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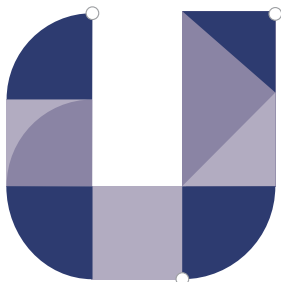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전병곤 | 김상기 | 이기태
정기웅 | 이기현 | 제성훈 | 최원근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전병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기웅 (한국외국어대학교 HK교수)

이기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최원근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연구지원

김소연 (통일연구원 연구원)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KINU 연구총서 21-07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저자	전병곤, 김상기, 이기태, 정기웅, 이기현, 제성훈, 최원근
발행인	고유환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평화연구실장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주)(02-2275-6894)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I S B N	979-11-6589-056-8 93340
가격	14,500원

© 통일연구원, 202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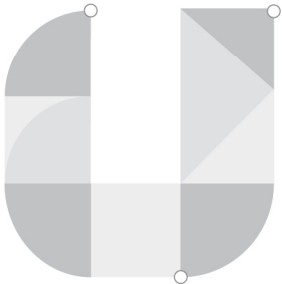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례

요약	13
I. 서론	19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1
2. 연구방법과 범위	24
II.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29
1. 이론적 논의	31
2. 분석틀	48
III. 한국의 대주변 4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추진실태	57
1. 추진체계 현황	59
2. 영역별 추진실태	92
3. 평가	143
IV. 주변 4국의 대한국 평화·통일 공공외교 인식: 전문가 조사 결과	159
1. 조사 개요	161

2. 국가별 결과 분석	166
3. 비교분석 및 특징	228

V. 결론: 평화·통일 공공외교에서 민간의 역할

확대 및 개선방안	259
1. 연구 결과의 종합 및 함의	262
2. 민간의 역할 확대 및 개선방안	279

참고문헌	313
-------------------	------------

부록	319
-----------------	------------

최근 발간자료 안내	335
-------------------------	------------

표 차례

〈표 II-1〉 종건국 개념의 네 가지 분류	34
〈표 II-2〉 주요 학자들의 공공외교 개념 정의 또는 인식	35
〈표 II-3〉 미국과 한국의 공공외교 정의	37
〈표 III-1〉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 주체	77
〈표 III-2〉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 주체	83
〈표 III-3〉 대러시아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 주체	88
〈표 III-4〉 대미국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 주체 및 사례	97
〈표 III-5〉 2020-2021 통일부 주최·후원 한미 전문가 정책 토론회 사례	125
〈표 III-6〉 2020-2021 외교부 주최·후원 한미 전문가 정책 토론회 사례	126
〈표 IV-1〉 설문조사 문항 구성	163
〈표 IV-2〉 설문조사 국가 및 분야별 응답 인원	165
〈표 IV-3〉 국가별 전문가 경력 분포	166
〈표 IV-4〉 한국의 대미국 공공외교 전반에 대한 평가	167
〈표 IV-5〉 한국의 대미국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174
〈표 IV-6〉 한국의 대미국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 직군	179
〈표 IV-7〉 한국 공공외교의 장애요인(미국)	180
〈표 IV-8〉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 전반에 대한 평가	184
〈표 IV-9〉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190

〈표 IV-10〉 한국의 대중국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 직군 …	195
〈표 IV-11〉 한국의 대일본 공공외교 전반에 대한 평가 ……………	199
〈표 IV-12〉 한국의 대일본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	204
〈표 IV-13〉 한국의 대일본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 직군 …	210
〈표 IV-14〉 한국의 대러시아 공공외교 전반에 대한 평가 ……………	214
〈표 IV-15〉 한국의 대러시아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	219
〈표 IV-16〉 한국의 대러시아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 직군 ……………	224
〈표 IV-17〉 국가별 한국의 공공외교 전반에 대한 평가 ……………	229
〈표 IV-18〉 국가별 한국 통일 공공외교의 목표 ……………	233
〈표 IV-19〉 국가별 한국 평화 공공외교의 목표 ……………	233
〈표 IV-20〉 국가별 한국 평화 공공외교의 지향점 ……………	234
〈표 IV-21〉 한국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	235
〈표 IV-22〉 국가별 한국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자원 ……………	239
〈표 IV-23〉 국가별 한국 통일 공공외교의 접촉경로(매체) ……………	240
〈표 IV-24〉 국가별 한국 평화 공공외교의 접촉경로(매체) ……………	240
〈표 IV-25〉 국가별 한국 평화 공공외교의 매체 유용성 전망 ……………	241
〈표 IV-26〉 국가별 한국 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 직군 ……………	243
〈표 IV-27〉 국가별 한국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 직군 ……………	243
〈표 IV-28〉 국가별 한국 통일 공공외교의 장애요인 ……………	244

〈표 IV-29〉 국가별 한국 평화 공공외교의 장애요인	245
〈표 V-1〉 한국의 주변 4국 평화·통일 공공외교 목표 비교	265
〈표 V-2〉 한국의 주변 4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영역별 비교	268
〈표 V-3〉 한국의 주변 4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매체 활용도 비교 ...	269
〈표 V-4〉 한국의 주변 4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대상 비교	270
〈표 V-5〉 한국의 주변 4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개선방안	310

그림 차례

〈그림 II-1〉 공공외교의 방식	39
〈그림 II-2〉 공공외교에 대한 5단계 분석틀	49
〈그림 II-3〉 5단계 분석틀에 따른 한국 공공외교 수행체계	49
〈그림 III-1〉 한국 공공외교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61
〈그림 IV-1〉 전문가의 소속기관 분포	165
〈그림 IV-2〉 한국의 대미국 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심층평가 (5점 척도)	169
〈그림 IV-3〉 한국의 대미국 평화 공공외교의 심층평가 (5점 척도)	169
〈그림 IV-4〉 한국의 대미국 통일 공공외교의 목표	171
〈그림 IV-5〉 한국의 대미국 통일 공공외교의 지향점	171
〈그림 IV-6〉 한국의 대미국 평화 공공외교의 목표	172
〈그림 IV-7〉 한국의 대미국 평화 공공외교의 지향점	172
〈그림 IV-8〉 한국의 대미국 공공외교의 자원	175
〈그림 IV-9〉 한국의 대미국 평화 공공외교의 자원	175
〈그림 IV-10〉 한국의 대미국 통일 공공외교의 매체	176
〈그림 IV-11〉 한국의 대미국 평화 공공외교의 매체	177
〈그림 IV-12〉 한국의 대미국 평화 공공외교 매체의 유용성 전망	177
〈그림 IV-13〉 한국 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국(미국)	178
〈그림 IV-14〉 한국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국(미국)	179

〈그림 IV-15〉 한국의 대미국 통일 공공외교의 장애요인	181
〈그림 IV-16〉 한국의 대미국 평화 공공외교의 장애요인	181
〈그림 IV-17〉 한국의 대중국 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심층평가 (5점척도)	185
〈그림 IV-18〉 한국의 대중국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심층평가 (5점척도)	185
〈그림 IV-19〉 한국의 대중국 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심층평가	186
〈그림 IV-20〉 한국의 대중국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심층평가	186
〈그림 IV-21〉 한국의 대중국 통일 공공외교의 목표	188
〈그림 IV-22〉 한국의 대중국 평화 공공외교의 목표	188
〈그림 IV-23〉 한국의 대중국 평화 공공외교의 지향점	189
〈그림 IV-24〉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의 주요 자원	191
〈그림 IV-25〉 한국의 대중국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자원	191
〈그림 IV-26〉 한국의 대중국 통일 공공외교의 매체	192
〈그림 IV-27〉 한국의 대중국 평화 공공외교의 매체	192
〈그림 IV-28〉 한국의 대중국 평화 공공외교의 매체 유용성 전망	193
〈그림 IV-29〉 한국 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국(중국)	194
〈그림 IV-30〉 한국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국(중국)	194
〈그림 IV-31〉 한국의 대중국 통일 공공외교의 장애요인	196
〈그림 IV-32〉 한국의 대중국 평화 공공외교의 장애요인	197

〈그림 IV-33〉 한국의 대일본 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심층평가 (5점 척도)	200
〈그림 IV-34〉 한국의 대일본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심층평가 (5점 척도)	200
〈그림 IV-35〉 한국의 대일본 통일 공공외교의 목표	201
〈그림 IV-36〉 한국의 대일본 평화 공공외교의 목표	202
〈그림 IV-37〉 한국의 대일본 평화 공공외교의 지향점	203
〈그림 IV-38〉 한국의 대일본 공공외교의 주요 자원	205
〈그림 IV-39〉 한국의 대일본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자원	205
〈그림 IV-40〉 한국의 대일본 통일 공공외교의 매체	207
〈그림 IV-41〉 한국의 대일본 평화 공공외교의 매체	207
〈그림 IV-42〉 한국의 대일본 평화 공공외교 매체의 유용성 전망	208
〈그림 IV-43〉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국(일본)	209
〈그림 IV-44〉 한국의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국(일본)	209
〈그림 IV-45〉 한국의 대일본 통일 공공외교의 장애요인	211
〈그림 IV-46〉 한국의 대일본 평화 공공외교의 장애요인	211
〈그림 IV-47〉 한국의 대러시아 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심층평가 (5점 척도)	215
〈그림 IV-48〉 한국의 대러시아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심층평가 (5점 척도)	215
〈그림 IV-49〉 한국의 대러시아 통일 공공외교의 목표	216

〈그림 IV-50〉 한국의 대러시아 평화 공공외교의 목표	217
〈그림 IV-51〉 한국의 대러시아 평화 공공외교의 지향점	217
〈그림 IV-52〉 한국의 대러시아 공공외교의 주요 자원	219
〈그림 IV-53〉 한국의 대러시아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자원	220
〈그림 IV-54〉 한국의 대러시아 통일 공공외교의 매체	220
〈그림 IV-55〉 한국의 대러시아 평화 공공외교의 매체	221
〈그림 IV-56〉 한국의 대러시아 평화 공공외교 매체의 유용성 전망	222
〈그림 IV-57〉 한국 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국(러시아)	223
〈그림 IV-58〉 한국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국(러시아)	223
〈그림 IV-59〉 한국의 대러시아 통일 공공외교의 장애요인	225
〈그림 IV-60〉 한국의 대러시아 평화 공공외교의 장애요인	226
〈그림 IV-61〉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심층평가(5점 척도)	230
〈그림 IV-62〉 한국의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심층평가(5점 척도)	231
〈그림 IV-63〉 한국 공공외교의 목표	232
〈그림 IV-64〉 한국 공공외교의 핵심 주체	236
〈그림 IV-65〉 한국 통일 공공외교의 핵심 주체	237
〈그림 IV-66〉 한국 평화 공공외교의 핵심 주체	237
〈그림 IV-67〉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자원	238
〈그림 IV-68〉 한국 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국(국가별 종합)	242
〈그림 IV-69〉 한국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국(국가별 종합)	242

본 과제는 주변 4국을 중심으로 기존 정부 차원의 통일 공공외교의 성과를 계승하되, 한계를 보완하려는 문제의식에서 평화 공공외교와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시도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담론 제기 및 한국의 주변 4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개선방안과 민간의 역할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본 과제는 문헌분석과 설문조사 그리고 공동연구 등의 연구추진방법을 동원했다. 2장에서는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연구 담론을 제기하는 한편, 분석틀로서 공공외교의 실행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5개의 구성요소인 목표, 주체, 자원(산), 매체, 대상과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영역인 문화, 지식, 정책 등 3개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3장에서는 한국의 주변 4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5단계 추진체계 및 영역별 추진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국가들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추진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5단계(목표, 주체, 자원, 매체, 대상)별로 현황을 추적하고 평가하였다. 또한 주변 4국에 대한 한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식, 문화, 정책 공공외교 등 영역별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한국의 주변 4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상국인 주변 4국의 입장과 시각이 반영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4장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현실적으로 주변 4국 국민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반인보다 한반도와 공공외교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이고 있는 전문가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조사에는 정부, 학계, 민간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55명의 주변 4국 전문가와 15명의 국내 전문가 등 총 7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설문항은 한국의 일반,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총 35개의 문항으로 구성했다. 설문 내용은 본 연구의 분석 틀인 5개의 구성요소에 총평 및 장애요인을 추가해서 구성했다.

5장 결론부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분석한 후 정책적 함의를 발굴한 다음, 이를 토대로 민간의 역할 확대방안과 한국의 대주변 4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 발굴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즉, ①일관성 있는 전략방향의 설정, ②통일 강조보다 평화우선적 접근, ③평화 담론의 계발, ④공통 목표의 수립과 국가별 맞춤형 전략의 상호 조응, ⑤민·관 협업체계의 구비와 민간의 역할 확대, ⑥네트워크의 활성화, ⑦평화와 통일에 관한 전문성 강화, ⑧평화·통일 공공외교 매체의 복합화, ⑨평화·통일 공공외교 대상의 체계화 등이다.

이어서 이러한 정책적 함의에 기초해 본 연구가 제시한 민간의 역할 확대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평화·통일 민·관 협의체의 구성, ②민간단체의 국내외 활동지원, ③평화·통일 공공외교 전담 기구의 설립 및 운용, ④평화·통일 공공외교 교육과정 보강 및 확대, ⑤국내외 민간 전문가 활용, ⑥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지식공동체 구성 및 지원, ⑦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국에 대한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개선방안을 본 연구의 5단계 분석틀인 목표, 주체, 자원(산), 매체, 대상별로 제시했다.

주제어: 통일 공공외교, 평화 공공외교, 평화·통일 공공외교, 국제적 공감대, 민간의 역할, 한반도 평화와 통일

Searching for the Ways of Improving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Constructing the Foundation for the Public Diplomacy on the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Four Surrounding Powers

Jun, Byoung-kon et al.

This research begins with the idea that it is significant not only continue legacy of the current Public Diplomacy on Unification targeting four surrounding powers,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which has been initiated by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ROK), but also expand realm by promoting the Public Diplomacy on Peace, as well as focusing on the possible contribution of civil society. In more detail, this research aims to raise awareness for the discourse on Public Diplomacy on Peace and Unification, identify policy agenda to improve it, and expand the role of civil sector.

The research utilizes various research methods such as literature analysis and experts surveys on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Russia, and Korea. Also, this research has been

proceeded as a joint research to conduct more comprehensively. This research is organized as follow. Chapter 2 lays out the discourse via a theoretical review on public diplomacy on peace and unification. This research adopted five key elements— goal, object, resource(or asset), medium, and subject— of public diplomacy as an analytic framework, then focuses in three spheres of culture, knowledge, and policy.

Based on this analytic framework, Chapter 3 empirically analyzes Korea's approach to public diplomacy on peace and unification on four neighboring countries, specifically strategy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implementation of five elements of goal, object, resource, medium, and subject. Specifically, this research evaluates implementing strategies and development of Korean public diplomacy on peace and unification in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as major stakeholders in East Asia. Then, the chapter also analyzes and evaluates the current status of relevant areas, such as knowledge, culture, and policy-oriented public diplomacy, to grasp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public diplomacy on peace and unification.

It is significant to balance and objective perspective to assess the implementation and devise improvement of Korea's public diplomacy on peace and unification toward four neighboring countries effectively. To this end, Chapter 4 covers an expert survey on Korea's public diplomacies,

including public diplomacies in general, on unification, and on peace, in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Given the circumstances that it is not feasible to survey the public opinion overseas, partly due to COVID-19 restrictions, the research investigated expert group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ublic diplomacy. A total of 70 experts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including 55 from four neighboring countries in addition to 15 from Korea. The expert survey is designed with total of 35 questions to evaluate the current implementation status of Korea's different public diplomacy schemes, including general, unification, and peace public diplomacy. Actual contents of the survey questions are designed to match with those five elements of public diplomacy analysis.

The Chapter 5 as conclusion summarizes and analyzes the research findings, derives policy implications, and identifies measures to expand the role of the civil sector. Details of policy implications identified in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① setting the direction of a coherent strategy; ② having a peace-prioritized approach rather than focusing on unification; ③ developing more effective rationality for peace; ④ establishing a grand strategy along with specifically tailored strategies on each countries; ⑤ creating a public-civil collaborative system and expanding the roles of the civil society; ⑥ accelerating networks; ⑦ enhancing the expertise on peace and unification, ⑧ developing more comprehensive

medium of public diplomacy on peace and unification; and ⑨ building more concrete system to initiate public diplomacy on peace and unification.

Based on such policy implications, the research derives measures to expand the role of the civil sector as follows: ① establishing a public-civil consultative body for peace and unification; ② supporting voluntary activities of the civil organizations at home and abroad; ③ establishing an independent institution to manage public diplomacy on peace and unification; ④ revising and expanding educational curriculum of public diplomacy on peace and unification; ⑤ utilizing civil experts at home and abroad; ⑥ building and supporting a community of knowledge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⑦ setting up a digital platform. Lastly, this research summarize with measures to improve Korean public diplomacy on peace and unification for neighboring countries,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by categorizing them into five areas—goal, object, resource(asset), medium, and subject—of analysis for this research.

Keywords: Public Diplomacy on Unification, Public Diplomacy on Peace, Public Diplomacy on Peace and Unification, International Consensus, Roles of the Civil Society,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및 국제사회 특히 주변 이해당사국 간의 합의와 지지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상대국 여론을 자국에 유리하게 조성하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¹⁾ 이의 일환으로 한국정부는 공공외교 원년(2010년) 설정, 공공외교 대사직 신설(2011년), 공공외교정책과 설치(2012년), 「공공외교법」 제정 및 발효(2016년),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년)」(이하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등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외교의 하위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관련 통일 공공외교가 추진되어왔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통일외교에다 공공외교를 접목하려는 시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도의 통일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지지를 획득하는 소위 ‘투사형 공공외교(projection public diplomacy)’의 맥락에서 시행되었다.²⁾ 이에 따라 한국정부가 추진한 통일 공공외교는 한반도 통일에 밀접한 이해관계와 영향

1)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라는 용어는 1965년 미국의 에드워드 머로우 공공외교센터(The Edward R. Murrow Center of Public Diplomacy)가 설립되면서 최초로 사용되었는데, 이후 국제관계의 전개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II장에서 다루었는바, 여기에서는 외교부의 공식 정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을 지칭한다. <http://www.mofa.go.kr/www/wpge/m_22713/contents.do> (검색일: 2021.9.29.).

2) 소위 ‘투사형(投射型) 공공외교’란, 인종, 언어, 한 민족이 오랜 기간 공동 경험을 통해서 공유하는 역사, 문화 등 정체성의 본원적 요소, 즉 ‘우리는 누구인가(who we are)’를 알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공공외교를 지칭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태환, “정책공공외교로서의 평화공공외교: 개념과 방향성,” (국립외교원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1-07, 2021.5.6.), p. 5,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act/ActivityAreaView.do?sn=13787&boardSe=pbl>> (검색일: 2021.12.24.).

력을 갖고 있는 주변 4국을 중심으로 하되 점차 그 대상 및 외연을 확산시키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 관련 이해관계가 상이한 주변국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공공외교의 특성상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는데에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주변 4국의 정책을 유인해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쉽지 않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재가동하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것인가란 과제는 기존 투사형 통일 공공외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차원의 평화 공공외교를 모색할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연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일반 공공외교에 관한 연구는 지난 10년간 한국 공공외교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며 다양한 이론적·정책적 연구성과를 축적해왔고,³⁾ 그 하위에서 통일 공공외교를 정면으로 다룬 의미 있는 연구성과도 발견할 수 있지만,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통일 공공외교와 평화 공공외교를 접맥하려는 연구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국을 중심으로 기존 통일 공공외교에다가 평화 공공외교를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추진방안을 마련하려는 시도

3) 관련 연구를 일일이 거론할 수 없지만, 한국의 공공외교 역할과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려는 시도들은 다음과 같다. 김우상, “대한민국의 중견국 공공외교,” 『정치정보연구』, 제16권 1호 (2013), pp. 331~350; 한인택,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평가와 발전방향,” (제주평화연구원 JPI정책포럼 187권, 2016.11.), pp. 38~47, <http://jpi.or.kr/wp-content/uploads/2020/06/JPI%EC%A0%95%EC%B1%85%ED%8F%AC%EB%9F%BC_2016-2.pdf> (검색일: 2021.12.24.). 백우열, “한국의 공공외교 전략 및 정책연구,” 『국가전략』, 제23권 3호 (2017), pp. 5~32.

4) 황병덕 외,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Ⅰ)/(Ⅱ)』 (서울: 통일연구원, 2012/2013); 박지연,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네트워크 탐색: 효율적인 외교 방식 결정을 위한 예비적 검토,” 『북한연구학회보』, 제23권 1호 (2019), pp. 1~27.

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감대를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연구가 한반도 ‘통일’을 한반도 ‘평화’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아니며, 통일 공공외교의 성과는 계승하되 한계는 평화 공공외교로 보완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평화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호구성형의 ‘주창형 공공외교(advocacy public diplomacy)’를 지향하고 있으며,⁵⁾ 이러한 입장과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주도형에서 정부와 민간의 상호 조화를 이루는, 즉 민·관 협업을 위한 민간의 역할 확대 방안도 모색할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기존 정부 차원의 통일 공공외교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보완하는 맥락에서 평화 공공외교와 민간의 역할이 추가된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방안을 마련하려는 연구 목적을 갖고 있는바, 이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외교의 이론적 측면에서 기존 통일 공공외교에 평화 공공외교를 추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정의와 담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 주변 4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제시할 것이다. 셋째,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공공외교 인프라와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5) 소위 ‘주창형(主唱型) 공공외교’란, 국제사회에서 그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이나 가치, 제도, 아이디어 등 정체성의 구성적인 요소들을 설파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공공외교를 의미한다. 김태환, “가치외교의 부상과 가치의 진영화: 강대국 사례와 한국 공공외교의 방향성,” 『문화와 정치』, 제6권 1호 (2019), p. 8.

2. 연구방법과 범위

가. 연구방법

본 연구는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는 목적에 효율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동원한다. 우선, 본 연구의 기본적인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이다. 공공외교와 통일 공공외교,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한국의 주변 4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관한 실태분석을 위해 단행본, 학술논문, 정책보고서 등 1,2차 문헌자료와 인터넷 자료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문헌조사와 분석을 진행했다.

둘째, 본 연구는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면접(depth interview)을 통한 실증적 분석을 병행했다.⁶⁾ 이는 문헌분석에만 의존할 경우 우려될 수 있는 정태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현지조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시도이다. 설문조사는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주변 4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조사 대상 전문가로 한국의 공공외교 관련 전문가 15명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국의 한반도 관련 전문가 55명을 포함한 총 70명을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로서 학계와 정부관료 그리고 언론, 문화, 기업인을 포함한 민간 영역 등 총 3개로 구분해 실태 파악에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

설문지는 총 3개 부분, 3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부는 한국의 공공외교 일반에 관한 평가이고 2부는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 실

6)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는 연구대상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센서스(census)와 구조적인 표집(recruiting)을 통해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survey)로 구분되나, 본 연구에서는 후자인 서베이를 편의상 설문조사로 통칭한다. 김경호, 『설문조사』(파주: 한국학술정보, 2014), p. 12.

태를, 3부는 한국의 평화 공공외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다. 설문조사 기간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2달간 진행했다. 설문조사가 완료된 후 설문 참여 대상자를 중심으로 개선방안 및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심층면접을 추진하였는데,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및 환경에 따라 화상회의와 서면 인터뷰를 병행하였음을 밝혀둔다.

셋째, 본 연구는 평화·통일 공공외교 이론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지역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HK+ 국가전략사업단)와 위탁을 통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다만, 사실상 개별연구의 결합인 공동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코웍 및 자문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진 전원이 참여하는 코웍회의를 5차례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학계 전문가의 견해를 수렴하는 한편, 공공외교 실무자나 시민단체 종사자와 같은 민간 전문가의 견해도 일부 수렴하였다. 또한 정책적인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인 통일부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나. 연구범위와 구성

본 연구가 주변 4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국 및 한반도 평화와 통일 관련 공공외교가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이 된다. 그러나 평화·통일 공공외교도 일반 공공외교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연구에 필요할 경우 한국 공공외교의 일반적 내용도 포함될 것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신통공외교가 주목받는 시점인 21세기 이후에 해당하나, 한국에 공

공외교가 본격 도입되는 시점인 2010년 이후 특히 문재인 정부시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3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한 후, 이를 토대로 전체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평화·통일 공공외교가 공공외교의 하위에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외교의 개념과 이론적 틀 내에서 통일 공공외교와 평화 공공외교, 그리고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개념과 방향성을 모색한다. 이어서 공공외교의 실행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5개의 구성요소인 목표, 주체, 자원(산), 매체, 대상을 원용한 5단계 분석틀(5-phase framework)과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영역인 문화 공공외교, 지식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의 범주를 제시했다.

3장에서는 한국의 대주변 4국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실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2장에서 제시한 5단계 분석틀에 의거해 한국의 주변 4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수행체계를 평가하였고, 지식, 문화, 정책의 영역에서도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이어 4장에서는 한국의 주변 4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추진실태에 관한 실증적 파악을 위해 주변 4국의 전문가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분석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가별로 소개한 후 종합·비교함으로써 개별 국가에 대한 정보 습득 및 이해는 물론 주변 4국의 종합적 특징과 차이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3장이 한국의 입장과 시각에서 주변 4국에 대한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 실태를 분석했다면, 4장은 대상국인 주변 4국의 입장과 시각에서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접근을 지향했다. 이는 한국과

대상국인 주변 4국의 인식을 종합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는데 유용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 결론부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 후,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에서 민간의 역할 확대 방안과 한국의 주변 4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I.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1. 이론적 논의

가. 공공외교와 신공공외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풍부한 자원과 발전된 과학기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하였다. 소련과의 대치로 세계적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자국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전파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경쟁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였다. 이는 국가가 중심이 되는 공공외교 활동으로 연결되었으며, 할리우드와 맥도날드로 대표되는 미국 문화는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었다. 냉전의 종식 이후 미국은 공공외교에 대한 자원과 기구를 축소 정비하였으나, 9·11 테러 이후 공공외교에 대한 투자를 다시 강화하였다.⁷⁾

나이(Joseph Nye)의 소프트파워 논의는 미국 공공외교의 재강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1990년 나이는 미국의 패권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라는 지표로 보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소프트파워라는 맥락에서 접근한다면 여전히 세계를 주도해 나갈 역량을 갖고 있다는 관점을 제기한 바 있다.⁸⁾ 2004년에 나이는 미국의 소프트파워가 위협받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소프트파워를 더욱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⁹⁾ 이러한 주장은 스마트파워 개념의 제시로 이어진다. 스마트파워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조합함으로

7) 박영호 외, 『미국의 대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 5.
8) 김상배, “소프트파워와 21세기 권력,” 김상배 엮음, 『소프트파워와 21세기 권력: 네트워크 권력의 모색』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9), p. 10에서 재인용, 이러한 나이의 관점은 다음의 책에 잘 나와있다. Joseph S. Nye Jr.,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 Power* (New York: Basic Books, 1990).
9)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은 다음과 같다. Joseph S. Nye Jr.,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써 국가를 위한 성공적 전략을 도출하는 힘을 말하는데, 나이는 스마트파워 개념을 설명하면서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 양자의 관계를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그리고 있다.¹⁰⁾

이처럼 현대 공공외교의 주창자이자 실천적 전형은 미국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미국 공공외교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1953년에 설립되어 1999년까지 운영된 미국 해외공보처(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이다. 그러나 공공외교를 현대 국제정치의 산물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비록 공공외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고대부터 외국 공중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존재하였으며, 국가 이미지 제고, 자국 문화의 해외 전파 등 오늘날 공공외교 영역으로 분류되는 활동들이 국가에 의해 수행되었다.¹¹⁾

공공외교는 국제정치 무대에 중견국이 등장함으로써 더욱 각광받게 된다. 냉전기 국제정치의 무대는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양분되어 있었으나, 냉전의 종식과 함께 1990년대 초부터 중견국 개념이 세계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중견국 지위를 강조하였는데,¹²⁾ 1990년

10) 미국외교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잡은 스마트파워의 개념은 2004년부터 나이의 저술을 통해 제시되기 시작했다. 김상배 엮음, 『소프트파워와 21세기 권력: 네트워크 권력의 모색』, p. 25.

11) 박영호 외, 『미국의 대한민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p. 10.

12) 스스로 중견국임을 내세우는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등의 공공외교는 서유럽이 자국의 문화와 예술 및 언어의 전파에 초점을 두는 방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양차대전기와 냉전기에도 중립국의 위치를 고수해온 스웨덴은 인권, 개발협력, 환경 등의 이슈에서 보편적 가치와 세계시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적개발원조 공여국인 노르웨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외교와 국가 간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는 평화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 대인지뢰금지협약, 인간안보, 환경, 난민문제 등 규범외교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위 중견국들은 일종의 틈새외교 및 규범외교의 성격을 갖는 이슈영역에서 공공외교 노력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송태은, “공공외교의 역사적 이해,” 김상배 외, 『지구화시대의 공공외교』(서울: 사회평론 아카데미, 2019), p. 92.

대 초 호주의 외무장관이었던 가레스 에반스(Gareth Evans)는 이러한 중견국들이 ‘뜻을 같이하는(like-minded)’ 국가들간의 연합형성을 통해 한정된 보유자원을 특화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강대국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특화외교(niche diplomacy)’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³⁾

중견국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쿠퍼, 히곳, 노쌀(Andrew F. Cooper, Richard A. Higgott, Kim Richard Nossal) 세 학자가 캐나다와 호주의 외교행태를 중심으로 수행한 중견국 연구는 중견국의 개념 및 행태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 시금석의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중견국을 정의하기 위해 네 가지 변수를 검토하고 있다. 첫째는 국가가 국제체제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position) 이다. 어떤 면에서는 위계(hierarchy)속에서의 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류 기준을 따를 경우 중견국은 영토와 인구, 경제력과 군사력 등의 지표에 있어 상위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하위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중간에 위치하는 국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지리적 위치(geographical location)에 따른 분류이다. 냉전시대의 예를 들자면 미국과 소련의 중간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규범적(normative) 관점에 의한 분류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평판에 따른 분류라고도 할 수 있으며, 명성에 따른 분류라고도 볼 수 있다. 예로서 국제사회에서 신뢰할만한 국가, 혹은 정의로운 국가라는 평판을 얻은 국가는 평판을 얻지 못한 강대국 보다도 더 현명하고 더 믿을만한 국가로 인식된다. 이러한 국가들은 사용할 수 있는 강압적인 힘이 부족한 경우에도 높은 외교적 영향력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태적(behavioural) 분류이다. 행태

13) 김우상, 『중견국 책략: 미·중 사이 한국의 스마트 외교』 (서울: 세창출판사, 2016), p. 19.

에 따른 분류는 국가의 행위에 집중한다. 즉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소위 ‘중견국다운(middlepowermanship)’ 행위 유형을 노정하는 국가들이 중견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다자적 해결을 추구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자의 위치를 자임하며, ‘좋은 국제 시민 의식’을 외교의 지침으로 삼는 일련의 행위들을 노정하는 국가가 중견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⁴⁾

상술한 쿠퍼 등의 연구 이후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졌으나, 대개의 경우 이들 연구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중견국의 정의를 물질적, 행태적, 관념적 이라는 세 가지 범주를 사용하여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변형의 하나일 뿐이다. 김우상은 중견국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중견국을 <표 II-1>과 같이 분류하고 있으며, 제시된 네 가지 범주 중 한 가지 이상 동일할 경우 그 국가는 중견국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⁵⁾

<표 II-1> 중견국 개념의 네 가지 분류

분류	내용
위계적	국제체제 내 군사력, 경제력, 인구수 등 국력의 위치
기능적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또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
규범적	국제법, 국제규범을 지키고 국제질서를 유지하는데 동참
행태적	국제분쟁의 타협적, 다자주의적 해결 추구, 선량한 국제시민 역할 담당

출처: 김우상, 『중견국 책략: 미·중 사이 한국의 스마트 외교』 (서울: 세창출판사, 2016), p. 20.

중견국 개념과 결합한 공공외교는 전통적 공공외교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의 신공공외교의 탄생을 가져왔다. 과거의 공공외교와

14) Andrew F. Cooper, Richard A. Higgott, and Kim R. Nossal, *Relocating Middle Powers: Australia and Canada in a Changing World Order* (Vancouver: UBC Press, 1993), pp. 17~19.

15) 김우상, 『중견국 책략: 미·중 사이 한국의 스마트 외교』, p. 20.

비교하여 신공공외교는 몇 가지 특징적 양상을 노정하는 바, 김태환은 “신공공외교”라고도 불리는 21세기 공공외교는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급진전으로 국가행위자와 비국가 행위자가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교류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공공외교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¹⁶⁾

소프트파워 개념의 유행과 공공외교 역할의 강조에 따라 공공외교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공공외교에 대한 정의 또한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표 II-2>는 1990년 이후 국제정치영역에서 공공외교 개념에 대해 논한 주요 학자들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2> 주요 학자들의 공공외교 개념 정의 또는 인식

학자(저술연도)	공공외교 개념 정의 또는 인식
Hans Tuch (1990)	정부가 자국의 목표와 정책뿐 아니라 사상과 이상, 제도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의 대중과 의사소통하는 과정
Benno Signitzer & Timothy Coombs (1992)	정부 및 민간의 개인과 단체 모두 다른 나라 정부의 외교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나라 대중의 태도와 인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법
Robert S. Fortner (1994)	특정 국가가 자국의 외교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외교 상대국의 정부, 사회,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적극적이고 세련된 설득 방식
Edward R. Murrow (2002) ¹⁷⁾	외국 정부뿐만 아니라 주로 비정부기구나 정부에 관여하지 않는 개인도 목표로 삼아 진행하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
Paul Sharp (2005)	(국가/정부에 의해 대표되는)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국가의 국민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과정
Michael Waller (2007)	전통외교 이외의 국제관계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한 국가의 행위자가 자신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국 혹은 다른 국가의 대중에게 개입하는 다양한 활동

16) 김태환, “21세기 신공공외교와 포럼외교,” (제주평화연구원 JPI정책포럼 제60권, 2011.1.), pp. 2~3, <http://jpi.or.kr/wp-content/uploads/2020/06/JPI_%EC%A0%95%EC%B1%85%ED%8F%AC%EB%9F%BC_2011-03.pdf> (검색일: 2021.12.24.).

학자(저술연도)	공공외교 개념 정의 또는 인식
Gyorgy Szondi (2008)	전통적으로는 해외 청중을 상대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소통이었으나, 이제는 다양한 차원들(국내와 해외, 국가 간 긴장 정도, 소통의 방향, 국가 특수적 맥락)의 상호적 텍스트 구성 방식(국가브랜딩 비교 관점)
Nancy Snow (2009)	전통적인 공공외교는 정부가 자국의 외교정책과 목표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나라 대중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의미하지만, 최근의 공공외교 개념에는 정부는 물론 개인 및 단체들이 상대국 대중들의 태도 및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포함됨
Bruce Gregory (2011, 276)	국가, 국가들의 연합, 국가 하위 행위자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가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자신들의) 문화·태도·행태를 이해시키고, (목표 대중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며, (그들의) 사고에 대해 영향을 미쳐 행동을 동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Mai' a K. Davis Cross (2013)	어떤 국가의 정부와 사회가 자국에 대한 해외 대중들의 인식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해외 청중들에 대해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의 방식
Eytan Gilboa (2016)	외국의 공중에 대한 (특정 국가의) 정부 관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외교정책의 관리(본질: 자국에 대한 타국 공중의 좋은 인상 심기)
Ellen Huijgh (2016)	정치적 실체(고대의 왕, 현재의 국민국가)와 외국의 사람 (공중) 또는 국내 공중 사이의 외교적 소통
Efe Sevin (2017)	국가 및 국가가 인정한 행위자들이 자국의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타국의 비국가 집단들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반적 활동
Jan Melissen (2005; 2018)	국민들의 이익 증진과 가치 교양을 위해 타국 국민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과정(2005)으로서 사람들에게 대한 외교적 관여(2018)
James Pamment (2018)	희망하는 정책목표를 지원할 목적으로 국제행위자가 외국의 청중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외국 시민·집단들에 대한 관여)
김상배(2019)	21세기 공공외교는 공개외교의 개념을 바탕으로 대내외적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소통외교에 대한 강조, 외교 전담 부처의 전통적인 역할론을 넘어서 정부 내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도 포함하는 네트워크 외교의 부상,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공개되는 쟁점들을 조율하고 각자의 이익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활동에 중심성을 제공하는 공익외교의 세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함

학자(저술연도)	공공외교 개념 정의 또는 인식
Nicholas J. Cull (2019)	한 국가의 외교정책을 형성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대중의 태도가 미치는 영향
The Hague Journal of Diplomacy (Jan Melissen & Jian Wang 2019)	자국의 정책 및 행동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다른 (국가) 사회의 공중들과의 관계를 창출·유지시키려는 노력

출처: 송기돈, “공공외교의 개념적 이해,” 문경연·송기돈·박지연 편저, 『공공외교: 이론과 사례』 (서울: 오름, 2020), p. 46의 표를 바탕으로 수정.

〈표 II-2〉에 제시된 개념 정의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21세기의 신공공외교는 주체, 대상, 수단, 매체, 관계의 유형 등에 있어 전통 외교 및 20세기의 공공외교와는 구분되며 차별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특히 행위주체와 사용하는 매체, 그리고 관계의 유형에 있어서 확대·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공공외교는 세계무대의 행위자들에 의해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 또한 2016년 2월 3일 공공외교법을 제정하고 8월 4일 시행함으로써 공공외교의 목적, 정의, 원칙 규정 및 추진체계 등을 명확히 하였다. 〈표 II-3〉은 공공외교의 주창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한국의 공공외교에 대한 정의를 정리한 것이다.

〈표 II-3〉 미국과 한국의 공공외교 정의

구분	정의
미국 국무부 (2008) ¹⁸⁾	정부 대 정부(government-to-government)의 관계를 넘어 타국의 국민들을 이해하고(understanding) 정보를 제공하며(informing) 그들을 포용하고(engaging) 그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influencing) 자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미국 해외공보처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2012) ¹⁹⁾	외국의 국민을 이해시키고, 정보를 제공하며, 그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미국 시민·기관과 상대국의 시민·기관과의 대화를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를 증진하는 것

17) Mark Leonard, *Public Diplomacy* (London: Foreign Policy Centre, 2002), p. 1.

구분	정의
대한민국 공공외교법 제2조 ²⁰⁾ (2016)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

〈표 II-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국가의 공공외교는 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을 제시하고 있고, 방법 및 추진전략으로써 ‘문화, 지식, 정책’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신통공외교의 핵심은 소통(communication)과 관여(engagement)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수단으로써의 역할에 방점을 두었던 전통적 공외교와 구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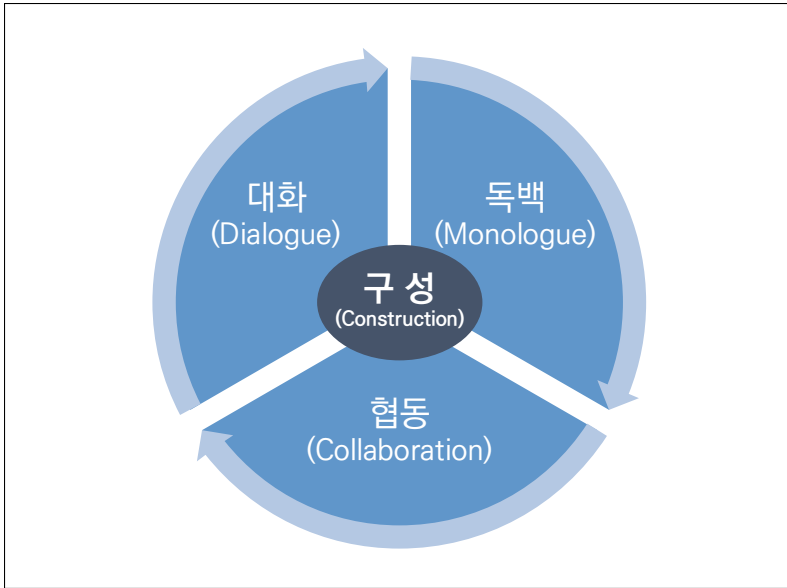
소통과 관여는 결국 구성(construction)으로 연결된다. 소통과 관여는 상호작용(interaction)과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에 기반하고 있으며, 상호주관적 이해는 상호 작용하는 행위자들 각자의 정체성(identity)의 구성으로 귀결된다. 상대방 국가의 정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의 정체성의 투사(projection)는 수신자에 의하여 이해(understanding)되고 인정(recognition)되며, 이해되고 인정된 나의 정체성은 다시 나에게 전달됨으로써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한 수정 혹은 조정으로 이어진다. 결국 공공외교는 나의 모습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투사형(projection type) 공공외교의 모습을 벗어나 발신자와 수신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추구하는 구성형(construction type) 혹은 주창형(advocacy type) 공공외교의 영역으로 이동해 나가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²¹⁾

18) U.S. Department of State, “Strategic Goal 11: Public Diplomacy and Public Affairs,” <<https://2009-2017.state.gov/s/d/rm/rls/perfplan/2004/20495.htm>> (검색일: 2021.10.25.).

19) 박영호 외, 『미국의 대한민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p. 8 에서 재인용.

20) 「공공외교법」 (법률 제13951호 신규제정, 2016.2.3.), 제2조,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2495>> (검색일: 2021.10.25.).

〈그림 II-1〉 공공외교의 방식



출처: Geoffrey Cowan and Amelia Arsenault, "Moving from Monologue to Dialogue to Collaboratio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Social Science*, Vol. 616 (2008), pp. 10~3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제프리 코완(Geoffrey Cowan)과 아멜리아 아르세노(Amelia Arsenault)는 공공외교를 독백, 대화, 협동의 세 층(Layer)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공동 프로젝트와 같은 협동이 바람직한 공공외교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코완과 아르세노가 제시한 세 층이 서로 단절되어 독립된 것은 아니다. 이 층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상호 간섭하고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독백이 대화로, 대화가 협동으로, 순차적으로 움직인다고 보다는

21) 공공외교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의 방식은 김태환의 주장을 빌려온 것이다. 이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정리는 김태환, "정책공공외교로서의 평화공공외교: 개념과 방향성" 및 Taehwan Kim, "Seeking Recognition in Anarchy: An Identity Approach to Public Diplomacy," (국립외교원 *IFANS PERSPECTIVES* IP2021-07E, 2021. 6. 7.),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lCode=P18&pblctDtaSn=13806&koreanEngSe=KOR>> (검색일: 2021.12.24.)를 참조할 것.

중층적 상호 작용을 통해 공공외교의 작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공공외교는 이러한 소통의 방식을 통해, 대화와 독백과 협동의 주고받음을 통해 그 모습을 구성한다고 전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I-1>은 이러한 주장을 도식화시킨 것이지만,²²⁾ 방식의 변화가 반드시 이러한 일방적 흐름의 궤적을 따른다고 볼 수 없으며 목적과 행위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소통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나. 통일 공공외교와 평화·통일 공공외교

(1) 통일 공공외교

통일연구원은 한국의 전통외교인 통일외교를 (신)공공외교인 통일 공공외교와 접목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2012년과 2013년 2년에 걸쳐 통일 공공외교 실태를 조사·확인한 바 있다.²³⁾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연구팀은 통일 공공외교를 “정부 및 민간이 소프트파워를 자산으로 상대국 국민, 그리고 글로벌 스페이스를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의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자발적 이해와 공감, 지지를 얻기 위하여 열린 소통과정을 통해서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알리고 설득하는 (비)공식 외교행위”²⁴⁾로 정의하였다.

22) 공공외교 방식에 관한 논의는 Geoffrey Cowan and Amelia Arsenault, “Moving from Monologue to Dialogue to Collaboratio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Social Science*, vol. 616 (2008), pp. 10~30을 참조할 것.

23) 황병덕 외,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Ⅰ):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 4국의 대한민국 통일 공공외교』; 황병덕 외,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Ⅱ): 한국의 주변 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24) 김태환, “한국 공공외교 수행체계와 통일 공공외교의 분석틀,” 황병덕 외,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Ⅱ)』, p. 50.

이후 외교부는 통일 공공외교의 목적을 “북한,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에 관한 외국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 및 통일 지지 세력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²⁵⁾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제시한 이래 통일 공공외교는 2015년까지는 개별 정책 공공외교의 방향을 통일 지향성을 갖게 수립시키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6년 초 이후에는 대북 제재 강화론에 입각한 사실상 흡수통일론의 맥락에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²⁶⁾

이와 같은 통일 공공외교는 일반적으로 그 정책적 소구대상(target audience)에 따라서 북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 통일 공공외교와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이 있는 해외 주요국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 통일 공공외교로 분류된다. 대외 통일 공공외교는 정책 공공외교, 문화 공공외교, 지식 공공외교라는 우리 정부의 3대 공공외교 분야 중 정책 공공외교의 하위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대북 통일 공공외교는 과거의 실제 사례들에 근거해 보면 문화 공공외교, 개발 공공외교, 기업 공공외교 등 다양한 공공외교의 영역이 중층적으로 작동한다. 통일 공공외교를 서구 학계의 기존 논의들을 기준으로 관찰하면 일종의 평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for peace)로 분류될 수도 있다. 분쟁지역에서 평화구축과 평화유지 측면에서 공공외교가 기여해온 사례들과 그에 대한 학술적 논의들은 통일 공공외교에서도 종종 이론적으로 유효하고 정책적으로도 적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 공공외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기반하여 한국의 공공외교에만 존재하는 독특한(sui generis) 성격을 갖는다.²⁷⁾

25) 김태환, “정책공공외교로서의 평화공공외교: 개념과 방향성,” p. 8.

26) 김태환, “한국 정책공공외교의 진화와 방향성: 공공외교에 대한 정체성 접근의 시각,”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 제1권 1호 (2021), pp. 1~28.

그러나 분단 이후 오랜 세월이 흐름으로써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적 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에 변화가 생겼고, 분단 1세대의 사망으로 인한 인구 구성의 변화 및 젊은 세대의 통일 비선호 현상으로 인하여²⁸⁾ 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통일의 연장 혹은 다른 형태로서의 평화 혹은 평화·통일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2) 평화외교와 평화 공공외교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평화외교와 평화 공공외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평화외교 및 평화 공공외교는 평화·통일 공공외교와는 명확히 구분된다. 학계에서 의미하는 평화외교란 안보외교의 한 분야로서 취급되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의 학자들은 평화외교를 평화유지군과 연결시켜 논하기도 한다.

유엔 또한 평화외교를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장한다. 2017년 취임한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외교’의 부흥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지속적 평화(sustaining peace)를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 및 모든 층위의 협력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²⁹⁾ 이신화는 “평화외교란 쌍방향 협상과 신뢰구축을 통해

27) 윤석준, 『공공외교의 이해』(파주: 한울아카데미, 2020), p. 199.

28) 통일 비선호 현상과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권재기, “한국 국민의 통일외교 프로파일 탐색 및 예측,” 『통일인문학』, 83집 (2020); 황태희,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이 보는 역사, 민족, 국가, 그리고 세계: 북한과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동아시아연구원 EAI워킹페이퍼, 2020.10.16.), <http://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0044&board=kor_workingpaper> (검색일: 2021.12.24.).

29) UN Secretary-General, “Urging Greater Investment in Diplomacy for Peace, Secretary-General Highlights UN’s Mediation Tools, Successes, during Security Council Debate,” 2018.8.29., <<https://www.un.org/press/en/2018/sgsm19182.doc.htm>> (검색일: 2021.6.18.).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고 관계 전환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분쟁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무력이 아닌 관심(attention)과 설득을 통한 평화로운 문제 해결법이 될 수 있는 공공외교가 평화외교 및 안보영역에서 주목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³⁰⁾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평화 공공외교는 중견국 규범외교의 사례로서 전통안보 분야에서 모색되었던 공공외교의 한 분야로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

김태환은 “평화 공공외교란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³¹⁾라는 가치와 규범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포함, (내외국민에 대한) 담론 소통 활동(discursive & communicative practices)을 통해서 평화와 안보에 대한 공유하는 의미를 확립하고 이를 확산, 내재화, 제도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에 ‘평화·안보 실천 공동체(peace-security community of practice)’를 구성하고자 하는 상호구성적·주창형 정책 공공외교’라고 정의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³²⁾ 이는 곧 ‘적극적 평화’라는 가치·규범에 대한 규범적 인정(normative recognition)의 추구이며, 이를 반영하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법적·정치적 인정(legal-political recognition)의 추구인 동시에, 이러한 소통 활동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감에 호소함으로써 감성적 인정(emotional recognition)을 추구하는 공공외교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설명의 맥락을 따르자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평화외교 및 (전통적) 평화 공공외교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정립될 필요가 있다.

30) 이신화, “평화외교와 안보공공외교,” 김상배 외, 『지구화시대의 공공외교』, p. 256.

31)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London: Sage, 1996).

32) 김태환, “정책공공외교로서의 ‘평화공공외교’ - 개념, 분석틀, 그리고 방향성,”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4.6.).

(3) 평화·통일 공공외교

상기한 바와 같이 통일 공공외교, 평화외교, 평화 공공외교는 각기 다른 의미와 목적성, 그리고 활동영역을 갖는다. 따라서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통일 공공외교와 평화외교, 그리고 평화 공공외교의 단순한 합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즉 통일 공공외교에 평화공공외교를 추가한다고 해서 평화·통일 공공외교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화·통일 공공외교란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목적성에 관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의 통일 공공외교는 분류하자면 정책 공공외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외교부는 정책 공공외교의 목표를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환경의 조성’으로 밝히고 있다.³³⁾ 따라서 통일 공공외교는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의를 따른다면 평화·통일 공공외교란 한반도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전략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는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탐구로 이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들을 때면 습관적으로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머리에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평화·통일정책’은 세 가지 의미에서 접근 가능하다. 첫째는 평화적 방법(수단)에 의한 통일이다. 둘째는 평화(유지 및 번영)를 위한 통일이다. 셋째는 평화 추구, 즉 평화를 통한 안전보장 확보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획되지 않은 부산물로서의) 통일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평화인가, 통일인가? 둘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여 말하기 힘든 까닭에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함께 말하고 ‘평화

33) 외교부,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p. 11.

통일'이라는 표현 대신 '평화·통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평화통일'은 상기한 바와 같이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연상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즉 '평화통일'과 '평화·통일'은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통일을 원하지만, 그 통일의 모습이 반드시 영토적 통합이어야 하는가?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했을 때 동북아의 평화 혹은 안보의 유지는 현상유지적 성격을 띠게 되고, 통일은 현상변경적인 까닭에 상충되는 개념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주의적 시각에 경도되어 동북아에 만연하고 있는 '힘을 통한 평화'와 같은 전통적인 지정학적 안보 논리가 아닌 '평화를 통한 안보'와 같은 평화 담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경우 '평화를 통한 안보'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까닭에 '통일이 꼭 영토적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통일의 목표는 평화의 확보인 까닭에 평화 추구를 통한 안보의 확보는 자연적으로 이 땅 한반도에서 함께 살아가는 상상의 공동체라는 정체성의 공유를 의미하는 통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개념 규정과 통일에 대한 기존 인식의 전환과 통일개념의 확대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특정한 틀 안에 규정짓는 것은 향후 발생 가능한 개념 확장과 변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담론적 접근을 통해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개념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가능케 하는 출발선의 제시에 만족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언급하자면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영토적 통합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같은 공간에서 오랜 세월 살아온 상상의 공동체라는 정체성의 확인을 통한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평화를 통한 안보의 개념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과 번영, 그리고 공진화(共進化)라는 목표를 외국 대중에게 이해시키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 및 평화와 통일 지지 세력을 조성하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방향의 제시는 향후의 발전적 확장과 변용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접근은 전통적인 통일 공공외교의 목적을 확장·발전시킨 것으로서 현정부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통일’이 아닌 평화적 공존에 의한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남북한이라는 두 개의 정치체제에 나뉘어 생활하고 있는 한민족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의 국민들, 나아가서는 세계의 구성원들과 공통으로 향유할 수 있는 평화라는 보편적 개념을 희구하기 때문이며, 이와 같이 접근할 때 우리의 평화와 통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영토적 통일의 추구는 본질적으로 현상변경을 피할 수 없으며, 현상의 타파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 영토적으로 통일된 국가가 수립된다는 것은 인구가 8천만을 넘어서고, 경제력과 군사력 양 측면에서 모두 세계 10위권 이내에 속하는 새로운 강대국의 출현을 의미한다. 이러한 강대국의 출현은 기존에 유지되고 있던 동북아의 세력균형 혹은 세력구도를 변화시키는 촉매제로서 작동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다. 결국 남북한의 영토적 통합 혹은 통일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한반도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요한 주변 4강을 포함한 동북아,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힘의 배분에 본질

적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의 결정적 전환점(critical juncture)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통일을 원한다면 우리의 통일이 지극히 평화적인 방식을 따를 것이며, 설혹 현상의 타파를 수반한다고 할지라도 동북아의 세력균형과 안정, 그리고 세계적 질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절차와 방법을 사용할 것임을 주변 강대국을 포함한 세계인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주변국에 전파하고 우리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외교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평화·통일 공공외교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번영, 그리고 평화적 통일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익개념에 근거한 협량한 외교의 틀을 벗어던져야 한다. 공공외교의 핵심이 매력의 발산이라고 한다면 목적성을 가진 매력의 발산은 오히려 수신자로 하여금 불쾌감과 혐오감을 갖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목적성의 표출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공동의 이익추구’야말로 공공외교의 성공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계적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음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감안할 때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 전개되는 권력다툼의 맥락을 파악하고 그에 적응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우리가 위치해야 할 적합한 자리를 찾아내는 상황지성을 활용해야 한다. 공공외교의 본질은 소프트파워 논의가 암시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우월한 이념과 가치를 전파하는데 있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관계 맺기를 통해서 공감을 얻어내는 데 있기 때문이다.³⁴⁾

2. 분석틀

가.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정의와 5단계 분석틀의 적용

본 연구는 한국의 주변 4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추진실태를 중심으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 확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한 분석틀로서 공공외교의 실행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5개의 구성요소(5-phase framework)’, 즉 목표, 주체, 자원 및 자산(콘텐츠), 매체(수단), 대상을 적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평화·통일 공공외교 역시 일반적인 공공외교의 틀 내에서 수행되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관한 명확한 개념과 범주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통일 공공외교가 공공외교의 하위에서 논의되고 정책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통일 공공외교가 이를 대체하거나 발전된 개념으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즉, 통일을 포함한 평화지향적 공공외교가 여전히 담론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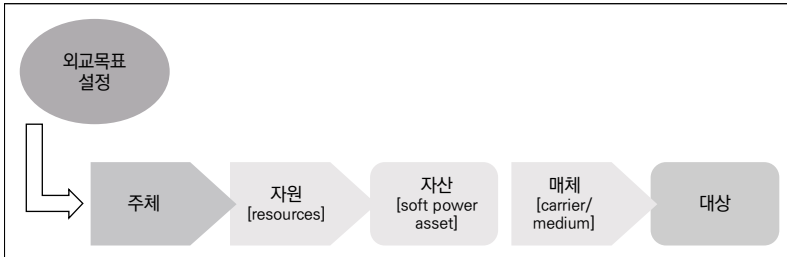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효율적 분석을 위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정의는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5개 구성요소를 사용하면,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일국의 정부와 민간이 소프트파워를 자산으로 타국 정부와 국민 및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에 대한 자발적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해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비)공식 외교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차원의 정의는 5단계 분석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림 II-2>는 이 5개의 요소를 실행단계별로 적시한 흐름도이고,

34) 김상배, “공공외교의 이론적 이해,” 김상배 외, 『지구화시대의 공공외교』, pp. 49~50.

<그림 II-3>은 이 5개 요소에 의거, 즉 5단계 분석틀에 따른 한국 공공외교의 수행체계 전반을 보여주고 있다.³⁵⁾ 이러한 공공외교의 5단계 분석틀을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적용하여 5개 핵심 요소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2> 공공외교에 대한 5단계 분석틀



출처: 황병덕 외,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p. 26.

<그림 II-3> 5단계 분석틀에 따른 한국 공공외교 수행체계



출처: 황병덕 외,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p. 26.

35) 황병덕 외,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p. 25.

(1) 목표

일반적으로 일국의 외교목표는 국가안보와 이익실현 차원에서 설정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외교목표에도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비핵화와 궁극적인 평화통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목표도 한국의 외교목표와 궁극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공공외교의 특성상, 전통 및 일반 외교와 목표를 실현하려는 수단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공공외교의 하위에서 운용되고 있는바, 공공외교의 목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의하면, 공공외교의 목표는 첫째,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 제고 및 국가 이미지 강화, 둘째,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셋째,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넷째, 공공외교 주체의 역량강화와 상호협업체계 정착 등이다.³⁶⁾ 이중에서 둘째와 셋째 목표가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목표설정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여기에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거나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국에 대한 구체적 목표도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목표가 공공외교의 목표는 물론 한국의 외교목표와도 상호 조응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과제이다.

36) 외교부,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p. 11.

(2) 주체

정부가 유일한 주체인 전통외교와 달리 공공외교의 주체는 정부 영역과 비정부(민간) 영역에다 정부와 민간을 연계하는 공적 영역 등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주체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차원(track 1)에는 통일부, 외교부, 문체부, 교육부 등의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등이 해당되며, 민간 차원(track 2)에는 학계, 연구소, 기업, NGO, 개인(한국민, 재외동포)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공적 차원(track 1.5)에는 공공기관(국책연구기관 및 재단), 공영방송(아리랑 TV, KBS World) 등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주체 간 거버넌스와 네트워크가 공공외교의 효율적 수행에 핵심이 된다.

한국은 2017년 8월 정부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공외교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체계적 효율성을 높이는 거버넌스를 구축한 바 있고, 주체 간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교류재단(KF)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할만하다. 다만,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이러한 주체간 거버넌스와 네트워크가 효율적인지, 민·관협업체계의 구축은 완비되었는지 등이 주요 관심이 될 것이다.

(3) 자원 및 자산(콘텐츠)

한국의 공공외교 자산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경험, 평화애호와 근면한 국가이미지, K-Pop, K-Drama 등의 한류, IT기술, 한국학 등 다양하나,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활용될 수 있는 자산은 제한적이다. 일반적인 공공외교의 경우,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교우위를 결합해내고 경제적 이익에 천착하지만 않는다면 공공외교 자산으로의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자산은 한국의 긍정적 국가이미지와 한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형성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경우에는 공공외교의 자산에다 별도로 평화·통일 관련 이슈를 설정하고 내용을 개발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비핵프로세스 등을 포함하는 한국의 대북정책은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핵심 자산이고 한국학으로 접맥되어 지식외교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이밖에 남북 공동개최와 같은 스포츠자산, 판문점, DMZ 평화지대나 생태공원 같은 관광, 환경자산 등도 거론될 수 있다.

(4) 매체(수단)

일반적으로 매체는 공공외교의 주체이자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인 언론재단이나 언론매체는 공공외교의 주체이면서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정부부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³⁷⁾ 특히, 미디어가 일반 국민의 인식이나 여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미디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욱이 사용 매체의 비중도 TV, 신문 등의 구 미디어에서 점차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등의 신 미디어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러한 플랫폼과 더불어 해당 분야의 자산이 상대방과 소통하는 구체적 매체를 의미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지식자산을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회의체, 강연, 연구와 교육, 인적 교류 등이 있고, 문

37) 한국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한국방송공사(KBS World) 등이 대표적이다.

화자신의 소통 프로그램은 전시와 공연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기업의 현지 활동(평화상, 장학금, 인턴십), 스포츠 활동(남북체전, 국제대회 공동유치 및 참가) 등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속한다. 평화·통일 공공외교에서 사용되는 매체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평화·통일 관련 어떤 미디어와 프로그램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지, 향후 어떤 매체와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할 것인지가 주요 관건이 될 것이다.

(5) 대상

공공외교의 대상은 정부와 국민 그리고 국제기구 등이 해당되며,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대상 역시 이와 같다. 구체적으로 정책서클, 여론주도층, 차세대그룹, 일반대중, 언론미디어 등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다만, 평화·통일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대상은 지역 차원과 이슈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³⁸⁾ 먼저, 지역차원의 경우 한반도의 현실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6자회담 참여국과 이를 제외한 여타국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이슈차원의 경우 비핵·평화, 경제발전, 민주주의, 위기관리와 신뢰구축, 인권 등이 있는데, 이 이슈들은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어 공감대 형성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핵·평화와 같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슈와 6자회담 참여국인 주변 4국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38) 황병덕 외,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pp. 53~56.

나.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영역

2017년 8월 공공외교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확정된 「제1차 대한민국의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에 의하면,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전략 부문으로서 문화, 지식, 정책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와 ‘공공외교 인프라’를 제시하고 있다.³⁹⁾ 이를 토대로 보면, 현재 한국이 추진하는 공공외교의 영역은 문화 공공외교와 지식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로 압축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공공외교 틀 내에서 평화·통일 관련 공공외교도 수행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접근하고 있는 한국의 주변 4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영역도 지식, 문화, 정책의 3개로 압축된다.

(1) 지식 공공외교

외교부의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의하면, 지식 공공외교의 목표는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2개의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데, 한국의 역사, 전통, 발전상 등에 대한 이해 제고와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확대가 그것이다.⁴⁰⁾ 이처럼 한국이 추진하는 지식 공공외교는 지식을 공공외교의 중요 자산으로 활용하며 한국의 국가 이미지 강화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한국의 경험이나 분단국으로서 평화와 위기관리 경험, 그리고 북한 및 북핵문제에 대한 이해 등은 단순한 정보(information)를 넘어 지식(knowledge)을 구성하는 주요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국제적인 소통을 통한 지식공동체를 구축하는데 비교우위를 갖는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

39) 외교부,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p. 11.

40) 위의 글, p. 11.

여기에는 한국어, 한국문화 등을 보급하고 한국학 관련 프로그램(교육, 강의, 세미나 등)을 운영하는 한국학 공공외교도 포함된다. 즉, 한국학을 지식으로 활용하는 한국학 외교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긴밀한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식 공공외교의 범주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에서 지식 공공외교는 가장 활발한 영역으로 평가되며, 한국의 주변 4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영역별 추진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도 중요한 분야이다.

(2) 문화 공공외교

문화 공공외교는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의 강점을 자산으로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정부는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 제고 및 국가이미지 강화’를 문화 공공외교의 목표로 설정하고, 선진문화국가로서의 매력 확산,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호감도 증진, 쌍방향 문화 교류를 통한 소통 강화를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⁴¹⁾ 실제로 2000년대부터 K-Pop, K-Drama, K-Movie, K-Beauty 등이 세계적으로 유행·확산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여행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한국인과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여기에는 상업적 목적과 정부 지원의 결합이 문화외교의 활발한 추진과 공공외교의 발전을 이루는데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공공외교는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수행하는데 상대적으로 커다란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문화는 분명 한국 공공외교의 중요 자산으로 평가됨에도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내용과 결합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41) 위의 글, p. 11.

노력도 많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주변4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탐색하려는 본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화 공공외교에서 한국의 강점인 문화자산과 한반도의 평화·통일문제를 어떻게 접목시킬 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3) 정책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policy advocacy)는 주로 지식 및 미디어 자원을 사용해서 특정 국가의 정책, 특히 외교정책을 설파하고 설득함으로써 자국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지를 구하는, 즉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추구하는 공공외교의 한 유형을 의미한다. 정책 공공외교가 단순히 개별 정책 자체에 대한 홍보 차원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데서 나아가, 정책에 담겨 있는 아이디어, 가치나 규범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상호주관적 이해와 의미’를 확립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의 담론적 확산을 추구할 때, 이는 상호구성형·주창형 공공외교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⁴²⁾

정책 공공외교의 목표는 한국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이고, 주요 전략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4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분석하는 본 연구와 매우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정책 공공외교의 영역은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을 구성한다.

42) 김태환, “정책공공외교로서의 평화공공외교: 개념과 방향성,” p. 8.

Ⅲ. 한국의 대주변 4국 평화· 통일 공공외교의 추진실태



1. 추진체계 현황

가. 한국의 공공외교 정책

한국은 공공외교의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2010년을 공공외교의 원년으로 선포하였으며, 기존의 정무·경제외교와 함께 공공외교를 외교의 3대 축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⁴³⁾ 구체적으로 2010년 5월에 「한국 공공외교 포럼」을 창설한데 이어 2011년 9월에 공공외교 대사를 임명하였고, 2012년 1월에는 문화외교국 산하에 공공외교정책과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2016년 1월에는 정책 공공외교 전담부서(정책 공공외교담당관실, 지역공공외교담당관실)를 신설하는 한편, ‘공공외교정책과’를 ‘공공외교총괄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정책 공공외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⁴⁴⁾

이처럼 외교부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포럼,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사업 등을 수행해왔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류 확산 및 한국어(학)·태권도 진흥, 재외공관 문화 전시장화, 청년·시니어 공공외교단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공공외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⁴⁵⁾

특히, 한국 정부는 공공외교의 통합적·체계적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2016년 8월에 발효된 「공공외교법」에 근거하여 2017년 8월 공공외교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공외교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통합조정기구로서 외교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기획재정부·교

43) 전병근 외,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조사』 (서울: 외교부, 2017), p. 9.

44) 위의 책, p. 9.

45) 외교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fa.go.kr/www/wpge/m_22713/contents.do> (검색일: 2021.6.8.).

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등 9개 정부 부처의 당연직 위원9명과 관련 정부 부처의 임명직 위원 5명, 그리고 민간 위원 5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⁴⁶⁾

공공외교위원회의 제1차 회의(2017.8.10)에서는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년)」 확정, 공공외교 추진기관 지정, 중앙부처간·중앙부처-지자체간 협업 및 민간의 공공외교 역량 활용 방안, 일반 국민의 공공외교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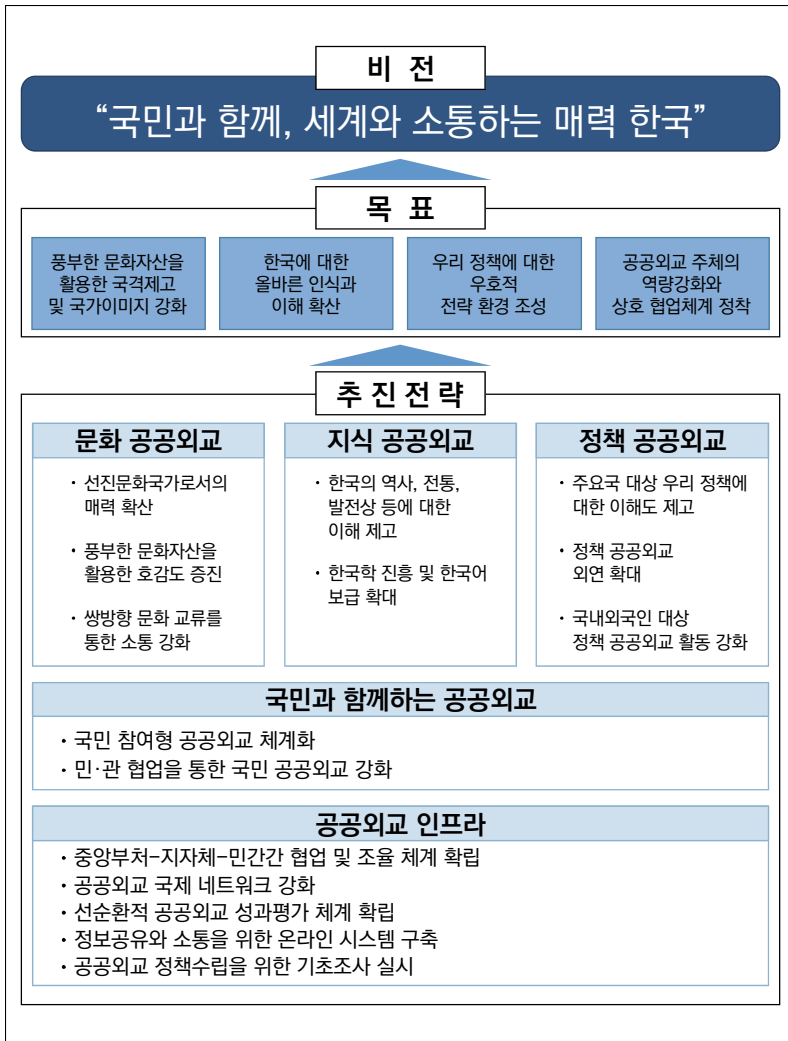
공공외교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확정된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년)」은 「공공외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이며, 이 기본계획에 의거 2018년부터 매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재외공관 등 공공외교 주체들이 체계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해왔다.⁴⁸⁾

46) 외교부,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p. 15.

47) 외교부, “공공외교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2017.8.9., <https://www.mofat.go.kr/www/brd/m_22721/view.do?seq=311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2> (검색일: 2021.6.8.).

48) 외교부, 『2021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I 권』 (서울: 외교부, 2021), p. 3.

〈그림 Ⅲ-1〉 한국 공공외교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출처: 외교부,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p. 11.

이 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 한국’이란 한국 공공외교의 비전 아래 4개의 목표와 6개 전략부문, 15개 추진전략 및 50개 중점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⁴⁹⁾ 4개의 목표는 ①풍

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 제고 및 국가 이미지 강화, ②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③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④공공외교 주체의 역량강화와 상호 협업체계 정착이다. 그리고 6개 전략부문은 공공외교 추진체계 확립, 문화 공공외교, 지식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공공외교 인프라 강화 등이다(〈그림 III-33〉 참조).

이처럼 통합조정기구인 공공외교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한국의 공공외교는 중앙정부간, 중앙과 지방정부간, 정부와 민간 등 공공외교 수행 주체 간 거버넌스를 형성하게 되었다. 물론 공공외교의 특성상 다양한 주체로 인한 분산성과 중복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공공외교 주체들이 상호 조율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 공공외교의 추진체계는 강화되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국가별,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참여형 공공외교의 도입과 활성화를 모색함으로써 공공외교의 목표와 주체, 자원과 대상 등이 상호 협력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내에서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가 수행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추진도 체계적일 수 있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 관련 공공외교에 집중할 경우, 특히 한반도 통일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 4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의 대주변 4국 공공외교 추진체계를 목표, 주체, 자원(산), 매체, 대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9) 외교부,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p. 11.

나. 한국의 대주변 4국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체계

(1) 미국

(가) 목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주된 목적은 국제사회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⁵⁰⁾ 정부가 명시적으로 밝히는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목표도 이와 다르지 않다. 통일부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국제사회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통일 공공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서 목적으로서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화와 통일은 사실상 순차적 성격을 가진다. 한국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근거한 통일을 추구한다면, 그 통일은 급격하게 이루어지거나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의 통일이라기보다는 남북 간 화해·협력 단계 등 평화적 공존 상태를 거치는 점진적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도출되는 결과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은 현실적으로 혹은 중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의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발전은 남북 간 적대관계의 해소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의 실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실질적 목적은 중단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증진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기반 조성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이 장기적 국가정책 목표로서 타당하지만,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출 때 통일에 이르는 과정, 즉 남북 간 화해와 교류·

50)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개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본 보고서의 제2장 참조 바람.

협력을 통한 관계의 발전이라는 우선적 목표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시점에서, 평화와 직결될 수 있는 남북 간 교류·협력의 증진과 관계의 발전이 국제사회에서 통일보다 더욱 보편적으로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치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목표도 ‘한반도 평화의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기반 조성’이라는 일반적 목표와 다르지 않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미국은 여러 국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공공외교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한반도 평화의 증진을 위한 당면 정책목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의 진전이며,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 미국의 지지와 협력은 (북한의 협력을 제외하고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제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미국은 가장 중요한 공공외교 대상이다. 주지하듯이 현재와 같은 강력한 대북제재가 지속될 때 남북 간 교류·협력의 증진은 한계가 뚜렷할 것이며, 대북제재의 완화 혹은 해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이다. 따라서 대미 공공외교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미국 내 지지 여론을 확대하는 것은 중차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나) 주체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주체는 행정부와 국회, 그리고 학계 및 전문가 집단으로 대표될 수 있다.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목표를 고려할 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는 대북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입법기관으로서 대북정책의 제도화를 추진하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하거나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도 중요할 수 있다. 학계 및 전문가 집단의 역할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평화와 통일에 관한 정책적 전문성을 갖춘 학계 또는 싱크탱크 인사들의 미국 전문가들과의 교류는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주도층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언론, 시민사회, 개인의 역할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그 역할은 실질적으로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첫째, 행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대북정책을 직접 추진하는 주체로서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가지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한국 정부의 대미외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었으며, 이 과제를 위해 미국 정부 및 미국 내 여론주도층의 지지와 공감대를 얻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그리고 통일부와 외교부의 고위 인사들이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의 협의의 장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정책 방안을 조율하기도 하며, 미국의 전문가 등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한국의 정책을 설명하면서 지지 확보를 도모하기도 한다. 최근의 예로, 정의용 외교부장은 2021년 9월 방미 과정에서 미 국무장관 등 행정부 인사들과의 논의뿐 아니라 미국외교협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초청 대담회에 참석하여 한국이 추구하는 북핵문제 해법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⁵¹⁾

둘째, 입법기관으로서 국회는 행정부와 더불어 정부 차원의 매우 중요한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 주체라 할 수 있다. 국회의 대미 정책 공공외교는 주로 의원 외교 차원에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여당 또는 야당의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행정부 및 의회의 인사들 그리고 현지 한반도 전문가들과 교류하거나, 미국의회 인사들의 방한

51) “정의용 “대북 유인책으로 제재 완화 검토할 때”, 『한겨레신문』, 2021.9.2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012445.html>> (검색일: 2021.12.24.).

시 교류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 커트 캠벨 등 고위급 인사들, 미 의회 내 지한파 의원모임인 코리아코커스(Korea Caucus) 소속 의원들을 만나 북미대화 재개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⁵²⁾ 미국 정치에서도 의회는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며, 미국의 대북정책도 미국 의회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의원외교와 같은 국회의 대미 정책 공공외교는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셋째,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싱크탱크 및 학계 전문가 집단의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도 매우 중요하다. 이 전문가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보, 북한의 정치·군사·경제, 남북관계 등에 관한 조사·연구에 기초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미국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내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고, 한미협력 방안에 대한 정책적 아이디어도 교환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등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면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한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예,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세종연구소 등)은 미국의 싱크탱크들과 공동 전문가 세미나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상호 간에 정보와 지식, 정책 아이디어들을 나눈다. 한국의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미국의 싱크탱크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하거나, 반대로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세미나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

52) “송영길, 방미 마치고 귀국.. 미 고위급 평양 방문 등 제안,” 『뉴시스』, 2021.9.24.,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924_0001591750#_eniple> (검색일: 2021.12.24.).

로 한미 간 싱크탱크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 통일연구원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 협력방안을 주제로 한국과 미국 양측에서 각각 6명 이상의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정책 세미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밖에 언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개인도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잠재적인 영향력도 크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자산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있어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산은 지식과 인적·제도적 네트워크라 할 수 있으며, 문화적 자산도 유의미할 수 있다. 우선 지식이 중요한 자산이다.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내 지지와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북한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풍부하고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구상을 미국인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식과 정보가 부족할 때, 미국 내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우리의 근거와 논리도 부족해질 것이며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이해는 대미 정책 공공외교의 중요한 지식자산이 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로 거의 30년째 미국에서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온 북한붕괴론은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혹은 동력을 약화시키거나 정책적 오판을 초래하기도 하였는데,⁵³⁾ 이는 북한체제의 특성 및 북한경제의 실상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53) 예를 들어, 실패한 대북정책으로 평가받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배경에는 북한체제 붕괴론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참조. 김상기 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 94.

고 볼 수 있다.⁵⁴⁾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며 충실한 이해라는 지적 자산에 기반한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미국의 대북정책 오판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인적 네트워크와 제도적 네트워크도 중요한 자산이다. 특히 한미 정부 관료들 간 그리고 한미 전문가 간 인적 유대관계는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제도화된 네트워크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미 싱크탱크 간 교류협력력이 제도화되어 정기적인 전략대화를 갖는 경우, 해당 싱크탱크의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지식, 인적·제도적 네트워크 외에 문화적 자산도 간접적으로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기여할 수 있다. 문화적 자산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호의적 인식을 갖게끔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K-Pop, K-Movie 등이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2021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및 미국 ABC 방송 출연은 전 세계적인 K-Pop 스타인 방탄소년단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 메시지 전달 효과가 배가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라) 매체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주로 인적 접촉, 미디어, 또는 전문화된 의사전달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 인적 접촉은 다시 대면 방식과 비대면(화상)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대면 접촉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접촉

54) Kim Sang Ki and Choi Eun-ju, "The Fallacy of North Korean Collapse," 38North, 2021, 2, 1., <<https://www.38north.org/2021/02/the-fallacy-of-north-korean-collapse/>> (검색일: 2021.9.28.).

방식이 크게 확산되었다. 예를 들어, 정부, 싱크탱크, 또는 학회가 주관하는 미국 전문가들과의 비대면 화상회의가 급증하였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극복된 이후에도 비대면 방식은 국제적 접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써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로는 주로 기성 언론과 인터넷, 정책 관련 저널 등이 활용된다. 민간 전문가들이 주로 이 매체들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관련 쟁점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거나 또는 북한 정세에 관한 분석적 설명을 제시하면서, 미국 내에서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한다. 또한 때로는 정부 고위 관계자나 의회의 인사들이 직접 미국의 언론과의 인터뷰 또는 정책 전문 저널 기고를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내 지지 확대를 도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한 대북전단살포금지 관련 법안이 미국 일각에서 논쟁적 이슈로 부상할 때 CNN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안에 대한 오해 불식을 위한 설명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 전문가들과의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공동연구와 같은 전문화된 의사전달 채널도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위한 주된 매체가 된다. 이 방식은 주로 싱크탱크 또는 학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경우들이 많다. 연구기관 차원에서 미국 방문을 통해 현지에서 한미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미국의 전문가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한다. 한국정치학회 또는 한국국제정치학회 등과 같은 학술단체나 대학 연구소들의 경우에도 미국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문제 관련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한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⁵⁵⁾ 예를 들어, 2021년 2월 한국국제정치학회

55) 박영호 외, 『한국의 대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3).

는 ‘미 바이든 신행정부와 한미관계’를 주제로 한미 국제정치학자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마) 대상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에서 주된 대상은 미국 행정부 및 관료 집단, 미국 의회, 싱크탱크 등의 전문가 집단, 언론, 그리고 미국 시민과 재미교포 사회 등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미국 행정부와 관료집단은 직접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주체로서, 가장 일차적으로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확보해야 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백악관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정책 관계자들, 국무부와 국방부 등의 고위 인사 및 한반도 문제 담당 관료들이 주된 대상들이다.

미국 의회도 미국의 대북정책 혹은 한반도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미국 조야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와 별개로 북한에 대한 독자적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제재는 의회의 법안 채택을 통해 이행되고 있다. 다른 한편, 최근에는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법안과 북미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미국 의회는 한국의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위한 대상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이외에 주목해야 할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대상은 주로 싱크탱크에 속해 있는 전문가 집단이다. 미국의 경우, 외교안보 문제 관련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등의 정부부처 관료들과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싱크탱크의 전문가로 활약하다가 정부부처에 들어가서 관료로서 역할을 하거나, 반대로 정부부처에서 일

하다가 임기가 끝나면 싱크탱크 전문가로 변모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현재 미국 워싱턴의 외교·안보 관련 주요 싱크탱크의 전문가 중 상당수가 정부 관료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평화연구소(USIP: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의 조셉 윤(Joseph Yun)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기부터 트럼프 행정부 초기까지 미 국무부의 대북정책 특별대표였으며,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은 오바마 행정부 국무부에서 비확산 및 군축 담당 특별 보좌관을 역임했다.

특히,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에는 직전 연도까지 싱크탱크 소속이던 여러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등의 고위 관료로 결합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정박은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전까지 브루킹스연구소 소속의 한반도 전문가였다. 또한, 켈리 맥사멘(Kelly Magsamen)은 오바마 행정부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후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로 자리를 옮겼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국방부장관 수석보좌관으로 결합했다.

미국의 언론과 언론인들도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중요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미국 사회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형성되는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지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 증진 문제 또는 북핵문제,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 사회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 미국 시민들도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중요한 대상일 수 있지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을 포괄적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대상으로서 미국의 언론과 언론인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미교포 사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미 한인들은 지역사회에서 또는 전국 단위에서 단체를 구성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행정부 또는 의회에 직접적으로 요구 사항을 전달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미국 의회의 종전 선언 및 북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 관련 움직임에 있어서도 재미 한인들의 목소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민주평통 미국지부도 한반도 평화 증진에 대한 미국 내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재미 한인 사회도 한국의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 대상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중국

(가) 목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목표가 한반도 평화정착, 공동번영, 비핵화라는 점에서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목표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목표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에 대해서는 통일보다 평화를 더욱 강조할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 주변 강국 중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 온 국가이다. 한국전쟁 참전으로 맺어진 북중 혈맹의 역사적 전통과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정도로 북중경협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남과 북에 대해 등거리 외교를 해왔고, 한반도 통일 문제 역시 남한과 북한 중 어느 한 쪽의 편을 들 수가 없는 상황이다. 비록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표명해왔고, 한국 주도의 평화통일이라는 현실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수교 이후 현재

까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지는 않았다.⁵⁶⁾ 더구나 한반도 통일이 한국 주도로 진행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한반도 통일이 가능한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현재의 분단된 현상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 대중국 통일 공공외교의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⁵⁷⁾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통일보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우선적으로 목표화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둘째, 공동번영의 측면이다. 중국은 자국의 정체성을 개발대국으로 규정한다. 이미 경제적으로 세계 2위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감안할 때는 아직 중진국의 수준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习近平) 정권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제시하면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 중진국 수준인 소강사회(小康社会) 달성을 선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 되는 2050년에는 사회주의 선진강대국 될 수 있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⁵⁸⁾ 이러한 중국의 상황은 결국 정치적 영향력 확대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경제적 번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대외경제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역시 그 출발점은 중국의 경제성장의 한계점을 직시하고, 해외 투자와 협력을 통한 자국의 경제성장 활로 확보와 이를 통한 자국의 경제적 번영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조되는 외교적 레토릭 역시 공동번영이다.

56)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으로는 박영호 외,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p. 137~154.

57) 전병근 외,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143~144.

58) “习近平在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中国政府网』, 2017.10.27., <<http://www.gov.cn/zhuanti/19thcpc/baogao.htm>> (검색일: 2021.9.25.).

셋째, 한반도 비핵화의 측면이다.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매우 중요하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성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 중국에도 북한의 비핵화는 중요하다. 핵비확산체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줄곧 가지고 있었던 중국이 바로 주변국인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할 이유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혈맹이라는 역사적 전통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중국에 대해 정치안보적 자율성을 유지해 온 북한의 핵무장은 중국으로서도 통제 불가능한 대상이다. 더구나 북한의 핵을 용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핵도미노 현상에 대한 안보적 우려 역시 큰 상황이다.

다만 북핵의 실질적 해결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노력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 동기가 약하다.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키를 미국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이 북미관계임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목표 설정에서 비핵화 문제는 한반도 평화 구축이나 공동번영보다 그 목표의 중요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오히려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다자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축과 공동번영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다. 즉,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공존과 번영을 위한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나) 주체⁵⁹⁾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주체는 정부 차원, 1.5트랙, 민간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 통일부, 외교부 등 전통적인 평화 공공외교, 통일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주체들이 있다. 중국과 같이 정부의 영향력이 큰 권위주의 체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의 경우 관련 분야 정치 엘리트, 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경우 시진핑 주석의 권력 집중도가 강화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 주석의 외교 인식과 정책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외교를 통한 평화·통일 공공외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국회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중국은 당·국가 체제로 불릴 정도로 국가경영에 공산당의 영향력이 매우 크지만, 최근에는 공산당 외에도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전국정치협상회의 등 입법기구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국회는 정당 차원, 또는 의원 외교를 통해 중국의 주요 정치 엘리트들과 교류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이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부, 교육부, 지방정부, 민주평통, 경제관련 부처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목표가 한반도의 평화구축, 공동번영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평화 조성을 위한 경제협력 확대,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와의 연계, 남·북·중·러 경제협력 구상 등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제 부처, 지방정부 등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59)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주체와 관련해서 전병근 외,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p. 38~40을 바탕으로 재작성.

상호간의 인식 제고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다양한 수단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문화·체육 관련 부처, 미래 세대를 위한 맞춤형 공공외교 및 교육 콘텐츠 확대 차원에서 교육부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또한 오랫동안 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주체로 활동해오면서 중국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민주평통 등이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주체이다.

둘째, 1.5트랙 차원에서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주체는 전략대화를 수행해 온 국책기관들이다. 통일연구원을 비롯하여, 국립외교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방연구원 등 외교안보 분야의 4대 국책연구기관은 중국과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매년 중국의 파트너 기관들과의 정책 세미나, 전략대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 대중국 통일, 정책 공공외교 차원에서 중요한 주체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통일부·외교부-통일연구원 그룹 혹은 4개 국책연구기관 그룹, 공동번영 차원에서 실질적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국책 경제 연구기관과의 협력 그룹 등 다양한 조합을 주요 주체로 설정할 수 있다. 사드(THAAD) 사태로 중단되어버린 한중 국책연구기관 대화는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인문사회, 외교안보, 경제 분야까지 분야별 양국의 1.5트랙 정책 전문가들의 정례적인 대화체는 상호 이해 및 신뢰 구축에 매우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1.5트랙 협력 플랫폼에 대한 시도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 중국과의 전략대화를 추진한 동북아시아위원회, 이명박 정부 시기 한중 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 박근혜 정부시기 한중 공공외교 포럼 등이 있었고,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중 미래발전 위원회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한중 미래포럼을 추진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역시 중요한 주체이다. 다만 1.5트랙 차원의 주요 주체들이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정치적 수요에 따른 이벤트성으로 활동을 한다는 아쉬움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셋째, 민간영역에서는 대학과 학술단체 등 학계와 연구소, 기업, NGO, 언론, 개인 등이 주요 주체가 될 수 있다. 대학으로는 북한대학원대학교,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등이 중국과 왕성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 차원에서는 다양한 협회들이 존재한다. 한중협회, 한중교류협회, 한중문화우호협회 등이 있다. 언론의 경우는 한중 고위언론인 포럼 등이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주요 언론사들이 인터넷에 중문판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또한 KBS는 중국 CCTV 그룹과 한중 문화 교류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인터넷 인구가 확대되고 있어 중국내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 방송업자들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아직까지 평화, 통일과 같은 다소 민감한 외교안보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개인들은 적지만, 사회문화영역에서 한국의 이미지 제고, 역사문제 바로잡기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개인들이 있다. 또한 중국의 유력 신문인 『환구시보(环球时报)』 등에 인터뷰 대상으로 한국 학자 및 전문가들이 진출하면서 향후 이들의 역할 역시 주목된다.

〈표 Ⅲ-1〉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 주체

영역	주체	
1트랙	정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경제부처
	의회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국회의원
	국가기관	민주평통, 지자체 정부

영역	주체	
1.5 트랙	공공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 세종학당, 한국관광공사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국방연구원 등
	미디어	KBS 등
2트랙	학회, 연구기관	북한대학원대학교,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성균중국연구소 등
	민간단체	한중협회, 한중교류협회, 한중 고위언론인 포럼 등
	개인(디지털)	개인 방송업자, 유튜버, 인터넷 인플루언서

출처: 저자 작성.

(다) 자산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 수행에 있어 주요 자산은 한국의 대북정책(평화, 번영, 비핵화 등), 한국의 발전경험, 문화예술, 경제, 지식자산 등이다. 문제는 평화·통일 공공외교 수행에 있어 핵심자산으로 한국의 대북정책이 대다수 중국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데 있다. 대신 중국의 엘리트나 대중들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한국의 평화, 번영, 비핵화 정책 등에 대한 관심을 간접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주요 자산으로는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예술 콘텐츠가 있다. 과거에는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이 매우 매력적인 자산이었으나, 중국의 급속한 경제 부상으로 인해 이 자산의 매력도는 다소 떨어진 상황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의 선진적인 경제 거버넌스 등은 중국인들에게 통할 수 있는 매력 자산이다.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에서 지식자산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대북정책, 통일방안, 평화외교 등에 대한 지식들은 위에서 언급했던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논의되고 활용되면서 중국의 관료나 전문가들이 한국의 상황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라) 매체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 수행을 위한 매체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플랫폼이 있다. 지식자산을 전파하기 위한 전략대화, 인적 교류, 교육 프로그램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위에서 언급된 한중간에 진행되어 온 각 주체별 평화통일 전략대화, 정책 세미나, 상호인적 교류, 교육 교류 등 매우 다양하고, 다층적인 차원의 매체가 개발되어 있다. 문화자산의 전파는 전시, 공연 등 수단이 있고, 정부, 민간(기업) 등이 진행해 온 다양한 한국 문화자산 홍보활동 등이 있다. 사드 사태와 중국의 한한령 등으로 인해 한중간 문화자산 교류가 다소 경직되었지만, 2021년 1월 한중 정상외교가 ‘한중 문화 교류의 해’ 선포를 통해 한중간 문화 교류 활성화를 약속한 것처럼 향후 문화전시, 공연, 방송 등 매체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의 현지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에 진출한 다수의 한국기업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장학금,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실질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인 중국인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해왔다. 사드 사태와 코로나19로 이어진 한중 관광 교류 중단은 복원 역시 중요한 매체로 활용될 수 있다. 중국의 ‘유커(遊客)’는 한국 관광시장의 주요 큰 손이고, 최근 중국인들의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면서 과거 단체 관광이나 단체 쇼핑 대신 개별 관광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남북분단, 한반도 평화, 통일과 연관된, DMZ 생태공원, 판문점 등에 대한 관광자원을 적극적인 매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언론 및 소셜네트워크 역시 매우 중요한 매체이다. 『KBS 월드 라디오』와 『연합뉴스』가 중국어 방송을 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도 중국어판을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인터넷 인구가 급속도로 증

가하고, 특히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여론 조성과 그 영향력이 엄청난 상황을 감안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평화·통일 관련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는 이 공간은 매우 중요한 매체일 것이다.

(마) 대상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은 정부, 전문가, 여론주도층이 될 수밖에 없다.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특성상 지식 혹은 정책외교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상도 일반 대중들 보다는 이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갖추어진 그룹이 더 적합하다. 중국 사회가 다원화되고 시민역량 역시 성장하고 있지만, 일반 대중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 같은 이슈에 관심을 가지기 힘들고, 특히 자국의 문제가 아닌 이웃국가의 통일 문제, 비핵화 등의 이슈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기는 쉽지 않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한국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중국의 체제 특성상 외교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 역시 한계가 많다. 따라서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대상은 여전히 정부관료,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들로 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 수행에 있어 대상에 따른 맞춤형 접근은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 즉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 중국인들이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 수행에 있어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역지사지의 자세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3) 일본

(가) 목표

한일관계의 복잡한 전개과정의 결과, 현 단계 한일관계는 ‘갈등’과 ‘협력’이 여러 분야와 여러 수준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갈등과 협력의 다각적 다층적 복합구조’를 갖게 되었다.⁶⁰⁾ 사실 한일관계 갈등의 기원은 ‘반공연대’ 구축이라는 안보협력을 위해 ‘식민지 유산’ 청산이라는 역사화해 노력을 봉인한 데에 비롯되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은 고노 담화(1993년), 무라야마 담화(1995년), 한일 신파트너십 선언(1998년), 간 담화(2000년) 등을 거치면서 역사 화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반면 냉전 종식으로 안보협력의 동인이 약해지면서 한일관계가 이완되어 구조변동기에 들어갔다. 이러한 가운데 한일간 경제협력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으며, 비영리 시민단체간 교류, 학술교류,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양국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한일관계를 고려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캐치 프레이즈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이며, 여기에는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국민외교와 공공외교, 국익증진의 경제외교와 개발협력, 전략적 경제협력이 포함된다.⁶¹⁾ 문재인 정부는 북한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북정책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한미, 한일 간 소통과 대화를 모색해 왔다. 특히 한일 간 협력과 대화의 선순환이 북일관계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0) 남기정,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 한국 외교의 ‘대전략’과 한일관계,” 『국가안보와 전략』, 제17권 3호 (2017), p. 37.

61) 김숙현, “한일관계 변화에 따른 동북아 정세 파급영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전략보고 제66호, 2020.2.25.), p. 8,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js_view.do?ntId=408789&bbsId=js&page=9&searchCnd=0&searchWrd=> (검색일: 2021.12.24.),

문재인 정부는 대일관계에서 정치경제와 안보협력 vs 역사영토 대일원칙 외교라는 두 트랙 접근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한일 양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 강화를 통해 일본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평화질서 파트너로서 일본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민간 차원의 노력도 지속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상은 일본의 국익에 부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후 일본은 ‘한반도의 안정화’를 추구하였고, 특히 핵을 가진 북한은 한반도 안정에 매우 심각한 불안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를 통한 비핵화가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의 안정화’를 위한 것임을 일본 정부,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공감 형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나) 주체

한국의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주요 행위자는 정부 차원에서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통 등이 있으며, 반민반관·준정부 차원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등이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한일협력위원회, 한일 평화증진포럼, 세종연구소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 외교부, 민주평통이 한반도 평화 및 통일 관련 대일본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K-Pop, 한식 등 한

류 문화를 소개하고, 한일 체육교류를 지원하며 DMZ 관광 등 한국 관광을 소개하는 활동을 통한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둘째, 한국의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정부 차원 이외에도 반민반관·준정부기관과 같은 1.5트랙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먼저 지식 및 문화외교 영역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정책 공공외교 영역에서는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한국국방연구원 등이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셋째, 민간 차원에서는 크게 학계 및 대학 연구소, 민간교류단체로 나눌 수 있다. 학계 및 연구소는 서울대 일본연구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등이, 민간교류단체는 한일협력위원회, 한일미래포럼, 한일 언론인 포럼 등이 꾸준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표 III-2〉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 주체

구분	주체	
1트랙	정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통
	국회	한일의원연맹
1.5트랙	공공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한국국방연구원
	미디어	국제방송(아리랑 TV, KBS World)
2트랙	학계, 연구소	서울대 일본연구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등
	민간교류단체	한일협력위원회, 한일미래포럼, 한일 언론인 포럼 등

출처: 저자 작성.

(다) 자산

한국은 무엇보다 ‘지식’을 자산으로 하는 지식 공공외교 및 정책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통일부, 외교부, 민주평통 등이 중심이 되어 일본의 정책결정자, 지식인, 언론계 인사, 시민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포럼, 세미나, 심포지엄,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한편 지식 및 정책 자산 이외에도 문화, 스포츠, 한국학 자산 등을 활용한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랑의 불시착』과 같이 한반도 분단을 다룬 드라마를 통해 일본 국민들이 한반도 상황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일본 관광객들의 판문점 방문을 유도하여 한반도 분단 및 평화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거두는 부수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한류를 통한 풀뿌리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청구권 문제와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에도, 2020년에 BTS로 대표되는 K-Pop과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 그리고 영화 『기생충』의 인기가 일본에서 한류붐을 지속시켰다. 이처럼 역대 최악이라고 불린 한일관계와 코로나19로 인해 상호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글로벌한 문화소비의 환경을 매개로 ‘K-Culture’의 소비층이 늘어나고 한류가 그 기반에 있다는 것의 의미는 매우 크다.⁶²⁾

특히, 한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는 연령층도 30~40대에서 10~20대로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10~2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⁶³⁾ 2020년 10월, 18세 이상 일본

62)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일본정세 2020』 (서울: 국립외교원), pp. 116~117.

63) 일본에서 2000년대 중반에 한글능력검정시험의 주된 수험자가 30~40대의 여성이었던 것에 반해, 2019년 11월에 실시된 제53회 시험에서는 10~20대가 68.1%를 차지하였다. 위의 책, p. 117.

성인 1,865명을 대상으로 한 일본 내각부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에 친근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역대 가장 높은 64.5%를 기록한 반면, 한류의 주 소비층인 18~29세 청년층의 54.5%가 ‘한국에 친근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⁶⁴⁾

물론 일본 내 사회적·시대적 흐름에 의해 한국에 대한 호감을 전면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내면적인 호감이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연령대가 10대, 20대 사회초년생에게 몰려있는 바, 미래사회에 한국에 대한 호감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로 보인다. 특히 자신의 의견을 공적인 장소에서 표현하는 것을 꺼려하던 기존의 기성세대와 달리 자신의 의견을 공적인 곳에서도 피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한국에 대한 호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류를 통한 문화 공공외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의 핵심 문화자산인 한류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 역시 일본 내 한류 소비층에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 하지만 문화 자산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결합시키는 콘텐츠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드물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적합한 콘텐츠 구성 및 형성에서도 아직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자산을 유일한 피폭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일본과 함께 한반도 평화 및 동아시아 평화를 향한 협력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갈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64) 内閣府, “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令和2年10月),” <<https://survey.gov-online.go.jp/r02/r02-gaiko/zh/z10.html>> (검색일: 2021.10.31.).

(라) 매체

한국의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각종 플랫폼 및 프로그램을 매체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 및 민간은 강연, 회의, 공동연구, 인적 교류 등의 매체를 통해 일본 정부와 일반 국민들에게 한반도 평화 및 통일의 필요성을 전달한다.

최근에는 공영방송, 신문 등 기존의 주류 매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수단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나 유튜브 등을 통해 한국 및 한반도 문제를 접할 수 있으며, 한반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국민들은 위성방송 및 케이블 TV를 통해 한국 방송(아리랑 TV, KBS World)을 시청할 수 있으며 북한 핵문제 및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한반도 정책 등을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의 보급은 한반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마) 대상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정치, 경제체제를 비롯해 자유,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이다. 무엇보다 일본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들의 여론 형성이 외교 정책 결정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공공외교를 추진하는데 일본 정부와 산하단체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추진방안도 긴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주요 대상인 정치인 등 정책결정그룹과 학자 및 언론인과 같은 여론주도층은 물론이고, 향후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과 같은 차세대 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민간 계층을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한반도 문제의 이해당사자인 일본 정

부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에 대한 한반도 평화, 통일 관련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한일 간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한일 간 현안사항에 대한 일본의 오해를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러시아

(가) 목표

대러시아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목표는 러시아 국민이 한반도 분단 및 갈등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이 남북은 물론, 러시아의 평화와 번영, 특히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자국의 극동 개발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민간은 긴밀하게 협력하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러시아 국민 전체, 특히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자발적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방적 메시지 전달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을 러시아 국민이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지·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나) 주체

한국의 대러시아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주체는 정부, 의회, 국가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1트랙’,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미디어 등으로 구성되는 ‘1.5트랙’, 학회, 연구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2트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대러시아 평화·통일 공공외교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는 주체들을 정리하면 <표 III-3>과 같다.

<표 III-3> 대러시아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 주체

영역	주체	
1트랙	정부	통일부, 외교부(주러 대사관,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주 블라디보스토크, 주 이르쿠츠크 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 국립외교원 포함) 등
	의회	한·러의원외교협의회, 국회의원
	국가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교육부 산하), 한국교육원(교육부 산하, 로스토프나도누, 사할린,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소재), 주러 한국문화원(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산하), 민주평통 러시아 지역회의 및 모스크바·블라디보스토크 지역협의회 등
1.5트랙	공공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모스크바 사무소 포함), 세종학당재단(세종학당 포함), 한국관광공사(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지사 포함), 한국문학번역원 등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미디어	KBS 월드라디오, 아리랑 국제방송 등
2트랙	학회, 연구기관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한국유라시아학회,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고려대 러시아·CIS 연구소, 서울대 러시아연구소, 국민대 유라시아연구소, 경희대 유라시아연구소, 배재대 한국-시베리아센터,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등
	기업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민간단체	한·러 대화(KRD), 한·러교류협회, 한·러문화예술협회, 삼일문화원, 원광한국학교 등

출처: 저자 작성.

(다) 자산

한국의 대러시아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자산에는 지식자산, 문화자산, 기업자산, 관광자산 등이 있다. 첫째, 지식자산에는 분단 및 전쟁의 유산과 남북 대립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실현한 역사적 경험,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제도와 정책 등이 포함된다.

둘째, 문화자산이다. 러시아와 오랜 교류 역사를 가진 중국 및 일본과 비교해 그동안 한국 문화자산의 경쟁력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1990년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한국 상품의 우수한 품질 덕분에 형성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 음악, 영화 등을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전통 및 현대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날로 커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셋째, 기업자산이다. 현지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차원에서 현지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는 기업 자체 및 상품의 이미지와 함께 한국에 대한 호의적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다.

넷째, 관광자산이다. 관광자산은 직접 방문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외교 대상이 한국 및 한반도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은 2005년 14만 3,850명에서 2019년 34만 3,057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관광객 증가에는 2014년 1월 1일 발효된 비자면제협정이 큰 역할을 했다. 이미 협정이 발효된 직후인 2014년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10만 명대에서 20만 명대로 증가했고, 2018년에는 30만 명대로 증가했

다.⁶⁵⁾ 관광자산에는 전통 및 현대 문화, 자연 및 생태환경, 관광 장소 및 시설 등이 포함되지만, 특히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는 의료서비스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치료와 관광을 결합한 의료관광이 의미 있는 자산이 되고 있다.

(라) 매체 및 대상

한국의 대러시아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매체에는 연설 또는 강연, 회의체, 인적 교류, 전시 및 공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미디어 홍보 등 전통적 매체와 함께 네트워크 구축, 사이버 매체 등 새로운 방식의 매체도 포함된다.

첫째, 연설 또는 강연은 주로 한국의 대통령 또는 정부 주요 인사가 러시아 현지에서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수행한다. 이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연설 또는 강연의 핵심적 메시지가 러시아 국민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파급효과 역시 크다.

둘째, 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이다. 여기에는 국책연구기관, 학회 및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이 러시아 측 파트너와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러시아 측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학술회의, 세미나 등이 포함된다.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들, 특히 시니어 전문가들은 북한의 입장에 대한 공개적 또는 암묵적 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방적 메시지 전달은 오히려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회의체는 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라 할 수 있다.

65) 관광 지식정보시스템, “입국 관광통계,” <<https://know.tour.go.kr/>> (검색일: 2021. 5.24.).

셋째, 인적 교류이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은 러시아의 분야별 전문가 초청 또는 지원을 통해 교육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이른바 ‘지한파(知韓派)’를 육성하고 있다.

넷째, 전시 및 공연이다. 주로 현지에서 한국 관련 전시 및 공연행사를 통해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및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다섯째, 미디어 홍보이다. 1961년 2월 러시아어 방송을 시작한 KBS 월드라디오(KBS World Radio)는 2006년 9월 모스크바 AM(738kHz) 송출을 개시하고, 2014년 3월 시베리아향 단파(9645kHz) 송출을 개시했다. 하지만 2019년 5월 모스크바 AM 송출을 중단하고, 10월 극동향 중파(1170 kHz) 송출을 재개하면서 WRN 위성 송출을 폐지했다.⁶⁶⁾ 대신 러시아어 텍스트와 오디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⁶⁷⁾ 러시아 국민이 방송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아리랑 국제방송(Arirang TV)은 러시아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 3월부터 러시아어 자막 서비스를 시작했다.⁶⁸⁾

여섯째, 네트워크 구축이다. 이는 현지 한국학자 또는 한국학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한반도 전문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네트워크 구축은 지속 가능한 공공외교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화’로 규정할 수 있다.

66) KBS WORLD, “KBS WORLD Radio 소개,” <http://world.kbs.co.kr/service/about_kbsworld.htm?lang=k> (검색일: 2021.5.24.).

67) KBS WORLD 러시아어 버전, <<http://world.kbs.co.kr/service/index.htm?lang=r>> (검색일: 2021.5.24.).

68) “아리랑TV 다언어 자막방송,” 『스포츠경향』, <https://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0802212104076&sec_id=540201> (검색일: 2021.5.28.).

일곱째, 사이버 매체이다. 인터넷 웹사이트 기반의 콘텐츠를 벗어나, 최근에는 유튜브(YouTube) 등을 이용하여 한국어 또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매체는 불특정한 젊은 세대의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매체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매체보다 전파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2. 영역별 추진실태

가. 지식 공공외교

(1) 미국

지식 차원의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미국을 대상으로 폭넓게는 한국과 한반도에 대한 일반적 이해의 확대 및 심화, 좁게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는 정부, 정부출연기관(1.5트랙), 또는 민간 차원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연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식으로 추진되며, 정부 또는 민간 학술단체에서 진행하는 학술회의 방식 등으로 추진되기도 한다.

(가) 정부 차원

지식 차원의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대표적인 방식인 미국인들 대상의 교육 또는 연구 프로그램의 운영은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으로는 우선 통일부와 외교부가 진행하는 몇 가지 사업을 들 수 있다.

통일부는 2020년부터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해외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체로 북핵문제 혹은 한반도 주변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반면, 북한체제의 특성 또는 북한의 정치·사회·문화 등에 대한 이해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미국을 비롯한 해외의 북한전문가들을 육성하기 위한 장기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위 과정의 경우 2~3년 간 지원하며, 펠로십의 경우에는 1년 간 지원한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운영하는 ‘해외 신진학자 초청 연수 프로그램’도 있다. 이 사업은 10일 이내로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현장 견학 및 세미나 등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단기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10여개 국가의 20여명을 초청한다.

또한 통일부는 연례적으로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Korea Global Forum for Peace)」을 개최한다.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은 2010년 창설된 다자 국제포럼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주제를 다루며, 세계 20여개국 이상의 북한 및 한반도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왔다.⁶⁹⁾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비대면 회의 병행 방식으로 한국에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남북관계 새로운 비전과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를 주제로 진행되었고, 다수의 미국 학자와 전문가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거나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다.⁷⁰⁾

외교부의 경우, 주로 국립외교원을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국립외교원이 운영하는 ‘동아시아외교 전문과정’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과 동아시아 외교 현안에 관한 지식 공유를 도모하기 위해 국내에서 운영하는 외국 외

69) KGFP 홈페이지 참조, <<https://kgfp.kr/about>> (검색일: 2021.10.1.).

70) “통일부,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개최.. 새 남북 비전 논의,” 『뉴시스』, 2021.8.27.,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27_0001563324> (검색일: 2021.10.1.).

교관 대상 교육과정으로서 장기과정과 특별과정이 있다.⁷¹⁾ 장기과정은 연 1~2회 각 20~25명을 선발하여 10~15주 동안 교육이 이루어지며, 특별과정은 3~4주 동안 주3회 교육을 진행한다. 둘째, 국립외교원은 신규로 부임하는 주한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이다. 1~2일에 걸쳐 진행되지만 한국의 외교정책을 포함한 주요 정책,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며, 한국 외교부 직원들과의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⁷²⁾ 셋째, 국립외교원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초청한 외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언어문화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1주일의 교육기간 동안 강의를 통해 한국의 외교, 경제, 문화 등에 대한 외국 외교관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현장 견학도 병행한다.⁷³⁾

(나) 1.5트랙 차원

1.5트랙 차원의 지식 측면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주로 외교부 출연 혹은 산하 기관들이 추진하는 국제포럼,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운영된다. 첫째, 외교부 출연 연구기관인 제주평화연구원은 연례적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하 ‘제주포럼’)을 주관하고 있다. 2001년 처음 시작한 제주포럼은 국제종합포럼으로서 세계적 저명 인사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에 관한 대화와 논의를 진행하는 장으로 역할을 해왔다.⁷⁴⁾ 제주포럼은 미국 등 해외

71)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knda.go.kr/knda/hmpg/kor/stac/EadpList.do>> (검색일: 2021.10.1.).

72)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knda.go.kr/knda/hmpg/kor/stac/DiplomatList.do>> (검색일: 2021.10.1.).

73) 위의 홈페이지 참조 (검색일: 2021.10.1.).

에서 참여하는 인사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간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왔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었고, 대주제는 ‘지속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이었다.

둘째, 외교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미국 등 해외 대상 한국학 강좌 설치·운영 지원 사업 및 한국학 전문가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해외 대학에 한국학 교수직 신설, 한국학 객원교수 파견, 또는 한국학을 전공하는 외국인 석·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포함한다. 물론 이 사업들은 한반도의 평화 증진 및 남북관계 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 한국 혹은 한반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증진 그리고 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의 양적·질적 성장이 결국 미국 사회에서 한반도의 평화 및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내 한국학 육성 및 확산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은 미국을 포함한 해외 교포 교육 사업을 통해 대미 공공외교에 기여한다. 재외동포재단은 구체적으로 한글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 한글 교사 국내초청 연수를 비롯하여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한글, 한국사, 한국문화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⁷⁵⁾ 지난 2021년 6월 재외동포재단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미주한국학교연합회 등과 화상 간담회를 갖고,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협의했다.⁷⁶⁾ 재미교포의 한국 및 한반도에 대한 이해

74) 제주평화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http://jpi.or.kr/>> (검색일: 2021.10.1.).

75)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s://www.okf.or.kr/homepage/business/fund_business.do> (검색일: 2021.10.1.).

76) “재외동포재단, 미주 한글학교와 화상간담회,” 『매일경제신문』, 2021.6.9.,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6/556886/>> (검색일: 2021.10.1.).

제고,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미국 내 공감대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 민간 차원

정부 차원 또는 1.5트랙 차원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민간 학술단체, 연구소 등이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지식 공공외교도 존재한다. 한국정치학회가 2007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하는 ‘한국정치 세계학술대회’가 하나의 사례이다. 이 학술대회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연구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혹은 한반도 관련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문제 등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서로의 연구성과를 나누고 교류하는 기회를 가진다. 2021년에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위기에의 대응: 역사적 전환기에 한국의 길’을 대주제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⁷⁷⁾

또한 동아시아연구원은 2021년부터 북한 전문 영문 웹저널 글로벌 NK(Global NK)를 운영하고 있다. 이 웹저널은 북한 및 한반도 이슈 관련 국내 및 해외 연구자들의 논문이나 현안 관련 기고, 전문가 인터뷰를 게재하고, 기타 각종 문헌 자료들을 제공한다.⁷⁸⁾ 이와 같은 영문 웹저널의 운영은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 여론주도층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지식 차원에서 효과적인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수단이 될 수 있다.

77) 한국정치학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kpsa.or.kr/homepage/kpsa2/www/img/kpsa/2021prog_book01.pdf> (검색일: 2021.12.8.).

78) 유사한 사례로서 현재 미국의 싱크탱크 스티imson센터(Stimson Center)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저널 38노스(38North)가 있다.

〈표 III-4〉 대미국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 주체 및 사례

구분	프로그램	주요 내용
정부	통일부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미국을 비롯한 해외의 북한전문가 육성 목적 장기 프로그램 - 학위 과정의 경우 2~3년 지원, 펠로십의 경우 1년 지원
	통일부 해외 신진학자 초청 연수 프로그램	해마다 10여개 국가 20여명 초청, 10일 이내 단기과정
	통일부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2010년부터 연례적으로 한국에서 개최, 한반도 문제 지식공유
	외교부 (국립외교원) 동아시아외교전문과정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동아시아 외교 현안 지식공유 - 장기과정: 연1~2회, 각 20~25명, 10~15 주 교육 - 특별과정: 3~4주 동안 주 3회 교육
	외교부 (국립외교원) 주한외교관 한국소개 프로그램	한국의 외교정책, 경제, 사회, 문화 등 교육 - 교육기간: 1~2일
	외교부 (국립외교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 외교관 한국언어문화연수	한국의 외교정책, 경제, 사회, 문화 등 교육 및 현장견학 병행 - 교육기간: 1주
1.5트랙	(제주평화연구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한국에서 개최, 한반도 문제 지식공유
	(한국국제교류재단) - 한국학 강좌 설치/ 운영 지원 - 한국학 전문가 육성 사업 등	- 해외 대학의 한국학 교수직 신설, 교원교육 지원, 객원교수 파견 등 - 한국학 전공 외국인 석·박사과정생 장학금 지원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교육사업	- 한글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 한글 교사 국내 초청 연수 등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활성화
민간	(한국정치학회) 한국학 세계학술대회	- 2007년부터 격년으로 개최 - 한국 혹은 한반도 관련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문제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연구성과 교류

구분	프로그램	주요 내용
	(동아시아연구원) 북한전문 영문 웹저널 『글로벌NK』 운영	- 북한 및 한반도 문제 관련 국내 미 해외 연구자들의 논문, 현안 기고, 전문가 인터 뷰 게재 등

출처: 저자 작성.

(2) 중국

한국 정부의 공공외교 추진전략에서 지식 공공외교는 한국의 역사, 전통, 발전상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확대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⁷⁹⁾ 이러한 지식 공공외교의 내용을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적용하면, 한국의 평화관, 평화를 지향해온 역사, 그리고 한반도 분단의 상흔과 그와 관련한 역사 및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학문적 논의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뿐 아니라, 1.5트랙,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공공외교를 수행해오고 있다.

(가) 정부 차원

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 행한 대중 연설은 한국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효율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방중 당시 베이징대학 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킨 바 있다.⁸⁰⁾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7년 중국 방문 당시 베이징대학 연설

79) 외교부,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p. 5.

80) 대통령기록관, “김대중 대통령, 중국 베이징 대학교 연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 협력),” 1998.11.12.,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검색일: 2021.9.20.).

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⁸¹⁾ 또한 교육부는 중국과 정례적인 교과서 세미나 등을 통해 중국 교과서에 한국 관련 오류 시정을 위해 노력해 왔고, 문화 및 역사 왜곡 문제와 관련한 수정 노력을 전개 중이다.⁸²⁾

다음은 외교부로 외교관들의 주요 업무가 우리 핵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점에서, 중국 내 다양한 관료 및 전문가들을 접촉하고 북한 문제 및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있다. 통일부 역시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주중한국대사관에 통일 주재관을 파견시키고, 중국 내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다양한 지식외교 및 중국의 여론 인식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통일부는 글로벌 통일 교육 사업을 통해 중국의 신진학자, 중국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중국인들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시킨다.⁸³⁾

(나) 1.5트랙 차원

1.5트랙 차원에서는 과거 동북아시아위원회, 한·중 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 등 정부별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가 중국과 정례적 대화채널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제 등과 관련한 지식 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들은 매번 구성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정부별 성격에 따라 우리 정책 위주 홍보에 치우쳤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대신 국책 연구기관들의 역할은

81) “문재인 대통령 베이징대 연설 전문,” 『연합뉴스』, 2017.12.15., <<https://www.yna.co.kr/view/AKR20171215067000001>> (검색일: 2021.9.25.).

82) “교육부, 일본·중국 역사왜곡에 적극 대응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2021.3.30., <<https://www.fnnews.com/news/202103301432502383>> (검색일: 2021.9.25.).

83) 국립통일교육원 글로벌 통일 교육 관련 설명, <https://www.uniedu.go.kr/uniedu/home/cms/page/uni_global_edu/view.do?mid=SM00000904> (검색일: 2021.9.25.).

정부 위원회에 비해 지속성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통일연구원을 비롯한 국내 다수 국책연구기관들은 중국을 상대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주체로 활동해 왔다. 특히 한중관계가 활발해지면서 다수의 중국내 한반도 전문가 및 오피니언 그룹들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각 국책 연구기관들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하고, 한국의 대북정책, 평화정책, 통일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역사 및 교육 관련 국책연구기관들의 경우는 문화, 역사 문제 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중국과 이 영역에서 갈등과 이견의 골을 좁히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활동이 지식외교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상하이에서 한중 전문가 포럼 등 관련 행사를 조직하고, 임시정부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동아시아 평화체제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평화와 통일 관련 지식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다.⁸⁴⁾

(다) 민간 차원

민간 차원에서는 국내 대학과 학술단체들의 활동이다. 국내 대학의 평화, 통일, 안보 등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중국과의 학술 세미나가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을 정도로 많은 지식 교류 활동이 진행되어왔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성균중국연구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등은 중국 푸단대 한국학연구센터, 길림대 동북아연구원, 연변대 등과 이미 오랜 기간 정례적 세미나 활동을 수행해왔다. 이 밖에서 한중친선협회, 21세기한중교류협회 등 다양한

84) 한국국제교류재단, “KF,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한중컨퍼런스’ 개최,” 2019. 2. 26., <<https://www.kf.or.kr/kf/na/ntt/selectNttInfo.do?nttSn=29238&bbbsId=1304>> (검색일:2021.9.25.).

사회단체들이 중국인민외교학회, 중국 송경령기금회 등 사회단체와 같이 한중 고위지도자포럼, 한중 차세대지도자포럼 등 다양한 포럼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통일 문제 등에 대한 지식 교류를 수행하였다.

(3) 일본

(가) 정부 차원

통일부는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통일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5트랙 민·관 합동 포럼인 「한반도국제포럼」(KGF: Korea Global Forum)을 2010년에 창설한 이후 매년 국내외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 「한반도국제포럼」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아세안 등 전 세계 20여 개 국가의 전·현직 관료와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공감대 형성 및 인식 공유를 지향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비공개 포럼에서는 동북아 및 북한 정세 변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한다. 2019년에는 한반도국제포럼 발족 10회차를 맞아 한반도국제포럼의 목적과 취지를 더욱 부각시키려는 차원에서 「한반도국제평화포럼」(Korea Global Forum for Peace: KGFP)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의 도쿄 개최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8월 29일에는 ‘한반도 평화의 길’, ‘국제 사회에 대한 북한의 도전과 국제 협력’을 주제로, 2018년 5월 31일에는 ‘남북, 북미정상 회담 이후 한일관계’, 2019년 7월 16일에는 ‘한반도 비핵·평화와 일본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도쿄에서 개최하였다.⁸⁵⁾

2020년 통일부는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이외에도 일본, 유럽, 미국 등의 한반도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를 총 70여 차례에 걸쳐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10월 15일에는 한일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동북아 평화구축을 위한 한일 협력 방안 및 일본의 역할’을 주제로 비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일본의 평화·통일 공공외교 네트워크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강원도와 평창군이 주최하는 「평창평화포럼」은 차별화된 평화의제 발굴 및 구체적인 실천 과제 제시로 인류 평화 증진 방안 모색 및 국제사회 평화 목표 실현을 위한 강원도 위상을 제고하고,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이슈화로 도민 안전 및 생존권 보장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남북평화협력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자산 및 매체는 지식, 회의체, 스포츠 교류, 방문 등이며 평화·국제협력 분야 전문단체 및 개인, 시민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21년 2월 9~11일까지 열린 「평창평화포럼」 중 ‘전쟁의 산물을 평화의 유산으로: 한국의 비무장 지대(DMZ)와 일본의 평화헌법’이란 주제의 패널에 아키바 타다코시 전 히로시마 시장이 참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⁸⁵⁾

(나) 1.5트랙 차원

한국학 확산의 차원에서 1.5트랙 차원의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994년부터 교육 및 연구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을 알린다는 목표 아래 한국학 진흥사업을 추진

85) 김남은, “한국의 대일본 평화 공공외교 실태 조사,”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5.12.),

86) 윤석정, “한국의 대일본 평화 공공외교 실태 조사,”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5.11.),

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일본 도쿄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⁸⁷⁾

첫째, 일본 대학, 고교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학 지원 사업이다. ‘한국학 기부강좌’는 일본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KF기부강좌’ 지원을 통해 일본 대학 내 한국 관련 강좌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정치’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학회 및 연구회, 고교 한국어 능력시험 지원을 통해 지역별, 학문별 학자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고교 한국어 교육 지원을 통한 대학의 한국어 수강인원 양성 및 고교-대학 연계교육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현지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한 ‘한일 교류 지원’ 사업은 강연, 회의, 행사 등 각종 이벤트를 통해 한국 소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원생 장학제도 워크숍’은 대학원생 장학제도 수혜자 및 지도교수를 대상으로 장학제도 수혜자들간 상호 네트워크 형성 및 차세대 학자군 육성을 목적으로 온·오프라인 워크숍을 연중 개최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문화한류 및 네트워크 확산 사업이다. ‘2021 Tokyo K-book Festival’은 한국문학을 포함해서 한국 도서 소개 행사 개최를 통해 문화한류 확산을 목적으로 하며, 작가, 서점, 일반인을 대상으로 11월에 북페어, 작가·북디자인 토크쇼 등을 개최하였다. ‘한일 차세대 문화인 대담’은 한일 차세대 문화인들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한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한일 예술가 2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대담회를 개최하였다. ‘KF 프렌즈 네트워크 사업’은 한국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활용 진로를 안내하고, 활동 가능한 한일교류 비정부기구(NPO/NGO)

87) 한국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 <<https://www.kf.or.kr/kf/cm/cntnts/cntntsView.do?mi=1643&cntntsId=1567>> (검색일: 2021.10.1.).

를 소개하며, 대학생 상호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한 네트워크 형성 및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어 수강생 및 교수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간담회를 연중 개최한다.

(다) 민간 차원

‘한일 시민 100인 미래 대화’는 2017년 제주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로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 시민 행사이다.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한일간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일 양국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함께 진솔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의 미래세대라 할 수 있는 대학생들 간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양대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는 2016년부터 ‘한일 상생을 위한 인문사회포럼’을 주관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제4회 포럼은 부산에서 한일·일한학생미래회의(KJ·JKSFF)와 공동 개최했고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이 한일관계 및 미래세대 간 대화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민간 차원에서는 한일관계 악화 속에서도 한일 미래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들, 대학생을 비롯한 미래세대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4) 러시아

지식 공공외교는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한국어 진흥 및 한국어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외교적 활동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지식 차원의 대러시아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를 주제로 하는 한러간 전략대화나 세미나에서 전문적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

감대를 형성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실태는 정책 공공외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한국 및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해하는 기반이 되는 한국학 및 한국어 지원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가) 정부 차원

먼저, 해외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을 가장 활발하게 수행하는 국가기관 중 하나는 해외 한국학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이다. 해외 한국학 지원사업은 학술연구, 학술회의, 학술지 및 단행본 발간, 교육 및 문화행사, 해외 한국학 저서 번역 분야로 나누어 해외 한국학자들의 과제를 지원한다. 최근 2년간 러시아 현지 한국학자들의 신규 과제로는 학술연구 분야에서 2020년 2건, 2021년 1건, 학술회의 분야에서 2021년 1건, 교육 및 문화행사 분야에서 2020년 1건이 선정되었다.⁸⁸⁾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한국학진흥사업단이 운영하는 해외 한국학사업은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초기 3년, 발전 5년 지원),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5년 지원), ‘한국학 세계맵 사업’(연구비 1회 지급, 연구 기간 3년), ‘한국학 전략 연구소 육성사업’(10년 지원), ‘한국 학술번역 사업’(3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이후 러시아 현지 대학 중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 차원에서 2016~19년 카잔 연방대,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 차원에서 2019~24년 카잔 연방대, 2016~21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2015~20년 극동 연방대, 2010~1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가 지원을 받았다.⁸⁹⁾

88)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지원사업,” <<https://www.aks.ac.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1010141100>> (검색일: 2021.6.2.).

89) 한국학진흥사업단, “한국학진흥사업 소개,” <<https://ksps.aks.ac.kr/hpjsp/hmp/bizguide/koreanstudypurpose.jsp>> (검색일: 2021.6.2.).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현지 외교공관 역시 지식 공공외교를 수행하고 있다. 주러 대사관은 2020년 9월 한국 고전문학을 알리기 위해 1956년 러시아의 시인 안나 아흐마토포바가 러시아어로 번역한 한국 고전시가집을 재출판하여 배포했다. 재외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사할린 주의 행정중심지에 위치한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도 2020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하여 양국관계 발전과 향후 발전 방향과 함께 한국 문화·역사 등을 주제로 하는 한국어 발표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원도 지식 공공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 현지에는 1993년 12월 사할린, 1995년 3월 블라디보스토크, 1997년 8월 하바롭스크, 2001년 로스토프나도누를 포함하여 무려 4개의 한국교육원이 설치되어 있다. 참고로 한국교육원은 미국에 7개, 베트남에 2개,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태국, 말레이시아에 각 1개가 설치되어 있다. 러시아의 영토가 넓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한국교육원이 다수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교육원은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한국 역사·문화 교실 및 체험 행사, 한글학교 지원사업(교과서 보급 및 장학 지원)과 함께,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과 채택 지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운영, 수준별 한국어 강좌 운영, 한국 유학 홍보 행사 개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지식 공공외교를 수행하고 있다.⁹⁰⁾

90) 재외교육기관포털, “한국교육원 소개,” <http://okep.moe.go.kr/html/page.do?htmlId=16&menu_seq=109> (검색일: 2021.6.2.).

(나) 1.5트랙 차원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외 한국학 진흥을 위해 한국어·한국학 교수직 설치, 교원고용 지원, 객원교수 파견 등으로 구성되는 한국학 강좌 운영,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 펠로십(러시아의 경우, 주요 대학 협약에 따라 선발), 박사 후 연구 펠로십, 한국 관련 연구자 및 업무 종사자 한국어 펠로십, 방한 초청 연구 펠로십, 외교관 및 대외협력 담당 공무원 한국 언어·문화연수, 신북방 차세대 한국어 교육자 집중 연수 등으로 구성되는 한국 전문가 육성, 해외 중·고등학교 교육자 한국학 워크숍, 해외 대학 한국학 특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워크숍·특강, 온라인 한국어·한국학 강의 및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글로벌 e-스쿨, 한국학 관련 출판물과 시청각 자료를 지원하는 한국 연구자료 지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⁹¹⁾

또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학 교육 및 연구의 경쟁력 제고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05년 현지의 한국학 거점 대학이 참여하는 러시아 한국학대학연합(RAUK) 결성을 지원했다. 여기에는 1897년 유럽 최초로 한국학 강의를 시작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⁹²⁾를 비롯해 극동 연방대, 노보시비르스크 국립대, 모스크바 국립대, 이르쿠츠크 국립대, 러시아 국립인문대, 모스크바 국립언어대 등의 한국학 관련 학과 및 센터가 참여하고 있다.⁹³⁾ 또한, 2009년에는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⁹⁴⁾ 러시아 26개 대학의 한국어 담당 교수

91) 한국국제교류재단, <<https://www.kf.or.kr/kf/main.do>> (검색일: 2021.6.2.).

92)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КАФЕД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https://www.orient.spbu.ru/index.php/ru/o-fakultete/kafedry/item/116-kafedra-koreevedeniya>> (검색일: 2021.6.5.).

93) Росси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университетского корееведения, <<http://www.rauk.ru/>> (검색일: 2021.6.3.).

94) 한국국제교류재단, “모스크바 사무소 소개,” <<https://www.kf.or.kr/kf/cm/cntnts/cntntsView.do?mi=1649&cntntsId=1569>> (검색일: 2021.6.3.).

협의체인 전러시아대학한국어교수협의회가 조직되어 전국 규모의 총회 및 학술 세미나와 전러시아 대학생 한국어 올림피아드를 개최하고 있다.⁹⁵⁾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세종학당을 76개국 213개소(2020년 6월 기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현지에는 주러 한국문화원, 로스토프나도누 한국교육원, 블라디보스토크 한국교육원, 사할린 한국교육원,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모스크바 원광교육센터, 고등경제대, 상트페테르부르크 한국문화센터, 아스트라한 국립대, 북동 연방대, 부랴트 국립대를 포함하여 총 11개 기관 내에 세종학당이 설치되어 있다.⁹⁶⁾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현재 러시아 현지에는 한국학 학사과정이 23개, 석사과정이 8개, 박사과정이 5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고, 세종학당은 2개, 코리아코너는 3개, 한국연구센터는 8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⁹⁷⁾ 특히, 모스크바 국립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노보시비르스크 국립대, 극동 연방대는 학·석·박사과정은 물론, 한국연구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어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국학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는 지식 공공외교의 핵심 파트너가 되고 있다.

95)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Участие в IX Всероссийском семинаре Объединения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российски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https://overseas.mofa.go.kr/ru-stpetersburg-ru/brd/m_7880/view.do?seq=761839> (검색일: 2021.6.4.).

96) 세종학당재단, “세계 곳곳 세종학당,” <<https://www.ksif.or.kr/ste/ksf/hkd/lochkd.do?menuNo=20101800>> (검색일: 2021.6.3.).

97) KF 통계센터, <<https://www.kf.or.kr/koreanstudies/koreaStudiesMap.do>> (검색일: 2021.6.3.).

(다) 민간 차원

1995년 8월 러시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선교를 목표로 이형근 목사가 설립한 삼일문화원은 이른바 ‘고려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역사를 복원하는 활동과 함께 모스크바와 볼고그라드를 중심으로 현지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 신문’, ‘광장’, ‘진달래꽃’, ‘한국의 언어’ 등 서적을 러시아어로 번역·출간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모스크바에서 ‘한글 반포기념 한국어 말하기 및 동요 암송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⁹⁸⁾

1993년 모스크바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목표로 설립된 원광한국학교는 현지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수준별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08년에는 교내에 세종학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⁹⁹⁾

나. 문화 공공외교

문화 차원에서 한국의 대주변 4국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를 문화와 접맥하거나 직접 결합하여 공공외교를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공공외교는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과 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 영역에서 한국의 주변4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98) 세계한민족문화대전, “삼일문화원,” <<http://www.okpedia.kr/Contents/ContentsView?localCode=cis&contentsId=GC95300877>> (검색일: 2021.6.3.).

99) 세계한민족문화대전, “원광한국학교,” <<http://www.okpedia.kr/Contents/ContentsView?contentsId=GC95300975&localCode=CIS>> (검색일: 2021.6.3.).

(1) 미국

(가) 정부 차원

문화 차원의 대미 공공외교는 미국 사회 내에서 한국에 대한 호의적 인식을 확산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표적인 추진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대미 공공외교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워싱턴에 각각 설치된 한국문화원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¹⁰⁰⁾ 미국 내 한국문화원에서는 주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한국영화 상영, 한식요리 강좌, 그리고 한국 음악 및 예술 공연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4월에는 미국 최초로 뉴저지주에서 진행된 ‘한복의 날’ 선포식을 뉴욕 주재 한국문화원이 지원하였다. 워싱턴과 뉴욕의 경우 한국문화홍보관을 별도로 운영한다.

(나) 1.5트랙 차원

1.5트랙 차원에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대표적인 대미 문화 공공외교 수행 기관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외박물관 협력사업’, ‘해외 한국문화행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박물관 협력사업’은 해외 우수 박물관에서의 한국관련 특별전시 및 한국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미국의 경우 덴버미술관 ‘한국문화재 상설전’을 2019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지원하였다.¹⁰¹⁾ 또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 문화예술기관·단체 또는 한국 관련 프

100) 해외문화홍보원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ocis.go.kr/kocceIntro.do>> (검색일: 2021.6.5.).

101) 한국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f.or.kr/kf/main.do>> (검색일: 2021.6.5.).

로그그램을 운영하는 해외 대학의 한국 관련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¹⁰²⁾ 최근 미국의 경우 2020년 미국 로올라메리마운트대 한국문화복합행사 지원이 있었다. 이외에도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외 한국미술 전문가 육성’, ‘재외공관-KF협력사업’을 통한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 민간 차원

정부 및 1.5트랙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미국인들에게 알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공공외교가 추진되어왔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 영화진흥위원회는 뉴욕주재 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뉴욕에서 ‘한국 영화배우 200인 사진전’을 개최했으며, 이는 한국영화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한국배우들 위상 제고를 위한 활동으로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¹⁰³⁾ 또한 국기원은 세계태권도연수원을 운영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태권도 지도자 배출에 기여하면서 태권도를 세계에 보급하고 있으며,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은 2021년 8월 미국 서부지역을 방문하여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대학교 비롯한 여러 학교에서 시범 공연을 펼치는 등의 홍보활동을 진행했다.¹⁰⁴⁾

102) 위의 홈페이지 참조.

103)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ofic.or.kr/kofic/business/main/main.do>> (검색일: 2021.6.5.).

104) “국기원 태권도시범단, 미 UC버클리대학교에서 태권도 시범,” 『뉴시스』, 2021.9.1., <https://newsis.com/view/?id=NISI20210901_0017902049> (검색일: 2021.9.5.).

(2) 중국

문화를 매개로 한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 활동은 직접적 효과를 기대한다기 보다는 다소 간접적이고 우회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선진문화국가로서의 매력을 확산하고 호감도가 증진되고, 그리고 쌍방향 문화 교류를 통한 소통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평화관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정책에 대한 지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 정부 차원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부 등 각종 부처들이 1.5트랙이나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하는 각종 문화행사 등이 있을 수 있다. 외교부가 주최하는 한중 공공외교 포럼이 문화를 매개로 한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행사는 한중 외교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중국공공외교협회가 주관한다. 2013년 9월 1차 포럼이 시작되었고,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이 발생하기까지 매년 지속되어 왔다. 이 포럼은 한중간 역사·문화적 유대감을 근간으로 한 인문교류 확대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스포츠, 드라마, 영화, 음악회 등과 같은 문화행사 등이 포럼과 연계되었다. 2019년 7차 「한중 공공외교포럼」 역시 ‘동북아 평화 협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한중 영화제, 한중 시민 100인 열린 미래대화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¹⁰⁵⁾

105) 외교부, “제7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 2019.10.17.,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9641> (검색일: 2021.9.25.).

(나) 1.5트랙 차원

1.5트랙 차원에서는 민주평통 지역협의회가 주도하는 다양한 평화와 통일 관련 문화행사가 있다. 비록 교민들이 주요 참여 대상자라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지만, 점차 중국 현지인들도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 ‘평화통일 브이로그 공모전’, ‘평화통일 그림(문예) 공모전’, ‘통일 한마음 걷기대회’ 등등이 있다.¹⁰⁶⁾ 또한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문화홍보원, 한국관광공사 등이 지원하는 중국인 대상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도 주목할 만하다. 주로 한국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주제들이 많지만, 점차 한중관계, 동북아평화, 한반도 통일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주제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 유학하는 석박사생과 같이 차세대 한국전문가에 대한 한국의 문화,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 100인 포럼’, 여성가족부의 ‘한중 청소년 교류 행사’, 한국학 과정을 설치한 중국 내 대학교를 지원하는 ‘한국학 학술대회 지원사업’ 등이 있다.

(다) 민간 차원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콘텐츠의 내용이 정치적이고 국제적 이슈라 민간이 주도하기는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차원에서 문화를 매개로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수행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문화의 형태로 민간 차원에서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수행한 사례를 딱히 찾아내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외교가 문화를 매개로 한 수행성과가 높다는 점, 중국 대중들이 정치적 이슈에 대한 교감이 낮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문화

10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협의회 활동현황,” <<https://www.nuac.go.kr/evntBbs/list.do?bbsId=NABSMSTR00000000000006>> (검색일: 2021.9.25.).

를 매개로 한 민간차원의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향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주로 정부 혹은 1.5트랙 차원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민간에서 문화 행사를 기획하는 등의 형태가 주를 이루나, 기획 단계에서부터 민간이 자발적으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콘텐츠를 문화행사와 연계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3) 일본

(가) 정부 차원

한국과 일본은 문화외교국장회의를 통해 문화 및 인적 교류 증진 논의를 위한 외교부 간 정례협의체를 개최하여 왔다. 하지만 2014년 9월 도쿄에서 제16차 회의가 열린 이후 6년간 개최되지 않다가 2020년 2월 7일 도쿄에서 서은지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과 시노미즈코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17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양국은 문화외교국장회의를 통해 공공문화외교 정책을 공유하면서 문화, 관광, 스포츠,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문화원은 2021년 8월 현재 27개국 32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요 역할은 첫째, 한국 문화를 매개로 한국을 올바르게 현지인에게 이해시키고, 둘째, 현지인과 한국인 간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일본지역 해외홍보문화원(이하 ‘해외문화원’)은 도쿄문화원(1979년 개원, Korea Center 역할)과 오사카문화원(1999년 개원)이 있으며 도쿄문화원은 간토지역을 비롯한 동일본지역을 관할하고, 오사카문화원은 간사이지역을 비롯한 서일본지역을 관할한다. 이러한

해외문화원은 공연, 전시, 한국어 보급 등을 통한 한일 문화교류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한다.

해외문화원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2015년 한일수교 50주년과 같은 주요 계기를 기해 쌍방향 문화교류 행사를 실시하여 한일교류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둘째, 한일 양국간 주요 계기를 활용한 양국 문화교류를 강화한다. 셋째, 현지인이 선호하는 콘텐츠 등을 지속적으로 소개하면서 한국 문화 팬을 확충한다.

위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주요 대상별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10~20대층을 대상으로는 K-Pop 커버댄스, 한국어 말해보기 대회 및 교육, 청소년 문화행사 등을, 30~60대층을 대상으로는 전통 공연 및 전시, 드라마, 영화상영회 등을,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는 한국어 교육, 현대 전통 공연 및 콘서트, 영화제 등의 행사이다.

최근 참관형 행사뿐만 아니라 K-Pop 커버댄스, 한국요리 콘테스트, 세종학당, 문화강좌 등 참여형 행사에 많은 관람객이 참여하면서 문화원 행사 참여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미지 제고를 하고 있다. 또한 양국간 교류 행사 사업에 현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현지 언론의 관심과 보도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¹⁰⁷⁾

(나) 1.5트랙 차원

‘한일문화교류회의’는 1998년 10월 한일정상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정신과 1999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문화교류 전반에 대하여 양국이 허심탄회한

107) 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문화원과 관련해서는 박영혜, “일본에서의 한국 문화 홍보 활동의 성과와 과제: 오사카 문화원의 활동을 중심으로,” (2021 한일문화포럼 〈한일 문화교류의 미래〉 발표문, 2021.9.8.), pp. 11~16.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같은 해 6월 양국 문화계를 대표하는 각 11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¹⁰⁸⁾ 한일문화교류회의는 한일 양국 정부의 문화외교채널이자 민간외교의 교류 네트워크로서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문화적 접근을 통한 갈등해소와 상호이해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한일문화교류회의 공연 ‘동행’은 양국의 문화교류 활성화 를 직접 실천하자는 한일문화교류회의 3기 위원들의 제언에 따라 문화를 통한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구축을 위해 무용,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 공연을 기획·개최해 왔다. 2012년 서울에서의 제1회 공연을 시작으로 한일 양국에서 순차 개최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양국의 협력 하에 제8회(2019년 10월 4일, 오사카)까지 진행되고 있다. 한일 양국문화에 관심을 가진 일반시민 등 다양한 관객을 초청하여 한일 문화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왔다. 2019년 오사카에서 개최한 제8회 ‘동행’공연은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문화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교류회의 설립 정신을 이어받아 최근 한일관계의 경색된 분위기가운데에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이루어진 공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¹⁰⁹⁾ 또한 한일문화교류회의는 한일 사회 현안을 주제로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한일 사회·문화 세미나’는 한일문화 교류회의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와 문화·인적 교류 현황 등을 주제로 일본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한국의 일반시민을

108) 한일문화교류회의, “한일문화교류회의 소개,” <<http://kjcec.or.kr/intro/>> (검색일: 2021.10.1.).

109) 한일문화교류회의, “2019년 한일문화교류공연 동행시리즈 여덟번째 ‘한일교류의 현황찬란한 유산’ 결과보고,” 2020.10.7., <<http://kjcec.or.kr/event2/?uid=61&mod=document&pageid=1>> (검색일: 2021.12.24.).

대상으로 일본 사회의 현재 상황에 대해 강연을 하고, 참가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제1회 세미나(2019.5.31.)는 츠츠이 준야(筒井淳也) 리츠메이칸대(立命館大) 교수가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제2회 세미나(2021.2.26.)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줌(Zoom), 유튜브(YouTube)를 이용한 온라인 개최로 진행되었고, 방재 대책 전문가인 니시카와 사토루(西川智) 나고야대 감재연계연구센터(名古屋大学減災連携研究センター) 교수가 ‘일본의 방재 대책’을 주제로 강연하였다.¹¹⁰⁾

(다) 민간 차원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이하 ‘민단’)은 민간에서 다양한 일본 내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민단 활동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화 공공외교 사례를 소개한다.

첫째, 남북 간 화합을 위한 문화행사이다. ‘오사카 하나 마투리(大阪ハナ・マトゥリ)’는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 및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간 화합의 축제로 2001년, 2003년, 2005년 세 번에 걸쳐 실시되었다. ‘오사카 하나 마투리’에는 재일코리안 및 일본인이 화합해서 공생의 꽃을 피우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특히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와 공동개최를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오사카에서 열린 다양한 재일코리안 축제는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 행사는 극장 무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특징이다. ‘오사카 하나 마투리’는 주로 한국과 북한의 민족무용, 음악, 연극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007년에 민단과 조총련의 관계가 악화되어 이후 개최를 못 하고 있다. 또한 이 행사는 오사카총

110) 한일문화교류회의, “제1회 한일 사회·문화 세미나 결과보고서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2019.9.25., <<http://kjcec.or.kr/event2/?uid=61&mod=document&pageid=1>> (검색일: 2021.10.1.).

영사관을 통해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었고, 재단지원금 이외로 협찬금을 민단 오사카가 마련하여 진행되었다.¹¹¹⁾

둘째,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전통문화 및 식문화 등 한국 문화 소개 문화행사이다. ‘한일 구루메 페어(日韓グルメフェア)’는 민단한식넷협의회(民團韓食ネット協議會)가 주최해서 먹거리를 통해 한일의 우호를 증진하는 행사이며, 2015년 11월 6~7일, 2016년 11월 4~6일 아사쿠사에서 실시되었다. 에도시대에 조선통신사 숙소로 아사쿠사의 ‘본산동본원사(本山東本願寺)’를 사용하면서 아사쿠사는 당시 한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마을이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한일 구루메 페어’는 ‘협동조합아사쿠사상점연합회’가 많은 도움을 주면서 실행되었다.

‘한국전통문화마당’은 민단 오사카본부가 주최하여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2월에 실시한 공연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오사카에서 활동하는 전통예술인과 전통예술팀만 출연할 수 있고, 오사카에 있는 민족학교 학생들도 출연한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까지 공연은 무료로 진행이 되었다가 2018년부터 티켓 가격 1,000엔을 받기 시작했다. 무료 공연이 유료로 변화되면서 관객의 감소가 걱정이 되었으나 무료로 진행하는 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티켓 구매를 하여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또한 제13회 ‘한국전통문화마당’에서는 텐리대학교(天理大学) 아악부(雅樂部)가 게스트로 출연하여 한국의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공연 개최, 즉 ‘한국전통문화마당’은 재일코리아 사회와 지역 사회와의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¹¹²⁾

111) “민단과 총련이 하나된 ‘오사카 하나 마투리’,” 『오마이뉴스』, 2005.9.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78310> (검색일: 2021.10.1.).

셋째, 일본 내 다문화공생을 위한 활동이다. 한일우호친선 모임 ‘다문화공생 festa(多文化共生フェスタ)’는 2018년 10월 20일, 일본 고등학교의 댄스동아리, 일본 북 예술단체, 전국 중·고등학교 전통 예술부 등 젊은 사람들이 출연하였다. 또한 이 때 한국의 퓨전국악 뮤지컬인 ‘판타스틱’이 일본 국내 투어 중에 함께 출연하였다. 2019년 11월 11일에는 민단 오사카본부 주최로 ‘다문화공생 festa(多文化共生フェスタ)’가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가수 성시경 등이 출연하였고, 그 밖에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시에라리온 등 5개 국가의 음악, 전통예술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었다.¹¹³⁾

(4) 러시아

(가) 정부 차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운영하는 주러 한국문화원(Korean Cultural Center)은 2006년 9월 개원하여 러시아 현지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와 한·러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문화부 및 현지 문화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연, 전시, 문화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문화행사에도 참여하면서 문화외교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전시실과 도서관을 통해 한국 관련 도서, 전통공예품, 전통의상 등 한국 콘텐츠를 소개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와 문화강좌(태권도, 전통춤, 사물놀이, K-Pop, 한지공예 등)도 운영하고

112) 민단 오사카 지부 홈페이지, <http://www.mindan-osaka.org/kccbbs/news_list.php> (검색일: 2021.10.1.).

113) 민단 오사카 지부 홈페이지, <http://www.mindan-osaka.org/kccbbs/kannews_viewbody.php?page=1&number=921&keyfield=subject&key=%91%BD%95%B6%89%BB%8B%A4%90%B6%83t%83F%83X%83%5E> (검색일: 2021.10.1.).

있다.¹¹⁴⁾ 2020년에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전러시아 한국영화 상영회와 영화감상문 콘테스트(6월 29일~8월 28일)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온라인 태권도 품새대회(11월 9~29일)를 개최하기도 했다.¹¹⁵⁾

현지 외교공관도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문화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¹¹⁶⁾ 주러 대사관은 2020년 6~11월 러시아어로 한식 메뉴 10개의 조리법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및 인터넷 사이트에 배포했다.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은 2020년 8월 한국의 역사, 청년, 현재를 잘 드러내는 영화로 『버닝』, 『국가부도의 날』, 『부산행』 그리고 『기생충』을 선정하여 현지 자동차 극장에서 상영하는 한국영화제를 개최하고, 9월에는 ‘한류’의 저변 확대를 위해 현지 K-Pop 동호회와 공동으로 K-Pop 페스티벌을 개최했으며, 11월에는 전통문화 공연, 태권도 시범, 영화 상영, 강연, 한식 행사, 체험 행사, 홍보관 운영 등으로 구성된 종합문화행사 Korea Festival을 개최한 바 있다.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은 2020년 10월 10일 ‘제1회 한국의 날’ 행사를 블라디보스토크 혁명광장에서 개최하면서 러시아 극동 최초로 공식적인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를 진행하고, 11~12월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한국드라마(『여우각시별』) 및 예능 프로그램(『윤식당2』) 러시아어 자막본 지원을 받아 연해주 최대 공영방송을 통해 방영했으며, 12월에는 봉준호 감독의 대표작을 상영하는 한국영화제를 개최했다. 주 이르쿠츠크 총영사관은 2020년 11월 9~15일 시베리아 최대 도시인

114) 주러 한국문화원, “역할과 기능,” <<https://russia.korean-culture.org/ko/6/contents/344>> (검색일: 2021.6.6.).

115) 한국-러시아 수교 30주년, “열린참여,” <<http://korussia30.com/>> (검색일: 2021.6.6.).

116) 한국-러시아 수교 30주년, “열린참여,” <<http://korussia30.com/>> (검색일: 2021.6.6.).

노보시비르스크에서 무용공연, 영화제, K-Pop 페스티벌, 미술 전시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문화주간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의 지원으로 2019년 11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러시아 국립도서관(1795년 개관)에 한국자료실 ‘Window on Korea’를 개관했다. 한국자료실은 아시아·아프리카 자료실 내 최초로 설치된 단독 국가 자료실로 한국어 학습교재, 한국 역사 및 문학 관련 도서, 영화 및 음반 자료 등 총 2,688점을 소장하고, 향후 매년 200여 점씩, 5년간 총 1,000여 점의 한국 관련 자료를 계속해서 지원받게 되었다.¹¹⁷⁾

(나) 1.5트랙 차원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의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계간지인 『Koreana』 러시아어판을 종이책, 웹진, 전자책으로 발간하여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통해 한국과의 우호·친선을 증진하고 있다.¹¹⁸⁾ 또한, 북한 문화부가 기증한 자료와 유물을 기반으로 하여 1990년 설치된 러시아 국립동양박물관 한국실 개보수에 10만 달러를 지원하여 2010년 12월 재개관식을 진행한 바 있다.¹¹⁹⁾

한국문화번역원은 차세대 전문번역가를 양성하기 위한 번역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러시아 원어민의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¹²⁰⁾ 2001~

117) 한국-러시아 수교 30주년, “열린참여,” <<http://korussia30.com/>> (검색일: 2021.6.6.).

118) 『Koreana』 러시아어판, <<https://www.koreana.or.kr/koreana/main.do?langTy=RUS>> (검색일: 2021.6.6.).

119) “모스크바 동방박물관 한국실 재개관,” 『연합뉴스』, 2010.12.22., <<https://www.yna.co.kr/view/AKR20101222071300069>> (검색일: 2021.6.6.).

120) 한국문화번역원, “정규과정,” <https://www.ltikorea.or.kr/kr/contents/business_tra1_1_2/view.do> (검색일: 2021.6.6.).

2020년 소설 79건, 시 15건, 희곡 등 4건, 고전 15건, 인문·사회 9건, 아동 4건, 총 126건의 러시아어 번역을 지원했고, 소설 60건, 시 12건, 희곡 등 3건, 고전 3건, 인문·사회 3건, 아동 20건, 총 101건의 러시아어 번역서 출간을 지원하기도 했다.¹²¹⁾ 또한, 2020년에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대표작가 5인의 문학작품을 공동 번역하고 교차 출간했는데, 번역 과정에는 양국의 번역가 10여 명이 참여했다.¹²²⁾

한국관광공사 모스크바 지사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독립영화제와 공동으로 2020년 9월 28일~11월 22일 온라인 한국 독립영화제를 주관하여 8편의 단편 및 장편 독립영화를 상영했다. 또한, 블라디보스토크 지사는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이 주최한 ‘제1회 한국의 날’ 행사에서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했는데, 해당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러시아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다.¹²³⁾

(다) 민간 차원

문화 공공외교는 민간에서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는 11월 7일 현지에서 한국전통연희축제를 개최했다. 또한 ‘수원국제사진축제’ (Suwon International Photo Festival)는 10월 21일~11월 11일 현지에서 개최된 ‘국제비디오아트축제’에 참여하여 한국 작가의 비디

121)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연감 2020』 (서울: 한국문학번역원, 2021), pp. 62~65.

122) 한국-러시아 수교 30주년, “열린참여,” <<http://korussia30.com/>> (검색일: 2021. 6. 6.).

123) 한국-러시아 수교 30주년, “열린참여,” <<http://korussia30.com/>> (검색일: 2021. 6. 6.).

오아트 작품을 소개했고, 11월 1~11일에는 ‘수원국제사진축제’에서 러시아의 대표적인 비디오아트 작가의 작품을 선보였다. ‘스페이스 포컨템포러리아트’는 2020년 11월 11일~2021년 1월 31일 러시아 내 가장 주목받는 전시공간 중 하나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네지 전시관에 한국을 대표하는 설치미술가인 이불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 바 있다.¹²⁴⁾

토지문화재단과 한·러 대화는 2019년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에서 박경리 문학제를 처음으로 개최한 데 이어, 2020년 8월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행사를 개최했다.¹²⁵⁾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에는 이미 2018년 6월 박경리 작가 동상이 건립된 바 있다.¹²⁶⁾

다. 정책 공공외교

(1) 미국

대미 정책 공공외교는 한반도 평화의 증진과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미국 내 지지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방편이다. 통일부와 외교부 등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펼치는 활동과 국책연구기관 등 1.5트랙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토론 기회 등을 통해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는 활동, 그리고 민간의 연구소가 수행하는 활동 등이 있다.

124) 한국-러시아 수교 30주년, “열린참여,” <<http://korussia30.com/>> (검색일: 2021. 6. 6.).

125) ““슬픔도 기쁨도 왜 이리 찬란한가!”, 『중앙일보』, 2020. 8. 2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54337#home>> (검색일: 2021. 6. 6.).

126) “러시아서 ‘박경리 문학제’ 열린다,” 『연합뉴스』, 2019. 6. 19.,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9093200005>> (검색일: 2021. 6. 6.).

(가) 정부 차원¹²⁷⁾

정부 차원에서 우선 통일부는 한반도 문제 관련하여 미국의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대북정책을 소개하고, 그들의 견해를 청취하면서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인 2020년 11월과 12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 등 미국의 원로 인사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북핵문제 해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¹²⁸⁾ 또한 지난해 12월 18일에는 통일부 주관으로 한국의 전문가들과 미국의 스티븐센터, 맨스필드재단, 미국평화연구소(USIP) 등의 전문가들이 생중계되는 화상회의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 방향 및 한미 간 조율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통일부는 이외에도 연 수차례 국내 전문가들이 미국의 전문가들과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논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의 유력 한반도 전문가들의 방한 시 한국의 대북정책을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미국 전문가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한다.

127) 이 보고서에서 미국 행정부도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 대상으로 간주하므로 한미 당국 간 협의도 정책 공공외교의 장으로 볼 필요가 있으나, 자주 진행되는 당국 간 협의 실태를 모두 기술하기 어려우며 또한 비공개 협의도 다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미 평화·통일 정책 공공외교 실태를 기술하면서, 한미 당국 간 협의 실태는 제외하기로 한다.

128) 통일부, 『2021 통일백서』 참조.

〈표 III-5〉 2020-2021 통일부 주최·후원 한미 전문가 정책 토론회 사례

일시	대상	회의명	주제	비고
2020. 11~12.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 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등	한반도 전문가 화상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미 간 협력방안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북미협상 -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 	3회 개최
2020. 12.	스팀슨센터(38노스), 맨스필드재단, 미국평화연구소 등의 전문가	한미 북한전문가 정책토론회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제언 및 한미 대북정책 조율	
2021. 3.	허드슨 연구소, 조지타운대 등의 전문가	한미 북한전문가 정책토론회	과거 북미 핵협상의 교훈	
2021. 5.	브루킹스 연구소 등의 전문가, 전 미국정부 관료	한반도 전문가 화상 간담회	북핵문제 해법 및 대북 조기 관여 방안	
2021. 8.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스팀슨센터(38노스) 등의 전문가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새로운 남북관계 비전과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	
2021. 9.	노틸러스 연구소, NTI (Nuclear Threat Initiative) 등의 전문가	북핵 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협력 관련 한미 국제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적 핵위협감소 프로그램의 한반도 적용 - 협력적 핵위협감소 프로그램과 에너지 협력 - 협력적 핵위협감소 프로그램과 공중보건 협력 	3회 개최

출처: 통일부 자료에 근거하여 필자가 정리.

주: 이 표는 2020~2021년 통일부가 주최 혹은 후원한 모든 한미 전문가 토론회의 목록을 의미하지는 않음.

외교부도 미국 국무부와의 협의를 제외하고도 한미 공동 전문가 정책세미나를 주최하는 방식으로 대미 정책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다.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왔던 주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방안’,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이다. 특히 외교부는 2020년 11월 이후에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에 대한 한미 전문가 토론회를 주최하거나 후원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한미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주로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 등 국내 싱크탱크와 협업을 통해, 한국의 전문가들이 미국외교협회(CFR), 퀸시연구소(Quincy Institute),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카네기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스티imson센터(Stimson Center),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브루킹스연구소, 미국평화연구소(USIP) 등 미국의 싱크탱크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표 III-6〉 2020-2021 외교부 주최·후원 한미 전문가 정책 토론회 사례

일시	대상	회의명	주제	주관
2020. 7.	퀸시연구소, 미국의교협회, 미국평화연구소 등의 전문가	한미 전문가 화상세미나	6.25 전쟁 70주년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을 위한 한미 간 협력	통일연구원
2020. 9.	미국외교협회	2020 제1차 세종-CFR 서울 워싱턴 포럼 화상회의	미국 대북정책의 미래	세종연구소
2020. 10.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세종-카네기 서울 워싱턴 포럼 화상회의	2021년 미-북 비핵화 협상을 향하여	세종연구소
2020. 10.	미국외교협회	2020 제1차 세종-CFR 서울 워싱턴 포럼 화상회의 "Dialogue with Axes Wong"	미국의 대북 외교정책 최신 경향	세종연구소
2020. 10.	헤리티지 재단	세종-헤리티지 서울 워싱턴 포럼 화상회의	한미동맹의 전망과 과제	세종연구소
2020. 11.	브루킹스연구소 전문가 등	2020 서울 워싱턴 포럼 화상회의	바이든의 외교정책과 한국	세종연구소
2020. 11.	CSIS, 미국평화연구소 등의 전문가	미 대선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한미 전문가 화상세미나	- 미 대선 이후 한반도정세 전망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한미협력방안	통일연구원
2020. 12.	퀸시연구소	2020 세종-퀸시 서울 워싱턴 포럼 화상회의	한미동맹의 미래	세종연구소

일시	대상	회의명	주제	주관
2020. 12.	미국외교협회	2020 제3차 세종-CFR 서울 워싱턴 포럼 화상 회의	바이든 정부에 대한 북한의 기대	세종연구소
2021. 5.	미국평화연구소, 브루킹스연구소, CSIS 등의 전문가	2021 제1차 서울-워싱턴 포럼 화상회의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합의	세종연구소
2021. 7.	CSIS, 전 미국정부 관료	2021 IFANS 국제문제 회의	북핵과 한반도 평화	국립외교원
2021. 8.	퀀시연구소, 스티븐스센터, 한미경제연구소 등의 전문가	2021 한미 싱크탱크 1차 공동 세미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 협력방안 모색	통일연구원
2021. 10.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등의 전문가	2021 한미 싱크탱크 2차 공동세미나	북한의 핵·미사일 현황과 창의적 북핵 해법의 모색	통일연구원

출처: 국립외교원 및 세종연구소 홈페이지, 통일연구원 자료에 근거하여 필자가 정리
주: 이 표는 2020~2021년 외교부가 주최 혹은 후원한 모든 한미 전문가 토론회의 목록을 의미하지는 않음.

(나) 1.5트랙 차원

국책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들도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의 경우 연 1~2회 미국을 방문하여 한반도 전문가들과 한미전략대화를 개최하며, 또한 미국 평화연구소(USIP),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스티븐스센터, 우드로윌슨센터 등 미국의 싱크탱크 전문가들과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2019년 3월에는 미국 현지에서 버지니아대와 공동으로 ‘한국전쟁의 종전’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통일연구원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한미 싱크탱크 세미나를 추진해왔으며, 2021년의 경우 외교부 후원으로 8월과 10월에 각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방안 관련 주제로 한미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한반도 평화 및 동아시아 지역 안보 문제 관련하여 한미 전문가 교류를 추진해왔다. 2020년 1월 미국 퍼시픽포럼과 공동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한미 양국의 입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10월에는 북한에 대한 이해 및 2021년 한반도 정세 진단을 주제로 미국의 전직 고위관료 등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21년 7월 말과 8월 초 북한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 방미단을 구성하여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졌으며, 또한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과 간담회를 통해 남북미 관계 및 한반도 평화의 증진 관련한 재미교포 사회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¹²⁹⁾

한국국제교류재단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대미 정책 공공 외교 역할을 수행한다.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한미전략포럼이 그 예이다. 이 포럼을 통해 한미 양국의 전문가들이 외교안보, 경제통상 등의 문제에 관하여 상호 간에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한다.¹³⁰⁾ 또한 해외 정책연구 지원사업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싱크탱크 또는 대학 소속 연구소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차세대 정책전문가 육성을 지원하며, 한국 관련 정책연구를 전담하는 코리아 펠로우(Korea Fellow) 설치를 지원한다.¹³¹⁾

(다) 민간 차원

민간 차원에서는 세종연구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아산정책연구원 등의 한반도 문제 관련 정책연구기관, 그리고 학술단체

129)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방미단, 미주민주참여포럼과 간담회,” 『재외동포신문』, 2021.8.1., <<https://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466>> (검색일: 2021.8.12.).

130) 한국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f.or.kr/kf/main.do>> (검색일: 2021.6.12.).

131) 위의 홈페이지 참조, (검색일: 2021.6.12.).

로 한국국제정치학회 등이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세종연구소는 2020년 11월 브루킹스연구소 및 미국외교협회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바이든 시대의 한미동맹’을 주제로 화상회의를 개최하였고, 2021년 2월에는 스텐튼센터와 공동으로 ‘미국과 한국의 대북접근: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한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세종연구소는 이외에도 외교부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한미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면서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기여하고 있다(위의 <표 III-16> 참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도 미국의 한반도 문제 관련 정책연구기관 전문가들과 전략대화를 지속하고 있는 민간 연구기관이다. 2021년 4월에는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아산정책연구원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한반도 및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 아산플레넘(Asan Plenum)을 2011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하였고, 최근에는 2019년 4월에 진행한 바 있다. 2021년 4월에는 미국 랜드연구소와 공동으로 북핵문제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학술단체로서 한국국제정치학회는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 매체 관련 설명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21년 3월에 미국의 전문가들과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를 주제로 한미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2) 중국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정책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다차원적인 한중 공공외교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의 한

국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우호 정서 함양 등 양국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기존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다소 정치적이고 민감한 현안에 대해 중국의 전문가, 여론주도층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다양한 정책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정책 추진에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가) 정부 차원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성과가 대표적이다.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특히 공공외교를 위한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 간 연계와 협업을 위한 체계들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¹³²⁾ 이 과정에서 평화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 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개념들이 정립되었고, 기존 네트워크를 정비하면서 다양한 성과들을 생산하였다. 다만,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부터는 성과가 다소 미진한 상황이나, 일단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활동을 정례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외교부의 경우는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정례적으로 정책 공공외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중국 주재 공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속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한국의 핵심적인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중국의 이해를 위해 노력 중이다. 한중 한반도 정책간담회, 한중 싱크탱크 전략대화, 한중 공공외교 포럼 등이 대표적이며, 연구용역 과제로 한중 공동 이미지 조사를 발주하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체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내 대사관을 중심

132) 외교부,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참조.

으로 한반도 정세 설명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강연회, 세미나, 포럼, 정책대화, 토크쇼, 각종 문화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평화·통일 공공외교정책에 대한 메시지 전달 및 평화·통일 관련 콘텐츠의 지속적인 발굴·배포 및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 역시 한반도 통일과 평화정착에 대한 중국의 관심 및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정부관계자와 평화·통일 전략대화, 정부인사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1.5트랙 다자협의체인 한반도국제평화포럼 등을 꾸준히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나) 1.5트랙 차원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주로 정책과 연관이 깊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형성 및 여론주도층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영역을 가교할 수 있는 1.5트랙 차원의 공공외교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주요 싱크탱크(전문가)와의 전략대화, 세미나 등 각종 네트워크 활동이 주를 이룬다. 대표적으로 통일연구원을 비롯한 국내 통일, 외교, 안보 관련 국책연구기관과 중국의 주요 싱크탱크들과의 정례 세미나를 들 수 있다. 통일연구원의 경우 한중수교가 된 1992년부터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과 매년 1회 전략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오다가 2014년부터 매년 2차례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제문제연구원, 중앙당교, 중국사회과학원 등의 싱크탱크는 물론 베이징대, 칭화대 등 주요 대학 전문가 및 여론주도층과도 지속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양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북한(핵)문제에 대한 상호 이견을 조율하면서 공감의 폭을 넓히고 있다.

또한 국립외교원, 한국국방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들이 중국의 유관 연구소와 학계 전문가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맺고 있고, 최근에는 주요 기관들이 함께 연대해서 공공외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연합 전략대화를 추진한 바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중 국책연구기관 합동전략 대화를 들 수 있다. 이는 2013년 한중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명시되었던 양국 간 중요 대화 채널의 하나이다.¹³³⁾ 기존의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온 양국 국책기관 간 전략 세미나, 대화 등을 한자리에 모아, 논의된 합의 내용과 의견을 정부에 직접 보고하는 체계로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한중 양국이 북핵문제 해결과 동아시아 평화 유지와 번영이라는 중요한 전략적 목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판단된다. 이 회의는 정치안보, 경제협력, 인문사회 3개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의 통일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과 중국의 현대국제관계연구원,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중국예술연구원 등 주요 기관들이 총망라되었다.¹³⁴⁾ 그러나 아쉽게도 이 회의는 사드 사태로 인해 한중관계가 악화되면서 단 3차례의 회의로 막을 내리게 되었지만, 만일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 전문가 대화 채널이 재개된다면 한국의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 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¹³⁵⁾

133)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및 부속서,”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3.6.28.,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763302&pkgId=49500572>> (검색일: 2021.9.25.).

134) “한·중 국책연구기관 첫 전략대화…정책제안 기대,” 『연합뉴스』, 2013.12.6., <<https://www.yna.co.kr/view/AKR20131206067400043>> (검색일: 2021.9.25.).

135)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1.4.3.,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640>> (검색일: 2021.9.25.).

(다) 민간 차원

민간 차원에서 한국의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관련 콘텐츠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대학과 사회단체들이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등 국내 대학의 중국 문제 연구소들이 중국의 대학 및 연구소들과 공동 학술회의, 세미나,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면서 상호 이해 및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단순한 학술회의뿐 만이 아니라, 공통 주제에 대한 공동저술 작업 및 출판 등이 활성화되면서 정책 공공외교의 공간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한국에서 유학한 다수의 중국 학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한반도 연구 그룹을 형성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네트워크와 정책 공공외교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1세기 한중교류협회, 한중언론인협회 등 각종 사회단체들도 평화 통일과 관련한 정책 공공외교를 수행한다. 주로 내용이 양국의 경제교류, 민심소통 증진, 우호관계의 여론 및 사회적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간간이 진행되는 고위급 인사 포럼 등에서 한반도 평화 및 통일과 관련된 주제가 논의되기도 한다. 과거 고위급 언론인 포럼의 경우, 사드 문제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할 정도로 상호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이 갈등으로 벌어지기도 하였다.¹³⁶⁾ 의견 충돌과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상호간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 개발 사업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내 여론주도층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국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공감 형성을 위한 DMZ 평화지대화 동영상과 한국 경제·정치 발전상 등이 제작·배포된 것을 들 수 있다.

136) “한중고위언론인포럼서도 사드 놓고 신경전,” 『동아일보』, 2017.9.8., <<https://www.donga.com/news/People/article/all/20170908/86227210/1>> (검색일: 2021.9.25.).

(3) 일본

(가) 정부 차원

통일부는 정부 간 대화 및 일본 내 전문가와의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통일부 고위관료가 일본을 방문하여 당국 간 대화인 ‘평화통일전략대화’를 실시하거나, 국내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와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매년 개최하였다. 일본지역 평화통일전략대화 추진실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7년 8월 30일~9월 2일, 통일부는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 납치문제대책본부 등을 대상으로 ‘평화통일전략대화’를 개최하고 대북정책 방향과 추진 성과를 설명하였는데, 일본 측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지지와 협력을 표명하였다. 2018년 12월 10일~12일까지 천해성 통일부차관은 아키바 다케오 외무차관, 와카미야 켄지 중의원 외무위원장 등을 만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진행 상황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방일 기간 중 민단 간부 대상으로 대북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일본 내 전문가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9년 7월 16~18일, 통일부차관은 일본 외무성 국장 등을 만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진행 상황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¹³⁷⁾

통일부는 재외동포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통일부는 현지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추진방향, 한반도의 평화경제에 대해 설명하고, 동포사회 내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지지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매년 통일부 장관 또는 차관이

137) 김남은, “한국의 대일본 평화 공공외교 실태 조사,”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 5.12.).

일본 도쿄지역을 방문하여 일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대 북 및 통일정책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외교부의 대일본 정책 공공외교는 다음과 같은 목적 및 기대성과 를 갖고 있다. 첫째,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일본 여론주도층 대상 양국 현안에 대한 올바른 사실 전달과 한국의 입장 을 표명하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네트워크 를 적극 활용한 플뿌리 공공외교 강화를 통해 중층적이고 지속가능 한 대일 공공외교 플랫폼 구축으로 상호 우호적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외교부 아태1과는 ‘한일 정책대화’를 개최하고 있다. 한일 정책대 회의 목적은 중장기적 한일 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한일관계 제반 환 경을 검토하는 것이다. 즉 한일관계 관련 정책 방향 및 새로운 네트 워크 구축을 도모하고, 일본 정치 변화에 따른 한일 안보협력 방 향의 모색, 중장기적 대일 정책 검토, 한·미·일관계, 미중관계 등 국 제질서 변화를 논의하였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해서 의장인 대 통령에게 자문 및 건의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내외 국민 및 재외동포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평화 및 통일 의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평 통 내 유라시아지역과에서 일본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 는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수행이며, 한 달에 한 번씩 기관지 『평화 +통일』을 발간하고 있다.¹³⁸⁾

13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 <<https://www.puac.go.kr/pblcteBbs/list.do?bbsId=NABSMSTR000000000009>> (검색일: 2021.10.10.).

민주평통은 2017년 4월에 일본 오사카 소재 재일대한민국민단 오사카본부에서 ‘한일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 포럼은 한일 양국의 학계와 정관계, 언론계 인사 등 한일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일반에게도 공개되고 한일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일 협력’이라는 주제로 한일 양국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와 국제공조’, ‘한일 관계의 현재와 미래, 전환기 관리’ 등을 논의하였으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정성이 급격히 증대된 중차대한 시기에 개최된 포럼이었던 만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해소하기 위한 한일 협력방안과 국제적인 공조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¹³⁹⁾

민주평통은 2020년 10월 27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한국, 중국, 일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일 평화포럼’을 개최하였다. 한중일 평화포럼은 ‘전환기 동아시아 평화 모색’을 주제로 ‘팬데믹 이후의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중일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구체적으로 패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전환기 속 동북아 정세를 전망하고, 평화공동체·생명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3국의 협력 방안,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구축 방안 등 정책대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¹⁴⁰⁾

민주평통은 ‘세계 청년위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는데 세계 청년위원 컨퍼런스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청년 자문위원들의

139) 김남은, “한국의 대일본 평화 공공외교 실태 조사,”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 5.12.).

140) 한중일 평화포럼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기초연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가 한국 측 패널로 참여, 중국 측에서는 왕이저우(王逸舟) 베이징대 교수, 일본 측에서는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 게이오대 교수와 호리야마 아키코(堀山明子)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장이 패널로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장,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위원장 등 한국측 주요 인사와 함께,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싱하이밍(邢海明) 주대한민국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참석하였다.

이해 확산 및 통일 공공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 한반도 통일문제와 재외동포사회에서의 청년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한편, 청년들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민주평통을 중심으로 한 청년들의 통일네트워크 형성을 모색한다. 2018년 세계 청년위원 컨퍼런스는 ‘평화, 번영, 통일! 새로운 시대를 향한 청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11월 10일~12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한국중앙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일본, 중국 등에서 온 만 45세 미만 100명의 청년 자문위원들과 19명의 국내 청년 자문위원들이 참가하였고, 이외에도 재일민단, 주일한국대사관, 재일본한국인연합, 동경민단, 이바라키민단, 동경한국상공회의소 등의 인사들이 참석하였다.¹⁴¹⁾

(나) 1.5트랙 차원

통일연구원은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와 매년 서울과 도쿄를 오가면서 ‘KINU-JIIA 한일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있다. 2021년 11월에도 제7차 ‘한일전략대화’를 개최했는데, ‘북한의 정치경제 상황’과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일관계’를 주제로 한 논의를 통해 일본의 주요 전문가들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이해와 공감을 유도한 바 있다. 또한 통일연구원은 2019년에 일본의 평화운동단체인 피스데포와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국립외교원 및 세종연구소와 함께 일본 나가사키대 핵무기폐기연구센터(RECNA), 히로시마시립대 히로시마평화연구소와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문제에 관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통일연구원은 차세대 연구자 네트워크 확대 차원에서 2021년 ‘해외 초청연구원’ 제도를 마련하

141) “일본 동경서 2018 민주평통 세계청년위원 컨퍼런스 열려,” 『월드코리아뉴스』, 2018.11.10.,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32953>> (검색일: 2021.10.10.).

고, 첫 번째 대상으로 ‘북일관계’를 전공으로 하는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초청연구원으로 초빙하였다.

(다) 민간 차원

한국의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와 일본의 피스데포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축 마련을 위한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는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통해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구상이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공동안보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군비통제로 평가받는다.

재일동포의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전개되어 왔다. 재외동포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민단’의 평화·통일운동 중에서는 1985년에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원 코리아 페스티벌(One Korea Festival)’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외에도 재일동포 단체는 언론, 출판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실천하고 있다.¹⁴²⁾

민단은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을 기반으로 한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민단은 민주평통의 협력하에 활동하고 있는데, 민단의 단장은 민주평통의 일본 부의장 직을 맡으면서 민단이 민주평통의 대일본 활동에서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민단은 한국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 한반도 평화와 번영 정책을 홍보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관련 각종 활동 및 행사

142) 허예원, “재외동포의 통일 공공외교 추진 방안,” (민주평화통일회의 사무처, 2019. 3.), p. 93.

를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일본 사회 내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¹⁴³⁾

‘원 코리아 페스티벌’은 재일동포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평화 및 통일운동 사업이다. 원 코리아 페스티벌은 도쿄, 오사카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재일동포를 비롯해 한국, 북한, 중국 조선족, 기타 국가의 문화단체 등을 초청한 음악제 형식과 함께 음식, 전시회, 참가행사 등의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85년 해방 40주년을 계기로 ‘8.15 민족·미래·창조 페스티벌’이 오사카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매년 개최로 진행되다가 1990년에 ‘원 코리아 페스티벌’로 행사명을 변경하였다. 1994년부터는 도쿄 개최가 시작되었으며, 1997년부터 개최지를 해외로 확대하면서 미국 뉴욕 개최와 함께 일본 내에서도 NHK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다. 2001~03년에는 매년 한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공동체를 주제로 한 ‘원 코리아 포럼’이 개최되었다. 재단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원 코리아 페스티벌의 일본 국내외로의 확대 발전,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한 연구 개발, 페스티벌, 심포지엄, 세미나, 공연 등의 다양한 활동이 있다.¹⁴⁴⁾

또한 재일동포 단체는 일본 내 출판물을 통한 평화·통일 공공외교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30년 동안 북핵 문제와 한반도 통일 논의를 중심으로 월간지 형태로 『통일평론』을 발행하고 있다. 또한 1959년 창간 이래 한국인이 발행하는 유일한 주간지로 발행되고 있는 『통일일보(統一日報)』도 일본 내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¹⁴⁵⁾

143) 위의 글, p. 93.

144) 위의 글, pp. 94~95.

145) 위의 글, p. 95.

(4) 러시아

(가) 정부 차원

정부 차원의 가장 중요한 평화·통일 정책 공공외교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평화·통일 구상을 설명하는 연설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역내 안정과 평화 유지가 러시아 극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아태지역과의 연계성 확대·발전의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¹⁴⁶⁾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8년 6월 러시아 하원 연설을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을 희망한다고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남북 경제협력 본격화와 러시아와의 3자 경제협력 확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⁴⁷⁾ 역대 대통령의 연설은 그 자리에 참석한 청중뿐만 아니라 현지 언론보도를 통해 핵심적 메시지를 러시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크다.

현지 외교공관 역시 평화·통일 정책 공공외교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1990년 9월 러시아(당시 소련)와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직후 개설된 주러 한국대사관과 1992년 1월 블라디보스토크, 2006년 3월 상트페테르부르크, 2008년 1월 이르쿠츠크에 설치된 총영사관은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전진기지’로서 한국 정부의 정책을 러시아 정부의 정책결정자, 중앙 및 지방의 여론 주도층은 물론, 러시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46)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박근혜 대통령 기조연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6.9.3., <<https://www.korea.kr/archive/speechView.do?newsId=132029703>> (검색일: 2021.6.15.).

147)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하원 연설 ‘유라시아의 꿈,’” 『연합뉴스』, 2018.6.21., <<https://www.yna.co.kr/view/AKR20180621120300001>> (검색일: 2021.6.13.).

또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한·러의원외교협의회는 러시아 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러·한의원협력그룹과 1995년 11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1차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비정기적으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있다.¹⁴⁸⁾ 합동회의에서는 한·러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 간 협력방안은 물론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평화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¹⁴⁹⁾

민주평통은 한국의 러시아 전문가와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가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러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한·러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민주평통 모스크바 협의회는 2013년 10월 ‘한반도 평화통일과 러시아’,¹⁵⁰⁾ 2019년 4월 ‘한반도 평화와 러시아의 협력’을 주제로 한·러 평화통일포럼을 주관했다.¹⁵¹⁾ 현지 한반도 전문가 및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 현지 교포들이 대거 청중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해당 행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나) 1.5트랙 차원

한·러 전략대화는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07년 한국의 동북아 시대위원회와 러시아의 전략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Research) 주관으로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양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민·관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분야

148) 국회사무처 국제국, “제9차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 결과보고서(2009.12.16.~12.23.)”.

149) 국회사무처 국제국, “제10차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 개최 및 하원 러-한의원협력그룹 대표단 초청 결과보고서(2012.12.26.~12.29.)”.

150) “한반도 평화통일과 러시아’ 주제로 한러포럼,” 『재외동포신문』, 2013.10.28.,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4834>> (검색일: 2021.6.14.).

151) “민주평통, 18일 모스크바서 ‘한러 평화통일포럼,’” 『연합뉴스』, 2019.4.16.,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6153400504>> (검색일: 2021.6.15.).

별 협력 전략이 논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정부 주요 인사와 여론 주도층에게 직접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을 설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시아위원회가 해산되면서 이어지지 못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제고 및 국내외 여론 주도층 인사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별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¹⁵²⁾ 이러한 차원에서 1999년부터 러시아 외교 아카데미와 한·러 포럼을 개최해왔는데, 2014년부터는 명칭을 ‘한·러 정경 포럼’으로 변경하고 러·한 소사이어티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러시아 법무부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러·한 소사이어티는 러시아 내 한반도 전문가, 전 남북한 대사, 정치인, 언론인, 사회활동가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¹⁵³⁾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수행하는 평화·통일 정책 공공외교의 파트너이자 현지 한반도 전문가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있다.

(다) 민간 차원

‘한·러 대화(KRD)’는 ‘러·독 대화’를 모델로 하여 양국의 공동관심 분야를 논의하는 민·관·산·학 합동 대화채널이다. 사무국 외 정치·국제관계, 경제·통상, 문화·예술, 교육·과학, 언론·사회, 청년을 주제로 하는 6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¹⁵⁴⁾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1차 포럼을 시작으로 2011년 10~11월 상트페테르부르크

152) 한국국제교류재단, “포럼 및 세미나,” <<https://www.kf.or.kr/kf/main.do>> (검색일: 2021.6.15.).

153) “러한 전문가들로 ‘한-러 소사이어티’ 공식 출범,” 『바이러시아21』, 2014.11.01., <<http://www.buyrussia21.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44>> (검색일: 2021.6.15.).

154) 사단법인 한러대화, <<http://ekrd.or.kr/>> (검색일: 2021.6.15.).

에서 2차 포럼, 2013년 11월 서울에서 3차 포럼을 개최했고, 이후 2018년 6월 모스크바에서 4차 포럼을 개최했다. 한·러 대화는 고려대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가 주관하지만 민·관·산·학 주요 인사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1.5트랙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또한 양국 정상에 참여하는 포럼 및 6개 분야별 교류 행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러 학계의 학술교류, 특히 국제학술회의, 국제세미나 개최도 민간 차원의 정책 공공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등 대학 부설 연구기관들과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한국유라시아학회 등 학회들은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학술교류를 주도하여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이들의 견해를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해왔다.

3. 평가

가. 추진체계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의 주변 4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현황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의 경우이다. 정부, 1.5트랙,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활발하게 추진해왔지만, 한계점들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역할 측면에서 미국 당국과의 협의가 긴밀하게 진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정부의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전개되어왔는지는 평가가 필요한 지점이다. 현재 통일부와 외교부가 각각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 역할을 수

행하고 있으나, 역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 문제는 공공외교가 일반적으로 외교부의 임무이지만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통일부의 업무영역이라는 점과 관계가 있으며,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체계적, 조직적 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의회가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현재 비중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가 정부의 주요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된 지 오래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것도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싱크탱크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의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가 과거에 비해 많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얼마나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출연기관들의 경우, 좀 더 체계적이며 전략적인 대미 정책 공공외교를 진행하기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지만, 아직 그러한 전략적 협력은 미흡해 보인다.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미 정책 공공외교 현황·계획에 대한 공유와 검토를 기반으로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 전문가 집단, 여론주도층의 지지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함께 모색하는 정부출연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 혹은 1.5트랙 차원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이러한 한계 혹은 문제점들은 본 연구가 수행한 미국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인다(본 보고서의 4장 참조). 정부 차원의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정부 및 1.5트랙 차원의 역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민간 차원의 역할이 미진하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민간 연구기관 뿐 아니라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간섭이 아닌 지원 그리고 민·관 협력 방식 추진에 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대상 측면에서도 평가가 필요하다. 대상이 주로는 미국 정부와 전문가 집단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미국 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도 아직은 폭넓게 안정적으로, 전략적으로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테면, 대상이 소수의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 집단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으며, 신진학자 혹은 전문가들을 ‘지한파’로 유도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 새로운 한반도 전문가들을 발굴하거나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미국 의회 의원과 보좌진, 그리고 미국의 언론과 언론인, 재미교포 사회를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는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재미교포 대상의 경우 정부 고위인사의 방미시 워싱턴이나 로스엔젤레스 한인단체 방문 그리고 민주평통 차원의 해외지부 활동을 제외하고, 별도의 활발한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 혹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더 많은 자원의 투여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실태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 목표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다. 중국은 북한과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 관련한 문제에서 타국가들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런데 기존 공공외교는 평화보다는 한반도 통일의

이미지가 주로 부각되고 있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동시에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반도 경제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공동번영의 이미지 산출에도 다소 한계가 있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가 너무 앞서다 보니 정작 중국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공동번영을 다소 소홀히 한 것으로도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목표 설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체는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특성상 지식·정책 공공외교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1.5트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다만, 과거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역할을 담당했던 1.5트랙 차원의 국책기관들이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과 그룹핑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공공외교 주체 그룹을 결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민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발견된다.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특성상, 민간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해도 정부나 1.5트랙과의 연계 혹은 협업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성과가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셋째, 자산과 대상의 문제이다.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자산은 한국의 대북정책 (평화, 번영, 비핵화 등), 한국의 발전경험, 문화예술, 경제, 지식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한반도 통일, 평화라는 이슈 자체가 정치적이고 민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이 관료나 전문가들에게 국한되어 왔고, 중국 대중들의 관심을 유발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중국 대중들의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다

양한 콘텐츠의 개발 그리고 정책·지식 자산 외에도 문화예술, 경제 자산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지 않았다. 향후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다.

넷째,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고 대상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결국 평화·통일 공공외교 수행을 위해서는 한국의 대북정책, 통일방안, 평화외교 등에 대한 지식·정책 자산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콘텐츠의 전파를 위한 매체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주로 전문가, 여론주도층의 회의체에 국한되어 있는 매체들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매체 활용이 다소 단순하였다면, 중국의 인터넷 및 언론의 성장을 활용한 다양한 개인과 민간들의 자연스러운 매체 확장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중국이라는 국가가 지역별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과 매체의 활용 역시도 그 특징을 감안한 맞춤형 공공외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서 한국의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본 연구의 분석틀에 의거해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목표’와 관련, 한국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을 대일본 공공외교에도 적용하려고 하지만, 일본 정부 및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잘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모두 북핵문제를 중요한 안보 위협으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 해결방법에 있어서 ‘대화’를 중시하는 한국과 ‘압력(대북제재)’을 강조하는 일본 사이에는 대북정책에서 상당한 인식의 차이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의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한국의 한반도 정책을 명확히 일본측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대북정책에서 한일이 공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체의 측면에서 한국의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1, 1.5, 2 트랙 모두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다. 비록 2019년 한일 관계 악화 이후 정부 차원에서 그 동안 제도화된 한일정책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1.5트랙 및 민간 차원은 여전히 대일본 공공외교의 핵심적인 추진 주체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식, 정책 공공외교는 1.5 트랙 차원에서, 문화 공공외교는 민간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일 관계의 부침에 따라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하는 점은 정부 주도형 공공외교의 한계로 평가된다.

자산과 관련, 지식, 정책, 그리고 문화외교를 대일본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문화자산을 한일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한일 간 교류의 주요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 내 한류 열풍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대일본 공공외교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평화·통일 공공외교와 관련된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 평화, 한반도 통일, 남북관계, 북일 관계를 포함하는 콘텐츠 부재는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한계로 남아 있다.

매체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여전히 정부와 민간이 주체가 되어 강연, 회의, 공동연구, 인적 교류 등을 통해 일본 정부 및 국민들과 교류하는 방식이다. 특히 한일관계에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기존 신문과 방송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대하며, 특히 한국 언론의 국제화, 즉 인터넷을 통한 일본어판 신문 및 일본어 방송은 일본 내 지식인 및 일반인들이 용이하게 언론 매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과 함께 소셜네트워크나 유튜브 등 일본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한반도 평화 및 통일 관련 콘텐츠를 발신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2020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은 기존의 대면 교류에서 벗어나 비대면, 온라인 교류의 필요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조류와 기술적 진보를 반영한 더욱 정교하고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개발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대상의 차원에서 볼 때, 한일관계의 악화에 따른 한일 정부 간 교류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여론주도층 및 차세대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정책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다만, 2020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일본 사회 내 한류 붐이 기존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일본의 MZ세대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향후 다양한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별 효과적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경우이다. 첫째, 목표의 측면에서, 한국의 대러시아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한국을 알리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면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을 홍보하는 데는 성공하고 있지만, 일방적 메시지 전달이 아닌 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

둘째, 주체와 관련, 한·러 수교 이후 불과 30년이라는 짧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러시아 평화·통일 공공외교에는 정부, 의회, 국가기관,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미디어, 학회 및 연구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정부와 정부 관련 기관이 여전히 주도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민간의 역할이나 참여 비중이 낮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은 대러시아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1990년

대에는 단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실현한 역사적 경험,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제도와 정책 등 지식자산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러시아 역시 단기간에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달성하면서, 적어도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차원에서 이러한 지식자산은 상대적으로 매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식자산 중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최근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문화자산, 한국에 대한 호의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기업자산과 관광자산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통적 매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사이버 매체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매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한국의 대통령 또는 정부 주요 인사의 연설 또는 강연의 강점과 파급효과가 여전히 큰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현지 언론보도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데 있다. 러시아 언론은 아시아 문제보다는 유럽 문제, 동북아 문제보다는 탈소비에트 지역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한반도 정세 또는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러시아 언론을 활용하여 파급효과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 측 초청기관이 이미 이름이 알려진 시니어 한반도 전문가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회의마다 러시아 측 참석자의 구성이 거의 유사하다. 이는 오히려 차세대 ‘지한파’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한반도 전문가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결정에 한반도 전문가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데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 정책을 세계전략 또는 동북아 정책 차원에서 바라보고 결정한다. 따라서 러시아 측 파

트너 또는 참석자 구성을 지금보다 더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할 것이다. 유튜브 등을 이용한 사이버 매체는 속도와 전파력 측면에서 강점이 매우 크다. 하지만 대부분의 콘텐츠가 한국어 또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어 한계도 많다. 따라서 평화·통일 공공외교 차원에서 한반도의 현실과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대상으로서 러시아는 남북 모두와 일정한 신뢰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이자 한반도 평화·통일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러시아의 여론 주도층, 특히 시니어 한반도 전문가들은 냉전 시기부터 한반도 정책에 관여해왔고 북한과 오랫동안 긴밀하게 교류해왔기 때문에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한반도의 현실을 단순히 냉전적 사고에 기반하여 해석하거나, 북한의 입장에 대해 최소한 '심정적 지지'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차원에서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는 단점도 있다. 더구나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그룹은 한·러 수교 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 세심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 영역별 추진실태

한국의 대주변 4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영역별 추진실태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영역별 실태는 정책 공공외교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었고 지식 공공외교가 그 다음이며, 특히 문화영역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문화

측면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문화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미 공공외교가 진행되고 있으나, 한반도의 평화 증진 및 남북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공외교활동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물론, 다양한 대미 문화 공공외교가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는 한국이 추진하는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 사회 내 공감대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한반도 평화 증진 및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 측면의 공공외교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진행한 미국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이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평화 공공외교 매체로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 행사를 지목했다(본 보고서의 4장 참조). 이와 관련하여 2021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방미 활동에서 방탄소년단이 함께한 것은 향후 문화 측면 대미 공공외교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정부의 정책 추진에 한류를 동원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하겠지만, 민·관 협력 차원에서 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결합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한국의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영역별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외교는 사실 한반도의 평화적 이미지에 대한 역사·문화적 전통을 잘 아우르는 정교한 콘텐츠가 필요하다. 그러나 평화 관련 콘텐츠는 주로 지식보다는 정책적 설명에 치우치고 있고, 기존 통일 공공외교 차원의 정책 설명과 홍보 확산 위주의 일방형 외교라 다소 아쉬운 상황이다. 다수의 중국 전문가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정책 설명과 홍보는 이미 다양하게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나, 이들로부터 자발적인 지지와 옹호를 이끌어내

는 수준까지는 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국에 대한 맞춤형 콘텐츠 역시 더 발굴하고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통일부가 『통일백서』등 한반도 통일 관련 다양한 자료를 홍보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영문판이고 아직 중문판이 없다. 중국 대중들까지 대상으로 하려면 중국어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문화를 매개로 한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문화영역의 특성상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아직까지 문화와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까지 연계되는 고급스럽고 전략적인 콘텐츠 개발에는 시간과 투자가 더 필요하다. 민간 영역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 교류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평화·통일 공공외교가 주로 지식·정책 등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자국이 참전한 6.25전쟁을 현재의 대미국 항전의 결집력을 제고하는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어 한반도 통일 등과 관련된 역사문제를 자연스럽게 문화에 녹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중국에서 민족주의, 국수주의 경향이 확대되면서 자국 문화에 대한 과도한 자긍심이 자국문화 우선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김치, 한복 등 한국의 전통문화가 자국이 원조임을 강조하려는 일부 중국인들의 움직임으로 인한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K-Pop, K-Drama, K-Beauty 등 우리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한류 등 문화자산을 맹신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 한류그룹인 BTS의 한국전쟁 70주년과 관련한 언급이 중국 대중들을 자극해 불매운동, BTS 광고 출연 취소 등의 역풍을 맞은 것이 좋은 사례이다.¹⁵⁵⁾ 문화자산을 활용하는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가능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

155) “BTS ‘한국전쟁’ 발언했다가 중국서 된서리…中누리꾼 격앙.” 『연합뉴스』, 2020.10.12.,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2108900083>> (검색일: 2021.6.16.).

하며, 우리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견인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한국의 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게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정책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교부, 통일부 등 주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1.5트랙 차원의 국책연구기관들이 상당 기간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평화·통일이라는 이슈 자체가 정치적이고 민감한 현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전문가, 여론주도층에 대한 선별적 공략이 더 적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책 영역 역시 정부나 1.5트랙을 넘어 민간 차원과 연대 확대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차원에서 평화·통일과 관련한 정책 공공외교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 줄 필요가 있다. 개인이나 민간 자체에서 평화·통일과 관련된 정제된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를 중심으로 예산을 적극 투입하고,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존 민간 차원의 다양한 매체들이 중국에 대한 활동의 공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평화·통일과 관련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외교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한국의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영역별 추진실태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 공공외교의 경우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식 공공외교는 주로 한반도 통일 문제보다는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및 동아시아 차원의 국제질서 안정 및 평화를 논의하는 형태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한일은 북한 핵문제를 양국의 공동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북핵 문제를 중시하고 있고, 이러한 북핵 문제에 대한 일치된 인식이 각종 국제회의 및 포럼, 세미나 형

태의 논의의 장이 형성되는데 일조하였다. 1.5트랙 차원에서는 한국 국제교류재단을 중심으로 한 한국학 확산을 통한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한일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지식인 및 시민 단체 교류, 대학생을 비롯한 미래세대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일 간 직접 교류가 힘들어지면서 오프라인 상의 교류 활동이 중지되거나 축소되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온라인 형태의 교류 방식이 차츰 소개되고 적응과정을 거치면서 한일 간 온라인 교류가 새로운 교류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한일 간 지식 공공외교는 정부, 1.5트랙, 민간 차원 모두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교류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기관 주최의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등은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주도형 추진에서 벗어나 정부와 1.5트랙, 민간이 함께 하는 형태의 민·관 혼합형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 공공외교에 대한 평가이다. 문화 공공외교는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한일관계의 대립이라는 양국 관계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문화외교국장회의 같은 경우는 한일관계 악화 속에 6년간 개최되지 않는 등 한일 정부 간 제도화된 정례 회의가 양국관계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5트랙 차원의 ‘한일문화교류회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일간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현안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하였다. 즉, 한일문화교류회의는 세미나를 통해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일본의 방재 대책’과 같이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사회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해하

는 행사를 추진하였다. ‘평화’를 단순한 국가 간 안보위협을 감소시키는 ‘소극적 평화’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 평화로 이해한다면,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한일 간 1.5트랙 교류는 지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간 차원에서는 재일동포 사회 내에서 민단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외교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문화 공공외교에서 단순히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 및 지역이 일본 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문제, 즉 다문화 공생 차원에서 민간 공공외교가 그 대상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한류 붐이라는 일본 내 사회현상 속에서 한국 문화에 친근감을 갖고 있는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한류 문화외교가 활발히 추진되었다. 특히 일본 내 홍보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일반 일본인을 대상으로 ‘참관형’ 행사 위주에서 ‘참여형’ 행사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만 하다.

셋째, 정책 공공외교에 대한 평가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정부 차원에서 한일 간 정책대화를 통해 ‘통일 공공외교’에서 ‘평화 공공외교’로 대일본 공공외교의 비중이 이동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이 대일본 공공외교에서도 적용되었으며, 당장의 한반도 통일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평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1.5트랙에서는 ‘평화’를 주제로 한 양국의 연구기관 간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과 나가사키대 핵무기폐기연구센터(RECNA), 히로시마시립대 히로시마평화연구소, 그리고 평화운동단체인 피스데포와의 지속적인 교류는 한반도 평화 및 북한 비핵화, 동북아 평화핵지대구상 등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포괄하는 평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국립 외교원, 세종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기관 역시 일본 연구기관과 ‘평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민간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한반도 통일문제를 ‘평화’ 개념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러시아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영역별 추진실태에 대한 평가이다. 첫째, 대러시아 지식 공공외교는 한국어 및 한국학의 확산을 통한 한국 이해 및 이미지 제고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 현지 외교공관,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원 등, 1.5트랙 차원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 세종학당재단 등, 민간 차원에서 삼일문화원, 원광한국학교 등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평화·통일 공공외교 차원에서 볼 때, 지식자산을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보다는 여전히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책을 홍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

둘째, 대러시아 문화 공공외교는 한국의 풍부한 선진문화 자산을 활용한 매력 확산과 호감도 증진, 쌍방향 소통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운영하는 주러 한국문화원, 현지 외교공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1.5트랙 차원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문화번역원, 한국관광공사 모스크바지사 등, 민간 차원에서 ‘한국 전통 연희단체 총 연합회’, ‘수원 국제 사진 축제’, ‘스페이스 포 컨템포러리 아트’, ‘토지 문화재단’ 등이 적극적으로 문화 공공외교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문화 공공외교는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지는 못하고, 아직은 한국을 알리

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여론 주도층 및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 러시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셋째, 대러시아 정책 공공외교는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이해도 제고와 여론 주도층과의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역대 대통령의 평화·통일 구상 연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운데, 현지 외교공관, 국회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민주평통 등, 1.5트랙 차원에서 한·러 전략대화, 한·러 정경 포럼 등, 민간 차원에서 한·러 대화, 한·러 학계의 학술 교류 등이 두드러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정작 주무 부처라 할 수 있는 통일부의 활동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물론, 1.5트랙 차원에서 통일연구원이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 산하의 러시아 전략연구소(RISS)와 한·러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있지만, 통일부 자체의 독자적인 평화·통일 공공외교 프로그램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러 전략대화가 중단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진행된 한·러 전략대화는 양국의 정책 결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정부 주요 인사와 여론 주도층이 참석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장으로 활용 가치가 높았다. 이후 양국 간 1.5트랙 차원 또는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진 대화채널은 별다른 이견이 없는 사항을 형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에 그쳤고, 정책 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인사가 참석하는 경우 역시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는 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자,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을 설득하는 장으로서 한·러 전략대화의 재개가 필요해 보인다.

IV. 주변 4국의 대한국 평화·통일 공공외교 인식: 전문가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가. 전문가 인식조사의 목적

3장에서 한국의 주변 4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추진체계와 영역별 실태를 분석했지만, 정태적 문헌연구의 한계가 있었다. 4장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맥락에서 한국 및 주변 4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일반적으로 공공외교가 다른 나라의 국민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특성상 그 성과와 의미 역시 자기중심적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제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한반도 주변 주요 국가, 즉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대상자들의 국적뿐만 아니라 전문분야에 있어서 언론, 시민사회, 경제 및 문화 등 민간분야에서 한반도 관련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에 비해 보다 입체적인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더욱이 본 연구는 지난 2012-13년 실시되었던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 연구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킨다는 면에서도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 정부가 통일 공공외교를 추진하던 초창기에 효과적인 방향과 전략의 수립을 위해 실시된 기존의 연구를 거의 10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돌아보고, 향후 10년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번 전문가 인식조사는 이전 조사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일부 설문 문항에서 시계열 분석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음을 밝혀둔다.

나. 설문지의 설계와 구성

본 전문가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설문조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주의사항과 전문가들의 인구학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문항을 제외하면 총 3개의 부분 3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부는 <한국의 공공외교>로서 한국 공공외교의 일반적 추진실태를, 2부는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로서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질문인데, 2013년 실시된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연구의 설문조사 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제3부 <한국의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는 이번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제3부도 기본적인 틀은 제2부와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그러나 평화 공공외교가 본격화된 시기가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에 현황에 대한 평가 문항 대신 앞으로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가 집중해야 할 의제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는 등 약간의 차이를 두었다.

아울러 1~3부의 문항들은 본 연구에서 공공외교를 분석하는 틀로 사용되는 5가지 구성요소(목표, 주체, 자원 및 자산, 매체 및 수단, 대상)를 효과적이고 균형 있게 파악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 구성은 아래 <표 IV-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 학계, 민간(언론, 경제 및 문화계) 등의 한반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2, 3부의 질문에 개방형 질문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비교적 자유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V-1〉 설문조사 문항 구성

구분	제1부 일반 공공외교	제2부 통일 공공외교	제3부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	합계
목표	1 (4번)	1 (8번)	1 (9번)	3
주체	2 (2,3번)	2 (2,3번)	2 (2,3번)	6
자원 및 자산	1 (8번)	3 (9,10,11번)	3 (10,11,12번)	7
매체 및 수단	1 (5번)	1 (5번)	2 (5,7번)	4
대상	2 (6,7번)	2 (4,7번)	2 (4,8번)	6
기타 (총평, 개방형 등)	1 (1번)	5 (1,6,12,13,14번)	3 (1,6,13번)	9
합계	8	14	13	35

이 설문지는 국문을 기본으로 작성되었으며, 영어, 일본어, 중국어 및 러시아어로 번역되었다.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언어적 차이는 다국적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이런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각 별도의 전문적 번역과 감수를 진행하였다.

설문 대상자들이 다양한 국가에 산재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설문조사는 온라인 플랫폼인 구글 폼(Google Form)을 기반으로 제공되었다. 단, 각국의 다른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에 접속이 제한되거나, 정치적인 특수 상황으로 인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메일 조사 방식으로 응답을 받은 후 설문 데이터를 해당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다. 전문가의 선정 및 특징

이 설문조사는 조사의 대상이 특정 영역의 전문가들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비확률적 표집을 실시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설문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조사 대상 모집단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및 국내에 산재하여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전문가는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 소속 전·현직 관료와 언론, 시민사회, 기업인과 문화계 등 민간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도적 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을 실시하였다.

최초 표집설계 단계에서 이번 설문조사의 대상은 연구 기간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100명 내외로 설정하였으며, 각 국가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인원을 조정하였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정부 인사와 전직 관료들은 해외 연구자들의 설문에 응하기 어려운 정치적 상황과 시민사회 영역의 취약성으로 인해 민간 전문가를 발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을 분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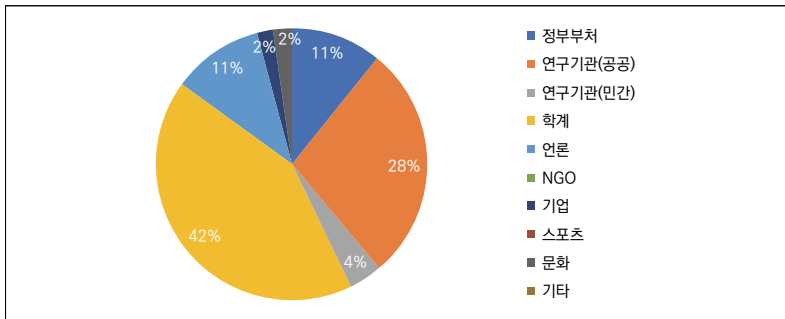
그러나 실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예기치 못한 기술적·정치적 난관에 봉착한 경우도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국가에서는 설문조사를 탑재한 온라인 플랫폼을 접속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의 설문조사 플랫폼도 중앙정부의 통제 등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구진의 개별적인 네트워킹을 활용한 노력 덕분에 짧은 조사 기간임에도 적지 않은 총 55명의 전문가가 조사에 응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12명, 중국 11명, 일본 17명, 러시아 15명이며, 분야별로는 정부관료 13명, 학계(교수, 연구원) 27명, 민간(언론, 시민사회, 경제 및 문화 등) 영역 15명이 참여하였다. 참고로 한국의 전문가는 정부, 학계, 민간 영역에서 각 5명씩 총 15명이 참여하였다.

〈표 IV-2〉 설문조사 국가 및 분야별 응답 인원

구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합계
정부 (전·현직 관료 등)	2	2	3	6	13
학계 (교수, 연구원 등)	7	6	8	6	27
민간 (언론, 시민사회, 경제 및 문화 등)	3	3	6	3	15
합계	12	11	17	15	55

〈그림 IV-1〉에서 보듯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소속기관 분포는 ‘학계’가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공 연구기관(28%)’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이어서 ‘정부부처’와 ‘언론’이 세 번째인 11%를 각각 기록했다.

〈그림 IV-1〉 전문가의 소속기관 분포



한편 한반도 관련 연구 및 업무 경력과 관련해서는 ‘20년 이상’이 가장 많은 42%를 차지했으며, ‘10~15년’이 20%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80%가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표집과정에서 전문성은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전체 응답자의 58%, 일본은 47%가 ‘20년 이상’의 경력

을 보여 가장 경력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15~20년'이 55%로 가장 많았다. 러시아는 일반적으로 한반도 전문가의 고령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 응답자들 가운데에서는 '20년 이상(33%)'과 '10~15년 사이(27%)'가 유사하게 나타난 것에서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3〉 국가별 전문가 경력 분포

국가	1년 미만	1~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미국	-	-	-	33%	8%	58%
중국	-	-	-	18%	55%	27%
일본	6%	18%	18%	6%	6%	47%
러시아	-	-	27%	27%	13%	33%
전체	2%	5%	13%	20%	18%	42%

2. 국가별 결과 분석

가. 미국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공공외교, 통일 공공외교, 평화 공공외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을까? 여기서 그 인식과 평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 기간은 2021년 8월~9월이며, 조사 대상은 총 12명이다.

(1) 한국의 대미국 공공외교에 전반에 대한 평가

(가) 일반 공공외교, 통일 공공외교,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평가 비교

한국의 공공외교에 대한 조사결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조금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이 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42%(12명 중 5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8%(1명)는 ‘매우 그렇다’, 25%(3명)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국이 통일 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59%(12명 중 7명)가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한국이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50%(12명 중 6명)가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34%(4명)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다. 종합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더 많은 가운데, 큰 차이는 없지만 통일 공공외교, 평화 공공외교, 일반 공공외교의 순으로 부정적 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4〉 한국의 대미국 공공외교 전반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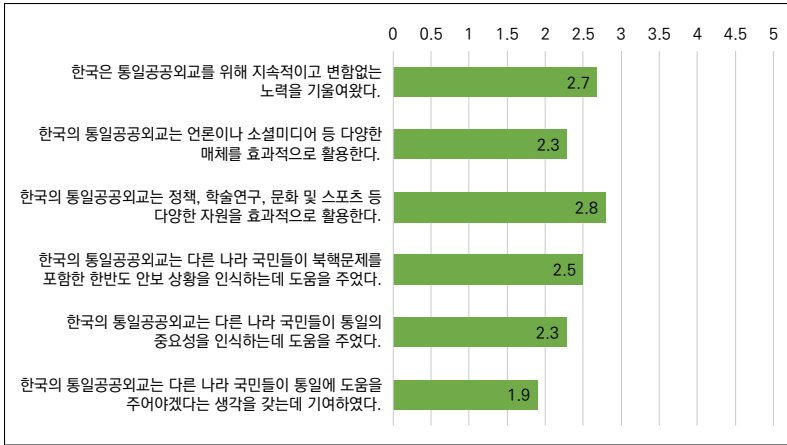
구분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공공외교	인원	1	3	3	5	0
	백분율	8%	25%	25%	42%	-
통일 공공외교	인원	2	1	2	5	2
	백분율	17%	8%	17%	42%	17%
평화 공공외교	인원	2	2	2	5	1
	백분율	17%	17%	17%	42%	8%

(나) 통일 공공외교와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심층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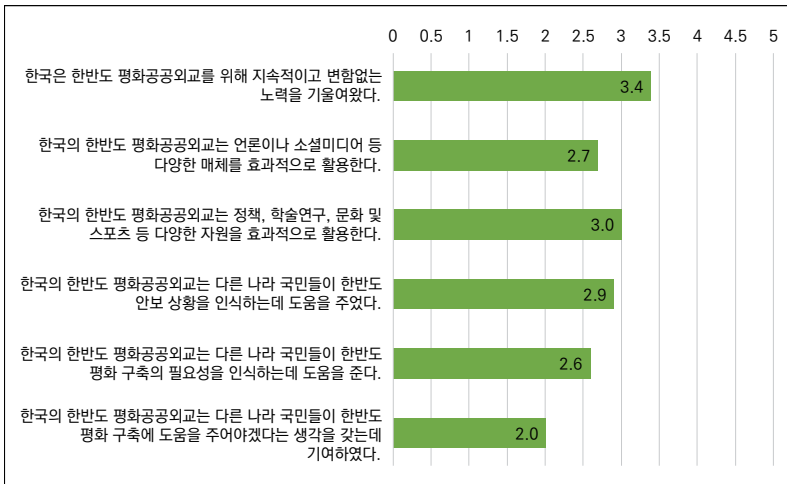
〈그림 IV-2〉과 〈그림 IV-3〉는 통일 또는 평화 공공외교의 지속성, 매체 활용, 자원 활용, 그리고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인식 혹은 평가를 보여준다. 5.0 만점의 평균값이 평가를 반영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평가를 의미한다. 조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평가 속에서 통일 공공외교보다는 평화 공공외교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속성’ 측면에서 평가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통일 공공외교의 지속성에 비해서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평가가 더 높으며, 차이는 0.7점이다. ‘지속적 노력’ 측면에서 이와 같이 차이가 비교적 뚜렷한 이유는 최근 한국 정부에서 통일보다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책, 학술연구, 문화 및 스포츠 등 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평화 공공외교가 통일 공공외교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목표 달성 여부와 관련하여, 통일 또는 평화 공공외교가 ‘다른 나라 국민들이 통일 또는 평화에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기여’하는 지에 대해서는 통일 측면의 평가가 평화 측면의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졌다.

〈그림 IV-2〉 한국의 대미국 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심층평가(5점 척도)



〈그림 IV-3〉 한국의 대미국 평화 공공외교의 심층평가(5점 척도)



통일 공공외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정책, 학술연구, 문화 및 스포츠 등 다양한 자원의 활용’이다. 다음으로는 ‘지속적 노력’,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 제고’의 순이다. 통일 공공외교가 ‘미국인들이 통일에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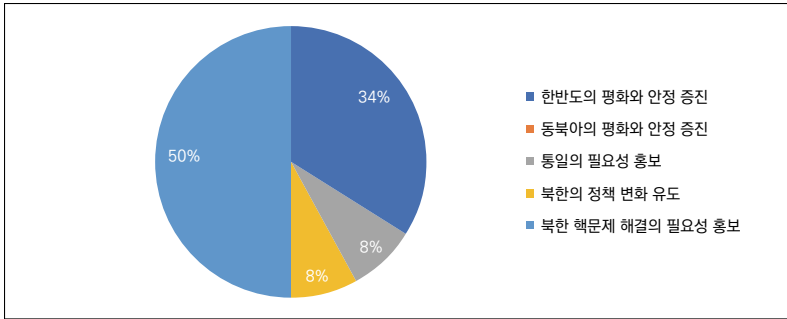
을 갖게 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1.9점에 그쳤다. 응답자 중 대다수가 한국이 통일 공공외교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를 달성하는데 대체로 실패했다고 답한 것이다.

평화 공공외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지속적 노력'이며, 평가 점수는 3.4점이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자원의 활용'에 대한 것이며, 평가 점수는 3.0점이다. 평화 공공외교의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응답은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엇갈린다. 우선 '한반도 안보상황 인식 제고 여부'에 대해서는 평균값이 2.9점으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화 공공외교가 미국인들이 '한반도 평화구축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점수는 2.6점이며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평화구축에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점수가 2.0점이며, 이는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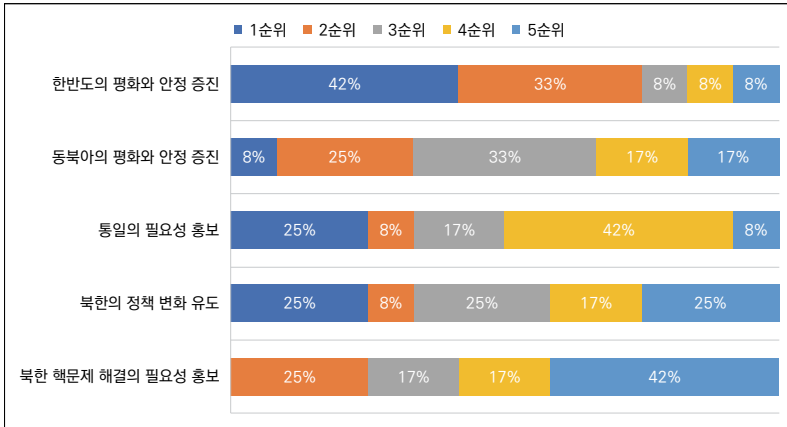
(2) 한국의 대미국 공공외교의 목표: 현재의 목표와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인식

〈그림 IV-4〉과 〈그림 IV-5〉는 한국이 추진하는 통일 공공외교의 현재 목표와 향후 방향성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인식을 나타낸다. 현재 목표에 대한 질문은 “한국이 미국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통일 공공외교가 어느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향후 방향성에 대한 질문은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①부터 ⑤까지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이다.

〈그림 IV-4〉 한국의 대미국 통일 공공외교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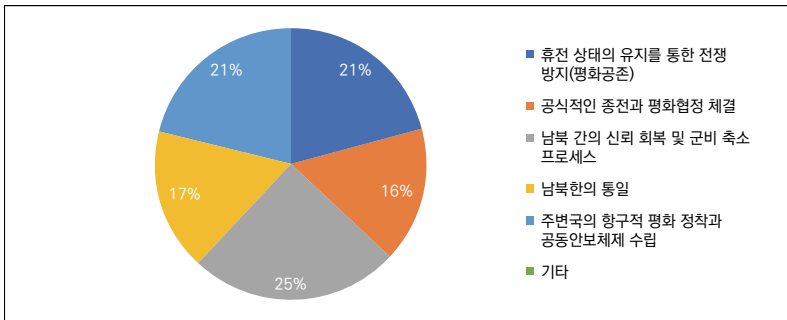
〈그림 IV-5〉 한국의 대미국 통일 공공외교의 지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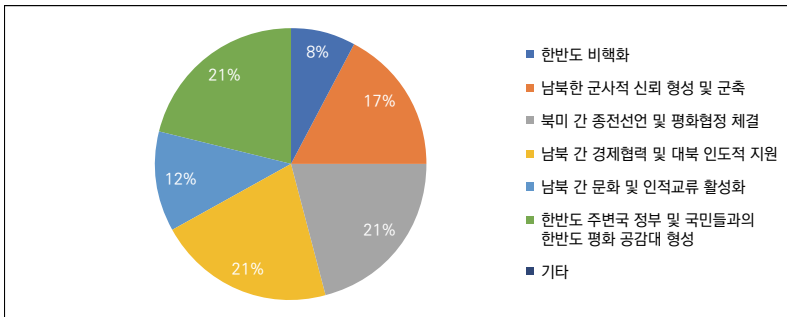
조사 결과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이 추진하는 통일 공공외교의 현재 목표가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필요성 홍보’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답했다. 각각 응답자의 50%(6명)와 34%(4명)가 그렇게 답하였다. 또한 앞으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목표에 대해서는 상대적 다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이 우선순위라고 응답했다. 또한 통일 공공외교에 관한 질문인 만큼 ‘통일의 필요성 홍보’와 ‘북한의 정책 변화 유도’에도 각각 25%(3명)이 1순위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림 IV-6〉과 〈그림 IV-7〉은 한국이 추진하는 평화 공공외교의 현재 목표와 향후 방향성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인식을 보여 준다. 현재 목표에 대한 질문의 내용은 “한국의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가 추구하는 실질적인 목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문항들 가운데 가장 유사한 것을 2개 선택해주시시오.)”이다. 향후 방향성에 대한 질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에 따라 2개를 선택해주시시오.)”이다.

〈그림 IV-6〉 한국의 대미국 평화 공공외교의 목표



〈그림 IV-7〉 한국의 대미국 평화 공공외교의 지향점



한국의 평화 공공외교의 현재 목표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응답은 다양하게 분산되어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많은 25%가 ‘남북 간의 신뢰회복 및 군비축소 프로세스’가 현재 한국의 평화 공공외교가 추구하는 목표라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다른 항목들과 큰 차이가 없다. ‘남북한의 통일’이 목표라는 응답과 ‘공식적인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이 목표라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이라는 점이 이채롭다. 최근 한국 정부가 통일보다 평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결과는 평화 공공외교가 본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의 평화 공공외교가 앞으로 집중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전문가들의 응답은 대체로 분산되어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많은 21%가 각각 ‘북미 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남북 경제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 ‘한반도 주변국 정부 및 국민들과의 한반도 평화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반도 비핵화’가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8%에 불과한 점이 특이하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고 보거나 또는 비핵화의 현실화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회의적으로 보는 미국 전문가들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3) 한국의 대미국 공공외교의 주체

공공외교의 주체, 즉 한국의 공공외교를 누가 주도하는지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의 대다수는 ‘정부 주도형’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는 ‘민·관 혼합형’이라고 응답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특히 일반 공공외교에 비해서, 통일 공공외교 및 평화 공공외교가 민간의 역할 보다는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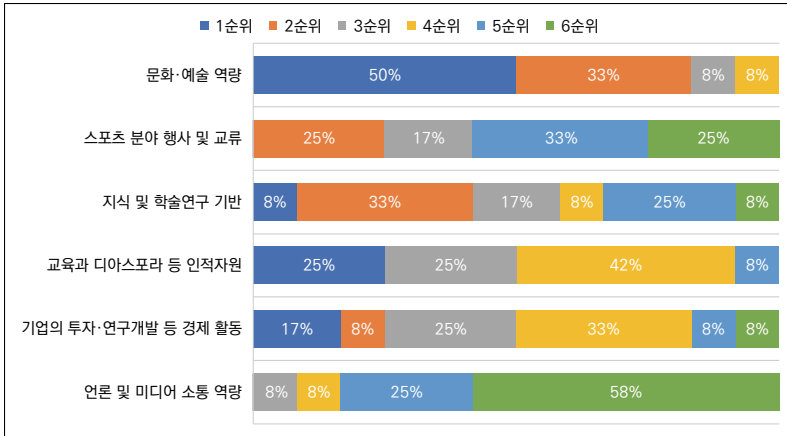
〈표 IV-5〉 한국의 대미국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구분	응답	정부 주도형	민간 주도형	민·관 혼합형
공공외교	인원	7	0	5
	백분율	58%	-	42%
통일 공공외교	인원	9	0	3
	백분율	75%	-	25%
평화 공공외교	인원	9	0	3
	백분율	75%	-	25%

(4) 한국의 대미국 공공외교의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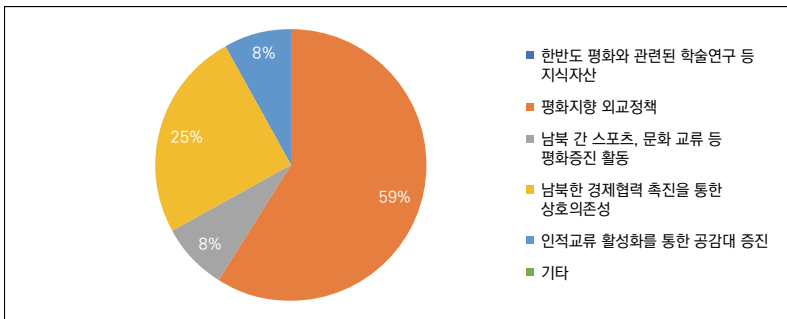
〈그림 IV-8〉, 〈그림 IV-9〉은 각각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주요 자원은 무엇인지,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자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우선 공공외교 자원 측면에서는 50%의 응답자가 ‘문화·예술 역량’을 1순위로 꼽았다. K-Pop, K-Movie를 비롯한 한국의 문화 및 예술 역량이 매우 중요한 공공외교 자산이 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25%는 ‘교육과 디아스포라 등 인적자원’을 1순위로, 17%는 ‘기업의 투자·연구개발 등 경제 활동’을 1순위로 선택했다. 또한 2순위로 ‘지식 및 학술연구 기반’을 선택한 응답자가 33%이며 ‘스포츠 분야 행사 및 교류’를 선택한 응답자가 25%인 점도 눈에 띄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IV-8〉 한국의 대미국 공공외교의 자원



평화 공공외교의 자원 측면에서는 59%의 응답자(12명 중 7명)가 ‘평화지향 외교정책’을 선택했다. 한국이 평화를 지향하는 외교정책을 펼치는 것 자체가 가장 효과적인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25%(12명 중 3명)가 ‘남북한 경제협력 촉진을 통한 상호의존성’이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자원이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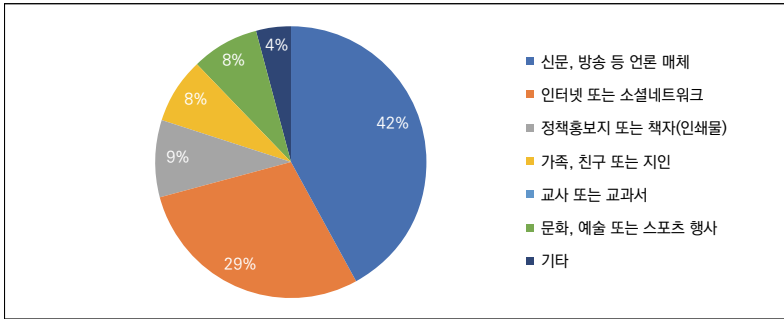
〈그림 IV-9〉 한국의 대미국 평화 공공외교의 자원



(5) 한국의 대미국 공공외교의 매체

〈그림 IV-10〉, 〈그림 IV-11〉, 〈그림 IV-12〉는 통일 또는 평화 공공외교 매체의 유용성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 및 향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매체의 현재 유용성 평가를 위한 질문의 내용은 “어떤 통로를 통해 한국의 통일 (또는 평화) 공공외교에 관하여 접하였습니까?(2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이다. 향후 유연성에 대한 전망 관련 질문은 “한국이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매체/수단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2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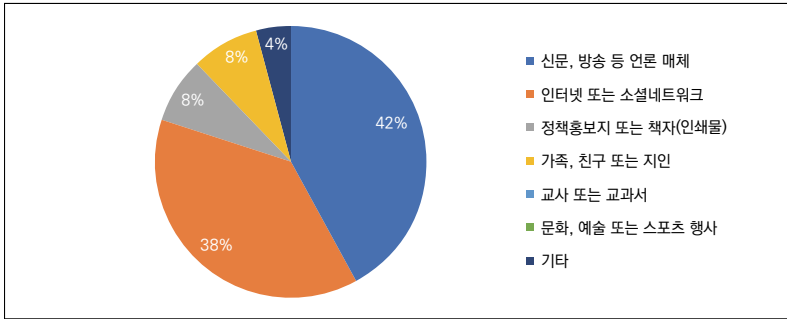
〈그림 IV-10〉 한국의 대미국 통일 공공외교의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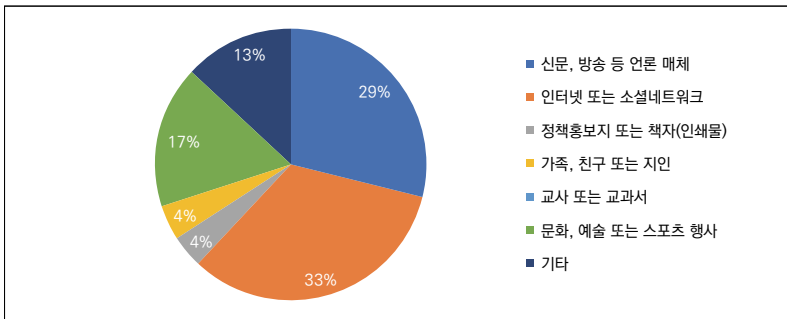
먼저, 현재 매체의 유용성에 대한 조사에서, 통일 또는 평화 공공외교 측면에서 모두 미국의 전문가들은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두 경우 모두 응답 비율이 42%이다. 다음으로 ‘인터넷 또는 소셜네트워크’가 통일 공공외교 측면에서는 29%, 평화 공공외교 측면에서는 38%의 선택을 받았다. ‘정책홍보지 또는 책자(인쇄물)’는 9%의 선택을 받았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유용성을 보여준다.

향후 평화 공공외교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매체로는 ‘인터넷 또는 소셜네트워크’가 가장 많은 33%의 지지를 받았고, 다음은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로서 29%의 지지를 받았다. 두 매체를 선택한 응답자 비율의 차이는 4%로 근소하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17%가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 행사’가 향후 한국의 평화 공공외교를 위해 유용한 매체가 될 수 있다고 응답한 점이다. <그림 IV-11>과 <그림 IV-12>를 비교할 때, 이 결과는 현재까지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 행사를 통해 한국의 평화 공공외교를 접한 적은 거의 없지만, 앞으로는 이 매체가 한국의 평화 공공외교를 위해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IV-11> 한국의 대미국 평화 공공외교의 매체



<그림 IV-12> 한국의 대미국 평화 공공외교 매체의 유용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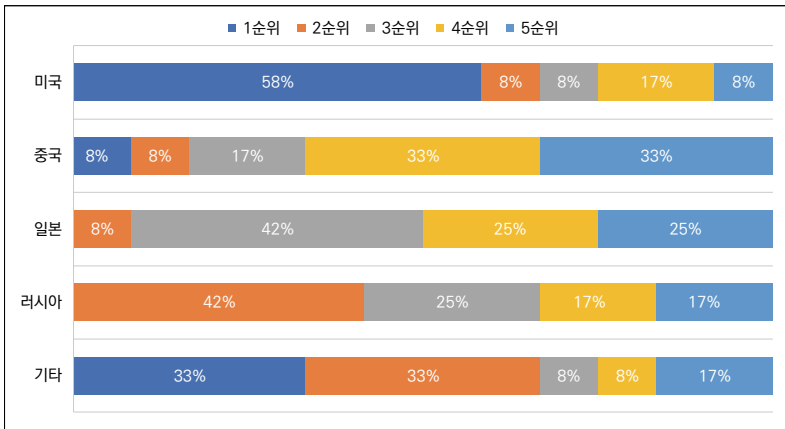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매체의 유용성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응답 결과는 현재 신문, 방송 등 전통적 언론매체 그리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 등 신 미디어가 한국의 공공외교를 위해 유용한 매체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한류 콘텐츠가 한국의 평화 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할 잠재력을 가진다는 점을 함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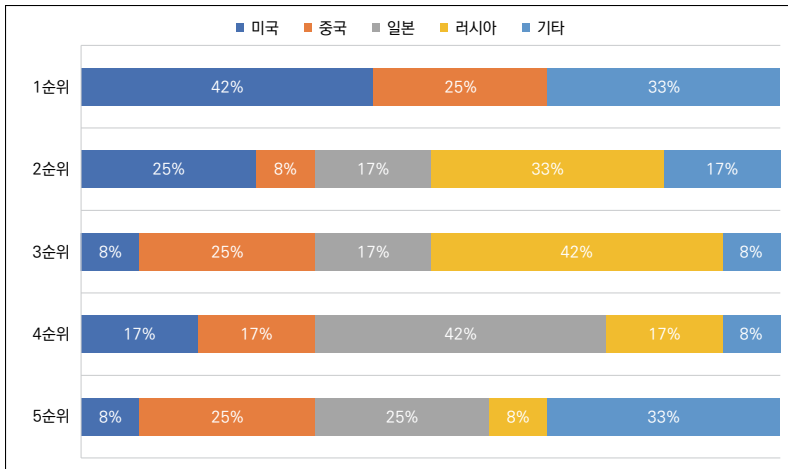
(6) 한국의 대미국 공공외교의 대상

〈그림 IV-13〉, 〈그림 IV-14〉는 통일 또는 평화 공공외교를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우선 통일 공공외교에 대해서는 ‘미국’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 비율이 58%로 압도적이다. 평화 공공외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분산된 결과가 나타나며, 42%가 ‘미국’을 1순위로 선택했고, 25%가 ‘중국’을 1순위로 선택했다.

〈그림 IV-13〉 한국 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국(미국)



〈그림 IV-14〉 한국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국 (미국)



〈표 IV-6〉은 통일 또는 평화 공공외교의 주된 대상이 어떤 직업군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우선 통일 공공외교에 대해서는 ‘정치인(33%)’, ‘관료(25%)’, ‘학자 및 전문가(13%)’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화 공공외교에 대해서는 ‘정치인(29%)’, ‘학자 및 전문가(25%)’, ‘관료(21%)’의 순이다. 두 경우에 있어서 응답의 큰 차이는 없으나, 평화 공공외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학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활동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IV-6〉 한국의 대미국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 직군

구분	정치인	관료	학자·전문가	언론	시민사회단체	일반국민
통일 공공외교	33%	25%	13%	8%	13%	8%
평화 공공외교	29%	21%	25%	4%	-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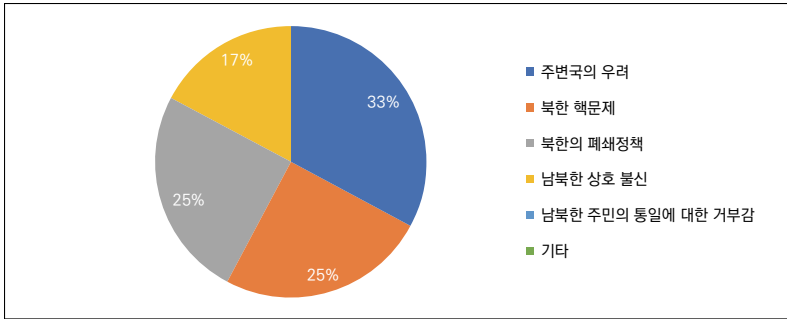
(7) 한국 대미국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의 장애요인

〈표 IV-7〉, 〈그림 IV-15〉, 〈그림 IV-16〉은 한국이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질문의 내용은 “한국의 통일 (또는 평화) 공공외교 추진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이다. 우선 통일 공공외교의 장애요인으로서는 응답자 중 33%(12명 중 4명)가 ‘주변국의 우려’를 지목했고, 다음으로는 25%(3명)가 각각 ‘북한 핵문제’와 ‘북한의 폐쇄정책’을 선택했다. 또한 평화 공공외교에 있어서는 33%(4명)가 ‘북한 정치지도자들의 호전성과 즉흥성’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했고, ‘북한 핵문제’ 등 다른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 대체로 유사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응답자 중 2명이 한국의 평화 공공외교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한미동맹’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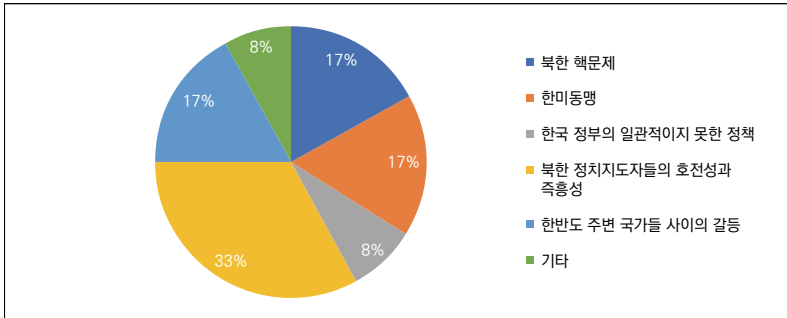
〈표 IV-7〉 한국 공공외교의 장애요인(미국)

통일 공공외교	응답	주변국의 우려	북한 핵문제	북한의 폐쇄정책	남북한 간의 상호불신	남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거부감	기타
	인원	4	3	3	2	0	0
	백분율	33%	25%	25%	17%	-	-
평화 공공외교	응답	북한 핵문제	한미 동맹	한국 정부의 비일관적 정책	북한 정치지도자들의 호전성과 즉흥성	한반도 주변 국가들 사이의 갈등	기타
	인원	2	2	1	4	2	1
	백분율	17%	17%	8%	33%	17%	8%

〈그림 IV-15〉 한국의 대미국 통일 공공외교의 장애요인



〈그림 IV-16〉 한국의 대미국 평화 공공외교의 장애요인



(8) 주관식 응답 분석: 개선을 위한 방향 및 과제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은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질문에 대한 선택지에 표기를 하는 것 이외에도 한국의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의 개선을 위한 방향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로 많았던 의견은 두 가지이다. 첫째, 통일 공공외교보다는 평화 공공외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주된 이유는 통일은 한국인들에게는 하나의 열망일 수 있으나, 미국인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다가오기는 어려우며, 단기적으로 실현될 가능성도 희박하고, 보편적인 가치로 인식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남한이 통일을 강조

할수록 북한은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공공외교에서 통일을 강조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통일 주제는 최소화하고, 대신에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의 종식과 같은 한반도 평화에 관한 주제들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둘째, 한국의 공공외교에 있어서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결합시키거나 활용할 것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미국 전문가들은 특히 K-Pop의 부상으로 미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쟁과 한반도 분단의 비극, 한반도에서 평화와 화해의 필요성에 관한 영화, 문학, 문화행사 등을 활용하거나 새롭게 기획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남북한의 공동 행사 때 K-Pop 혹은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외에도, 미국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중 하나는 한국이 한반도 문제가 (남이 아닌) 자신의 문제라는 인식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에 대한 압박도 필요하고, 미국 정치인들과 언론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어떤 전문가는 한미 연합훈련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대신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자적 연합훈련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 대학들의 대학원 과정에 한국에 대한 강좌가 더욱 많이 개설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의견, 미국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 남한이 북한과 교류할 때 미국의 정치인들과 언론 관계

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그렇게 할 때 미국의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나. 중국

(1)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 전반에 대한 평가

(가) 일반 공공외교, 통일 공공외교,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평가 비교

〈표 IV-8〉은 중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공공외교 전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일반 공공외교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73%(‘매우 그렇다’ 9%, ‘그렇다’ 64%)로 부정적 평가 0%(‘그렇지 않다’ 0%, ‘전혀 그렇지 않다’ 0%)를 완전히 압도하였다. 한중 간 교류가 많고,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을 접할 기회가 많아 한국의 일반 공공외교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통일 공공외교의 경우에도 긍정적 평가(64%)가 부정적 평가(9%)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설문의 응답자들이 한국에 대한 지식이 많은 전문가들이고, 한국 공공외교의 다양한 주체들과 접촉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의 공공외교 노력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화 공공외교에 대해서도 긍정적(64%) 평가가 부정적(9%) 평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평가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 전문가들이 한반도 통일 문제와 평화 문제의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위와 같이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일반, 통일, 평화 각 영역에서의 공공외교의 효과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

으며, 다만 통일, 평화 공공외교에 비해 일반 공공외교의 효과성을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 전반에 대한 평가

구분	일반 공공외교					통일 공공외교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비중	9%	64%	27%	-	-	18%	45%	27%	9%	-	18%	45%	27%	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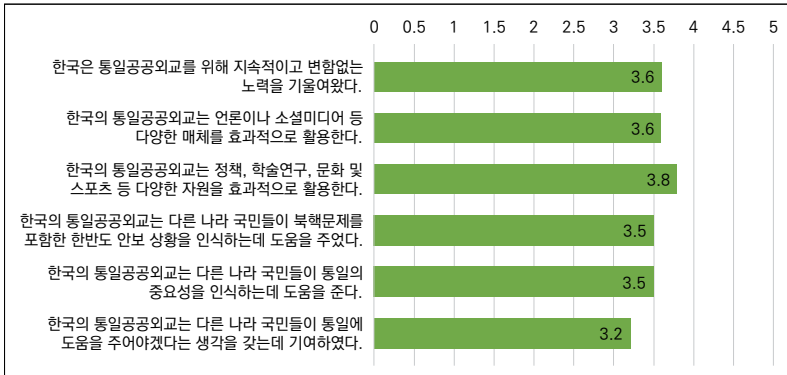
(나) 통일 공공외교와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심층적 비교

통일 공공외교와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공공외교의 지속성, 자원 및 매체의 활용, 성과 달성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그림 IV-17〉와 〈그림 IV-18〉에서 보듯이, 중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에 대해 3.1점 이상의 대체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공공외교의 경우, ‘다양한 자원 활용(3.8점)’, ‘지속성(3.6점)’, ‘다양한 매체 활용(3.6점)’, ‘한반도 안보상황 및 통일 인식 도움(3.5점)’ 등의 순서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였으며, 이러한 평가는 평화 공공외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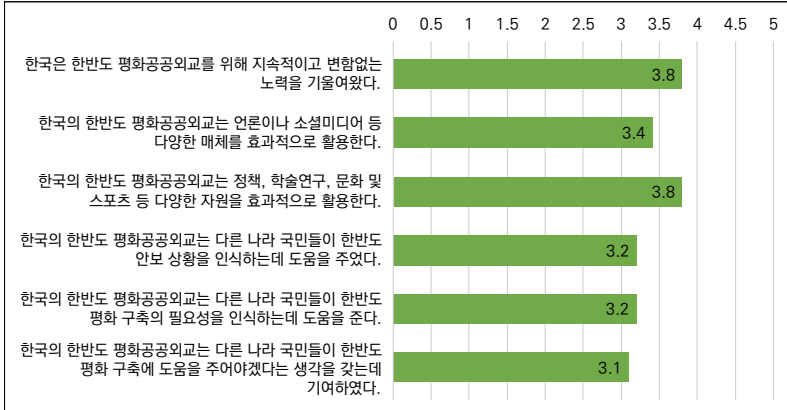
다만, 통일 공공외교와 평화 공공외교의 평가에서 차이점도 발견된다. 즉, ‘통일 공공외교에서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상황 이해와 통일의 중요성 인식’은 3.5점의 평가를 받은 반면, ‘평화 공공외교에서 한반도 안보상황 이해와 평화구축의 필요성 인식’은 3.2점을 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중국이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를 평화 공공외교에 비해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 수행이 평화 공공외교에

비해 역사가 길고, 실질 접촉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IV-17〉 한국의 대중국 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심층평가(5점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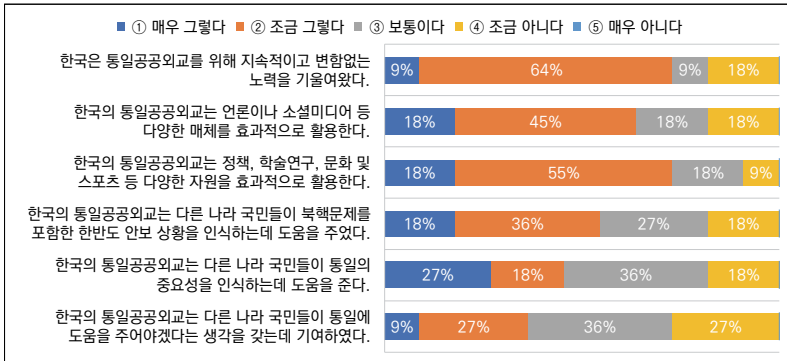
〈그림 IV-18〉 한국의 대중국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심층평가(5점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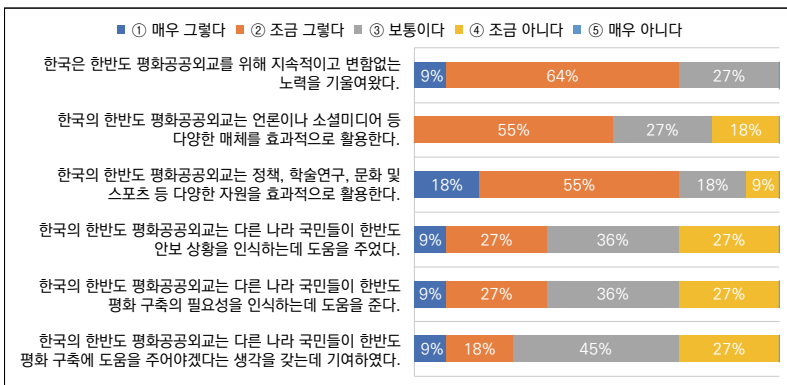
아래 〈그림 IV-19〉, 〈그림 IV-20〉는 평가 측정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측정 항목의 응답 비율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평가에서는 ‘지속성’, ‘매체활용’, ‘자원 활용’ 등은 긍정적인 응답(‘조금 그렇다’ 이

상이 70% 정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비해 통일의 중요성이나 통일에 기여하려는 인식, 즉 ‘공감대 형성’에서는 다소 유보적이거나 부정적 평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 인식’과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평가가 많았다. 이는 한국의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를 성실히 수행해왔음을 인정하지만, 그 효과가 아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IV-19〉 한국의 대중국 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심층평가



〈그림 IV-20〉 한국의 대중국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심층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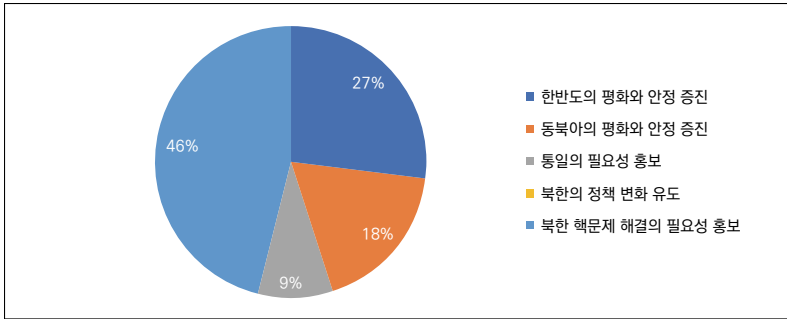
(2)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의 목표

(가) 통일 공공외교와 평화 공공외교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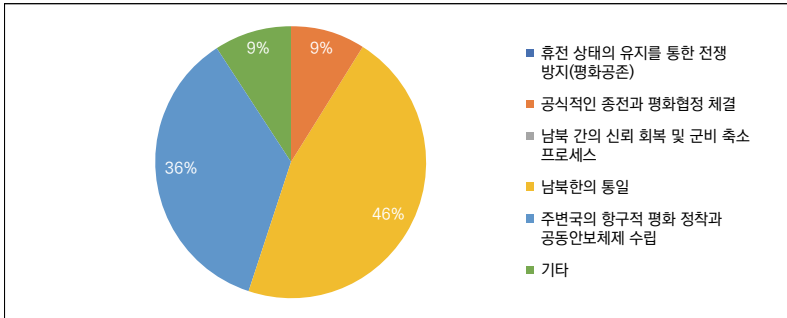
〈그림 IV-21〉과 〈그림 IV-22〉는 중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와 평화 공공외교의 목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준다. 중국의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한국 통일 공공외교의 목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필요성 홍보(46%)’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증진(27%)’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이유는 중국 전문가들과의 각종 회담, 행사에서 논의되는 주제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래비전, 정치, 경제, 사회문화 협력 등의 이슈보다 북한 핵 문제가 더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측이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평화 공공외교의 목표로 ‘남북한 통일(46%)’, ‘주변국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공동안보체제 수립(3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반도 평화를 한반도 통일과 연계 내지 연상해서 인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전문가들의 인식과 차이가 나는 현상으로, 중국은 한국정부가 평화 공공외교를 강조하는 이유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보다 남북통일의 목표를 우선시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중국은 타 국가들과 달리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평화 공공외교가 평화보다 통일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는 인식과 경계심의 반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IV-21〉 한국의 대중국 통일 공공외교의 목표



〈그림 IV-22〉 한국의 대중국 평화 공공외교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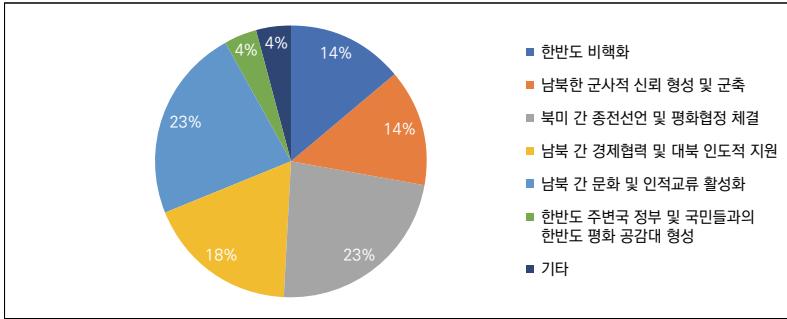


(나) 평화 공공외교가 나아갈 방향

한국의 평화 공공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응답은 분산되어 나타났다. 즉, ‘북미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23%)’, ‘남북 간 문화 및 인적 교류 활성화(23%)’, ‘남북 간 경제협력 및 대북 인도적 지원(18%)’, ‘한반도 비핵화(14%)’, ‘남북한 군사적 신뢰 형성 및 군축(14%)’의 순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그나마 ‘북미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과 ‘남북한 교류’가 동물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한반도 평화를 보는 중국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은 물

론 북핵문제의 해결에 미국책임론을 제기해왔다는 점, 남북한의 자주적인 통일을 지지해온 점, 북중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점, 경제협력을 통해 정치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접근을 선호해 온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림 IV-23〉 한국의 대중국 평화 공공외교의 지향점



(3)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의 주체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 공공외교의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에서 일반 공공외교는 ‘민·관 혼합형(73%)’으로 평가한 반면, 통일 공공외교(55%), 평화 공공외교(64%)는 모두 ‘정부 주도형’으로 평가하였다.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에 비해 일반 공공외교의 추진체계를 ‘민·관 혼합형’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은 이유는 통일이나 평화라는 의제에서 자유로운 일반 공공외교의 경우에 민간의 역할과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커다란 차이는 없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가 평화 공공외교보다 민간의 역할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에서 통일 분야가 주요 콘텐츠로 부각되어 추진되어왔고 그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과 활동이 각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의 다수 민간단체들이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동북지역에서 통일(북한)과 관련한 활동들을 많이 해 온 영향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평화 공공외교의 경우는 한반도 평화 개념을 특별하게 강조하기 시작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가 혹은 정부의 역할이 더 크다고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9〉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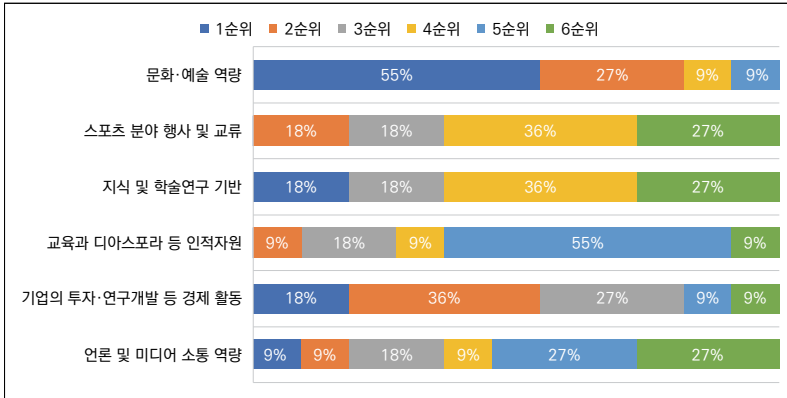
구분	정부 주도형	민간 주도형	민·관 혼합형
일반 공공외교	27%	-	73%
통일 공공외교	55%	-	45%
평화 공공외교	64%	-	36%

(4)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의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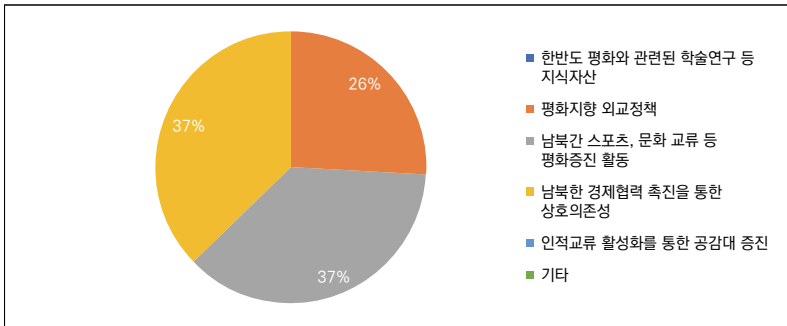
〈그림 IV-24〉와 〈그림 IV-25〉는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와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자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그림 IV-24〉에서 보듯이, 중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중국 일반 공공외교에서 ‘문화·예술 역량’을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응답했으며, 뒤이어 ‘지식 및 학술연구’, ‘기업의 투자 등 경제 활동’을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평화 공공외교에 있어서는 남북간 ‘스포츠 및 문화 교류’를 통한 평화증진 활동과 ‘남북 경제협력’을 각각 37%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공공외교의 경우 문화 및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한 추진이 가능하나, 평화 공공외교의 경우에는 남북관계 및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거나 관련 내용을 동반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이한 점은 중국이 한국의 대중국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으로 남북한의 교류 및 협력을 강조한다는 사

실이며, 이는 향후 한국의 대중국 평화 공공외교를 추진하는데 시
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림 IV-24〉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의 주요 자원



〈그림 IV-25〉 한국의 대중국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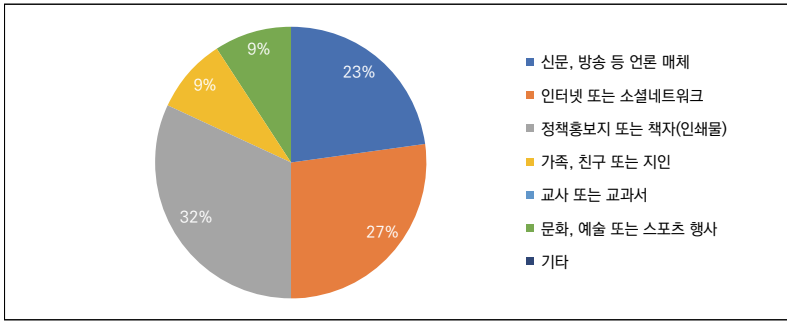
(5)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의 매체

(가) 기존 매체 활용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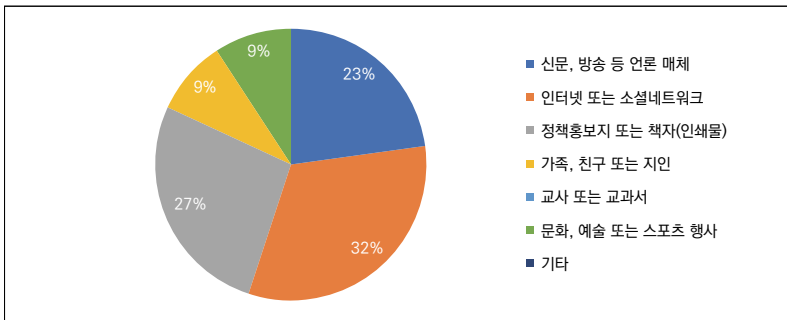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의 매체 유용성에 대한 설문에서 중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를 접한 매체로 '정책홍보

지 또는 책자(인쇄물)', '인터넷 또는 소셜미디어', '신문, 방송 등 언론'을 거의 유사한 비율로 꼽았다. 통일 혹은 평화 공공외교의 특성이 주제의 전문성, 혹은 난이도 때문에 다소 정책 지향성, 혹은 전문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 '정책홍보지 또는 책자'가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인적 네트워크나 사회문화 행사의 매체 영향력은 낮게 평가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IV-26〉 한국의 대중국 통일 공공외교의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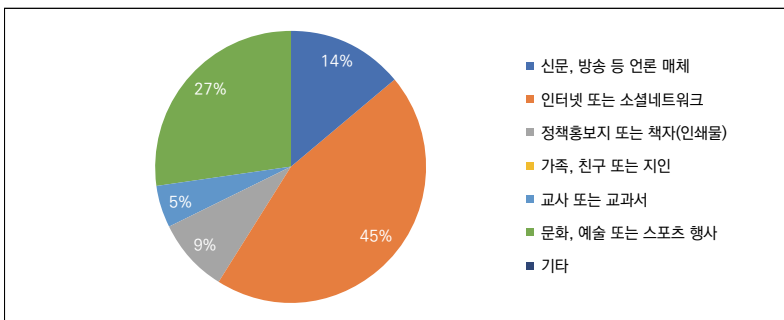
〈그림 IV-27〉 한국의 대중국 평화 공공외교의 매체



(나) 향후 효과적 매체 활용 방향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평화 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또는 소셜네트워크(45%)’,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 행사(27%)’ 등의 매체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중국 역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가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비록 민감한 정치 이슈에 대한 사이버 통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외의 이슈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수의 대중이 사이버 상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 행사’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다는 사실이다. 향후 대중국 평화 공공외교에서 문화·예술 매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고 확산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대도시 등 인구 밀집지역이 많고 한중 교류에서 다양한 사회문화 행사가 연계되어 온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 공공외교의 수단으로 단순 정보와 지식 전달을 넘어서는 문화 공감대 형성 수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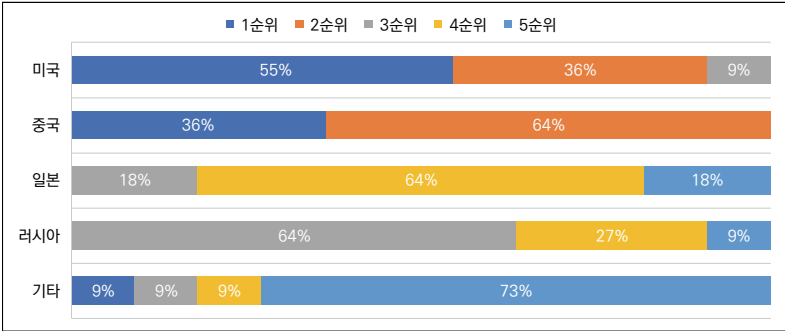
〈그림 IV-28〉 한국의 대중국 평화 공공외교의 매체 유용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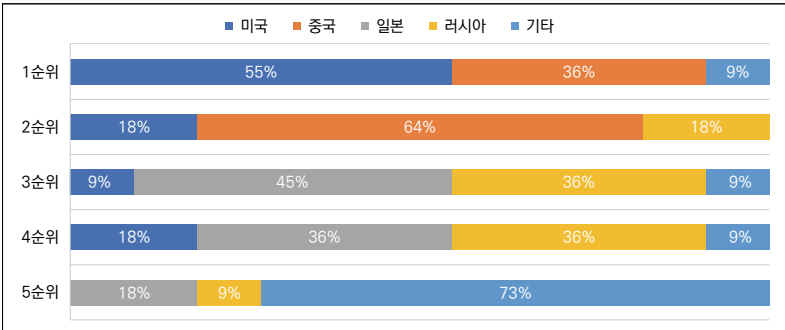
(6)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의 대상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가 가장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질 대상국가로 '미국', 그 다음으로 '중국'을 선정하였다. 이는 중국이 한국의 통일과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책임론을 주장하는 현실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한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를 정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림 IV-29〉 한국 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국(중국)



〈그림 IV-30〉 한국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국(중국)



한편 가장 효과적인 추진대상이 되는 직업군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자·전문가’, ‘관료’, ‘언론’ 순의 응답이 나왔다. ‘시민사회단체’나 ‘일반국민’에 대한 중요도가 낮게 나온 이유는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관련 주제의 전문성 때문에 일반인보다 여론주도층, 전문가 그룹에 접근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IV-10〉 한국의 대중국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 직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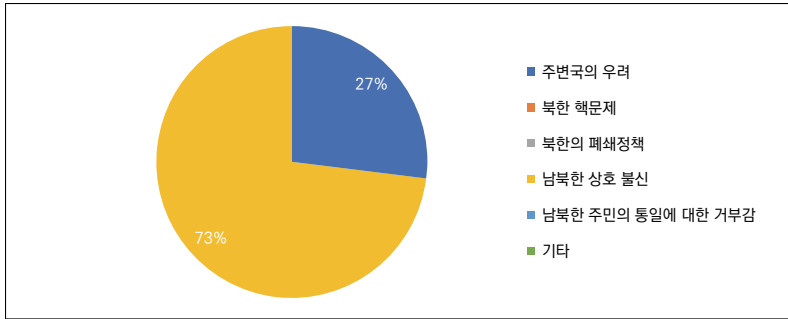
구분	정치인	관료	학자·전문가	언론	시민사회단체	일반국민
통일 공공외교	18%	23%	32%	18%	5%	5%
평화 공공외교	14%	23%	32%	18%	-	14%

(7)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의 장애요인

(가) 통일 공공외교

〈그림 IV-31〉은 한국의 대중국 통일 공공외교의 장애요인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현지 전문가들은 통일 공공외교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남북한 상호불신(73%)’, ‘주변국의 우려(23%)’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에서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국제적 차원이 아닌 남북관계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인식과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 등 외세의 개입 없이 남북한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형성하면 자주적인 통일이 가능하다는 기대와 희망이 깔려있다. 여기에는 북중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한중협력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보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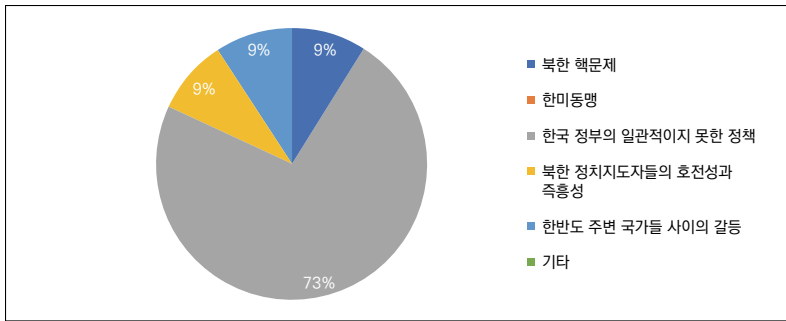
〈그림 IV-31〉 한국의 대중국 통일 공공외교의 장애요인



(나) 평화 공공외교

〈그림 IV-32〉에서와 같이, 중국의 현지 전문가들은 평화 공공외교의 가장 큰 걸림돌로 ‘한국정부의 비일관적 정책(73%)’을 압도적으로 꼽았다. 반면에 ‘북한 핵문제’와 ‘지도자의 호전성’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문가들이 한국 평화 공공외교의 장애요인으로 ‘한국 정부의 비일관적 정책’을 지목한 점은 매우 주목된다. 그동안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 혹은 평화 공공외교 현장에서 한국정부의 통일 혹은 평화정책이 정권별로 너무 변화가 심하다고 자주 비판하곤 하였다. 한국의 공공외교 주체 혹은 매체들 역시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보수와 진보 혹은 정책 선호에 따라 각각의 시각과 주장을 펼치다 보니 일관된 정보나 정책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32〉 한국의 대중국 평화 공공외교의 장애요인



(8) 주관식 응답 분석

중국 측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 개진을 해주었다. 이 중 특이할만한 점은 통일 공공외교 수행에 있어 남북한 간 신뢰 회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 문제는 결국 남북 양자 관계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간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는 인식이다. 이와 연관해서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유도, 사회경제 발전 견인, 남북한 이질성 확대 방지 등의 제안이 있었다. 또한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에 있어 주변 국가들의 안보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정부의 정권 교체에 따른 통일 혹은 대북정책 변화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의 평화 공공외교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 역사논쟁 등 현 한반도 주변 국제질서의 주요 쟁점들이 희석되어야 한반도 평화기제가 작동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문제해결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한국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의 일관성, 남북관계 안정적 유지에 대한 의지, 북미관계 정상화 노력,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 북한의 안보 우려 해

소 등의 문제들이 평화 공공외교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은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을 유도하고 설득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중국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예컨대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정책—을 발굴·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일본

(1) 한국의 대일본 공공외교 전반에 대한 평가

(가) 일반 공공외교, 통일 공공외교,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평가 비교

〈표 I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전문가의 한국 공공외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부정적’이다. 먼저, 일본 전문가들에게 한국이 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그렇지 않다’가 41%, ‘보통이다’가 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렇다’가 18%, ‘매우 그렇다’는 6%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같은 질문을 한 결과 ‘그렇지 않다’가 47%, ‘보통이다’가 35%, ‘전혀 그렇지 않다’가 18%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비율로 나타난 반면 긍정적인 평가는 전혀 응답이 없었다. 한국의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일본 전문가들의 평가에서도 ‘보통이다’가 65%, ‘그렇지 않다’가 17%, ‘전혀 그렇지 않다’ 12%로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난 반면 긍정적인 평가는 ‘그렇다’가 6%였다.

전체적으로 일본은 공공외교 일반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다소 우세한 편이나,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강세를 보였다. 특히 통일 공공외교는 긍정적인 평가가 전혀 없었고,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 역시 긍정적 평가가 6%에 불과하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것은 일본이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반대한다기 보다는 한국의 통일, 평화 관련 공공외교 추진에서 문제점 및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IV-11〉 한국의 대일본 공공외교 전반에 대한 평가

구분	일반 공공외교					통일 공공외교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비중	6%	18%	35%	41%	-	-	-	35%	47%	18%	-	6%	65%	18%	12%

(나) 통일 공공외교와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심층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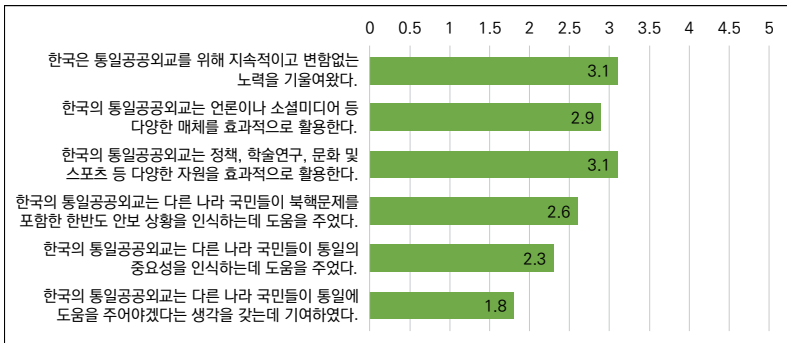
〈그림 IV-33〉의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5점 척도 평가에 서는 ‘한국이 통일 공공외교를 위해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와 ‘정책, 학술연구, 문화 및 스포츠 등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가 3.1점으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는 다른 나라 국민들이 통일에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는 1.8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림 IV-34〉의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5점 척도 평가에 서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를 위해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와 ‘정책, 학술연구, 문화 및 스포츠 등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언론이나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가 각각 3.4점, 3.3점, 3.2점으로 다소 높게 나왔다. 하지만 ‘한국의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는 다른 나라 국민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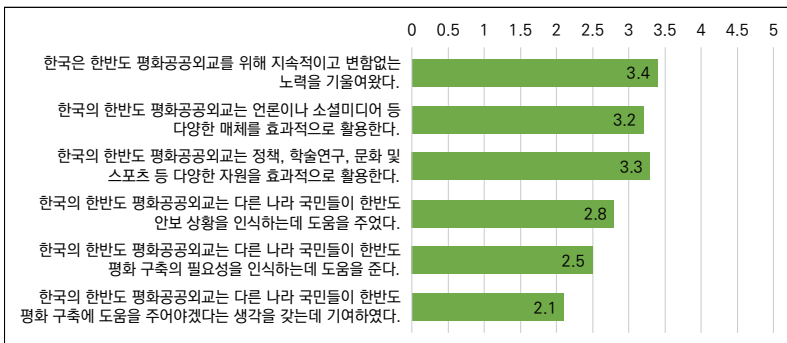
한반도 평화 구축에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는 2.1점으로 긍정적 평가 응답 없이 가장 낮게 나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와 같이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와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 평가가 높은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 기여’ 및 ‘한반도 평화 구축 기여’에 대한 일본 전문가들의 부정적 평가는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근본 목표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그림 IV-33〉 한국의 대일본 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심층평가(5점 척도)



〈그림 IV-34〉 한국의 대일본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심층평가(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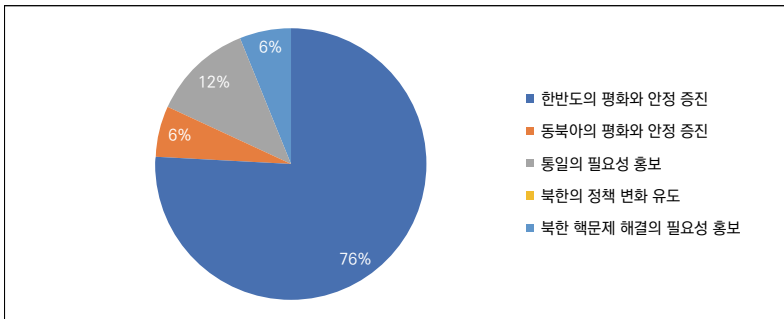


(2) 한국의 대일본 공공외교의 목표

(가) 통일 공공외교와 평화 공공외교의 목표

〈그림 IV-35〉와 〈그림 IV-36〉은 한국의 대일본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의 목표에 대한 일본 전문가의 인식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추진하는 대일본 통일 공공외교에서 가장 두드러진 분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76%)’을 꼽았고, 이어 ‘통일의 필요성 홍보(12%)’,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증진(6%)’,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필요성 홍보(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일 통일 공공외교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정작 ‘통일의 필요성’에서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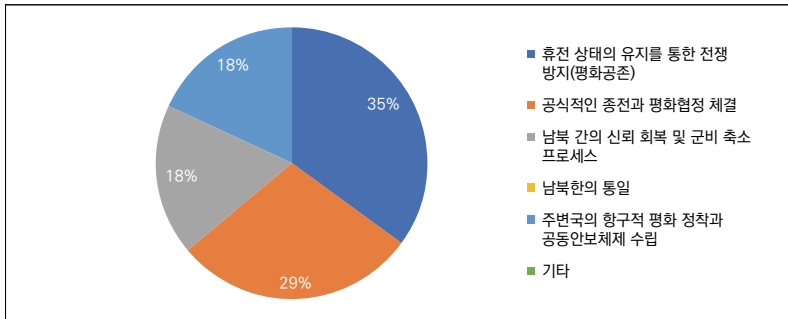
〈그림 IV-35〉 한국의 대일본 통일 공공외교의 목표



한편, 한국의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가 추구하는 실질적인 목표에 대한 질문에서, 일본 전문가들의 응답 결과는 ‘휴전 상태의 유지를 통한 전쟁 방지(평화공존)’이 35%, ‘공식적인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이 29%, ‘남북 간의 신뢰 회복 및 군비 축소 프로세스’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공동안보체제 수립’이 각각

18%를 나타냈다. 반면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응답은 없었다. 일본 전문가의 인식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휴전 상태의 유지를 통한 전쟁 방지(평화공존)’은 일본의 전통적인 대한반도 정책과 일치한다. 즉, 일본은 ‘한반도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데, 이는 급격한 통일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을 바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36〉 한국의 대일본 평화 공공외교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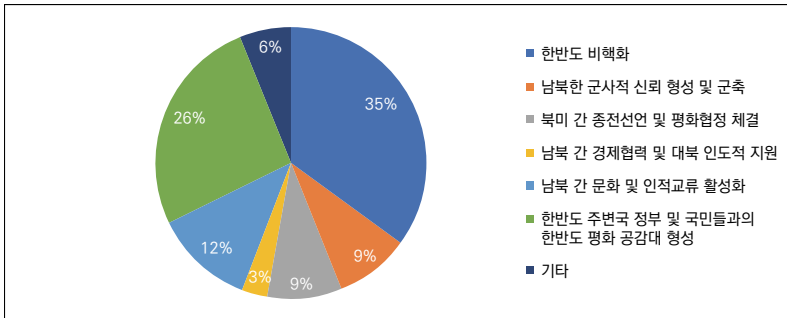
(나) 평화 공공외교가 나아갈 방향

일본의 현지 전문가들에게 한국이 추진하는 평화 공공외교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 비핵화’가 35%로 가장 높았고, ‘한반도 주변국 정부 및 국민들과의 한반도 평화 공감대 형성’이 26%, ‘남북 간 문화 및 인적 교류 활성화’가 12%, ‘남북한 군사적 신뢰 형성 및 군축’과 ‘북미 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이 각각 9%, ‘남북 간 경제협력 및 대북 인도적 지원’이 3%로 나타났다.

일본 전문가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일본이 통일 한국의 모습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어찌면 당연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주변국 정부 및 국민들과의 한반도 평화 공감대 형성’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

데, 이는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를 반추하면서 향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한일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V-37〉 한국의 대일본 평화 공공외교의 지향점



(3) 한국의 대일본 공공외교의 주체

일본의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체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 주도형’, ‘민간 주도형’, ‘민·관 혼합형’의 3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했는데, 민간주도형이라고 인식한 일본 전문가는 단 1명도 없었다. 이는 한국의 공공외교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의 역할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을 방증하는 결과로 보인다. 그나마 <표 IV-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 공공외교에 대해서 ‘민·관 혼합형(53%)’이라는 인식이 ‘정부 주도형(47%)’보다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통일 공공외교와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인식은 정부 주도형이 압도하고 있다. 비록 커다란 차이는 아니지만 통일 공공외교가 ‘정부 주도형’이라는 인식(76%)이 평화 공공외교가 ‘정부 주도형’이라는 인식(65%)을 약간 상회하는 점은, 아무래도 한반도 통일문제가 정부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는 동시에 한국의 대일본 평화 공공외교가 통일 공공외교보다 민간의 활동공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IV-12〉 한국의 대일본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구분	정부 주도형	민간 주도형	민·관 혼합형
일반 공공외교	47%	-	53%
통일 공공외교	76%	-	24%
평화 공공외교	65%	-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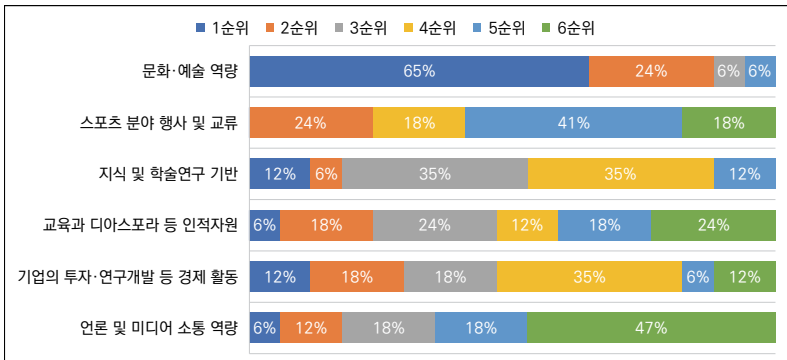
(4) 한국의 대일본 공공외교의 자원

한국이 추진하는 대일본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의 전문가들에게 ‘문화·예술 역량’, ‘스포츠 분야 행사 및 교류’, ‘지식 및 학술연구 기반’, ‘교육과 디아스포라 등 인적 자원’, ‘기업의 투자·연구개발 등 경제 활동’, ‘언론 및 미디어 소통 역량’ 등의 예시를 제시하고 순위대로 나열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문화·예술 역량’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였다(〈그림 IV-38〉참조). 이는 다수의 일본 전문가들이 한류 열풍에 힘입은 문화·예술을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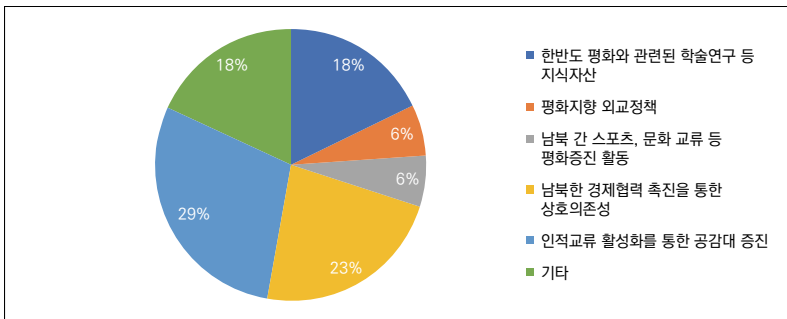
한편, 〈그림 IV-39〉에서 보듯이, 한국의 대일본 평화 공공외교의 효과적인 자원에 대한 일본 전문가들의 응답은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공감대 증진(29%)에 이어 ‘남북한 경제협력 촉진을 통한 상호의존성(23%)’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학술연구 등 지식자산(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의 대일본 일반 공공외교의 주요 자원에 대한 평가와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자원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문화·예술’ 자원이 일반 공공외교에서 가장 높게 나온 반면 평화 공공외교에서는 6%로 가장 낮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평화 공공외교와 관련된 문화·예술 분야의 콘텐츠 부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평화 공공외교에서 ‘남북간 인적 교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앞서 언급되었던 한국의 급격한 통일 지양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선적으로 남북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한반도 내부에서 먼저 형성해 나가는 것이 일본의 한반도 평화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V-38〉 한국의 대일본 공공외교의 주요 자원



〈그림 IV-39〉 한국의 대일본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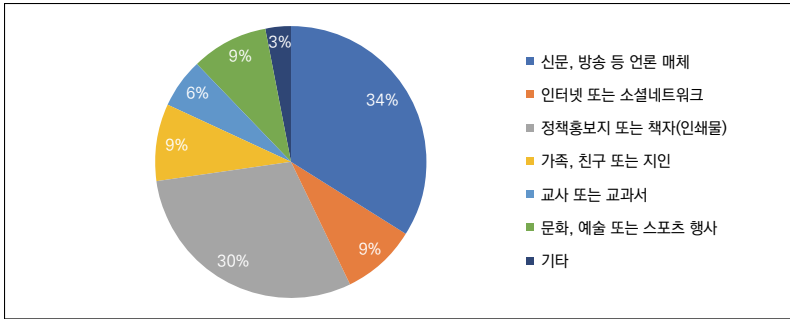
(5) 한국의 대일본 공공외교의 매체

(가) 기존 매체 활용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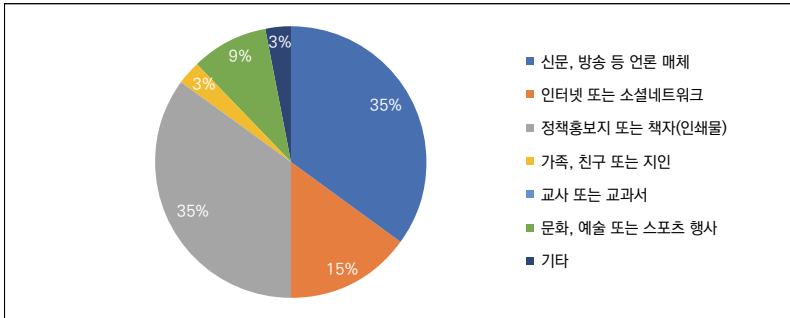
한국이 추진한 대일본 공공외교에서 효과적인 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본의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에 관하여 어떤 통로를 통하여 접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그림 IV-40>에서와 같이,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가 34%, ‘정책홍보지 또는 책자(인쇄물)’이 30%로 높은 선택을 받았고, ‘인터넷 또는 소셜네트워크’, ‘가족, 친구 또는 지인’,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 행사’ 등은 모두 9%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대일본 평화 공공외교의 매체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IV-41>에서 보듯이,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와 ‘정책홍보지 또는 책자(인쇄물)’이 모두 35%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 또는 소셜네트워크’가 15%,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 행사’가 9%, ‘가족, 친구 또는 지인’과 ‘기타(정부연구기관)’가 3%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일본 통일 공공외교와 평화 공공외교에서 모두 ‘언론 매체’와 ‘정책홍보지 또는 책자(인쇄물)’이 가장 유용성 높은 매체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관계부처와 미디어가 일본에 대한 공공외교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수행과정에서 일본어판의 활용과 실시간 접근 환경이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컨대, 한국 신문사의 일본어판 신문은 일본 전문가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그림 IV-40〉 한국의 대일본 통일 공공외교의 매체



〈그림 IV-41〉 한국의 대일본 평화 공공외교의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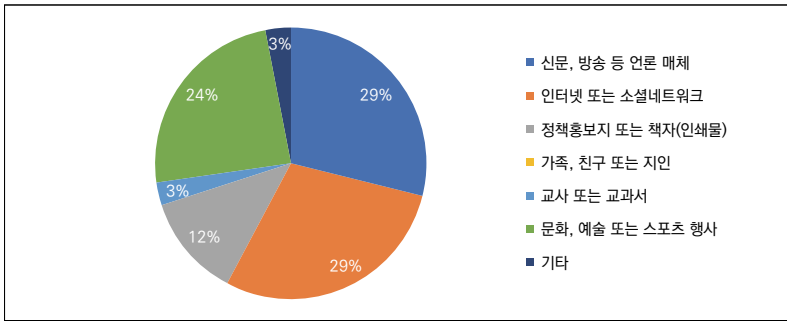


(나) 향후 효과적 매체 활용 방향

향후 한국의 대일본 평화 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력해야 할 매체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의 전문가들에게 설문했다. 그 결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29%)’와 ‘인터넷 또는 소셜네트워크(29%)’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 행사(24%)’, ‘정책홍보지 또는 책자(인쇄물)(12%)’, ‘교사 또는 교과서(3%)’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향후 한국의 대일본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매체로 기존의 구 미디어와 함께 신 미디어(인터넷, 소셜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

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문화·예술·스포츠 행사가 세 번째로 선택 되었다는 사실인데, 일본 사회에서 한류를 포함한 한국의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체의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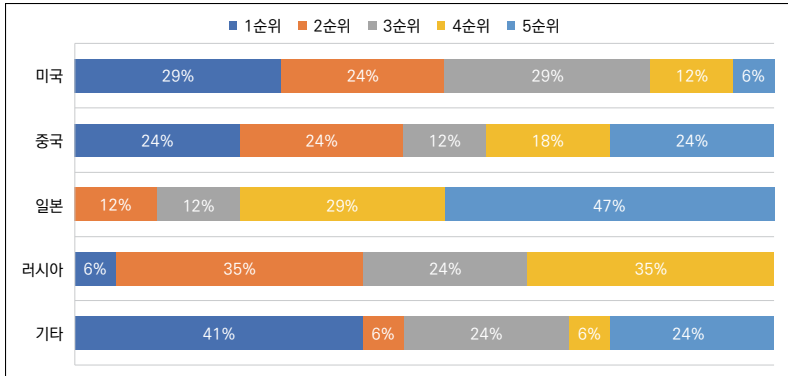
〈그림 IV-42〉 한국의 대일본 평화 공공외교 매체의 유용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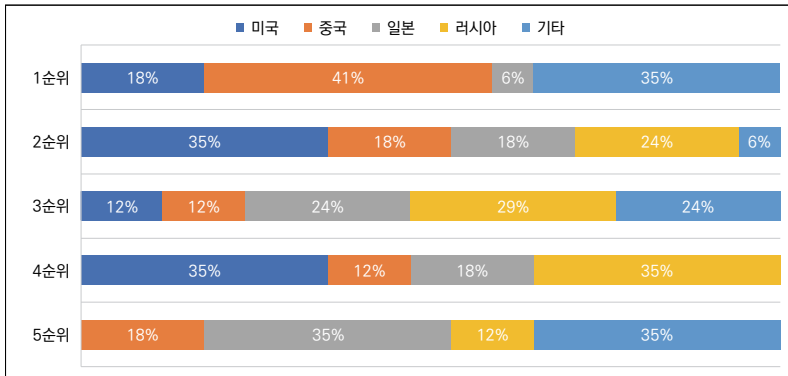
(6) 한국의 대일본 공공외교의 대상

일본의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를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국가를 우선순위로 받은 결과, 미국과 중국이 1순위에서 각각 29%, 24%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같은 조사에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국가로 중국이 1순위에서 41%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고 다음이 미국이었다. 종합하면,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국 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국으로 미국, 중국을, 평화 공공외교의 경우에는 중국, 미국을 선택했다. 반면에 일본 전문가들의 47%가 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추진 대상국으로 일본을 5순위로, 또 35%는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추진 대상국으로 일본을 5순위로 응답했다는 점은 주목된다. 이는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와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해석된다.

〈그림 IV-43〉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국(일본)



〈그림 IV-44〉 한국의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국(일본)



다른 한편, 한국의 대일본 통일 공공외교의 주된 대상이 되는 직업군을 묻는 질문에서 일본의 전문가들은 ‘일반국민(29%)’, ‘정치인(29%)’, ‘언론(18%)’, ‘학자·전문가(12%)’, ‘관료(9%)’, ‘시민사회단체(3%)’의 순으로 응답했다. 그리고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이 되는 직업군으로는 ‘일반국민(38%)’이 가장 높았고, ‘정치인(26%)’, ‘언론(24%)’, ‘관료(6%)’, ‘학자·전문가(6%)’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V-13〉 참조).

전반적으로 대일본 통일 공공외교와 평화 공공외교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상은 ‘일반국민’과 ‘정치인’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언론’의 비중이 높고, ‘학자’와 ‘관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일부 일본 언론에서 북한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흥미 위주로 보도하고 있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한반도 상황 및 평화지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언론에 대한 평화 공공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13〉 한국의 대일본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 직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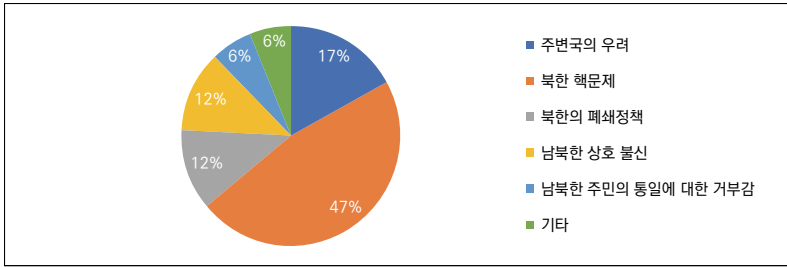
구분	정치인	관료	학자·전문가	언론	시민사회단체	일반국민
통일 공공외교	29%	9%	12%	18%	3%	29%
평화 공공외교	26%	6%	6%	24%	-	38%

(7) 한국의 대일본 공공외교의 장애요인

(가) 통일 공공외교

일본의 전문가들에게 통일 공공외교를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북한 핵문제’가 47%로 가장 높았고, ‘주변국의 우려(17%)’, ‘북한의 폐쇄정책(12%)’, ‘남북한 간의 상호불신(12%)’, ‘남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거부감(6%)’이 뒤를 이었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 ‘제3자의 관점 결여(6%)’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 일본인 납치자 문제임을 감안하였을 때,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대일본 통일 공공외교의 효과는 상쇄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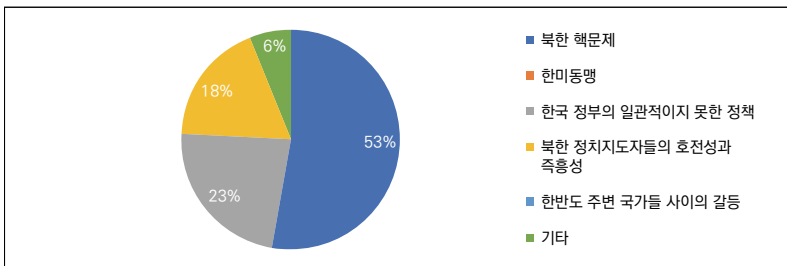
〈그림 IV-45〉 한국의 대일본 통일 공공외교의 장애요인



(나) 평화 공공외교

〈그림 IV-46〉은 한국이 추진하는 평화 공공외교의 장애요인에 대한 일본 전문가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일본 전문가들의 인식은 구체적으로, ‘북한 핵문제’가 53%로 가장 높았고, ‘한국 정부의 비일관적 정책(23%)’, ‘북한 정치지도자들의 호전성과 즉흥성(18%)’이 뒤를 이었다. 통일 공공외교와 마찬가지로 일본 전문가들은 ‘북한 핵문제’가 평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비일관적 정책’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후술하는 전문가들의 개인 의견에서도 한국이 정권의 변화 속에 일관적이지 못한 대북정책, 대일정책이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림 IV-46〉 한국의 대일본 평화 공공외교의 장애요인



(8) 주관식 응답 분석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분석함에 있어 대일본 통일 공공외교와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일본 전문가들의 주관식 응답에서 나타난 의견들을 종합해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통일 공공외교와 평화 공공외교에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이다. 특히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일부를 포함한 주변국의 이익에 합치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형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가 이 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인의 공감 혹은 협력을 얻기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한국이 자국의 이익과 한반도의 안전만을 일방적인 형태로 강조하고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가 일본에 제공하는 구체적인 이익을 언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기 보다는 주변국의 지도자, 전문가, 일반 국민들이 어떠한 인식, 기대, 우려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보다 상호적인 방법으로 한국의 정책과 전략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 정부의 일관성 있는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추진이 필요하다. 상당수의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이념에 기반한 당파성을 배제하고 장기적인 비전에 따른 홍보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추진 주체인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이 상대국의 인식 및 특성을 고려해서 어떠한 접근법이 유효할지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한반도 통일 및 평화에 대한 한국 내의 컨센서스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남북 및 한국 내에서도 통일 형태,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

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정권 교체 및 발신 주체의 성격에 따라 통일과 평화에 관한 내용이 변한다는 점과 평화와 통일의 관계에 대한 한국 내 컨센서스가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넷째, 통일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먼저 남북의 평화공존을 통해 남북한 국민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외교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심지어 몇몇 전문가들은 개인적으로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이 아닌 자유로운 왕래 등 남북 협력에 목표를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아마도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의 관심과 이해에 상호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러시아

(1) 한국의 대러시아 공공외교 전반에 대한 평가

(가) 일반 공공외교, 통일 공공외교,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평가 비교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은 한국의 공공외교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표 IV-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이 공공외교, 통일 공공외교, 평화 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일반 공공외교에 대해서는 66%, 통일 공공외교에 대해서는 34%, 평화 공공외교에 대해서는 60%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통일 공공외교에 대해서만 20%가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했을 뿐, 공공외교 일반과 평화 공공외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전혀 없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 비율은 중국(각각 73%, 63%, 63%)보다는 낮았지만, 미국(각각 33%, 25%, 34%), 일본(24%, 0%, 6%)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었다. 이는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공공외교 일반과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적인 평가 비율은 대러시아 공공외교가 현지에서 한국을 알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한국 정부의 한반도 통일 정책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설득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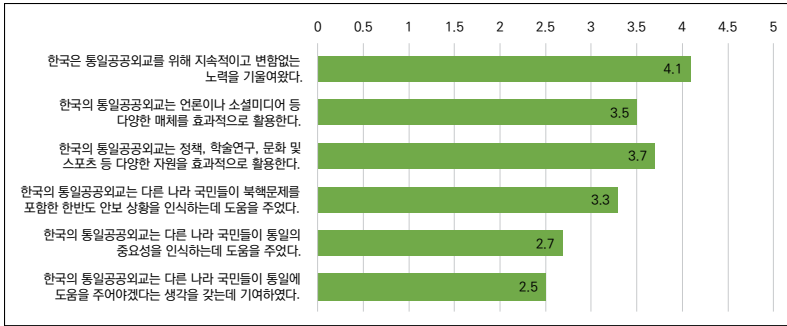
〈표 IV-14〉 한국의 대러시아 공공외교 전반에 대한 평가

구분	일반 공공외교					통일 공공외교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비중	13%	53%	33%	-	-	7%	27%	47%	20%	-	7%	53%	4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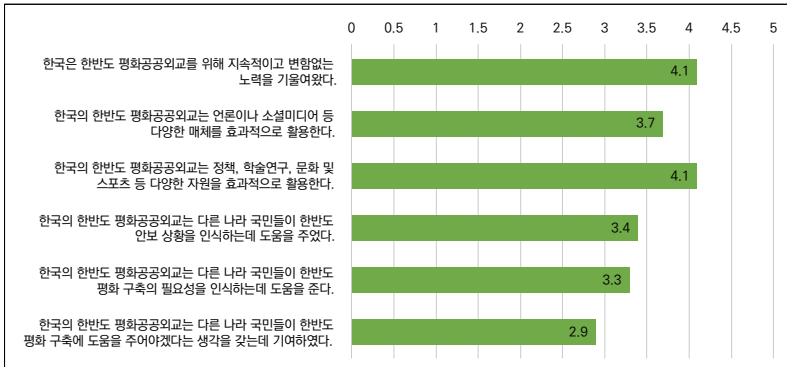
(나) 통일 공공외교와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심층적 비교

〈그림 IV-47〉과 〈그림 IV-48〉은 한국의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러시아 전문가의 평가를 5점 척도로 구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지속성(4.1)’, ‘자원의 다양성 및 효과(3.7)’, ‘매체의 다양성 및 효과(3.5)’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발적 참여 유도(2.5)’, ‘통일의 중요성 인식(2.7)’ 등 목표 달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림 IV-47〉 한국의 대러시아 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심층평가(5점 척도)



〈그림 IV-48〉 한국의 대러시아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심층평가(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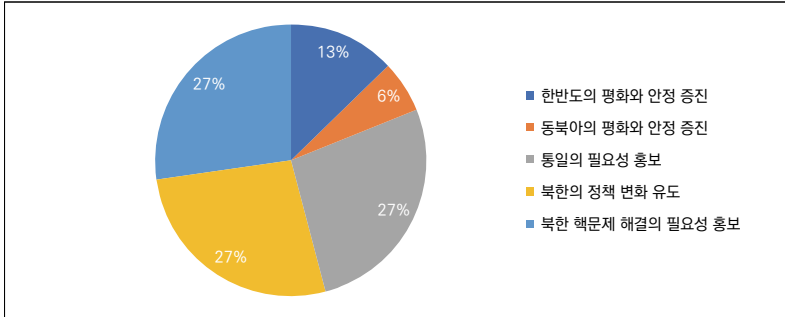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한국의 평화 공공외교와 관련해서도 ‘지속성(4.1)’, ‘자원의 다양성 및 효과(4.1)’, ‘매체의 다양성 및 효과(3.7)’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발적 참여 유도(2.9)’ 등 목표 달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가 ‘지속성’과 ‘자원·매체의 다양성 및 효과’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지만, 그것을 활용하여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한반도 주변 상황 인식’, ‘평화·통일의 중요성 인식’, ‘자발적 참여 유도’ 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한국의 대러시아 공공외교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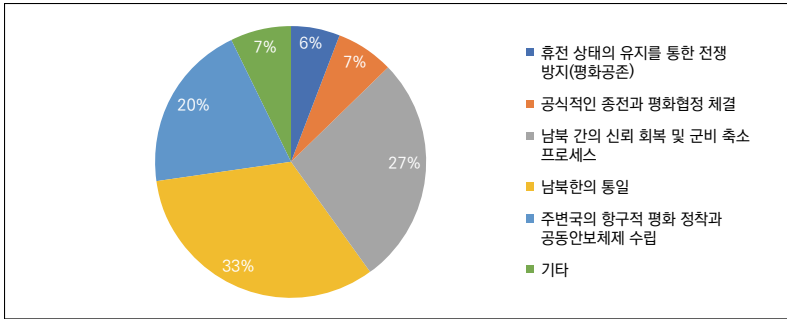
(가) 통일 공공외교와 평화 공공외교의 목표

〈그림 IV-49〉 한국의 대러시아 통일 공공외교의 목표



〈그림 IV-49〉는 한국의 대러시아 통일 공공외교의 목표에 대한 러시아 전문가의 인식을 보여준다.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가 ‘통일의 필요성 홍보(27%)’, ‘북한의 정책 변화 유도(27%)’, ‘북한 핵 문제 해결의 필요성 홍보(27%)’를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증진(6%)’,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13%)’에는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대러시아 통일 공공외교가 한반도 통일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의 정책 변화 유도와 북한 핵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발전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대러시아 통일 공공외교가 북한의 정책 변화, 북한 핵 문제 등 당면한 이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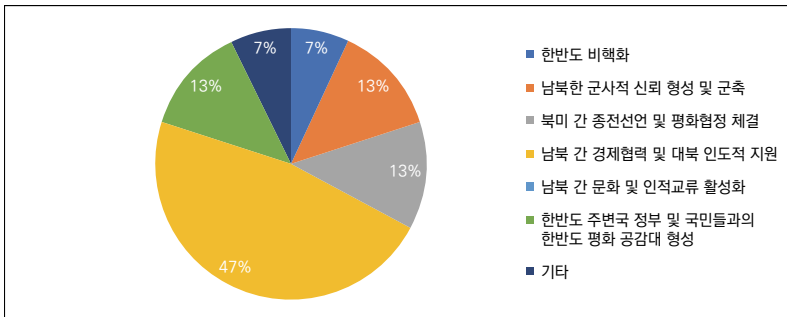
〈그림 IV-50〉 한국의 대러시아 평화 공공외교의 목표



〈그림 IV-50〉에서 보듯이,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은 한국의 평화 공공외교가 ‘남북한의 통일(33%)’, ‘남북 간의 신뢰 회복 및 군비 축소 프로세스(27%)’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25%와 35%가 지적한 ‘휴전 상태의 유지를 통한 전쟁 방지(평화공존)’, 각각 10%와 29%가 지적한 ‘공식적인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은 가장 낮은 비율(7%)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러시아에서 한국의 평화 공공외교가 궁극적으로 남북 화해를 통한 통일을 지향한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평화 공공외교가 나아갈 방향

〈그림 IV-51〉 한국의 대러시아 평화 공공외교의 지향점



〈그림 IV-51〉은 한국의 대러시아 평화 공공외교의 지향점에 대한 러시아 전문가의 인식을 보여준다. 향후 평화 공공외교가 집중해야 할 문제로는 ‘남북 간 경제협력 및 대북 인도적 지원(47%)’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남북한 군사적 신뢰 형성 및 군축(13%)’, ‘북미 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13%)’, ‘한반도 주변국 정부 및 국민과의 한반도 평화 공감대 형성(13%)’이었고, ‘한반도 비핵화(7%)’는 후순위를 차지했다. ‘남북 간 문화 및 인적 교류 활성화’를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러시아에서는 평화 공공외교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화 등과 같은 평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에 앞서 남북 간 경제협력 및 대북 인도적 지원, 군사적 신뢰 형성 및 군축 등과 같은 평화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북한 체제에 대한 과도한 압박 또는 이를 통한 북한 체제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우려하는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이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3) 한국의 대러시아 공공외교의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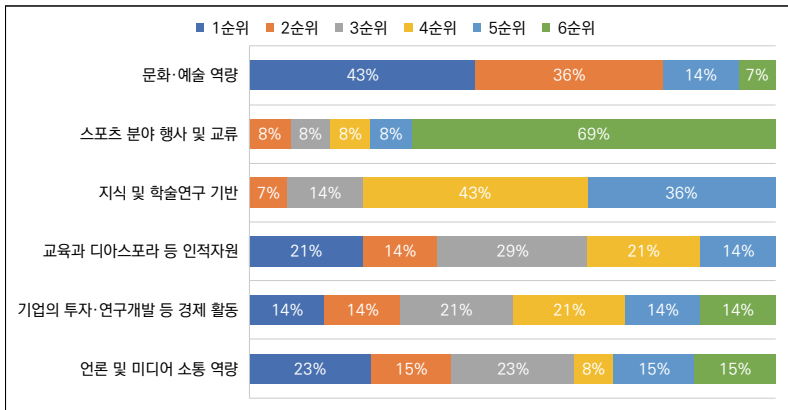
〈표 IV-15〉은 한국의 일반, 통일, 평화 공공외교의 추진체계가 ‘정부 주도형’인지, ‘민간 주도형’인지, ‘민·관 혼합형’인지에 대한 러시아 전문가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러시아 현지 전문가의 압도적 다수(87%)는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체계를 ‘정부 주도형’이라고 답했다. 또한, 통일 공공외교와 평화 공공외교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각각 응답자의 무려 93%와 87%가 ‘정부 주도형’이라고 답했다. 이는 다른 나라(미국, 중국, 일본)와 비교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인데, 대러시아 공공외교가 현지 주재 외교공관과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IV-15〉 한국의 대러시아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구분	정부 주도형	민간 주도형	민·관 혼합형
일반 공공외교	87%	6%	7%
통일 공공외교	93%	7%	-
평화 공공외교	87%	13%	-

(4) 한국의 대러시아 공공외교의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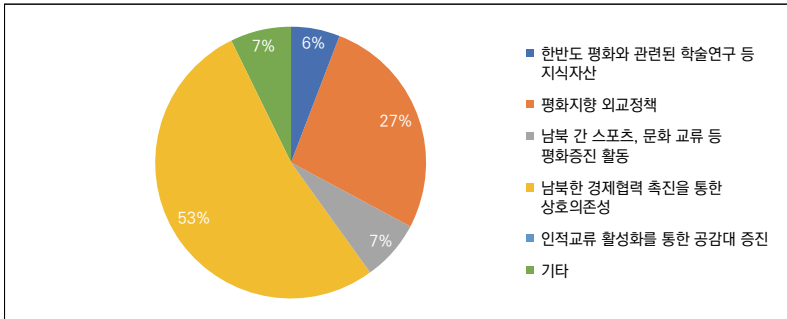
〈그림 IV-52〉 한국의 대러시아 공공외교의 주요 자원



한국의 대러시아 공공외교의 주요 자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러시아 현지 전문가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였다. 〈그림 IV-52〉는 한국의 대러시아 일반 공공외교의 주요 자원에 대한 조사 결과이고, 〈그림 IV-53〉은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자원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러시아 현지 전문가 다수는 ‘문화·예술 역량’을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반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으로 지적했다. 반면, ‘스포츠 분야 행사 및 교류’는 가장 중요도가 낮았다. 이는 한국의 주요 자원이라 할 수 있는 한류와 같은 문화자산이 러시아에서도 통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평화 공공외교와 관련한 주요 자산으로

는 ‘남북한 경제협력 촉진을 통한 상호의존성(53%)’과 ‘평화지향 외교 정책(27%)’이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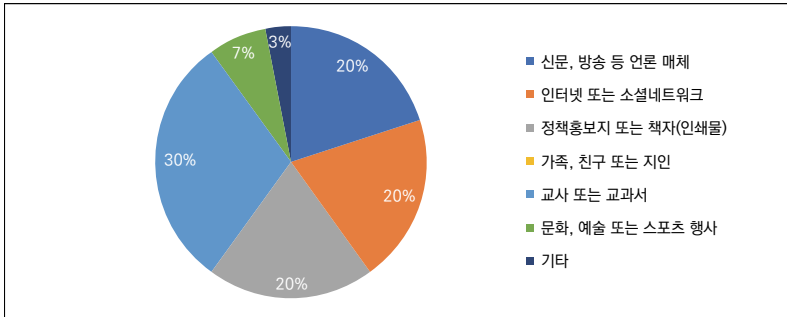
〈그림 IV-53〉 한국의 대러시아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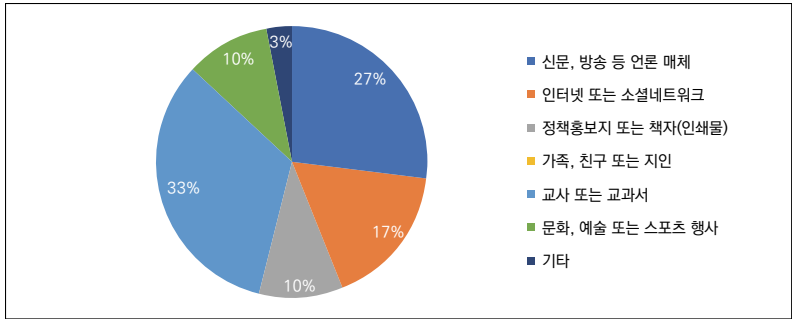
(5) 한국의 대러시아 공공외교의 매체

(가) 기존 매체 활용에 대한 평가

〈그림 IV-54〉 한국의 대러시아 통일 공공외교의 매체



〈그림 IV-55〉 한국의 대러시아 평화 공공외교의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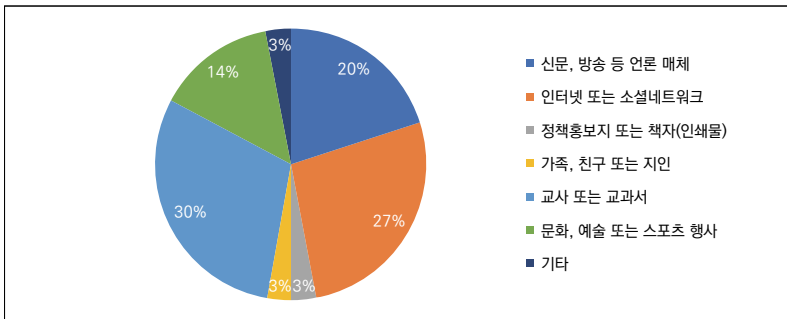
〈그림 IV-54〉에서와 같이,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를 접한 매체로 주로 ‘교사 또는 교과서(30%)’,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20%)’, ‘인터넷 또는 소셜네트워크(20%)’, ‘정책홍보지 또는 책자(인쇄물)(20%)’를 지적했다. 또한 〈그림 IV-55〉에서 보듯이, 평화 공공외교를 접한 매체에 대한 응답에서도 ‘교사 또는 교과서(33%)’,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27%)’, ‘인터넷 또는 소셜네트워크(17%)’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다른 국가와 달리 ‘교사 또는 교과서’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는 응답자 중 상당수가 고등교육기관에서 한국학 전공을 전공한 전문가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는 한국의 대러시아 공공외교 차원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학 교육 및 연구 지원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나) 향후 효과적 매체 활용 방향

〈그림 IV-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은 한국이 평화 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매체·수단으로 ‘교사 또는 교과서(30%)’, ‘인터넷 또는 소셜네트워크(27%)’,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20%)’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기존 일반 공공외교 차원에서 추진해온 한국학 교육 및 연구 지원사업을 평화 공공외교 차원에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기존에는 단순히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식적인 ‘정책홍보지 또는 책자(인쇄물)’보다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이버 매체, 그리고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의 활용도 제고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56〉 한국의 대러시아 평화 공공외교 매체의 유용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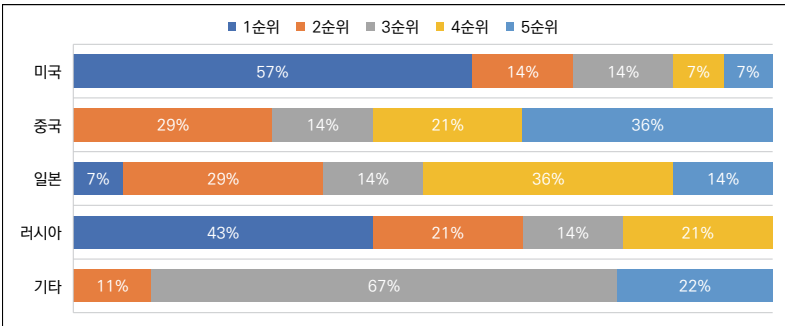
(6) 한국의 대러시아 공공외교의 대상

〈그림 IV-57〉과 〈그림 IV-58〉은 각각 한국 통일 공공외교와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국에 대한 러시아 전문가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그림 IV-57〉에서 보듯이,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은 통일 공공외교를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국가로 ‘미국’과 ‘러시아’를 선택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가장 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국가로 지목되었다. 이는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부정적 인식과 이른바 ‘4강’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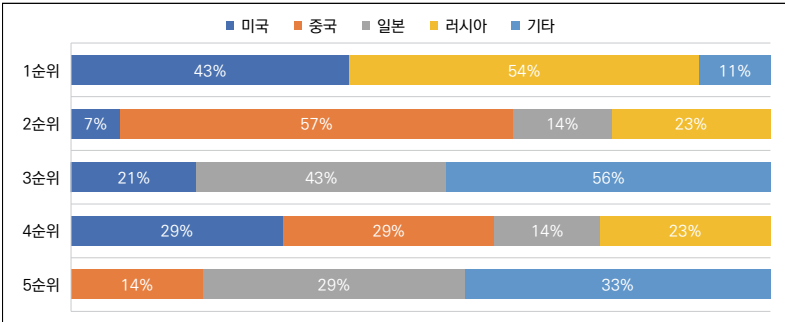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을 가장 지지한다는 긍정적 인식이 중첩된 결과로 보인다.

이어서 <그림Ⅳ-58>에서와 같이, 러시아 현지 전문가 다수는 평화 공공외교를 가장 지지하는 국가로 ‘러시아’를 선택했다. 반면, ‘일본’을 가장 덜 지지하는 국가로 지목했다. 이는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이 자국이 한반도 평화를 가장 지지한다는 인식과 함께, 한·일 관계를 고려할 때 ‘일본’이 가장 한반도 평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인식의 산물로 해석된다.

<그림 Ⅳ-57> 한국 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국(러시아)



<그림 Ⅳ-58> 한국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국(러시아)



한편, <표 IV-16>은 한국의 대러시아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 직군에 대한 러시아 전문가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으로는 ‘정치인(40%)’과 ‘언론(40%)’이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는 러시아에서는 한반도 정책 결정에서 ‘관료’, ‘학자·전문가’, ‘일반 국민’의 영향력보다 ‘정치인’과 ‘언론’의 영향력이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는 한반도 정책을 세계전략 또는 동북아 정책 차원에서 바라보고 결정한다. 따라서 한반도 정책 결정은 상향식보다는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정치인이자 관료인 대통령의 ‘이너씨클’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또한 러시아에서 한반도 정세는 일반 국민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일반 국민은 주로 언론보도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고 있다.

<표 IV-16> 한국의 대러시아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 직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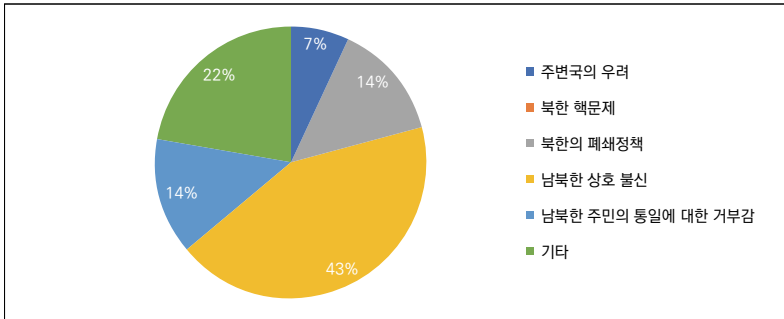
구분	정치인	관료	학자·전문가	언론	시민사회단체	일반국민
통일 공공외교	40%	3%	17%	40%	-	-
평화 공공외교	33%	3%	27%	27%	-	10%

다음으로,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으로는 ‘정치인(33%)’, ‘학자·전문가(27%)’, ‘언론(27%)’이 선택되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에서는 한반도 정책 결정에서 ‘관료’, ‘일반 국민’의 영향력보다 ‘정치인’과 ‘언론’의 영향력이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일 공공외교와 달리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에는 ‘학자·전문가’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한반도 통일을 한반도 평화보다 높은 수준의 정책 결정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7) 한국의 대러시아 공공외교의 장애요인

(가) 통일 공공외교

〈그림 IV-59〉 한국의 대러시아 통일 공공외교의 장애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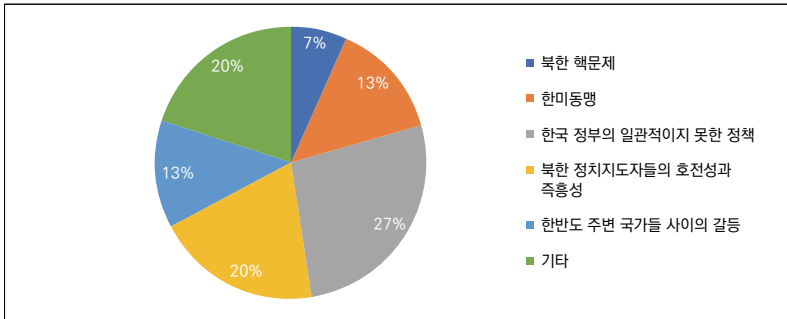
〈그림 IV-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 추진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남북한 상호불신’(43%), ‘북한의 폐쇄정책’(14%), ‘남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거부감’(14%)을 지적했다. 다시 말해,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은 통일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한편, 통일 공공외교의 장애요인을 주로 남북관계 또는 남북 내부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 핵문제’와 ‘주변국의 우려’를 지목한 한국과 미국 및 일본의 인식과 달리 한반도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함께 남북한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평화 공공외교

〈그림 IV-60〉은 한국의 대러시아 평화 공공외교의 장애요인에 대한 러시아 전문가의 인식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평화 공공외교 추진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것은 ‘한국 정부의 비일관적 정책(27%)’, ‘북한 정치지도자들의 호전성과 즉흥성(20%)’

이었다. 반면, ‘북한 핵문제’를 지적한 응답은 가장 낮은 비율(7%)을 차지했다. 이는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이 통일 공공외교 추진의 장애요인을 주로 남북관계 또는 남북 내부에서 찾은 것과도 연관되는데, 이들은 평화 공공외교의 장애요인 역시 남북한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의 정책에서 찾았다. 다만, 상대적으로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에 비해 러시아는 한국 정책에 보다 호의적인 시각 또는 남북관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시각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IV-60〉 한국의 대러시아 평화 공공외교의 장애요인



(8) 주관식 응답 분석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정책 또는 의제 등)에 대한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공공외교를 통해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이 독자적인 구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많은 러시아 국민이 한국 정부의 한반도 통일정책이 미국의 정책적 영향력 아래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같은 직접적인 주장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과정에 대한 더 섬세한 주장을 담아야만 통일 공공외교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

화’에 대한 ‘프로파간다(propaganda)’가 미국에서는 유효할 수 있지만, 러시아에서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셋째, 통일 공공외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정책의 ‘상징’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세 차례에 걸친 두 정상의 만남은 러시아 국민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매우 큰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넷째, ‘고려인’을 통일 공공외교의 핵심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 국민보다 오히려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이 한반도 통일을 더 원하고 그것의 실현을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을 통일 공공외교를 확산하는 주체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다섯째, 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더 많은 자료가 외국어로 번역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영어 또는 러시아어로 번역된 자료가 많을수록 통일 공공외교의 효과가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평화 공공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정책 또는 의제 등)에 대한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 공공외교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먼저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이 ‘우파 보수주의 정부’와 ‘중도좌파 진보주의 정부’의 교체에 따라 변화하면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방향도 크게 변화해왔다고 지적했다. 둘째, 평화 공공외교가 북한 체제의 ‘조기붕괴론’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현 체제가 필연적으로 조기에 붕괴할 것이고,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압박으로 인한 어떠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살아남으면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이고, 그 결과 한반도는 ‘제

2의 한국전쟁' 발발의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셋째, 평화 공공외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수행된 정책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정책이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당시의 정책에 대해 비록 수정이 필요한 '전술적' 한계는 있었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옳았다고 주장했다. 넷째, 평화 공공외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남북 간 문화적·인적 교류와 경제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전문가들은 북핵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신뢰 구축의 진전에 대한 홍보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3. 비교분석 및 특징

가. 설문조사 결과의 국가별 비교

(1) 한국 공공외교의 전반에 대한 평가

(가) 일반,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평가 비교

한국의 일반 공공외교, 통일 공공외교 및 평화 공공외교의 성과에 대한 한반도 주변4국 전문가의 평가는 일반 공공외교, 평화 공공외교, 통일 공공외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일반 공공외교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비중은 47%인데 반해 평화 공공외교는 38%로 조금 낮았고 통일 공공외교는 가장 낮은 27%에 머물렀다. 물론, 일반 공공외교의 긍정적 평가가 절반인 50%에도 못 미친다는 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의 추진 성과가 일반 및 평화 공공외교에 비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는 점은 주목된다. 즉, 한반도의 통일이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주도의 통일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방식의 통일 공공외교는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주는 등 효과가 미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공공외교 전반에 대한 평가를 국가별로 비교하면, 미국과 일본은 부정적 평가가 높은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긍정적 평가가 높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표 IV-17>에서 보듯이, 미국은 한국의 일반,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본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한국의 공공외교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순이었다.

<표 IV-17> 국가별 한국의 공공외교 전반에 대한 평가

구분	일반 공공외교					통일 공공외교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	8%	25%	25%	42%	-	17%	8%	17%	42%	17%	17%	17%	17%	42%	8%
중국	9%	64%	27%	-	-	18%	45%	27%	9%	-	18%	45%	27%	9%	-
일본	6%	18%	35%	41%	-	-	-	35%	47%	18%	-	6%	65%	18%	12%
러시아	13%	53%	33%	-	-	7%	27%	47%	20%	-	7%	53%	40%	-	-
합계	9%	38%	31%	22%	-	9%	18%	33%	31%	9%	9%	29%	40%	1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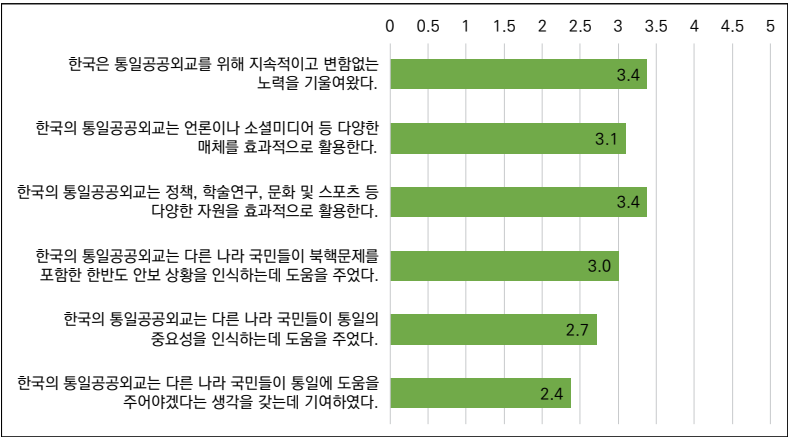
(나)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심층적 비교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 아래와 같은 6개의 문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 ① 한국은 통일 공공외교를 위해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 ②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는 언론이나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 ③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는 정책, 학술연구, 문화 및 스포츠 등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 ④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는 다른 나라 국민들이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 ⑤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는 다른 나라 국민들이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 ⑥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는 다른 나라 국민들이 통일에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기여하였다.

그 결과, 두 분야 모두 ‘지속적 노력’과 ‘다양한 자원 및 매체의 활용’, 그리고 이를 통한 ‘한반도 상황인식에 대한 도움’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나타났다. 다만, 통일 공공외교에서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 이해’와 ‘통일에 기여하겠다는 인식’을 주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차례로 2.7점 및 2.4점을 기록해 낮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6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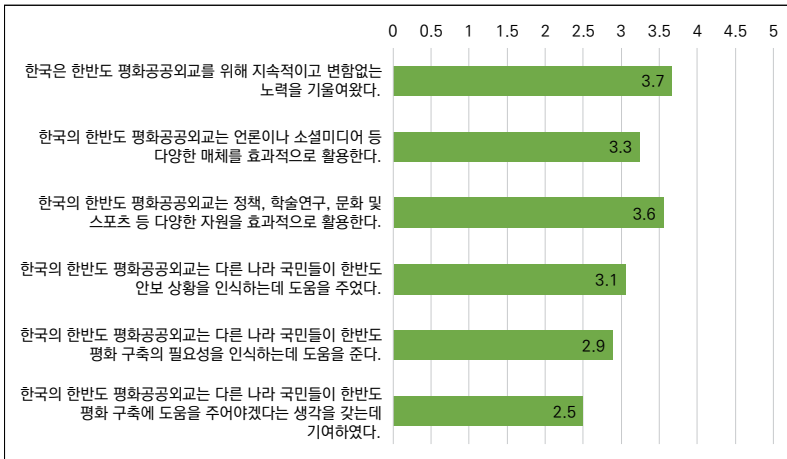
〈그림 IV-61〉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심층평가(5점 척도)



〈그림 IV-6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화 공공외교에서도 ‘한국이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평가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 두 항목에서 각각 3.7점과 3.6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역시 평화 공공외교의 핵심적 목표라 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구축의 필요성 인식(2.9점)’과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2.5점)’ 등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한국의 평화 공공외교가 주변국과 평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반도 통일에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 4국의 입장과 정책을 감안하면 주변국과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주변국이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반대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 나온 배경에 대해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62〉 한국의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심층평가(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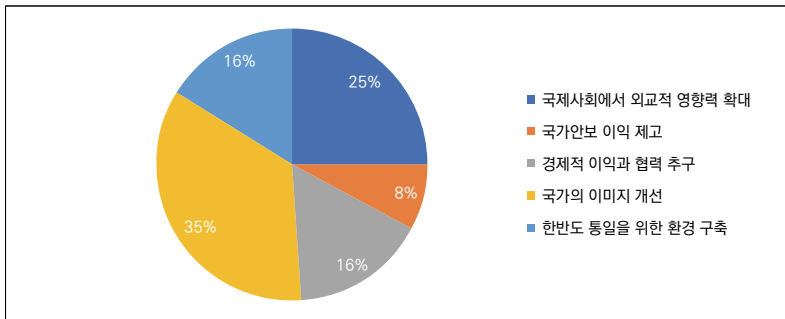
(2) 한국 공공외교의 목표

(가) 현재의 목표

한국 공공외교의 목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주변 4국의 전문가들은 ‘국가의 이미지 개선(35%)’을 첫 번째로 답했고 이어서 ‘국제사회에 서외교적 영향력 확대(25%)’를 두 번째로 답했다(〈그림 IV-63〉참조). 통일 공공외교의 목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증진(40%)’과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필요성 홍보(29%)’, ‘통일의 필요성 홍보(15%)’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V-18〉참조).

한편 평화 공공외교의 목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은 고른 분포의 특징을 보여준다. 〈표 IV-19〉에서 보듯이, ‘주변국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공동안보체제 수립(22%)’을 필두로 ‘남북한의 통일(21%)’, ‘남북 군비축소(19%)’, ‘평화공존(18%)’, ‘공식적인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17%)’ 등이 거의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커다란 차이가 없다. 이는 한국의 평화 공공외교의 목표가 아직은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IV-63〉 한국 공공외교의 목표



〈표 IV-18〉 국가별 한국 통일 공공외교의 목표

국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증진	통일의 필요성 홍보	북한의 정책 변화 유도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필요성 홍보
미국	33%	-	8%	8%	50%
중국	27%	18%	9%	-	45%
일본	76%	6%	12%	-	6%
러시아	13%	7%	27%	27%	27%
전체	40%	7%	15%	9%	29%

〈표 IV-19〉 국가별 한국 평화 공공외교의 목표

국가	휴전 상태의 유지를 통한 전쟁 방지 (평화공존)	공식적인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남북 간의 신뢰 회복 및 군비 축소 프로세스	남북한의 통일	주변국의 항구적 평화정책과 공동안보체제 수립	기타
미국	21%	17%	25%	17%	21%	-
중국	-	9%	-	45%	36%	9%
일본	35%	29%	18%	-	18%	-
러시아	7%	7%	27%	33%	20%	7%
전체	18%	17%	19%	21%	22%	3%

한편 통일 공공외교의 목표에 대한 국가별 인식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1순위로 꼽은 반면,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거의 압도적인 응답률(76%)을 기록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 통일 공공외교의 전개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영향력이나 역할을 고려한 접근과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관심사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른 한편, 평화 공공외교의 목표에 대한 국가별 인식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유사한 비율을 보이는 가운데 크게 두드러지는 특징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미국 및 일본 전문가보다 많은 45%의 중국

전문가와 33%의 러시아 전문가가 ‘남북통일’을 평화 공공외교의 목표로 인식하고 있는 점은 특이하다. 그만큼 두 국가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앞으로의 지향점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증진’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제일 많았다. 이는 향후 한국 통일 공공외교의 정책 방향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평화·안정에 방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답변에 주변 4국 전문가들의 기대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표 IV-20〉 국가별 한국 평화 공공외교의 지향점

국가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군사적 신뢰 형성 및 군축	북미 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남북 간 경제협력 및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간 문화 및 인적 교류 활성화	한반도 주변국 정부 및 국민들과의 한반도 평화 공감대 형성	기타
미국	8%	17%	21%	21%	13%	21%	-
중국	14%	14%	23%	18%	23%	5%	5%
일본	35%	9%	9%	3%	12%	26%	6%
러시아	7%	13%	13%	47%	-	13%	7%
전체	19%	13%	16%	18%	13%	18%	4%

한편 평화 공공외교에서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는 ‘한반도 비핵화(19%)’가 근소한 차이로 1위로 꼽혔고, ‘남북 간 경제협력 및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한반도 주변국 정부 및 국민들과의 한반도 평화 공감대 형성’이 각각 18%로 두 번째 많은 응답을 받았다. 단, 국가별로 강조하는 지점이 모두 상이하였다. 미국은 ‘북미 간 종

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남북 간 경제협력 및 대북 인도적 지원’, ‘한반도 주변국 정부 및 국민들과의 한반도 평화 공감대 형성’의 세 분야가 각각 21%를 기록하며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포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북미 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 간 문화 및 인적 교류 활성화’가 각각 23%를 기록했다. 반면에 일본은 ‘한반도 비핵화(35%)’를, 러시아는 ‘남북간 경제협력 및 대북 인도적 지원(47%)’을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응답하였다.

(3) 한국 공공외교의 주체

(가) 추진체계

〈표 IV-21〉에서 보듯이, 한국의 공공외교의 추진체계에 대해 주변 4국의 전문가들은 일반,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 모두 ‘정부 주도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일반 공공외교에서는 ‘정부 주도형’이라는 답변이 56%, ‘민·관 혼합형’이라는 답변이 42%로 나타났는데 비해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는 ‘정부 주도형’이라는 답변이 각각 76% 및 73%로 높게 나타나 이 두 분야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더욱 강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통일이나 평화를 민간이 선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이나 역할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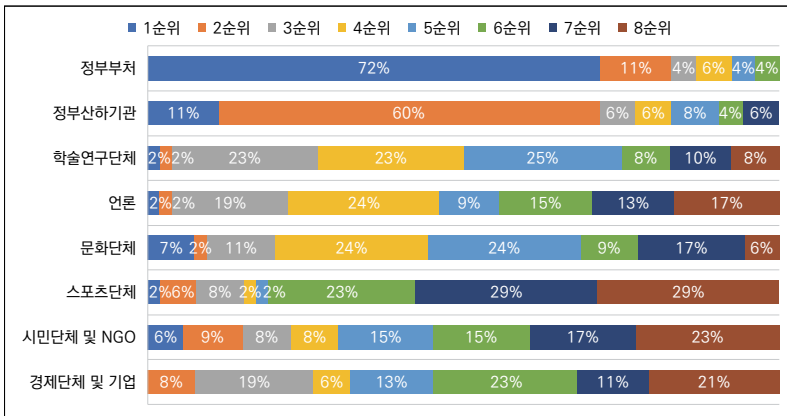
〈표 IV-21〉 한국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구분	정부 주도형	민간 주도형	민·관 혼합형
일반 공공외교	56%	2%	42%
통일 공공외교	76%	2%	22%
평화 공공외교	73%	4%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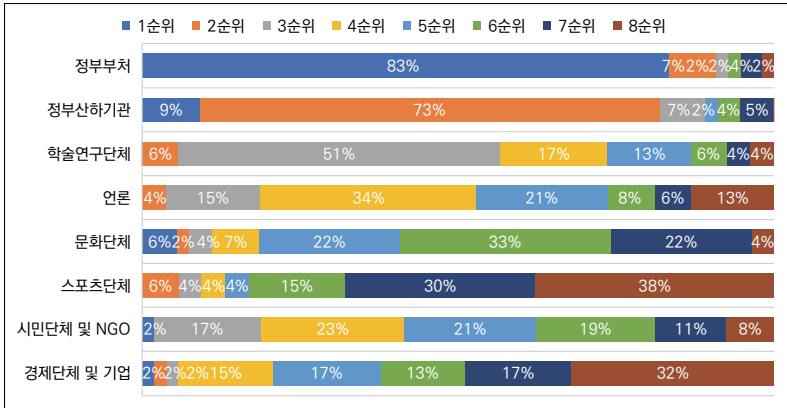
(나) 핵심 주체

〈그림 IV-64〉, 〈그림 IV-65〉, 〈그림 IV-66〉은 각각 한국의 일반, 통일, 평화 공공외교의 핵심 주체에 대한 주변 4국 전문가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 한국 공공외교의 핵심 주체를 묻는 질문에서도 한국 공공외교가 ‘정부 주도형’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외교의 핵심 추진기관에 대해 1순위로 ‘정부부처’를 꼽은 비율이 ‘일반 공공외교’ 72%, ‘통일 공공외교’ 83%, ‘평화 공공외교’ 81% 등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2순위로 ‘정부산하기관’을 뽑은 답변도 ‘일반 공공외교’ 60%, ‘통일 공공외교’ 73%, ‘평화 공공외교’ 75% 등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부처’ 및 ‘정부산하기관’을 공공외교의 핵심 주체로 인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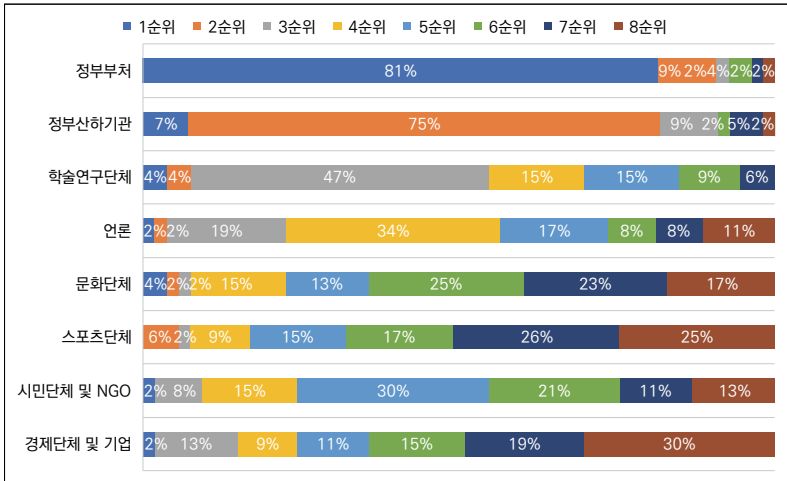
〈그림 IV-64〉 한국 공공외교의 핵심 주체



〈그림 IV-65〉 한국 통일 공공외교의 핵심 주체



〈그림 IV-66〉 한국 평화 공공외교의 핵심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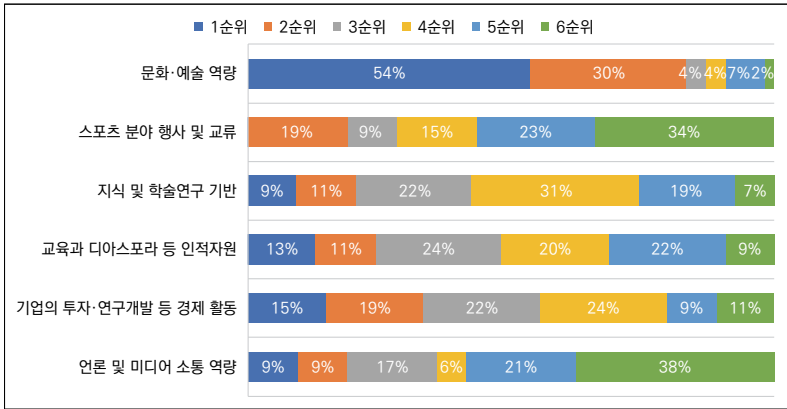


(4) 한국 공공외교의 자원

일반 공공외교의 자원에서는 ‘문화·예술 역량’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답변이 54%를 기록한데 이어 ‘기업의 투자 및 연구개발 등 경제 활동’이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은 문화영역과 경제영역에 포진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67〉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자원



한편 평화 공공외교의 자산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북한 경제협력 촉진을 통한 상호의존성(35%)’을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였고, ‘평화지향 외교정책(27%)’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별 전문가들의 인식을 비교하면, 미국의 경우 ‘평화지향 외교정책’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답변이 과반 이상(58%)을 차지한데 비해 중국은 ‘스포츠 및 문화교류 등 평화증진 활동(36%)’과 ‘남북한 경제협력 촉진을 통한 상호의존성(36%)’ 등 남북한의 교류를 평화 공공외교의 중요한 자원이라고 응답하였다. 러시아 역시 응답자의 53%가 ‘경제협력’을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일본의 경우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공감대 증진’이 29%로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24%의 ‘남북한 경제협력 촉진’이 뒤를 이었다. 따라서 미국을 제외한 인접국들은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을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자원으로 지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2〉 국가별 한국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자원

국가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학술연구 등 지식자산	평화지향 외교정책	남북 간 스포츠, 문화 교류 등 평화증진 활동	남북한 경제협력 촉진을 통한 상호의존성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공감대 증진	기타
미국	-	58%	8%	25%	8%	-
중국	-	27%	36%	36%	-	-
일본	18%	6%	6%	24%	29%	18%
러시아	7%	27%	7%	53%	-	7%
전체	7%	27%	13%	35%	11%	7%

(5) 한국 공공외교의 매체

(가) 기존 매체의 활용

통일 공공외교 및 평화 공공외교를 접한 매체에 대한 질문에서는 두 분야 모두 유사하게 신문, 방송 등 언론으로 대표되는 구 미디어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정책홍보지 또는 책자(인쇄물)’에 이어 인터넷 또는 소셜미디어 등 신 미디어가 세 번째로 뒤를 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IV-23〉에서와 같이, 통일 공공외교는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가 29%, ‘정책홍보지 또는 책자(인쇄물)’ 23%, ‘인터넷 또는 소셜네트워크’가 20%를 기록했다. 한편 〈표 IV-24〉에서 보듯이, 평화 공공외교는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가 32%, ‘인터넷 또는 소셜네트워크’가 24%, ‘정책홍보지 또는 책자(인쇄물)’이 21%를 기록했다.

통일 공공외교의 접촉경로(매체)를 국가별로 비교하면 미국과 일본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반면, 중국에서는 한국 정부의 ‘정책홍보지 또는 책자(인쇄물)’을 통해 접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러시아는 ‘교사 또는 교과서’ 등 한국학

프로그램과 관련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평화 공공외교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통일 공공외교에 비해 국가별로 ‘인터넷 또는 소셜네트워크’의 응답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추세가 발견된다.

〈표 IV-23〉 국가별 한국 통일 공공외교의 접촉경로(매체)

국가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	인터넷 또는 소셜 네트워크	정책홍보지 또는 책자 (인쇄물)	가족, 친구 또는 지인	교사 또는 교과서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 행사	기타
미국	42%	29%	8%	8%	-	8%	4%
중국	23%	27%	32%	9%	-	9%	-
일본	33%	9%	30%	9%	6%	9%	3%
러시아	20%	20%	20%	-	30%	7%	3%
전체	29%	20%	23%	6%	10%	8%	3%

〈표 IV-24〉 국가별 한국 평화 공공외교의 접촉경로(매체)

국가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	인터넷 또는 소셜 네트워크	정책홍보지 또는 책자 (인쇄물)	가족, 친구 또는 지인	교사 또는 교과서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 행사	기타
미국	42%	38%	8%	8%	-	-	4%
중국	23%	32%	27%	9%	-	9%	-
일본	35%	15%	35%	3%	-	9%	3%
러시아	27%	17%	10%	-	33%	10%	3%
전체	32%	24%	21%	5%	9%	7%	3%

(나) 향후 효과적 매체 활용 방향

한편, 〈표 IV-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화 공공외교에서 앞으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매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터넷 또는 소셜네트워크’가 33%,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가 24%라는 응답을

받았다. 그러나 이 질문에서 특이한 점은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 행사’가 20%로 세 번째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별로는 중국(27%), 일본(24%)에서 문화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향후 동북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평화 공공외교에서 민간의 문화, 예술 및 스포츠 분야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표 IV-25〉 국가별 한국 평화 공공외교의 매체 유용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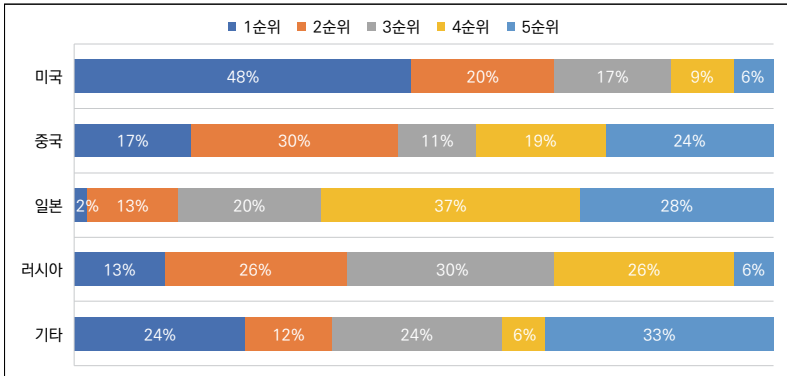
국가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	인터넷 또는 소셜 네트워크	정책홍보지 또는 책자 (인쇄물)	가족, 친구 또는 지인	교사 또는 교과서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 행사	기타
미국	29%	33%	4%	4%	-	17%	13%
중국	14%	45%	9%	-	5%	27%	-
일본	29%	29%	12%	-	3%	24%	3%
러시아	20%	27%	3%	3%	30%	13%	3%
전체	24%	33%	7%	2%	10%	20%	5%

(6) 한국 공공외교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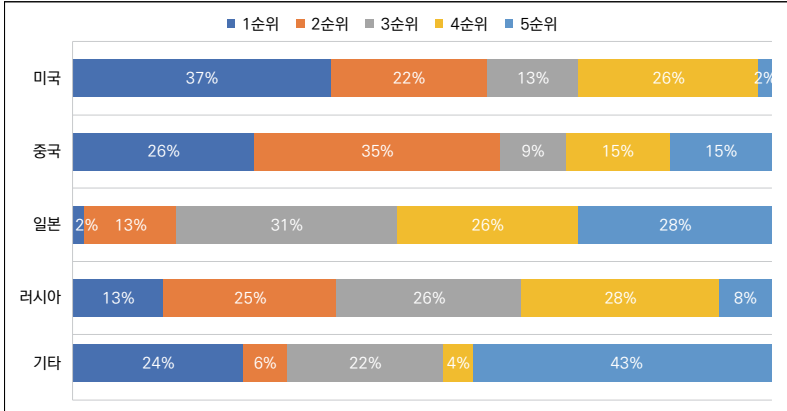
주변 4국의 전문가들에게 통일 공공외교와 평화 공공외교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대상을 국가와 직업군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림 IV-68〉과 〈그림 IV-69〉는 각각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추진 대상국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구현한 것이다. 먼저, 주변 4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모두가 한국의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중요한 대상 국가로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 통일 공공외교의 경우 ‘미국’을 꼽은 응답이 1, 2 순위를 합쳐 68%, ‘중국’은 1,2순위를 합쳐 47%를 기록했다. 평화 공공외교의 경우에는 1, 2순위를 합친 응답에서 ‘미국’이 59%, ‘중국’이 61%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상호 전략적인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68〉 한국 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국(국가별 종합)



〈그림 IV-69〉 한국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국(국가별 종합)



한편 〈표 IV-26〉에서 보듯이, 통일 공공외교가 집중해야 할 대상 직군으로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31%)’과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는 ‘언론(22%)’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국가별로 살펴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되었

는데, 중국의 경우는 여론주도층에 해당하는 ‘학자·전문가(32%)’를, 러시아는 ‘언론(40%)’을, 일본은 ‘일반국민(29%)’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IV-26〉 국가별 한국 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 직군

국가	정치인	관료	학자·전문가	언론	시민사회단체	일반국민
미국	33%	25%	13%	8%	13%	8%
중국	18%	23%	32%	18%	5%	5%
일본	29%	9%	12%	18%	3%	29%
러시아	40%	3%	17%	40%	-	-
전체	31%	14%	17%	22%	5%	12%

한편 평화 공공외교에서도 ‘정치인(26%)’이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되었는데, 통일 공공외교와 달리 ‘일반 국민(22%)’과 ‘학계(21%)’도 적지 않은 선택을 받았다. 〈표 IV-27〉에서 보듯이, 국가별로는 미국(29%)과 러시아(33%)에서 ‘정치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일반국민(38%)’을 꼽은 경우가 많은 반면, 중국은 ‘학자 및 전문가 집단(32%)’을 중시하였다.

〈표 IV-27〉 국가별 한국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 직군

국가	정치인	관료	학자·전문가	언론	일반국민
미국	29%	21%	25%	4%	21%
중국	14%	23%	32%	18%	14%
일본	26%	6%	6%	24%	38%
러시아	33%	3%	27%	27%	10%
전체	26%	12%	21%	19%	22%

(7) 공공외교의 장애요인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표 IV-28>에서와 같이 통일 공공외교의 장애요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은 ‘남북한 간의 상호불신(33%)’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20%)’와 ‘북한 핵문제(20%)’가 같은 비율로 2위를 차지했다. 한편 통일 공공외교의 장애요인을 국가별로 비교하면 역시 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인식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미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주변국의 우려(미국 33%, 일본 18%)’와 ‘북한 핵문제(일본 47%, 미국 25%)’를 주요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한의 상호불신(중국 73%, 러시아 43%)’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북한의 폐쇄정책(14%)’과 ‘남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거부감(14%)’ 등 남북한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V-28> 국가별 한국 통일 공공외교의 장애요인

국가	주변국의 우려	북한 핵문제	북한의 폐쇄정책	남북한 간의 상호불신	남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거부감	기타
미국	33%	25%	25%	17%	-	-
중국	27%	-	-	73%	-	-
일본	18%	47%	12%	12%	6%	6%
러시아	7%	-	14%	43%	14%	21%
합계	20%	20%	13%	33%	6%	7%

둘째, <표 IV-29>에서 보듯이, 평화 공공외교의 장애요인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의 결과는 ‘(한국의 정권교체에 따른) 비밀관적 정책(31%)’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가운데, ‘북한 핵문제(24%)’

와 ‘북한 정치지도자들의 호전성과 즉흥성(20%)’도 중요한 걸림돌로 지적되었다. 국가별 인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미국은 ‘북한 정치지도자들의 호전성과 즉흥성’에 가장 큰 비중(33%)을 두고 있고, 일본은 ‘북한 핵문제(53%)’를, 중국은 ‘한국 정부의 비일관적 정책(73%)’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한국 정부의 비일관적 정책(27%)’과 ‘북한 정치지도자들의 호전성과 즉흥성(20%)’ 모두를 지적하며 다소 객관적 입장에서 남북한 정치지도자들의 책임을 균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IV-29〉 국가별 한국 평화 공공외교의 장애요인

국가	북한 핵문제	한미 동맹	한국 정부의 비일관적 정책	북한 정치지도자들의 호전성과 즉흥성	한반도 주변 국가들 사이의 갈등	기타
미국	17%	17%	8%	33%	17%	10%
중국	9%	—	73%	9%	9%	—
일본	53%	—	24%	18%	—	6%
러시아	7%	13%	27%	20%	13%	20%
합계	24%	7%	31%	20%	9%	9%

나. 전문가 인식의 특징 비교

(1) 국가별 특징

(가) 미국

한국이 추진하는 공공외교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인식과 평가는 향후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 개선 과제 혹은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현재 한국의 대미 공공외교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대체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더 많다. 특히, 목표 달성 여부에 있어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국의 공공외교가 한반도의 통일 혹은 평화정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한반도의 통일 또는 평화정착에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인식 형성에 크게 기여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 같다. 이러한 결과는 물론 설문조사 대상의 협소함으로 인한 한계를 갖지만, 한국의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재검토와 혁신이 없다면, 투자 비용 대비 효과가 미약한 대미 통일 공공외교 혹은 평화 공공외교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한국의 공공외교 주체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인식은 압도적으로 ‘정부 주도형’에 ‘민·관 혼합형’이 결합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 주도형’이라는 응답은 1명도 없었다. 이는 대미 공공외교 주체의 협소화 문제를 시사한다.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외교를 펼칠 때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한국의 대미 공공외교를 주도하는 것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정부이며, 민간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왜소하다. 향후 대미 공공외교에 있어서 ‘민·관 혼합형’의 비중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민간 주도형’ 공공외교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이 추진하는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의 목표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인식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분산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대미 정책 공공외교가 포괄하는 범위가 넓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미 정책 공공외교가 충분히 전략적으로 전개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즉,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목표는 뚜렷한데, 그 목표가 대미 공공외교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응답자 중

5명이 휴전상태의 유지를 통한 전쟁방지 또는 주변국과의 공동안보 체제 수립을 주된 목표로 인식하며, 4명이 남북한의 통일이 목표라고 응답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는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의 주요 목표 혹은 우선순위는 아닐 수 있다. 특히 최근 한국 정부는 휴전상태의 지속보다는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통일을 우선적 과제로 언급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한국 정부의 목표와 미국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한국의 정책공공외교의 목표 간에 인식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며, 그에 기초한 대미 정책 공공외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넷째,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이 향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평화 공공외교 매체로써 기존 언론이나 신 미디어 외에도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 행사에 주목하고 있는 점도 중요하다. 특히 공공외교의 자원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Pop, K-Movie 등의 한류 콘텐츠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국이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화예술 콘텐츠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문화예술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영역이며, 정부의 주도 혹은 관여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대미 공공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한류 콘텐츠 활용에 대한 민·관 협력 모델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중국

중국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한국의 공공외교 전반 (일

반, 통일, 평화)의 수행 과정이나 노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는 한국의 대중 공공외교의 주체, 규모, 빈도 수 등이 중국 정부, 전문가, 대중 등에게 일단 접촉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은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과정이나 노력에 대한 평가는 높은 반면에 공공외교를 통해 실질적 효과, 예를 들면 한반도 안보상황 혹은 한반도 통일 관련 인식 제고, 중국 대중들이 한반도의 통일 혹은 평화를 위해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유도하는 등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정도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셋째, 중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가 정부 주도형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외교를 민·관 혼합형으로 보는 인식과 다소 대비되는 결과였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통일 공공외교의 민간 역할을 평화 공공외교에 비해 훨씬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가 평화 공공외교에 비해 역사가 길고, 그 과정에서 통일 관련 콘텐츠가 민간영역에까지 파급되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향후 효과적인 한국의 대중국 평화 공공외교를 위해서는 민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중국은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통일 공공외교에서는 통일의 미래비전, 방안보다는 북핵 문제에 중점을 두고, 평화 공공외교에서는 지역 평화보다는 남북통일을 우선시한다는 인식이다. 미국, 일본과 달리 중국은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남

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협력, 미래비전 그리고 중국과 함께할 수 있는 지역 평화 방안 등이 방향으로 제시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지향점으로 북한 비핵화보다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 신뢰 회복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현실에서 나타나는 중러 대 한미일의 입장 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은 향후 한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발전을 위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문화·예술·스포츠 행사라는 매체를 중요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기존의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가 급속도로 발전한 중국의 인터넷 환경을 잘 활용해왔지만, 이러한 인식은 향후에도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매체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평화 공공외교에서 문화예술 및 스포츠 행사라는 매체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이는 한반도 평화라는 전문적 영역의 주제와 문화예술 매체와의 결합이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이는 민간이 특히 강점을 보이고있는 문화예술 매체 활용능력을 잘 정비하고, 한반도 평화라는 전문적 콘텐츠의 접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최대 걸림돌로 남북관계의 불신, 정부정책의 비일관성을 주요하게 선정하였다. 이는 한미일의 응답에서 북핵이나 북한의 평화 의지 부족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과 매우 큰 대비를 이룬다. 주관식으로 진행된 발전 방안에 대한 건의에서도 이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실제 공공외교 현장에서 중국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을 강조해왔고, 정권교체와 무관한 한국정부의 일관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오랜 기간 통일 공공외교를 진행하면서 중국 전문가 혹은 대중을 대상으로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조, 혹은 관심 유도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은 북핵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중국 공공외교가 타 국가에 비해 접근법을 달리해야 하는 이유이다.

(다) 일본

일본 전문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대일본 공공외교, 통일 공공외교, 평화 공공외교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에서 모두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0%,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6%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국의 대일본 공공외교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에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일본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과 최근 한일관계 악화 상황 등이 반영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일본 공공외교를 민간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형의 추진체계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일본 공공외교 추진의 주요 행위자로 정부부처와 정부 산하 기관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반면 공공외교, 통일 공공외교, 평화 공공외교가 ‘민간 주도형’이라는 응답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한국 내에서 이제 공공외교는 정부보다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는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일본 공공외교에서 주요 자산과 매체(수단)가 ‘문화·예술’임을 고려한다면, 현재 대부분의 문화·예술 관

런 민간단체가 정부의 지원 및 협력 없이 대일본 공공외교의 추진주체로 나서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한국의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일본 통일 공공외교와 평화 공공외교의 목표에서 일본 전문가들은 각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 ‘휴전 상태의 유지를 통한 전쟁 방지(평화공존)’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일본 역시 한반도 통일보다는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통한 평화와 안정이 자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응답이 없었다는 점을 주목하면 더욱 이러한 인식은 선명히 드러난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안정화된 한반도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급격한 통일 과정보다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유지를 선호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도 이러한 일본의 인식을 고려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일본 전문가들은 미래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수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을 주목하고 있다. 기존에 평화·통일 공공외교와 관련해서 일본 전문가들은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와 ‘정책홍보지 또는 책자(인쇄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일본 전문가들이 한국의 언론 매체가 일본어 신문 및 방송을 제공하고 있고, 정부홍보물 역시 기존 책자와 더불어 전자파일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이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력해야 할 매체로 언론 매체와 함께 ‘인터넷, 소셜네트워크’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 예술 행사’가 미래 주요

매체로 언급되었는데 일본 사회 내 한류 붐과 함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콘텐츠로 ‘문화, 예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다섯째, 일본의 전문가들은 ‘남북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으로 인식하는 특징을 보였다. 한국의 대일본 일반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에 대한 평가와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일반 공공외교의 경우, ‘문화예술’이 가장 높았는데, 평화 공공외교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평화 공공외교에서 ‘남북간 인적 교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일본 전문가들의 주관식 의견에서도 남북한의 평화공존 상황에서 남북한 간 자유로운 인적 교류 활성화를 주문한 내용이 다수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이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전개하기에 앞서 먼저 한반도 내부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을 지적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 내에서 한반도 평화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 이후에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미이다.

여섯째, 한국의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상은 ‘일반국민’과 ‘정치인’으로 나타났다. 공공외교라는 기본 개념 차원에서 본다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한편 일본은 시민사회 및 시민단체가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든 사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은 정부기관 주도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전문가들은 ‘언론’을 주요 대상으로 언급하였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편견 및 흥미 위주의 보도와 한국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하는 일본의 보수언론에 대한 공공외교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곱째, 일본은 한국의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장애요인으로 ‘북핵문제’를 지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3대 해결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만큼 북핵문제는 일본의 안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며 북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논의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비일관적 정책’ 역시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그동안 한국 정권 교체에 따라 대북정책과 대일정책이 변화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은 모두 대화와 제재의 병행이지만, 실제 정책 추진에 있어서 한국은 대화를, 일본은 제재를 더 강조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일본과의 평화공감대 형성 및 협력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 러시아

러시아 현지 전문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은 한국의 공공외교, 특히 일반 공공외교와 평화 공공외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 비율은 비록 중국보다는 낮았지만, 미국, 일본보다는 매우 높았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한국의 공공외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통일 공공외교의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적인 평가 비율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둘째,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지속성, 자원·매체의 다양성 및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가 한반도 주변 상황 인식, 평화·통일의 중요성 인식, 자발적 참여 유도 등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투사형 공공외교’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러시아 전문가들은 한국의 공공외교를 정부 주도형의 추진 체계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미국, 중국, 일본과 비교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러시아에서 한국의 공공외교가 기존 현지 외교 공관 주도에서 벗어나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의 대러시아 평화·통일 공공외교가 당면한 이슈에 대한 이해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는 존재하지만, 한국 정부가 궁극적으로 남북 화해를 통한 통일을 지향한다는 인식은 러시아에서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통일 공공외교가 한반도 통일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의 정책 변화 유도와 북한 핵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를 통해 향후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논리로의 발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다섯째, 한국의 대러시아 평화 공공외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과 ‘통일의 필요성 홍보’에 중점을 두면서, 특히 ‘남북 간 경제협력 및 대북 인도적 지원’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중국과 일본의 현지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지적하지 않았던 이슈이기도 하다.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화 등과 같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보다 북한의 현 체제를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과 군사적 신뢰 구축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평화 공공외교에 이바지한다고 보고 있다.

여섯째, 러시아에서 효과적인 평화·통일 공공외교 매체는 ‘교사 또는 교과서’, ‘인터넷 또는 소셜네트워크’,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의 순이다. 한국의 대러시아 통일 공공외교 차원에서 현지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학 진흥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이는 평화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데도 효과적인 매체가 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국민의 계층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사이버 매체, 언론 매체 등을 맞춤형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일곱째,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은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장애요인을 주로 남북관계, 남북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의 정책에서 찾았다. 이들은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남북한 상호불신’과 ‘한국 정부의 비일관적 정책’을 지적했다. 이는 중국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치하지만, 주로 북핵 문제와 북한 체제의 성격에 책임을 돌리는 미국과 일본 현지 전문가들의 시각과는 크게 배치된다. 다만, 중국에서 이러한 장애요인이 압도적 다수의 선택을 받은 것과 달리 러시아에서는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 현지 전문가들의 남북한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보여주는 동시에, 러시아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보다 호의적 시각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특징 비교

이상 한국의 공공외교 전반에 관한 주변 4개국 전문가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국가별 특징을 추출한 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했다. 즉, 각 설문항에 따라 주변 4국 전문가의 인식이 일치하는 경우와 일부 국가 간 인식을 공유하는 경우, 그리고 국가 간 인식의 차이가 확연한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주변 4국 전문가의 인식이 대체로 일치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정부 및 정부 기관을 핵심 주체로 하는 정부 주도형이라는 인식이다. 또한 통일 공공외교의 성과 및 구체적으로 통일의 중요성 이해와 통일 기여에 대한 낮은 평가, 평화구축의 필요성과 기여에 대한 낮은 인식 등도 공통된 인식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공공외교의 강점 자산이 문화라는 점, 한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매체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를 거론한 점, 미국과 중국이 한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 국가라는 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보는 주변 4국의 입장과 정책이 상호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변 4국 전문가들이 상호 공통된 인식을 보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된다. 왜냐하면 주변 4국 전문가의 일치된 인식은 그 자체로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한반도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주변 4국 전문가 중 일부 국가 간 인식을 공유하는 경우이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한국 공공외교 전반에 대한 평가와 장애요인 등에서 두드러진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평가에서 미국과 일본은 대체로 부정적인데 반해 중국과 러시아는 긍정적이다. 또한 장애요인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북핵문제와 주변국의 우려, 북한의 호전성 등을 지적했는데 반해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남북한 상호불신과 한국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을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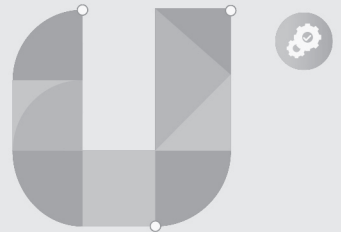
다만, 이러한 미일과 중러의 인식의 차이는 현실 국제관계에서처럼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된다. 왜냐하면 다양한

설문항 중에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소수의 답변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인식이 일치하거나 미국을 제외한 3국의 인식이 유사한 경우도 발견된다. 예컨대,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통일 공공외교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데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였고, 한국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자원으로 미국은 평화지향적 외교정책을 지목한 반면 중일리의 전문가들은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에 방점을 두었다.

셋째, 전문가의 인식 차이가 국가별로 확연한 경우이다. 앞에서 언급한 주변 4국 전문가 간 인식이 일치하는 경우와 국가 간 독특하게 인식을 공유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의 목표와 지향점, 장애요인 등에서 국가별로 평가나 강조하는 지점이 다르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는 북핵이나 북한문제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고, 일본은 북핵문제와 함께 상대적으로 평화안정 및 교류에 더 관심을 보였다. 반면에 중국은 북한에 우호적이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중립적인 인식을 보여주었고 북미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에도 관심을 가졌다. 러시아는 남북한 문제에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이처럼 국가별 전문가의 인식의 차이는 존재한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이해가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한반도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별 공통 관심 사항을 도출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대상 국가의 특성을 주목하고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V. 결론: 평화·통일 공공외교에서 민간의 역할 확대 및 개선방안



본 과제는 주변 4국을 중심으로 기존 정부 차원의 통일 공공외교의 성과를 계승하되, 한계를 보완하려는 문제의식에서 평화 공공외교와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시도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담론 및 한국의 주변 4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개선방안과 민간의 역할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2장에서는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정의와 연구 담론을 제기하는 한편, 분석틀로서 공공외교의 실행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5개의 구성요소인 목표, 주체, 자원(산), 매체, 대상과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영역인 문화, 지식, 정책 등 3개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에 의거 3장에서는 한국의 주변 4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5단계 추진체계 및 영역별 추진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국가들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추진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5단계(목표, 주체, 자원, 매체, 대상)별로 현황을 추적하고 평가하였다. 또한 주변 4국에 대한 한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식, 문화, 정책 공공외교 등 영역별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한국의 주변 4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상국인 주변 4국의 입장과 시각이 반영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4장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현실적으로 주변 4국 국민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반인보다 한반도와 공공외교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이고 있는 전문가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조사에는 정부, 학계, 민간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55명의 주변 4국 전문가와 15명의 국내 전문가 등 총 7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설문항은 한국의 일반,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총 35개의 문항으로 구성했다. 설문 내용은 본 연구의 분석틀인 5개의 구성요소에 다다 총평 및 장애요인을 추가해서 구성했다.

본 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발굴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에서 민간의 역할 확대 방안과 주변 4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 결과의 종합 및 함의

가. 종합 분석: 실태와 인식

(1)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성과 미흡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은 2010년을 공공외교의 원년으로 선포한 후발국이지만 지난 10년간 수행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인 예로 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과 「공공외교법」 제정,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공공외교의 비전과 목표,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외교 수행 주체 간 협업 수준을 제고했던 점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외교의 수행체계를 더 고도화하고 정교화할 필요성은 존재한다. 특히,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한 공공외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물론 평화·통일 공공외교가 하나의 독

립된 영역을 구축한 것이 아니고 정책 공공외교의 하위에서 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존재한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정착과 번영 및 통일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는 국제환경을 조성하려면 정부 차원의 외교와 더불어 공공외교의 추진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정책 공공외교의 일부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추진체계 및 접근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주변 4국 전문가들에게 한국 공공외교의 전반에 관한 평가를 질문했다. 주변 4국 전문가들은 일반 공공외교를 제일 높게 평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평화 공공외교였으며, 통일 공공외교를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중국 및 러시아보다 더 낮게 평가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의 성과를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충격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이는 한국의 전문가들이 통일 공공외교 73%, 평화 공공외교 67%의 압도적 수치로 한국의 공공외교를 잘 수용할 국가로 미국을 선택한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한국의 대미, 대일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필요성과 잠재력은 높게 평가되지만, 공공외교의 접근방식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통적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에서 주요 대상자들과 상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담론과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어서 심층평가 결과를 보면 ‘공공외교의 매체와 자원의 활용’ 및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 증진’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 이해’와 ‘통일에 대한 기여’ 그리고

‘한반도 평화 구축의 필요성’과 ‘평화에 대한 기여’ 등의 인식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는 공공외교의 궁극적 목표인 자발적 참여 유도에 이르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점은 그동안 한국이 공공외교를 추진하면서 우리 주도의 통일을 설득하려는 소위 투사형 공공외교를 전개했거나, 최소한 상대방에게 그렇게 인식된 것임을 보여준다. 물론 한반도 통일은 주변국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투사형 공공외교가 아닌 주창형의 공공외교로도 통일공감대를 형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는 통일보다 주변국과의 공감대 형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점은 평화 공공외교도 통일 공공외교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통일 공공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상호구성형으로의 이행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2) 평화·통일 공공외교 목표의 혼재

한국 공공외교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주변 4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표 V-1>에서 보듯이 국가적 외교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이 그나마 일관되게 국가별 목표로 반영되어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는 공공외교의 특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여전히 전통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의 주변 4국 평화·통일 공공외교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

〈표 V-1〉 한국의 주변 4국 평화·통일 공공외교 목표 비교

대상국	목표
미국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기반 조성
중국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및 한반도 비핵화 지지
일본	평화번영의 한반도와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지지
러시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 지지 유도

이와 관련하여 주변 4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일반 공공외교 목표를 ‘국가이미지 개선’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로, 통일 공공외교의 목표를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증진’과 ‘북핵문제의 해결의 필요성 홍보’로 인식하였다. 이처럼 한국 공공외교와 통일 공공외교의 목표에 대한 주변국 전문가의 인식은 대체로 2개 정도로 집약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평화 공공외교의 목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은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공동안보체 수립, 남북통일, 남북 신뢰구축, 평화공존, 평화협정 등에 대한 답변의 비중이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의 평화 공공외교가 다양하고 폭넓게 추진되었다는 평가도 가능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뚜렷한 목표의 부재와 주변국과의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는 이전 정부보다 평화를 더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추진 기간이 짧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더 나아가 여기에는 보수와 진보 정권의 정책변화로 인한 비일관성도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화의 가치를 담보하는 일관된 원칙과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변국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의 지향점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남북경협, 주변국과의 평화공감대 형성 등을 지목한바, 향후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정책 방향 설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평화·통일 공공외교에서 민·관협업 체계의 미비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주체는 정부와 1.5트랙, 민간 등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포진해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부와 통일부, 교육부 등의 행정부와 국회 등이 활발하고, 1.5트랙 차원에서는 국제교류재단을 필두로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국책연구소, 아리랑TV와 KBS World와 같은 국제방송 미디어 등이 주도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학회, 대학 및 민간연구소, 기업 및 민간단체, 개인 등이 활동하고 있다. 각 주체별로 일정 시기에 어느 국가에 대한 활동에 특화된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심이고 민간의 참여와 역할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전문가들의 인식도 대체로 유사하다. 즉, 통일 공공외교의 경우 한국 전문가들의 57%가 ‘정부 주도형’, 43%가 ‘민·관 혼합형’이라는 인식을 보였고, 평화 공공외교의 경우에는 60% 대 40%로 ‘정부 주도형’이 우세했다. 반면에 이에 대한 주변 4국 전문가의 인식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통일 공공외교의 경우 주변 4국 전문가들의 76%가 ‘정부 주도형’, 22%가 ‘민·관 혼합형’이라는 인식을 보였으며, 평화 공공외교의 경우에도 73% 대 24%의 비율로 ‘정부 주도형’이 우세했다. 한국은 주변 4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정부가 주도하되 민간의 역할 또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인식하는데 비해 정작 해당

국에서는 민간의 역할이 미약하고 정부가 주도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이런 정부 주도형의 공공외교가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냉정한 재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통일 공공외교의 성과에 대한 주변국 전문가들의 평가에서 부정적 의견이 40%로 긍정적 평가(27%)를 월등히 상회했다는 점은 그간 정부주도로 추진되어 온 통일 공공외교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투사형 공공외교의 성격을 벗어나 외국의 국민들과 자연스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을 통해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4) 평화·통일 공공외교 자산의 제한 및 영역별 특징

한국의 대주변 4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산은 일반 공공외교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주변 4국 모두에서 자주 사용되는 자산은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와 북한 이해 등과 같은 지식자산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각 국가에 진출한 기업이 중심이 된 경제자산이 일부 사용되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다. 특히,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자산의 경우 국가별로 폭넓게 활용되면서 한국과 한국민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강점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문화자산이 한반도 평화나 통일 공공외교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남는다.

〈표 V-2〉 한국의 주변 4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영역별 비교

대상국	지식영역	문화영역	정책영역
미국	△	×	○
중국	△	×	○
일본	△	×	○
러시아	×	×	△

주: ○: 상, △: 중, ×: 하

이 점은 한국의 주변 4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영역별 실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표 V-2〉에서처럼 한국의 주변 4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에서 정책영역이 가장 활발하고 그 다음으로는 지식영역이며 문화영역의 활동은 가장 저조하다. 한국 공공외교의 핵심 문화자산인 한류를 활용한 접근은 경쟁력이 있는 미디어와 결합하면서 활발하게 전개되지만, 한반도 평화나 통일과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사드 이후 악화된 한중관계와 중화민족주의의 부상에 따라 한류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류를 활용한 문화 공공외교는 물론 평화·통일과의 결합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국가별,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평화·통일 공공외교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주변 4국 전문가들의 인식은 주목된다. 이들은 한국의 일반 공공외교에서의 주요 자원을 문화와 경제영역으로 인식하였고, 평화 공공외교에서는 평화지향적 외교정책과 남북경협을 통한 상호의존성이라고 인식하였다. 특히, 중국, 일본 등 인접국들은 남북경협 및 교류를 통한 상호의존성에 비교적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는 한국 공공외교의 실제 추진 내용과 방향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측면과 주변국 전문가들의 자체 기대가 반영된 측면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으로의 활용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평화·통일 공공외교 매체의 다원적 활용

한국의 주변 4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매체로는 신문, 방송 등 구 미디어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등 신 미디어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구 미디어에서 신 미디어로 전환 중에 있다고 평가된다. 이밖에 일부 국가에서는 정책홍보지와 문화·예술 행사 및 기업활동도 제한적이거나 통용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전문적인 의사전달 채널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회의체가 비중 있게 사용되어 왔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회의가 주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 비대면 화상회의는 향후 기술의 진보가 동반되면서 새로운 매체 중에 하나로 자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표 V-3〉 한국의 주변 4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매체 활용도 비교

대상국	언론	인터넷	정책홍보지	의사전달체로서의 회의체	문화·예술 등의 행사
미국	○	○	△	○	△
중국	○	○	○	○	△
일본	○	○	△	○	△
러시아	○	○	○	△	△

주: ○: 높음, △: 낮음

이처럼 한국의 주변 4국에 대한 매체 활용은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변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를 주로 언론과 정책홍보지, 인터넷 등을 통해 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국가별로 다른 점도 발견된다. 예컨대 중국, 일본은 정책홍보지를 통해, 러시아는 교과서를 통해 많은 정보를 획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언론과 인터넷이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특히 향후 평화 공공외교의 주요 활용매체로 인터넷(소셜네트워크)이 1위, 언론이 2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계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평화 공공외교의 활용매체로 문화·예술 관련 행사가 3위에 올랐다는 점은 강점 자산과 매체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 다만 평화·통일 공공외교와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6) 평화·통일 공공외교 대상의 편중

〈표 V-4〉에서 보듯이 한국의 주변 4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대상은 대체로 정부 관료와 학계 전문가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란 주제의 특성상 지식과 정책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또한 공공외교의 특성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소수의 여론주도층에 대한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표 V-4〉 한국의 주변 4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대상 비교

대상국	정부관료	전문가 (학자 및 여론주도층)	민간 (사회단체, 교포, 일반국민)
미국	○	○	△
중국	△	○	△
일본	○	○	△
러시아	△	△	△

주: ○: 높음, △: 낮음

이러한 집중 현상은 주변 4국 전문가의 인식에서도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 주변 4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추진 대상으로 정치인과 학자(전문가)를 선택했고, 국가로는 미국과 중국을 선택했다. 이는 한국의 추진실태와 마찬가지로 정책 결정에 영

향을 주는 그룹이라는 점과 한반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두 국가가 상호경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향후 한국은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추진할 때 이 두 국가에 대해 특별히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한중관계가 악화되면서 한중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 또한 부정적으로 변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중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평가보다 미국의 평가가 더 부정적이란 점은 향후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대상을 선별하고 접근하는데 각별히 유의해야 함을 시사한다.

(7)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장애요인 도출

마지막으로 주변 4국 전문가의 인식조사에서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이 부분은 향후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개선방안을 효율적이면서도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사하였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주변국 전문가의 조사 결과가 국내의 인식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주목하였고, 그 결과 다음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주변 4국의 전문가들은 통일 공공외교에서는 ‘남북한의 상호불신(33%)’을, 평화 공공외교에서는 ‘한국 정부의 비일관적 정책(31%)’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반해 국내의 전문가들은 ‘남북한 상호불신(13%)’과 ‘한국 정부의 비일관성(20%)’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였고, 오히려 통일 공공외교(47%)와 평화 공공외교(60%)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북한 핵문제’를 지목했다.

물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매우 중요한 의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제사회와의 인식 격차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한 간 오랜 역사적 대결과 상호불신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를 방지하거나 더욱 심화시키면서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지기 쉬우며 주변국과의 공감대 형성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주변국이 수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 정책적 함의

이상 주변 4국을 중심으로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수행체계와 영역별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대상국인 주변 4국 전문가의 인식을 종합한 결과는 한국의 주변 4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수행하는데 적지 않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1) 일관성 있는 전략 방향의 설정

우선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추진하는데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가 상대국에 대한 통일정책의 홍보와 우호적 이미지를 전파하려는 시도에만 머물러 있을 경우, 정권의 변화에 따라 매번 새로운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그리고 이는 주변국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혼란만 심어줌으로써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성과를 높이는 데에도 한계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국 외교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보수와 진보, 정권교체 및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등에서 벗어나 모두가 용인할 수 있는 범주와 공유할 수 있는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내용을 설정해야 한다. 예컨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평화통일 등 한국 외교의 기초를 이루는 가치와 규범, 원칙과 방향 등을 설정하고, 이를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전략의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원칙성을 확보하고 일관성 있는 시행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통일 강조보다 평화우선적 접근

둘째,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추진하는데 통일을 강조하기보다 평화를 우선하는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앞의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왜냐하면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통일을 강조하며 접근할 경우 상대국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제약이 따르는 반면, 평화는 거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용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한국과 주변 4국 간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상호 경쟁 및 갈등의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통일’보다 ‘평화’라는 가치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중국(러시아)은 미국(일본)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통일이 아닌 평화를 내세울 경우 상대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중국은 수시로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안정을 찬성하고 지지한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3) 평화 담론의 계발

셋째, 일관성 있는 정책 설정과 평화 우선적 접근을 위해서 평화 담론의 계발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논리를 만들고 이를 국제사회에 전파·설득하고 지지를 유도하는 등의 정책 방향을 유지해왔다. 예컨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러한 논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며 한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데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중심적 관점에 기반한 담론만으로는 국제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란 쉽지 않다. 각국의 입장과 이익, 역사문화적 전통 및 계층 등에 따라 평화에 대한 이해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평화의 담론, 공동체적 관점이 반영된 새로운 담론 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세계 평화가 동북아 평화안정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역방향적 관점도 수용하는 쌍방향의 열린 담론을 모색해야 한다. 인류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공동이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즉 한반도의 특수성이 어떻게 세계적 보편성과 결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최근의 영화 『기생충』이나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성공은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앞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기존 한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성과를 제약했던 자기중심적인 투사형 공공외교에서 벗어나 상호구성적인 주창형 공공외교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4) 공통 목표의 수립과 국가별 맞춤형 전략의 상호 조율

넷째, 주변 4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공동 목표를 수립하고 이와 상호 조율할 수 있는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

다. 이미 한국 정부는 주변 4국에 대한 맞춤형 정책 공공외교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한국 공공외교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주변 4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즉, 평화와 통일 관련한 내용, 특히 평화 관련 내용이 부재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목표로 설정하고, 주변 4국이 한반도 평화구축의 참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각 국가별 상황이 상이하고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한 한국과 주변 4국 간의 입장도 상호 다르기 때문에 공동 목표와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전략의 기획, 조정,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개선된다면 미국과 일본의 한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커다란 영향력을 보유한 미국과 중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역량을 집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과 가치의 진영화가 심화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담론을 개발하는 데에도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민·관 협업체계의 구비와 민간의 역할 확대

다섯째, 평화·통일 공공외교에서 민·관 협업체계를 구비하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중앙 차원에서 공공외교 주체 간 거버넌스와 네트워크가 갖추어지긴 했지만, 한국의 주변 4국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통해 볼 때는 민·관 협업체계가 덜 작동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물론 공공외교의 후발국으로서도 일국 외교정책이란 특성상 한국의 공공외교는 정부 주도형이며, 이는 평화·통일 공공외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평화·통일

공공외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업, 사회 단체, 일반국민 등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며,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주변 4국의 민간사회의 성격과 발전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변 4국의 특성과 한국의 과도적 상황에 맞도록 민·관의 역할이 상호 조응하는 방향에서 민·관 협업체제를 구비해야 할 것이다. 즉,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일반 공공외교의 틀과 체계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제공할 것이다. 다만 공공외교가 지향하는 민간 영역에 대한 접근의 확산이란 측면에서 보면 정부는 정책과 전략 차원에서 전체적인 방향과 재정 지원 등을 담당하고 공공외교의 접근 주체, 실행, 내용에 있어서는 민간의 자율적 책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정책 영역의 공공외교에 역점을 두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와 정책 대안에 대한 지지 등을 도모하는 평화와 통일 분야 공공외교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충분할 것이다. 반면, 문화와 지식 영역은 민간 부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6) 참여형 네트워크의 활성화

여섯째,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지속적·효과적 추진과 공감대 형성·확산을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구성은 물론 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네트워크에는 국내의 정부와 민간(시민단체, 학계, 언론계)이 참여하는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와 한국과 주변 4국 간의 실질적인 외교를 수행하는 국제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네트워크는 일부 구성되어 있긴 하지

만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하다. 그나마 대미국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가 가장 활발한 편이나 대러시아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는 가장 저조한 편이다.

국제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 중국이 활발한 편이나, 민간의 참여를 고려하면 미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제한적이고 부족한 측면이 발견되는바, 향후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과 전문가와 시민사회 자체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화와 관련한 시민사회 간 국제 연대 활동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여론 형성에서 긴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게다가 평화 담론을 생성하고 확산하는 지식의 장(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국내외 네트워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7) 평화와 통일에 관한 전문성 강화

일곱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관련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주변 4국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일반 공공외교의 하위에서 즉, 문화, 지식, 정책 공공외교의 영역에서 평화와 통일 관련한 내용이 다루어지지만 현저하게 부족하다.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하나의 영역으로 구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가 다른 영역의 하위에서 진행될수록 이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는 시급한 과제로 부각된다.

예컨대 한국의 강점인 문화자산을 활용해 주변 4국에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전개할 경우, 문화자산과 국가별 전문성에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전문성이 모두 필요하다. 지금까지 외교부 주관 하에 문

화와 국가별 전문성은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 관련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가 관련 콘텐츠를 발굴해서 활발하게 추진되려면 전문영역으로 격상시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만일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평화와 통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통일부나 통일연구원에 적극적인 역할 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 평화·통일 공공외교 매체의 복합화

여덟째, 평화·통일 공공외교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매체의 복합화가 필요하다. 신·구 미디어와 정책홍보지, 인적 교류를 통한 회의체 등 다양한 매체가 활용되고 있지만, IT 기술의 진보와 매체별 장점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 향후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유용하게 발굴된 자산과 이러한 복합적 매체의 활용이 결합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평가된다. 예컨대 코로나19를 계기로 활성화되고 있는 비대면 유통 플랫폼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문화, 예술 및 스포츠 등 민간의 문화교류를 매개로 한 평화 공공외교 정책 수립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조사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평화 공공외교의 효과적 매체로 언론과 인터넷(소셜 네트워크)에 이어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 행사를 지목한 바 있다. 이는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한국의 강점 자산인 문화와 민간의 역할을 결합시키는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9) 평화·통일 공공외교 대상의 체계화

아홉째,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대상을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국가별 특성과 일국 내의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로 타겟(Target)을 선정하고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상 국가의 경우, 한반도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에 역량을 집중하되, 미중 전략경쟁 관계에 연루되지 않도록 접근 전략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또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한국과 국가별 역학관계와 국가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가별 내부 대상의 경우에도 미국의 동부와 서부, 중국의 베이징과 동북지방처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주변 4국의 여론주도층, 해외교포, 차세대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 주요 타겟을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접근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민간의 역할 확대 및 개선방안

앞 절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분석한 후 발굴한 정책적 함의는 모두 9개였다.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전략 방향의 설정, 통일 강조보다 평화우선적 접근, 평화 담론의 계발, 공통목표의 수립과 국가별 맞춤형 전략의 상호 조응, 민관 협업체계의 구비와 민간의 역할 확대, 네트워크의 활성화, 평화와 통일에 관한 전문성 강화, 평화·통일 공공외교 매체의 복합화, 평화·통일 공공외교 대상의 체계화 등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함의에 기초해서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주변 4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민간의 역할 확대 방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내외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려면 정부 주도보다 민간 주도의 공공외교가 더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공공외교 기본계획에서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와 인프라 강화를 전략으로 설정하고 추진해왔으나,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추진체계는 여전히 정부 주도형에 머물러 있고 민간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가 향후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점차 전환해갈 수 있도록 민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평화·통일 민·관협의체 구성

현재 『2021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I 권』에 의하면 외교부, 문화부, 통일부 등 17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들은 각각의 공공외교 추진계획 및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조율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¹⁵⁶⁾ 그러나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외교의 현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평화·통일 공공외교 관련 거버넌스는 정부내에서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외교부와 통일부의 역할 분담 및 조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외교부는 외교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평화와 통일정책에만 집중할 수 없고 공공외교의 전담기구인 국제교류재단도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평화·통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성과가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56) 외교부, 『2021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1권』, pp. 1~531.

따라서 공공외교의 총괄 부처인 외교부와와 업무 중복을 피하되, 평화·통일 공공외교 관련 업무에서 통일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민·관 협력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통일부의 주도하에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국방연구원 등의 국책연구기관과 한국공공외교학회, 언론 등의 민간 학자들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평화·통일 관련 민간 단체들이 참여하는 평화·통일 공공외교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 이 협의체는 매년 2회 개최를 통해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목표와 방향을 마련하고 참여기관들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조정, 평가함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한다. 향후에는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민·관협의체의 운영은 민간의 자율과 전문성에 맡기고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는 예산이나 기금 조성 등의 지원 역할에 집중한다.

(2) 민간단체의 국내외 활동지원

상기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민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민간단체의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앞의 전문가 인식조사에서 확인했듯이, 남북 교류협력의 경험과 사업, 정책 등은 한반도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남북협상 또는 교류협력의 경험이나 정책 등을 타국 정부와 필요에 의해 공유하는 것을 제외하고, 직접 국내외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남북 교류협력이나 한반도 평화 관련 관심과 경험을 보유한 NGO의 국내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평화적 접근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심과 활동을 보이는 관련 시민사회의 단체들로 구성된 포럼의 개최를 구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준다. 아울러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시민참여형 공모사업 등을 시행한다면 민간의 관심을 유도하고 역할을 확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평화·통일 공공외교 전담 기구의 설립 및 운용

민·관 협업체계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전담기구인 가칭 ‘한반도 평화·통일 협력재단’을 설립·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 기구는 국내 외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우호적 여론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내와 남북 및 국제적인 교류협력 활동과 지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활동방향이 외교에 포커스를 두게 되면 공공외교의 담당부서라 할 수 있는 국제교류재단과 기능이 중첩될 수 있고, 그렇다고 연구와 교육에 포커스를 두면 기존 통일연구원이나 국립통일교육원의 기능과 중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기구는 남북 관계와 통일정책의 하위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한 국내 및 남북협력, 국제협력 등을 포함하는 모든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되는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면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통일부와 민간단체 사이에서 협력 유인과 소통의 역할을 전담함으로써 민간의 역할 확대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구 설립과 목적, 기능, 예산 등이 「남북관계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4) 평화·통일 공공외교 교육과정 보강 및 확대

평화·통일 공공외교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평화·통일 공공외교 관련 교육은 국립통일교육원이 주도하고 있으나 국립외교원도 공공외교의 맥락에서 시행하고 있다. 두 기구간의 역할과 임무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의 방향과 내용, 커리큘럼 등을 민·관협의체의 틀 내에서 상호 조정하고 협의하면 된다. 즉, 국립외교원은 공공외교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고 통일교육원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더 집중해서 추진하면 될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보다는 한반도 평화의 맥락에서 교육과정을 보강하고 확대해야 한다. 현재 각급 학교의 평화·통일교육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도서 발급 등을 통해 평화·통일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평화·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을 교육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평화·통일의 내용 전파 및 민간의 역할 확대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평화·통일 공공외교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교육의 전문화와 교육 대상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학생만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강좌의 개설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과정,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연계한 시민교육과정, 국내 유학생 및 해외 전문가를 포함한 글로벌 시민교육과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5) 국내외 민간 전문가·활동가 활용

일반적으로 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민간 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민간의 전문가들은 공공외교의 기획

·수행·평가 등 주체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고, 여론주도층으로서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뚜렷한 목표와 범주가 있는 평화·통일 공공외교에서 이런 전문가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내적 공감대를 형성·확산하는데 각 분야의 민간 학자 및 전문가의 역할은 중요한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이들 전문가들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물지형도’를 작성해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 관련 국내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양성·발굴해야 하며, 이렇게 확보된 국내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와의 담론 생성 및 공감대를 형성·확산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평화 관련 국내외 비정부기구(NGO)의 활동가들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부 차원의 외교활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직접 관여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평화 의제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평화지향적 활동을 통해 평화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발굴·양성 및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외의 현지 민간 전문가와 차세대 신진학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한반도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나 유튜버들도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의 주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유학생, 특파원, 주재원 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포럼,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재단, 통일연구원, 가치 ‘한반도 평화·통일 협력 재단’ 등과 같은 1.5트랙 및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1.5트랙의 기관 및 전문가들은 전문적 지식과 식견, 그리고 자

원과 매체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1.5트랙 전문가들이 주도적 이니셔티브를 취함으로써 2트랙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2트랙 전문가들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2트랙 전문가들에게 부족한 자원과 매체를 보완해주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1.5트랙의 전문가들은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실행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2트랙의 전문가들이 이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자연스럽게 ‘평화·통일’의 의미를 주변국을 비롯한 세계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6)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지식공동체 구성 및 지원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통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대중의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대중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식인과 지식인 간의 네트워크인 지식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제적으로는 국가 간 형성된 지식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식공동체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결정자들이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그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결정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공유하면서 평화의 의미와 규범, 담론을 생산하고 남북 협력,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과 같은 의제 등에 대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감대를 형성·전파·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적 지식공동체와 함께 초국가적 지식공동체의 구성이 긴요하며, 구성 후 일정 기간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현재 국내외 싱크탱크를 비롯한 각국의 전문가, 전략가들이 참여하는 양자 및 다자간 다양한 회의체가 존재하나, 상호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1단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는 상호 간의 이해를 넘어 공유와 공감하는 내용을 생성하는 2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와 문화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형성된다면 국제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7) 디지털 플랫폼 구축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선진적 매체로 가상공간인 인터넷(소셜네트워크, YouTube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는 냉전의 유산과 분단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북핵문제로 인한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바, 세계 평화운동과 국제협력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해 온라인 상에서의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시대적 조류와 미래의 확장성에 부응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 유관 부처 등에 의해 운영되는 공식 채널은 우수한 기획자나 콘텐츠 생산자(contents creator)가 영입되어 대중의 관심을 끌어들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정책 홍보적 성격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은 민·관협업체계로 진행하되,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에만 머물러야 한다. 구체적으로 민간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운영하며,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운영 가이드 라인을 제시·감독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한국은 평화담론과 정책개발 및 국제협력이 활발한 다수의 시민 단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열린 공간이 제공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규제와 제약이 없는 공간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류와 평화운동을 결합시킬 수 있는 참신한 콘텐츠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최근 새로운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상활동 공간인 메타버스(Metaverse)에 한반도 평화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 가상공간을 선점한다면, 전 세계 신세대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는 공공외교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세계 일반 대중들과의 쌍방향적 소통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대학생들에게 해당 사이트의 관리와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예컨대 공모사업이나 자원봉사 등을 통한 장학금과 인센티브의 제공은 훌륭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는 놀이터를 제공하고 관리할 뿐 놀이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놀거리나 놀이에 참여할 행위자는 민간이 스스로 공급하는 형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한국의 대주변 4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개선방안

(1) 미국

한국은 그동안 다방면에서 미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펼쳐왔다. 그렇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가 수행한 미국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한계점을 드러낸다. “한국이 평화 혹은 통일 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보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다. 물론 조사 대상 전문가 숫자가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평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설문조사 결과 이외에도 한국의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실태에 대한 본 연구의 조사와 분석 결과는 그 자체로 현재의 한계점과 개선 과제들을 드러낸다. 여기서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목표, 주제, 자산, 매체, 대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목표: 한반도 평화공감대 형성

첫째, 목표 측면에서 대미 정책 공공외교의 큰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한반도 평화에 초점을 맞춘 공공외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미국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주관식 답변을 통해 공통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대미 공공외교의 목표로서 실효성을 갖기 쉽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주된 이유는 한반도의 통일은 미국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단기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이유이다. 반면에 평화는 그 자체로 보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동맹관계에 있으며 주한미군을 파병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제이다. 객관식 답변에서 미국의 전문가들이 평화 공공외교에 비해서 통일 공공외교에 더욱 부정적 평가를 제시한 것도 이러한 이유와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있어서 통일은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 대미 정책 공공외교의 핵심 주제로서 실효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앞으로 통일부와 외교부, 국책연구기관들이 추진하는 정책 공공외교의 명칭 자체를 통일 공공외교보다는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대

한 지지 확보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협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대미 공공외교를 추진하되, 그 내용을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의 틀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주제: 거버넌스의 역할 조정 및 강화

둘째,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주체 측면이다. 우선 행정부 차원에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두 주체인 통일부와 외교부의 역할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한 가지 방안은 평화·통일 공공외교에서 상대적으로 우선시해야 할 분야 혹은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통일부는 상대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된 문제, 대북제재 문제, 북미 간 교류협력, 북한 관련 지식 공공외교 등의 측면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외교부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측면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이다. 물론 완벽한 역할 분담은 어렵겠지만 상대적으로 우선시해야 할 분야를 구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대미 정책 공공외교가 가능해질 수 있다.

다른 검토 가능한 방안은 대북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주무부처가 되고, 외교부는 대북정책 분야를 제외한 일반 공공외교에 주력하는 것이다. 물론 이 방안은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업무가 기본적으로 외교부에 귀속되어있는 현재의 조직 편제에 대한 변동을 수반할 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직 편제의 개편을 포함하여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주무부처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두 가지 방안, 즉 통일부와 외교부의 역할 분담 혹은 통일부가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주무부처가 되는 방안 중 어떤 방안을 취하건 현재 통일부의 공공외교 역할은 확장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통일부의 국제협력과를 국제협력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 이외에 대미 정책 공공외교의 핵심적 주체인 국책연구기관 혹은 정부출연기관들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 개별 기관 차원에서 활발한 대미 활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협력을 통해 보다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관한 기관 간 전략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각 기관장들이 공동 대표를 맡고 그 중 한 명이 상임대표를 맡으며, 기관별로 부서장급으로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 책임자를 두어 상시적으로 대미 정책 공공외교 추진 전략을 협의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민간의 역할도 더욱 확대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즉 세종연구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아산정책연구원 등 그리고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같은 학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기관 혹은 단체와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 협력의 새로운 모델 개발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20년부터 시작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해외 북한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은 통일부의 후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민·관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다) 자원(산): 북한 이해와 문화자산의 활용

셋째, 자산 측면에서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 관련 지식 공공외교의 확대가 매우 필요하다. 북미 간 비핵화협상이 쉽지 않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1990년대 이후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북한 붕괴론이라 할 수 있다. 북한체제가 곧 붕괴될 것이라는 인식은 북한과의 협상 동기 자체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북한체제는 1990년대 중후반 최소 수십만명이 기아로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도 생존한 바 있다. 최근 강력한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이미 생존을 위한 내적 기반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붕괴론 이외에도 ‘북한 악마화’ 인식도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야기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왔다.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정보, 연구에 기반한 실사구시적 접근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대미 지식 공공외교 확대가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또한 문화적 자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K-Pop, K-Movie 등 한류 콘텐츠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문화·예술 역량을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적극적으로 접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문화·예술이 한국의 대미 공공외교 효과를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민간 영역의 한류 콘텐츠를 정부의 대미외교에 일방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의 공감 속에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탄소년단과 미국에서 함께 한 일정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난 9월 영화진흥위원회와 뉴욕 주재 한국문화원이 주최한 한국영화배우 사진전에 만약 한반도 평화 관련 주제가 결합되었다면 문화 측면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하나의 사례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하는 문화 행사를 미국에서 개최하면서 K-Pop과 K-Movie가 결합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 매체: 화상회의 확대

넷째, 매체 측면에서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화상회의가 크게 증가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화상회의 방식을 대미 공공외교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대미 정책 공공외교는 현지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비용과 시간이 크게 소요됨으로 인해 상시적인 교류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화상회의 방식은 특히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이슈가 생겼을 때 한미 간 소통과 교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미 전문가 정책세미나를 위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기존의 대면 방식과 코로나19를 계기로 확대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을 병행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한미 간 소통과 교류를 넓힐 필요가 있다.

(마) 대상: 한반도 전문가 발굴·육성

다섯째, 대미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활동은 주로 정부 인사 또는 워싱턴의 주류 싱크탱크 전문가들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소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가 지속될 때, 그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대상의 확대에 있어서 특히 새로운 한반도 전문가들을 발굴하거나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의 대북정책에 우호적인 신진 학자 혹은 전문가들이 활동 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언론계 인사들도 중요한 대미 공공외교의 대상이

다. 미국 시민들은 주로 언론을 통해 한반도 문제와 한국의 대북정책을 접하게 된다. 따라서 언론계 인사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가 제고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외에도 미국 의회의 의원 및 보좌진, 재미교포 사회 등에 대한 정책 공공외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중국

(가) 목표: 통일보다 평화와 공동번영에 방점

첫째, 한국의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통일보다는 평화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지정학적 이익 관계로 인해 한국이 통일을 강조할 경우,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을 우려해 협조하지 않거나 심지어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평화를 우선하면서 통일 문제를 함께 인식시킬 경우, 중국은 한국의 한반도 통일 강조가 야기할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오히려 중국은 한국의 평화 강조가 자국의 전략적 이해와도 부합하기 때문에 한중간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될 수 있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연대 논의 —한미일 협력, 쿼드플러스(QUAD+), 파이브아이즈(Five Eyes)— 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 실험으로 인해 동북아 정세가 악화될 경우, 중국은 한국의 선택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평화지향적인 외교정책을 지속한다면 중국의 협력을 유인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평화와 함께 중국은 공동번영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중국은 자국 주도의 경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공동번영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대

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수행하면서 한반도와 중국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한의 경제협력과 중국을 포함한 인접국과의 경제협력을 연계시키되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주체: 민간의 역할 확대

기존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주체는 정부, 1.5트랙 위주로 이루어져 왔고, 민간은 학자나 전문가층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통일, 평화라는 주제 자체가 전문적이고 난해한 특징이 있어 정부와 학자 및 전문가 중심의 활동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수행하는데 한국의 행위 주체를 더 다양화하고 특히 민간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존 한중 민간단체 교류에 정부가 평화·통일 공공외교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한중간 평화·통일 관련 세미나, 도서 출판, 공동연구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언론 및 방송 연대를 통해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인터넷 플랫폼에서 개인 방송업자,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평화 이벤트 및 상품을 기획할 수도 있다. 이런 평화 관련 문화행사를 기획하는데 정부보다 민간으로부터 수용성이 높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민간이나 개인은 행사를 기획하는데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평화·통일과 관련된 정제된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콘텐츠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이 중국에 대한 활동 공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다) 자원(산): 새로운 자산 만들기

한국의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자산은 대북정책(평화, 변영, 비핵화 등), 한국의 발전경험, 문화예술, 경제, 지식 등이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한반도 통일, 평화라는 이슈 자체가 정치적이고 민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공공외교의 효과나 대중성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 대중들의 관심을 유발시킬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기존 문화, 경제 공공외교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평화 관련 지식정보 생산이 절실하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다수의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과 평화 관련 콘텐츠를 출판물(책자)과 인터넷 정보 공간이라는 매체를 통해 습득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의 평화정책, 통일방안, 통일과 평화의 연계성,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실질적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를 다량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식 정보 생산의 매체로 출판업계나 방송국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통일부의 『통일백서』처럼 『한반도 평화 백서』를 제작하거나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관련한 다양한 다큐 등을 제작해서 중국의 공감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식 정보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자산과 연계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문화를 매개로 한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문화영역의 특성상 직접적이고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와 평화 그리고 한반도 통일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고급스럽고 전략적인 콘텐츠 개발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과도한 민족주의, 국수주의 경향이 확대되면서 자국문화 우선주의가 팽배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소위 3K (K-Pop, K-Drama, K-Beauty) 등 우리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한류를 활용한 문화자산에 대한 맹신을 버려야 한다. 대신 평화, 공동번영 등 보편적 가치를 기존 한류 매체에 녹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한류가 이미 한국만의 문화가 아닌 세계 보편의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평화와 통일의 이미지 역시 중국과 함께 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로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라) 매체: 매체의 발굴 및 복합화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위한 콘텐츠 생산 다음으로는 결국 콘텐츠의 전파를 위한 다양한 매체 활용이 중요하다. 기존 중국을 대상으로 한 통일과 평화 공공외교에서 사용된 매체에는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 회의체를 비롯해 신·구 미디어와 책자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어왔다. 하지만 향후에는 평화·통일 공공외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효용성 높은 신규 매체를 개발하고 여기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중국의 거대한 인터넷 인구를 감안해 인터넷 및 사이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방송의 활용이다. 한중 간 방송 매체 연대 확대를 통해 평화 관련 문화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활용도가 낮은 스포츠 교류 역시 새로운 매체로 발전시킬 수 있다. 가능하다면 한중 간에 적극적인 자원 마련을 통해 북한 팀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동북아 스포츠 리그 창설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스포츠를 통한 평화 외교는 이미 그 역사가 깊고, 그동안 많은 성과를 보여 주었다. 한국이 좀 더 적극성을 띄고 동북아 평화 스포츠 리그 등을 현실화

시킬 수 있다면 이 만큼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매체는 없을 것이다.

(마) 대상: 지역별·세대별 맞춤형 접근

한국의 대중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추진대상은 관료, 학자 및 전문가 등 여론 및 정책주도층 위주였다. 물론 평화·통일이란 주제와 공공외교, 그리고 중국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인구가 많고 지역별 특성이 다양한 중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지역별, 세대별 맞춤형 접근이 더 효과적이다. 즉 중국의 주요 도시, 동북 3성 지역, 중서부 내륙으로 지역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주요 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과 접촉도가 높다는 점에서 한류 등의 문화예술 자산을 활용한 접근보다는 주요 정책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 관련 지식과 정책 자산을 활용한 공공외교가 더 적합할 수 있다. 내륙지역과 같이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의 경우는 공동번영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기업 투자, 경제교류 협력 등이 주요 수단이 되어야 하고, 북한과 밀접하고 한반도 경제와 연관성이 많은 동북 3성의 경우, 공동번영을 강조하는 동시에 비핵화의 중요성, 한반도 통일 편익론의 구체적인 구상들을 제공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세대와 함께 차세대 예컨대, ‘지우링허우(90後:90년대 이후 출생자)’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대들은 중국의 부상 및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한 관계로 민족적 자부심이 강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를 감안한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3) 일본

(가) 목표: '신뢰' 조성

한일관계는 구조적으로 변화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일 간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없었지만, 최근 일본 내에서는 교류·협력 자체를 반대하거나 방해하려는 세력의 발언이 강해지면서 일본 정치권 내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에 소극적인 목소리가 들린다. 이러한 한일관계의 '거리두기' 혹은 '단절'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일 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순기능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일본 내에 확산시키고 동시에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내 사회적 분위기와 역사 왜곡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면서 조건과 실천과제 사이에서 딜레마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한일 간 협력을 위해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특히 한국의 대일정책 및 한일협력에서 '신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대일 및 대북정책의 정책 방향과 한국의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정책 방향이 상호 조화를 이루며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일정책 및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및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공감을 얻기 어려우며 오히려 역효과만 일으킬 뿐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주로 한국 혹은 한반도 문제,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층을 대상으로 전개해왔다.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한국, 한반도, 한국문화

에 관심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교류 그 자체에 의미를 둘 것인지, 아니면 비교적 관심이 낮거나 한국에 대한 비우호적 입장이 강한 계층, 예를 들어 일본 남성층 혹은 보수우익 성향 계층을 겨냥한 새로운 기획 등 저변 확대를 도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 추진주체: 외교부와 통일부의 역할 조정, 지자체의 역할 확대

한국의 공공외교는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담당하고 있다. 물론 공공외교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기관, 시민단체, 개인 등이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평화·통일 공공외교도 외교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개인 등이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중에서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일 공공외교 수립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외교부가 중심이 되면서도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통일부가 일정 정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 조정 및 집중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 공공외교와 관련해서 국가브랜드위원회,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단체에서 한일 교류 확산 활동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과거부터 일본은 중앙집권적 성향의 한국보다 지방자치 성향이 강한 국가였으며, 현재도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한 가운데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한일관계 악화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차원의 한일교류는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조치 및 한국의 대응 조치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되

면서 국내 여론에 눈치를 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과의 교류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특히 한일 간 문화교류에서 ‘정치’ 논리의 개입을 억제하면서 정부 차원의 관계 악화와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는 분리되어야 한다.

(다) 자원 및 자산: 평화·통일 관련 콘텐츠 공동개발

한국의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정책 공공외교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한류붐을 계기로 문화 공공외교도 민간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 공공외교로 대표되는 한국학 진흥이다. 일본 시민들이 한국에 관심이 생겨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적다. ‘한류대학’, ‘K-Pop 학과’ 등과 같은 시민대학, 사이버대학 차원에서의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일 교류의 연속성을 위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통일과 관련된 콘텐츠의 다변화와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동영상을 전달하는 유튜브(YouTube)는 전파 속도를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끊임 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전략의 수립을 통해 일본 대중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한국 상황 및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당위성 등의 단순한 소개가 아닌 ‘스토리’를 포함한 한국 및 한국 정책의 ‘전체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매력은 30년 이상 지켜온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마초적 소프트파워(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간섭)’와 차이가 있다. 한국의 발전 과정 및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한계 등도 그대로 소개함으로써 진정한 한국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평화·통일 공공외교와 관련해서 한일의 콘텐츠 공동 개발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한일 간에는 문화와 콘텐츠 분야에서 민간의 공동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국 정부 차원에서 공적 지원을 확대 및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일 전문가들이 한일 갈등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발굴해서 이를 웹툰, 드라마, 웹소설로 제작한다면 한일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 단, 정부의 지원이 특정 단체나 개인에 이뤄지기보다는 ‘한일 공동 콘텐츠 구상’과 같은 플랫폼을 설립하여 참가자들이 공개적으로 경쟁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매체: 디지털 플랫폼 활용과 참여형 행사 확대

코로나19 시기 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한국의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에서 디지털 플랫폼은 코로나 시기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도 어느 정도 대안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한일 간 정책회의 개최 및 문화교류, 그리고 충실한 콘텐츠가 구비된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온라인 여행’ 등이 새로운 차원의 교류사업으로 모색 가능하다.

디지털 플랫폼의 또 다른 장점은 일본 현지인들의 ‘참여형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코로나 시기를 통해 각종 심포지움, 세미나 등은 통역 설비 준비와 같은 기계적 어려움도 겪었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최근에는 온라인 회의가 일상화되고 있다. 특히 유튜브 등을 통한 생방송과 함께 전문가 및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한일 간 교류 형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한 문화 공공외교 측면에서 기존의 ‘참관형 행사’가 아닌 일본인이 직접 세종학당, 문화강좌 등에 참여하는

‘참여형 행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 고양과 이해 제고에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참여형 행사는 현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지 언론의 관심과 보도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식의 사업은 단순히 상대국에 관심이 있는 수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신뢰’를 쌓는데 효과적이다.

(마) 대상: 도쿄, 오사카 중심 탈피, 남성 계층 주목

한국의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도쿄와 오사카 등 수도권 및 재일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정책 공공외교는 도쿄 편중 현상이 매우 심하며, 지식 및 문화 공공외교도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 국한되고 있다. 향후 도쿄와 오사카 중심의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탈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문화 공공외교에서 현재 도쿄를 중심으로 한 동일본 지역에는 ‘한일축제한마당’이라는 대표행사가 존재하는 반면에 서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일문화의 대표행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서일본 지역과 동일본 지역 특성에 맞는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일본 지역에 있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원폭 피해지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 지역에는 평화문제를 연구하는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활동도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 공공외교가 전개되는 것과 차별화된 민간의 정책 공공외교를 전개하기 용이한 점이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일 양국 간 교류, 특히 일본 중고등학생들의 한국 수학여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일본 학생들의 한국 수학여행

은 이웃 국가인 한국의 문화와 생활 등을 이해하고,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한국은 과거에 한국의 어려운 정치적 상황, 예를 들어 1980년대 ‘10.26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해 한국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일본 내에 있는 가운데서도 일본인 교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여행을 통해 이해시키는 작업을 한 적이 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수학여행’과 같은 방법 및 그에 따른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상여행 콘텐츠를 개발해서 사전에 보고 배우고 현지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새로운 한국 여행 형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밖에도 한국의 대일본 평화·통일 공공외교에서 남성 계층을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드라마, 영화, 음악 중심의 한류가 일본 내 여성 계층에 집중되고 있지만, 남성들은 한류보다 스포츠와 게임 쪽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이다. 향후 남북한 체육 교류 활성화를 바탕으로 대일본 스포츠 교류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4) 러시아

(가) 목표: 상호공감대 형성 모색

대러시아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목표는 러시아 국민이 한반도 분단 및 갈등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이 남북은 물론, 러시아의 평화와 번영, 특히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자국의 극동 개발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데 있었다. 그동안 대러시아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한국을 알리고 한국에 대한 공

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데는 이바지했지만, 아직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한반도 주변 상황 인식, 평화·통일의 중요성 인식, 자발적 참여 유도 등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을 단순히 홍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직시하고, 이제는 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과 러시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고 궁극적으로 상호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첫째,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연장선이 아니라 독자적인 구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둘째, 당면한 이슈에 대한 이해보다 러시아의 평화·번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담론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 일본 대 중국, 러시아의 대결 및 가치 구도의 고착화를 타개하면서 한반도 평화공감대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주체: 민간의 참여 확대

1990년 수교 이후 불과 30년이라는 짧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러시아 평화·통일 공공외교에는 정부, 의회, 국가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1트랙’,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미디어 등으로 구성되는 ‘1.5트랙’, 학회, 연구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2트랙’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구성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대러시아 평화·통일 공공외교에는 ‘1트랙’, 특히 현지 외교공관의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트랙’에 해당하는 민간의 활동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현지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대기업은 한국에 대한 호의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이들의 사회공헌활동과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다. 따라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추진 주체로서 대기업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사회공헌활동에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콘텐츠를 결합하거나, 기업이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위해 기업의 현지 활동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참여는 러시아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지와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과 고려인 단체를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추진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 자산: 한반도 평화·통일과 남북협력 관련 자산의 발굴 및 접맥

우선 대러시아 평화·통일 공공외교 차원에서 지식 공공외교는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사업의 성과에 기반을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초점을 맞추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 한국학 지원사업, 해외 한국학 사업 등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제로 하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해외 한국학 진흥사업에서도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한 한국학 강좌 운영, 전문가 육성, 워크숍·특강, 연구자료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대러시아 평화·통일 공공외교 차원에서 문화 공공외교의 경우, 지금까지는 한국을 알리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먼저, 주러 한국문화원, 현지 외교공관, 한국관광공사 모스크바 지사 등이 진행하는 다양한 문화행사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제로 하는 영화,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주제로 하지 않더라도 ‘4.27 판문점 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 등 중요한 역사적 이벤트를 기념하는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러시아 국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발간하는 계간지 『Koreana』 역시 그 지명도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문화·예술 소개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 특집 편성을 통해 주요 독자인 여론 주도층에게 한반도 평화·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대러시아 정책 공공외교 차원에서는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콘텐츠에 세심한 변화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첫째,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이 가장 합리적인 정책이었다고 인정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을 대러시아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러시아 국민에게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하여 강렬한 인상을 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및 그 합의사항을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상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러시아 내에서 남북관계, 남북 정부와 정치지도자의 정책을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과 통일의 필요성 홍보에 중점을 두면서 남북 간 문화적·인적 교류와 경제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 남북 간 경제협력 및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라) 매체: 다양한 매체의 발굴 및 활용

첫째, 연설 또는 강연의 경우, 대통령의 연설과 함께 러시아 방문에 앞서 현지의 유력 신문에 기고문을 게재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 구상을 설명하는 연설은 그 자리에 참석한 청중은 물론, 언론보도를 통해 핵심적 메시지가 러시아 국민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하지만 2016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하원 연설 등은 현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는 연설 내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관심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가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국내외 신문에 기고문을 게재하여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는 전통이 있다. 따라서 연설 전에 러시아 현지의 유력 신문에 대통령이 직접 쓴 평화·통일 구상에 대한 기고문을 게재한다면 연설의 주목도 역시 제고될 것이다.

둘째,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학술회의, 세미나 등)의 경우, 러시아 측 참석자 중 이미 이름이 알려진 시니어 한반도 전문가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러시아 대외정책 전반 또는 동북아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문가와 차세대 ‘지한파’ 전문가들의 비중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전시 및 공연의 경우,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제로 하는 행사를 별도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전시 및 공연은 한국의 전통 및 현대 문화콘텐츠를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넷째, 미디어 홍보의 경우,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뉴스와 해설을 러시아어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KBS 월드라디오의 러시아어 홈페이지와 아리랑 국제방송 러시아어 자막

서비스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영어에 능숙하지 않거나 한국어를 모르는 러시아 국민이 접할 수 있는 미디어 홍보 매체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뉴스와 해설을 러시아어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한국 및 한국 문화 관련 러시아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포털 사이트를 공공기관 주도로 개설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다섯째, 네트워크 구축의 경우, 현지 한국학자 또는 한국학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한반도 전문가 간 네트워크 등 이미 구축된 네트워크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한국 측 파트너를 지정하여 ‘제도화’를 공고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사이버 매체의 경우, 젊은 세대의 감성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미 유튜브 등을 이용하여 러시아어로 한국어 또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채널은 부재하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이 직접 이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역량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마) 대상: 대상자 풀(pool)의 체계적 확대

먼저, 러시아 국민 전체에 대해서는 한반도가 러시아, 특히 러시아 극동과 인접해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러시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이 북한의 현 체제에 압박을 가해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북 화해를 통한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여론 주도층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러시아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고,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연장선이 아닌, 독자적인 구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여론 주도층, 특히 시니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한반도의 현실을 단순히 냉전적 사고에 기반하여 해석하거나, 북한의 입장에 대해 최소한 ‘심정적 지지’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한국어 또는 한국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통해 먼저 한국 자체의 매력도를 제고하고, 그 기반 위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호의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냉전적 사고 또는 북한에 대한 ‘심정적 지지’로부터 자유롭다. 하지만 한반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다시 말해, 하나의 민족이 다른 국가에 사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있어도 한반도 통일에는 덜 공감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 세심한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차세대 ‘지한파’ 전문가들을 위한 맞춤형 참여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그룹은 수교 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차세대 ‘지한파’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교육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향후 지역별, 세대별, 분야별로 전문가를 꾸준히 발굴,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 풀(pool)을 체계적으로 관리, 확대할 필요가 있다.

(5) 종합

이상에서 한국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개선방안은 본 연구에서 발굴한 정책적 함의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본 연구의 분석틀인 5개의 실행과정(목표, 주체, 자산, 매체, 대상)에 의거하되,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이렇게 제시된 개선방안의 핵심을 정리한 것이 <표 V-5>이다. <표 V-5>에서 보듯이, 5단계별 개선방안은 각 국가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하게 포진해 있으며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국가별 개선방안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통하는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목표의 측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공감대 형성이, 주체의 측면에서는 외교부와 통일부 및 민간을 포함한 거버넌스의 역할 조정이, 자원의 측면에서는 평화·통일 콘텐츠와 문화자산의 결합이, 매체의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기술의 진보가 반영된 신규 발굴이, 대상의 측면에서는 발굴 및 맞춤형의 체계적 관리 등으로 요약·압축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종합하면 ‘평화’와 ‘공감’, ‘공동’, ‘참여’ 등이 한국의 대주변 4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개선방안에 대한 핵심 키워드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표 V-5> 한국의 주변 4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개선방안

구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목표	한반도 평화공감대 형성	통일보다 평화와 공동번영에 방점	신뢰조성	상호공감대 형성 모색
주체	거버넌스의 역할 조정·강화	민간의 역할 확대	외교부와 통일부의 역할 조정 지자체의 역할 확대	민간의 참여 확대

구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자원	북한 이해와 문화자산의 활용	새로운 자산 발굴	평화·통일 관련 콘텐츠 공동개발	한반도 평화·통일과 남북협력 관련 자산의 발굴·접맥
매체	화상회의 확대	매체의 개발·복합화	디지털 플랫폼 활용과 참여형 행사 확대	다양한 매체의 발굴 및 활용
대상	한반도 전문가 발굴·육성	지역별·세대별 맞춤형 접근	도쿄·오사카 중심 탈피 남성계층 주목	대상자 풀(pool)의 체계적 확대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일본정세 2020』. 서울: 국립외교원, 2019.
- 김경호. 『설문조사』.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4.
- 김상기·이기태·이우태·이동률·이혜정.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김상배 편저. 『소프트파워와 21세기 권력: 네트워크 권력의 모색』.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9.
- 김상배·박종희·배영자·송태은·신범식·이승주·이신화·조동준. 『지구화시대의 공공외교』. 서울: 사회평론 아카데미, 2019.
- 김우상. 『중견국 책략: 미·중 사이 한국의 스마트 외교』. 서울: 세창출판사, 2016.
- 문경연·송기돈·박지연 편저. 『공공외교: 이론과 사례』. 서울: 오름, 2020.
- 박영호·김국신·박인휘·정기웅. 『미국의 대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박영호·김동수·박인휘·정기웅. 『한국의 대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박영호·여인곤·조민·이기현·김성철.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외교부. 『2021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I 권』. 서울: 외교부, 2021.
- 윤석준. 『공공외교의 이해』. 파주: 한울아카데미, 2020.
- 전병곤·이기현·신상진·이동률.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전병곤·이동률·박주화.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조사』. 서울: 외교부, 2017.
- 통일부. 『2021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21.
-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연감 2020』. 서울: 한국문학번역원, 2021.
- 황병덕·김규륜·박영호·여인곤·이교덕·강동완·김갑식.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 4국의 대한국 통일 공공외교』.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황병덕·박영호·임강택·전병곤·조한범·강동완·김갑식·김태환·이기태.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I): 한국의 주변 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Cooper, Andrew F., Richard A. Higgott, and Kim R. Nossal. *Relocating Middle Powers: Australia and Canada in a Changing World Order*. Vancouver: UBC Press, 1993.
- Galtung, Johan.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London: Sage, 1996.
- Leonard, Mark. *Public Diplomacy*. London: Foreign Policy Centre, 2002.
- Nye, Joseph S.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 Power*. New York: Basic Books, 1990.
- _____.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2. 논문

- 권재기. “한국 국민의 통일외교 프로파일 탐색 및 예측.” 『통일인문학』. 83집, 2020.
- 김우상. “대한민국의 중견국 공공외교.” 『정치정보연구』. 제16권 1호, 2013.

- _____. “가치외교의 부상과 가치의 진영화: 강대국 사례와 한국 공공 외교의 방향성.” 『문화와 정치』. 제6권 1호, 2019.
- _____. “한국 정책공공외교의 진화와 방향성: 공공외교에 대한 정체성 접근의 시각.”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 제1권 1호, 2021.
- 남기정.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 한국 외교의 ‘대전략’과 한일관계.” 『국가안보와 전략』. 제17권 3호, 2017.
- 박지연.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네트워크 탐색: 효율적인 외교 방식 결정을 위한 예비적 검토.” 『북한연구학회보』. 제23권 1호, 2019.
- 백우열. “한국의 공공외교 전략 및 정책연구.” 『국가전략』. 제23권 3호, 2017.
- Cowan, Geoffrey and Amelia Arsenault. “Moving from Monologue to Dialogue to Collaboratio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Social Science*. vol. 616, 2008.

3. 기타 자료

〈신문〉

『뉴시스』,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스포츠경향』,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월드코리아뉴스』, 『재외동포신문』,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겨레신문』.

〈웹사이트〉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s://know.tour.go.kr>>.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s://www.inss.re.kr>>.
 국립외교원 <<http://www.knda.go.kr>>.
 국립외교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https://www.ifans.go.kr>>.
 국립통일교육원 <<https://www.uniedu.go.kr>>.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
 대한민국정책브리핑 <www.korea.kr>.

동아시아연구원 <<http://www.eai.or.kr>>.

로앤비 <<http://www.lawnb>>.

미국 국무부 아카이브 <<https://2009-2017.state.gov>>.

민단 오사카 지부 홈페이지 <<http://www.mindan-osaka.org>>.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https://www.nuac.go.kr>>.

바이러시아21 <<http://www.buyrussia21.com>>.

사단법인 한러대화 <<http://ekrd.or.kr>>.

세계한민족문화대전 <<http://www.okpedia.kr>>.

세종학당재단 <<https://www.ksif.or.kr>>.

영화진흥위원회 <<https://www.kofic.or.kr>>.

외교부 <<https://www.mofa.go.kr>>.

일본내각부(日本内閣府) <<https://survey.gov-online.go.jp>>.

재외교육기관포털 <<http://okep.moe.go.kr>>.

재외동포신문 <<http://www.dongponews.net>>.

재외동포재단 <<https://www.okf.or.kr>>.

제주평화연구원 <<http://jpi.or.kr>>.

주러 한국문화원 <<https://russia.korean-culture.org>>.

중국일대일로망(中国一带一路网) <<http://ydy1.china.com.cn>>.

중국정부망(中国政府网) <<http://www.gov.cn>>.

한국국제교류재단 <<https://www.kf.or.kr>>.

한국-러시아 수교 30주년 <<http://korussia30.com>>.

한국문화번역원 <<https://www.ltikorea.or.kr>>.

한국정치학회 <<http://www.kpsa.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www.aks.ac.kr>>.

한국학진흥사업단 <<https://ksps.aks.ac.kr>>.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https://kgfp.kr>>.

한일문화교류회의 <<http://kjcec.or.kr>>.

해외문화홍보원 <<https://www.kocis.go.kr>>.

38North <<https://www.38north.org>>.

KBS WORLD <<http://world.kbs.co.kr>>.

Koreana <<https://www.koreana.or.kr>>.

<법령>

「공공외교법」 제2조.

<기타>

외교부.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국회사무처 국제국. “제9차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 결과보고서
(2009.12.16.~12.23.)”.

_____. “제10차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 개최 및
하원 러-한 의원협력그룹 대표단 초청 결과보고서(2012.12.
26.~12.29.)”.

김숙현. “한일관계 변화에 따른 동북아 정세 파급영향.”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INSS 전략보고. 제66호, 2020.

김태환. “21세기 신공공외교와 포럼외교.” 제주평화연구원 JPI정책포
럼. 제60권, 2011.

_____. “정책공공외교로서의 평화공공외교: 개념과 방향성.” 국립외
교원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1-07, 2021.

한인택.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평가와 발전방향.” 제주평화연구원
JPI정책포럼. 제187권, 2016.

허예원. “재외동포의 통일 공공외교 추진 방안.” 민주평화통일회의의 사
무처, 2019.

황태희.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이 보는 역사, 민족, 국가, 그리고
세계: 북한과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동아시아연구원
EAI위킹페이퍼, 2020.

박영혜. “일본에서의 한국 문화 홍보 활동의 성과와 과제: 오사카 문화

- 원의 활동을 중심으로.” 2021 한일문화포럼 〈한일문화교류의 미래〉 발표문, 2021.9.8.
- 김태환. “정책공공외교로서의 ‘평화공공외교’ - 개념, 분석틀, 그리고 방향성.”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4.6.
- 윤석정. “한국의 대일본 평화 공공외교 실태 조사.”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5.11.
- 김남은. “한국의 대일본 평화 공공외교 실태 조사.”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5.12.
- Kim, Taehwan. “Seeking Recognition in Anarchy: An Identity Approach to Public Diplomacy.” 국립외교원 IFANS PERSPECTIVES. IP2021-07E, 2021.
- UN Secretary-General. “Urging Greater Investment in Diplomacy for Peace, Secretary-General Highlights UN’s Mediation Tools, Successes, during Security Council Debate.” 2018.

부록



[부록: 전문가 인식조사 문항]

ID			
----	--	--	--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통일연구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 HK+국가전략사업단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대한민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한반도 주변 주요국가(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란 외교적 자산을 활용하여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informing) 이해(understanding) 시켜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국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 자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일컫으며, 한국 정부는 2010년을 공공외교 원년으로 설정한 이후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한국정부의 공공외교는 한반도 통일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통일 정책 및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통일에 국한된 통일 공공외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확립하고 이를 확산, 내재화, 제도화하는 평화 공공외교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사는 한국의 평화

· 통일 공공외교의 현재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한반도 주변 4개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과 국내의 전문가 약 100명을 대상으로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설문조사 이후 일부 참가자를 대상으로 보다 면밀한 심층면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조사의 질문에는 정해진 정답은 없으며 귀하의 생각과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대략 15~2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본 설문에 성실하게 끝까지 참여하실 경우 소정의 답례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설문지는 익명으로 보관되며, 자료 처리 후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되었다가 본 연구가 마무리된 이후에 폐기될 예정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연구 및 학술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이며, 그 결과가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등으로 출판될 경우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 답례품의 제공을 위해 한국 국내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8조에 의거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에 참여함으로써 귀하가 받을 수 있는 피해는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니다. 귀하는 설문조사를 참여하는 도중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귀하가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불편함이 느껴지시면 언제든지 설문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언제든지 이 조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 결정이 귀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조사의 연구 책임자는 통일연구원 전병곤 선임연구위원이며, 본 조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구책임자 또는 최원근 공동연구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부. 한국의 공공외교

1. 본 연구팀은 공공외교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정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란 외교적 자산을 활용하여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informing) 이해(understanding)시켜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국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 자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일컫는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귀하께서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 추진체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 주도형 ② 민간 주도형 ③ 민·관 혼합형

3. 귀하께서는 한국 공공외교 추진의 핵심적인 담당기관 및 주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정부부처 () ② 정부산하기관 ()
③ 학술연구단체 () ④ 언론 ()
⑤ 문화단체 () ⑥ 스포츠단체 ()
⑦ 시민단체 및 NGO () ⑧ 경제단체 및 기업 ()

4. 귀하께서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주요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영향력 확대 ()
② 국가안보 측면의 이익 제고 ()
③ 경제적 이익과 협력 추구 ()
④ 국가의 이미지 개선 ()
⑤ 한반도 통일을 위한 환경 구축 ()

5. 귀하께서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①부터 ⑦까지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K-Pop 등 문화·예술 ()
- ② 언론·광고·소셜네트워크 등 다양한 매체 ()
- ③ 스포츠 행사 및 관광 ()
- ④ 경제적 기여 (투자 또는 ODA) ()
- ⑤ 한국학 및 한반도 관련 학술교류 및 연구 지원 ()
- ⑥ 디아스포라·유학생 등 상호인적 교류 ()

6. 귀하께서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 프로그램들 가운데 비중(중요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아니다 ↔ ⑤ 매우 그렇다)

	내용	① 매우 아니다	② 조금 아니다	③ 보통 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언론 대상 프로그램					
②	학계 및 정책연구 서클 대상 프로그램					
③	경제계 대상 프로그램					
④	학생 대상 프로그램					
⑤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					
⑥	시민사회 단체 및 NGO 대상 프로그램					

7. 귀하께서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동북아 ② ASEAN ③ 중동 및 북아프리카
- ④ 오세아니아 ⑤ 유럽 ⑥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⑦ 북미 ⑧ 중남미 ⑨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8. 귀하께서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①부터 ⑥까지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문화·예술 역량 () ② 스포츠 분야 행사 및 교류 ()
- ③ 지식 및 학술연구 기반 () ④ 교육과 디아스포라 등 인적자원 ()
- ⑤ 기업의 투자·연구개발 등 경제 활동 ()
- ⑥ 언론 및 미디어 소통 역량 ()

2부.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

1. 본 연구팀은 통일 공공외교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정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통일 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공공외교’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다른 나라 국민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부 또는 비정부 행위자들의 의도적 노력, 즉, 한국의 통일 정책 및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행해지는 외교활동을 일컫는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귀하께서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통일공공외교 추진체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 주도형 ② 민간 주도형 ③ 민·관 혼합형

3. 귀하께서는 한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의 핵심적인 담당기관 및 주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정부부처 () ② 정부산하기관 ()
③ 학술연구단체 () ④ 언론 ()
⑤ 문화단체 () ⑥ 스포츠단체 ()
⑦ 시민단체 및 NGO () ⑧ 경제단체 및 기업 ()

4. 귀하께서 생각하는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를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긍정적 태도의 강도에 기초하여 순위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미국 () ② 중국 () ③ 일본 () ④ 러시아 ()
⑤ 기타 ()

5. 귀하께서는 어떤 통로를 통하여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관하여 접하였습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
- ② 인터넷 또는 소셜네트워크
- ③ 정책홍보지 또는 책자(인쇄물)
- ④ 가족, 친구 또는 지인
- ⑤ 교사 또는 교과서
- ⑥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 행사
- ⑦ 기타 ()

6. 귀하께서는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다음의 여러 문장들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아니다 ↔ ⑤ 매우 그렇다)

	내용	① 매우 아니다	② 조금 아니다	③ 보통 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한국은 통일공공외교를 위해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②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는 언론이나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③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는 정책, 학술연구, 문화 및 스포츠 등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④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는 다른 나라 국민들이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⑤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는 다른 나라 국민들이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⑥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는 다른 나라 국민들이 통일에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기여하였다.					

7. 귀하께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국민들을 향한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주된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에 따라 2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정치인 () ② 관료 ()
- ③ 학자·전문가 () ④ 언론 ()
- ⑤ 시민사회단체 () ⑥ 일반국민 ()

8. 귀하께서는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어떠한 형태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점진적 남북 합의통일
- ② 급진적 남북 합의통일
- ③ 점진적 남한 주도통일
- ④ 급진적 남한 주도통일

9. 귀하께서는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추진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변국의 우려
- ② 북한 핵문제
- ③ 북한의 폐쇄정책
- ④ 남북한 간의 상호불신
- ⑤ 남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거부감
- ⑥ 기타()

10. 귀하께서는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통일 공공외교가 어느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
- ②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증진
- ③ 통일의 필요성 홍보
- ④ 북한의 정책 변화 유도
- ⑤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필요성 홍보

11. 귀하께서는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부터 ⑤까지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 ()
- ②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증진 ()
- ③ 통일의 필요성 홍보 ()
- ④ 북한의 정책 변화 유도 ()
- ⑤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필요성 홍보 ()

12. 귀하께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기간(1998-2008) 동안 한국이 추진해온 통일 공공외교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각 항목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① 매우 아니다 ↔ ⑤ 매우 그렇다)

	내용	① 매우 아니다	② 조금 아니다	③ 보통 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통일공공외교는 동한반도의 평화·안정에 기여하였다.					
②	통일공공외교는 동아시아 평화·안정에 기여하였다.					
③	통일공공외교는 통일의 필요성을 홍보하는데 기여하였다.					
④	통일공공외교는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데 기여하였다.					
⑤	통일공공외교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홍보하는데 기여하였다.					

13. 귀하께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기간(2008-2017) 동안 한국이 추진해온 통일 공공외교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각 항목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① 매우 아니다 ↔ ⑤ 매우 그렇다)

	내용	① 매우 아니다	② 조금 아니다	③ 보통 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통일공공외교는 동한반도의 평화·안정에 기여하였다.					
②	통일공공외교는 동아시아 평화·안정에 기여하였다.					
③	통일공공외교는 통일의 필요성을 홍보하는데 기여하였다.					
④	통일공공외교는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데 기여하였다.					
⑤	통일공공외교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홍보하는데 기여하였다.					

14. 귀하가 생각하시는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정책이나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

3부. 한국의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

1. 본 연구팀은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정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반도 평화공공외교’란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확립하고 이를 확산, 내재화, 제도화함으로써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에 평화·안보 실천 공동체(peace-security community of practice)를 구성하고자 다른 나라 국민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부 또는 비정부 행위자들의 의도적 노력과 외교활동을 일컫는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귀하께서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공공외교 추진체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 주도형 ② 민간 주도형 ③ 민·관 혼합형

3. 귀하께서는 한국의 한반도 평화공공외교 추진의 핵심적인 담당기관 및 주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정부부처 () ② 정부산하기관 ()
③ 학술연구단체 () ④ 언론 ()
⑤ 문화단체 () ⑥ 스포츠단체 ()
⑦ 시민단체 및 NGO () ⑧ 경제단체 및 기업 ()

4. 귀하께서 생각하는 한국의 한반도 평화공공외교를 가장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긍정적 태도의 강도에 기초하여 순위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미국 () ② 중국 () ③ 일본 () ④ 러시아 ()
⑤ 기타 ()

5. 귀하께서는 어떤 통로를 통하여 한국의 한반도 평화공공외교에 관하여 접하였습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
- ② 인터넷 또는 소셜네트워크
- ③ 정책홍보지 또는 책자(인쇄물)
- ④ 가족, 친구 또는 지인
- ⑤ 교사 또는 교과서
- ⑥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 행사
- ⑦ 기타 ()

6. 귀하께서는 한국의 한반도 평화공공외교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음의 여러 문항들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아니다 ↔ ⑤ 매우 그렇다)

	내용	① 매우 아니다	② 조금 아니다	③ 보통 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한국은 한반도 평화공공외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②	한국의 한반도 평화공공외교는 언론이나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③	한국의 한반도 평화공공외교는 정책, 학술연구, 문화 및 스포츠 등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④	한국의 한반도 평화공공외교는 다른 나라 국민들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⑤	한국의 한반도 평화공공외교는 다른 나라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준다.					
⑥	한국의 한반도 평화공공외교는 다른 나라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 구축에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기여하였다.					

7. 귀하께서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공공외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매체/수단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
- ② 인터넷 또는 소셜네트워크
- ③ 정책홍보지 또는 책자(인쇄물)
- ④ 가족, 친구 또는 지인
- ⑤ 교사 또는 교과서
- ⑥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 행사
- ⑦ 기타 ()

8. 귀하께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국민들을 향한 한국 한반도 평화공공외교의 주된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에 따라 2개를 선택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① 정치인() ② 관료() ③ 학자·전문가()
- ④ 언론() ⑤ 일반국민

9. 귀하께서는 한국의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가 추구하는 실질적인 목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문항들 가운데 가장 유사한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휴전 상태의 유지를 통한 전쟁 방지(현상유지)
- ② 공식적인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 ③ 남북 간의 신뢰 회복 및 군비 축소 프로세스
- ④ 남북한의 통일
- 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공동안보체제 수립
- ⑥ 기타 ()

10. 귀하께서는 한국의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북한 핵문제
- ② 한미동맹
- ③ 한국 정부의 비일관적 정책
- ④ 북한 정치지도자들의 호전성과 즉흥성
- ⑤ 한반도 주변 국가들 사이의 갈등
- ⑥ 기타()

11. 귀하께서는 한국의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자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학술연구 등 지식자산
- ② 평화지향 외교정책
- ③ 남북 간 스포츠, 문화 교류 등 평화증진 활동
- ④ 남북한 경제협력 촉진을 통한 상호의존성
- ⑤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공감대 증진
- ⑥ 기타 ()

12. 귀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화공공외교가 가장 집중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에 따라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한반도 비핵화
- ② 남북한 군사적 신뢰 형성 및 군축
- ③ 북미 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 ④ 남북 간 경제협력 및 대북 인도적 지원
- ⑤ 남북 간 문화 및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공감대 확대
- ⑥ 한반도 주변국 정부 및 국민들에 대한 한반도 평화 중요성 설득
- ⑦ 기타 ()

13. 귀하가 생각하시는 한국의 한반도 평화공공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한국의 한반도 평화공공외교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정책이나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

4부. 기본문항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성 ()
- ② 여성 ()
- ③ 기타 ()
- ④ 응답하지 않음 ()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
- ② 30대 ()
- ③ 40대 ()
- ⑤ 50대 ()
- ⑥ 60대 이상 ()

3. 귀하는 어떤 기관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 ① 정부부처 () ② 연구기관 (공공) ()
- ③ 연구기관 (민간) () ④ 학계 ()
- ⑤ 언론 () ⑥ NGO ()
- ⑦ 기업 () ⑧ 스포츠 ()
- ⑨ 문화 () ⑩ 기타 ()

4. 귀하께서 한반도 관련 업무(연구)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석사학위 2년, 박사 학위 5년 포함)

- ① 1년 미만 ()
- ② 1-5년 미만 ()
- ③ 5-10년 미만 ()
- ④ 10-15년 미만 ()
- ⑤ 15-20년 미만 ()
- ⑥ 20년 이상 ()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보고서

2019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9-01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미국의 적대국 관계정상화 사례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이기태 외	8,000원
2019-02	남북관계 2023: 도전요인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김갑식 외	17,500원
2019-03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도경욱, 안준형	8,500원
2019-0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이재영, 김주리	8,000원
2019-05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서보혁 외	12,000원
2019-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이재영 외	11,500원
2019-07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조정아 외	11,000원
2019-08	북한 변화의 변수와 경로: '핵문제'와 '개혁·개방'의 조합을 중심으로	박영자 외	11,000원
2019-09	남북연합 연구: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무철 외	15,000원
2019-10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통일전략	신중호 외	18,000원
2019-11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홍석훈 외	9,000원
2019-12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이우태 외	9,000원
2019-13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나용우 외	10,000원
2019-14	북한 외교정책: 정책패턴과 북핵외교 사례분석	김진하 외	10,000원
2019-15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오경섭 외	9,500원
2019-16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김수경 외	7,500원
2019-17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통일정책 개선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14,500원
2019-18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의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연구 - 영사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9-19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 정책	이상신 외	24,000원
2019-20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총론: 평화·경제·화해 협력 구상	서보혁	10,000원
2019-21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서보혁 외	14,000원
2019-22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9-22-01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8,500원
2019-22-02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4,500원
2019-23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조정아 외	12,000원
2019-24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홍 민 외	10,500원
2019-25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 분석	정은외	14,000원
2019-26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19-27	한반도 평화·변영 실현을 위한 국경 협력	현승수 외	14,000원
2019-28	한반도 접경국과의 초국경 관광·교통 협력	최장호 외	10,000원
2019-29	주변국의 사이버 환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채재병 외	8,500원
2019	제3세대 인권과 북한	인도협력연구실 편	16,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9-01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김상기 외	
2019-02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이기태, 배정호	
2019-03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김석진, 홍제환	
2019-04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한국인의 주요 인접국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이상신 외	

<Study Series>

2019-01	North Koreans' Current Living Conditions Based on UNICEF Survey Results: With a Focus on the Status of Infant Nutrition	Hong, Jea Hwan	
2019-02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Do, Kyung-ok · Baek, Sangme	
2019-03	South Koreans' Perception on Peace: With a Focus on Peace, War, the Way Peace is Realized, and the Attitude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Kim, Kap-Sik · Park, Juhwa	

2020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0-01	평화경제 실현방안: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20-02	남북한 주민 왕래 및 이주와 혼인에 관한 법적 연구	이규창, 문선혜	10,000원
2020-03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김수암 외	9,000원
2020-04	평화-인권-발전의 트리아앵글: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홍석훈 외	11,000원
2020-05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변영	현승수 외	11,500원
2020-06	한반도 평화변영과 북일관계 연구	이기태 외	8,000원

2020-07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민태은 외	8,500원
2020-08	남북기본합정 체결방향과 과제	도경옥 외	9,000원
2020-09	남북연합 구상과 추진방안	이무철 외	11,000원
2020-10	새로운 한반도 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김갑식 외	13,000원
2020-11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박주화 외	12,500원
2020-12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성윤 외	15,500원
2020-13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은이 외	11,000원
2020-1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나용우 외	14,500원
2020-15	해외의 시각으로 본 신남방·신북방정책의 평가와 과제	나용우 외	17,500원
2020-16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4,500원
2020-16-01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6,500원
2020-16-02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6,500원
2020-17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주화 외	12,500원
2020-18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해양협력을 중심으로	서보혁 외	20,000원
2020-19	국제 평화경제 사례와 한반도	조한범 외	11,500원
2020-20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홍민 외	18,000원
2020-21	강대국 경쟁과 관련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3,000원
2020-22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홍제환 외	14,000원
2020-23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	최창호 외	7,000원
2020-24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조정아 외	13,000원
2020-25	KINU 통일외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이상신 외	24,500원
2020-26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 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화·연설 분석	오경섭 외	14,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20-01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이규창 외
2020-02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과 국내외 정책 전망	민태은 외

〈Study Series〉

2020-01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Legal Issues and Challenges Do, Kyung-ok·Ahn, Jun-hyeong
2020-02	Variables and Pathways of Changes in North Korea: Focused on Different Combination of 'Nuclear Issues' and 'Reform·Opening' Park, Young-Ja·Jeong, Eun Mee·Han, Ki Bum
2020-03	Daily Lives of North Korean Women and Gender Politics Cho, Jeong-ah·Yee, Ji Sun·Yi, Hee Young
2020-04	2019 Annual Reports of Attitude of Koreans toward Peace and Reconciliation Park, Juhwa et al.

202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1-01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김석진·홍제환 8,000원
2021-02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최규빈 외 9,000원
2021-03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이지순 외 9,000원
2021-04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김수암 외 9,500원
2021-05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이우태 외 11,000원
2021-06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민태은 외 10,000원
2021-07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전병곤 외 14,500원
2021-08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이재영 외 11,500원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정성윤 10,500원
2021-10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정은미 외 10,500원
2021-11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오경섭 외 10,500원
2021-12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김진하 외 18,000원
2021-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홍제환·김석진 10,000원
2021-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를 중심으로	정은미 외 9,500원
2021-15 KINU 통일외식조사 2021: 통일·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이상신 외 22,500원
2021-16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황수환 외 16,000원
2021-17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나용우 외 16,500원
2021-18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김형수 외 9,500원
2021-19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	박영자 외 13,500원
2021-20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이윤진 외 11,000원
2021-21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11,000원
2021-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3,500원
2021-2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이기태 외 13,000원
2021-2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민국 협력 방안	최희식 외 11,000원
2021-25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박은주 외 19,000원
2021-26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이재영 외 23,000원
2021-27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 정착	장철운 외 14,000원
2021-28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최지영 외 16,500원
2021-29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최지영 외 12,000원
2021-30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김갑식 외 12,000원
2021-31-01 평화공감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박주화 외 10,000원
2021-31-02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1,500원

2021-32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이무철 외 14,000원
2021-33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정은이 외 14,000원
2021-3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조한범 외 16,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21-01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이상신 외
---------	--------------------------------	-------

〈Study Series〉

2021-0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k-Jin Kim
2021-02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Jea Hwan Hong · Suk-Jin Kim
2021-03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Jeong-ah Cho · Choon Geun Lee · Hyun-suk Oum
2021-04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oo-Am Kim et al.

KINU Insight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1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2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정은미
2019-03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김주리
2019-04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이지순
2019-05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북한에 주는 함의	이재영
2019-06	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	서보혁
2019-07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이해	조한범
2019-08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 과제	김갑식 외
2020-01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20-02	평화의 경제적 가치: 2018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장철운
2020-03	미국의 對北성공 관계정상화 프로세스와 대북정책	김유철
2020-04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북중무역 감소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최지영
2021-0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홍 민 외
2021-02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홍 민 외
2021-03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최지영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한동호 외	24,000원
북한인권백서 2019	김수경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9	김수경 외	24,500원
북한인권백서 2020	이규창 외	21,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0	이규창 외	27,000원
북한인권백서 2021	오경섭 외	21,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오경섭 외	27,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8	2019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19	2020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0	2021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1	2022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1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2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1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2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1호 (202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1 (202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2호 (202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2 (202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0, No. 2 (2021)	10,000원

기타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2018	북한의 건강권	이금순 외
2018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Lee, Keumsoon et al.
2018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디렉토리	김진하 외
2020	동서 화해사상으로 본 통일공동체의 상과 과제	김범수 외
2020	DMZ 접경지역의 비평화 실태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 전략촌을 중심으로	정근식 외
2021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서보현·옹혜민 엮음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메일 서비스	수신 ()		수신거부 ()
회원 구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위탁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회원자격 갱신 시 보유기간은 1년 연장)**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5.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고지사항)

위탁 받는 업체(수탁업체)	업무내용
(주) 코리아디엠	발간물 발송 업무 처리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 동 의	
-----	--	-------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